

2025 영남 초대형 산불 피해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안동, 영덕, 의성을 중심으로



GREENPEACE

녹색전환연구소
Institute for green transformation

재난피해자권리센터
2024.11.14

목차

| | |
|---|----|
| 목차..... | 2 |
| 서론..... | 4 |
| 1. 조사 배경..... | 4 |
| 2. 조사 기획, 범위 및 방법..... | 4 |
| 3. 조사 및 분석 유의사항..... | 5 |
| 4. 조사 결과 기술 방식..... | 6 |
| 5. 조사 지역 산불 피해 및 지원 현황..... | 8 |
| 본론..... | 13 |
| 1. 응답자 기초 조사..... | 13 |
| 2. 재해의 물적 피해..... | 16 |
| [전체 물적 피해]..... | 16 |
| [일상의 물적 피해]..... | 17 |
| [행정기관 피해 평가 체감도]..... | 19 |
| [교차분석 결과: 물적 피해와 행정기관 피해 평가 체감도]..... | 21 |
| [신체적 피해]..... | 22 |
| 3. 재해 직후 대피..... | 24 |
| [대피 방법 및 수단]..... | 24 |
| [임시 대피소 경험 및 평가]..... | 26 |
| [임시 대피소 보급 물품별 평가]..... | 28 |
| [임시 대피소 보급 물품 제공의 신속성, 공정성, 적절성 분석]..... | 33 |
| [임시 대피소 생활 만족도와 불편사항]..... | 34 |
| [임시 대피소 외 임시거주지 실태 평가]..... | 36 |
| 4. 임시주택..... | 39 |
| [임시주택 거주 만족도 및 제공기간]..... | 39 |
| [임시주택 외 거주 응답자]..... | 42 |
| [교차분석: 연령별 응답자와 임시주택 제공기간 수요]..... | 43 |
| 5. 재해로 인한 심리적 영향..... | 44 |
| [전체 IES-R-K 척도검사 결과]..... | 44 |
| [주요 요인별 외상 후 스트레스 영향]..... | 46 |
| [심리지원 서비스의 실태 및 평가]..... | 53 |
| 6. 재난 지원..... | 56 |
| [정보 전달 및 구호 서비스 평가]..... | 56 |
| [임시 대피 기간 이후 구호서비스 및 물품 제공]..... | 59 |
| [성금 정보 전달 실태 및 필요 지원 현황]..... | 61 |
| [상관분석: 정보 제공과 행정 신뢰의 연쇄 구조]..... | 64 |
| 7. 복구와 회복..... | 66 |
| [복구지원비 평가]..... | 66 |
| [피해 사실 조사 합리성과 복구지원비]..... | 68 |
| [주택 피해 유형 및 차별 경험]..... | 70 |
| [피해보상 문제 제기 여부 및 경험]..... | 73 |
| [통계분석: 문제 제기 유무와 행정기관 및 피해산정 합리성 평가]..... | 75 |

| | |
|--|-----------|
| [주택 복구]..... | 76 |
| [소득 피해 현황 및 회복 전망]..... | 79 |
|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피해조사 합리성과 소득 회복 인식 정도]..... | 83 |
| [새로운 마을을 위한 보완점]..... | 84 |
| [새로운 마을에 대한 기대사항]..... | 86 |
| [마을 공동체 결속과 갈등]..... | 89 |
| [교차분석: 피해사실 조사 합리성 인식과 갈등 원인]..... | 93 |
| 8. 산불특별법..... | 95 |
| 결론 | 98 |
| 9. 종합 시사점..... | 98 |
| 10. 지역별 시사점..... | 110 |
| 11. 부록 - 지역 심층 보고서..... | 119 |
| [안동 지역 보고서 : 회복과 재건을 위한 재난거버넌스의 방향]..... | 119 |
| [영덕 지역 보고서: 2025년 영남 초대형산불 피해 실태조사로 본 기후재난 대응 거버넌스의 과제]..... | 143 |
| [의성 지역 보고서 : 2025 영남 초대형 산불 피해 실태조사로 본 피해자 권리의 과제] | 170 |

서론

1. 조사 배경

2025년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2025년 영남 초대형 산불(이하 초대형 산불)은 주택, 산림, 생업기반이 파괴되는 물리적 피해뿐 아니라, 대피와 임시거주 과정, 보상과 복구, 주민들의 심리상태와 공동체 관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재난 대응과 회복 과정에서 피해주민들이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주요한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개별 사례 수준으로 한정하지 않고, 산불 피해주민이 재난의 전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했는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본 조사는 산불 피해 규모를 다시 집계하거나 피해 금액을 추산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는다. 그보다는 피해 주민이 재난을 어떻게 인지했고, 어떤 방식으로 대피했고, 이후 임시거주와 복구 과정을 어떻게 통과해 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민의 권리 보장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는 하지 못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향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 및 시행령을 비롯한 재건위원회의 역할과 제도 개선 논의에서 피해주민 권리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 기반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조사 기획, 범위 및 방법

[조사 기획]

본 실태조사는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녹색전환연구소,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이하 재난피해자권리센터)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수행했다. 세 기관은 2025년 6월 실태조사 필요성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협의하며 단계적으로 준비했다.

조사 방식은 설문 조사와 심층 면접을 병행하는 형태로 설계했다. 수차례 회의를 통해 실태조사와 심층면접 질문지를 공동으로 생산했으며, 조사 접근성이 확보된 지역을 기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영덕 지역은 그린피스가, 안동 지역은 녹색전환연구소가, 의성 지역은 재난피해자권리센터가 각각 담당했다.

현장 조사는 피해주민 조직과의 협업과 소통을 통해 2025년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의성 지역의 경우 ‘의성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와 ‘산불회복주민연대 의성무지개’(두 개 단체 통합해 이하 ‘의성주민대책위’로 지칭)와 협업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설문 참여자 및 심층면접 대상자 표본은 연령별, 성별, 지역, 피해유형 등을 고려해 안배, 선정했으며, 실제 실태조사도 함께 수행했다. 안동 지역은 산불 대응 활동을 벌여 온 지역단체인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와 협력했으며, 영덕 지역은 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조사 대상자를 만났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피해주민대책위와도 소통했다. 이러한 방식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으며, 동시에 대책위원회 및 지역 시민사회가 산불 이후 대응을 주도해 온 주체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기도 하다. 다만, 조사 접근 경로의 차이가 곧 실태조사 참여자(응답자) 특성의 차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과 해석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사 범위]

본 조사에서는 2025년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 주민 중 경북 안동, 의성, 영덕에 실제 거주 중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32명의 심층면접 인터뷰를 바탕으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한다.

기존의 재난 대응 연구는 주로 재난 발생 원인, 면적, 피해액 등과 같은 '사건 중심 지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재난은 단일 시점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후 삶과 생활 조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본 조사는 피해 경험을 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초기 대피 상황, 임시대피소 및 임시주택 이용, 생업과 일상생활의 변화, 공동체 관계의 변동, 심리적 어려움,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여, 피해 주민들이 겪는 생활상의 영향과 공동체, 정부에 대한 인식 등을 다각도로 측정했다. 이를 통해 산불 피해 주민들이 겪는 장기적 피해 양상과 제도적 취약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조사 범위는 다음과 같은 영역을 포함한다.

- 1장. 응답자 기초 조사
- 2장. 산불의 물적 피해
- 3장. 산불 직후 피해
- 4장. 임시주택
- 5장. 산불로 인한 심리적 영향
- 6장. 재난 지원
- 7장. 복구와 회복
- 8장. 산불특별법

[조사 방법]

본 조사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2일간 안동·영덕·의성 3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의 객관성과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교육을 이수한 조사원이 개별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대인면접방식 조사를 진행했으며, 심리 상태나 민감한 주제와 같은 일부 문항에서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모든 조사 과정은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 진행되었으며, 조사 착수 전 응답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을 상세히 고지하고 자발적 동의를 구했다. 또한 성실한 응답 및 조사의 완성도를 위해 응답자에게는 조사 참여에 따른 소정의 사례를 제공했다.

- 조사 대상: 안동, 영덕, 의성 산불 피해 지역 주민
- 표본의 크기: 총 300명 (지역별 100명 균등할당)
- 표집 방법: 임의 표집·유의 표집·눈덩이표집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대인 면접조사 및 자기 기입방식
- 조사기간: 2025년 10월 20일 ~ 31일 (총 12일간)

3. 조사 및 분석 유의사항

본 조사는 2025년 10월, 산불 재난 이후 주민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나,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조사는 산불 피해 지역 거주자라는 특수한 모집단의 성격을 고려해 인구학적 통계에 기반한 엄격한 비례 할당 표집이 아닌 임의표집·유의표집·눈덩이표집 방식을 사용했다.

둘째, 본 보고서의 통계 분석 결과, 주요 변수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일부 확인되었으나, 특정 문항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모집단의 특수성 및 표본 크기 제한으로 인한 것일 수 있으며, 분석 결과 해석에 있어 수치상의 유의성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들의 현장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자료로서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재난 피해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생활 환경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일부 문항에 대한 응답 거부 등 결측치가 존재하며, 데이터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각 통계표 하단에 문항별 유효 응답수를 명시했다.

넷째, 본 보고서의 빈도표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했으며, 이로 인해 각 항목별 구성비의 합계가 10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문에서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 단위로 표기했으며, 반올림 과정에서 수치가 높아진 경우 '약'을 붙여 표시했다.

다섯째, 본 조사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된 횡단적 조사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재난 복구 단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주민들의 태도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시간적 한계가 존재하며, 앞으로 이를 추적할 후속 조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4. 조사 결과 기술 방식

[기술 방식]

A. 지역별 보고서 제공

안동·영덕·의성 세 지역의 피해는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역별 특성에 따라 상이한 기술이 필요한 내용도 있었다. 이에, 최종 보고서의 별첨으로 지역별 분석 결과를 별도로 취합한 지역별 결과 보고서가 첨부됐다.

B. 심층면접 인터뷰 결과의 활용

통계 수치를 넘어선 피해 주민들의 실상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로 10명의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정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당 인터뷰 결과는 최종 보고서와 지역별 보고서의 관련된 실태조사 항목에 삽입됐다. 지역별 심층면접 대상자 개요는 아래와 같다.

a. 안동 심층면접 대상자 개요

| No | 대상자 | 특징 | 지역 |
|----|------|-------------|-----|
| 1 | 안동-A | 남후농공단지 입주업체 | 남후면 |
| 2 | 안동-B | 전소 마을 이장 | 남선면 |
| 3 | 안동-C | 전소 마을 이장 | 남선면 |

| | | | |
|----|------|------------------------------------|-----|
| 4 | 안동-D | 피해 지역 면장 | 임하면 |
| 5 | 안동-E | 자영업자, 세입자, 마을총무, 안동시 일상회복지원단 활동 | 남선면 |
| 6 | 안동-F | 은퇴자, 개인 작업장 전소피해 | 남선면 |
| 7 | 안동-G | 농지 피해, 안동시대책위활동 | 길안면 |
| 8 | 안동-H | 임업피해 | 정상동 |
| 9 | 안동-I | 새마을부녀회장/여성농민회 | 임하면 |
| 10 | 안동-J | 별정우체국 시설 피해 | 남선면 |

b. 영덕 심층면접 대상자 개요

| No | 대상자 | 특징 | 지역 |
|----|------|--|-----|
| 1 | 영덕-A | 펜션 전소 피해자 | 영덕읍 |
| 2 | 영덕-B | 마을 총무(주택반파 및 농지 피해) 임업(송이)분야에 많은 피해를 입음 | 지품면 |
| 3 | 영덕-C | 이장(주택전소 및 농지 피해) 주택 전소 | 지품면 |
| 4 | 영덕-D | 이장(주택전소 및 농지 피해) | 지품면 |
| 5 | 영덕-E | 마을 대책위원(주택전소 및 농지 피해) | 축산면 |
| 6 | 영덕-F | 주민(주택전소 및 농지 피해) | 지품면 |
| 7 | 영덕-G | 주민(주택전소 및 농지 피해) | 지품면 |
| 8 | 영덕-H | 주민(주택전소 및 농지 피해) | 지품면 |
| 9 | 영덕-I | 주민(주택전소 및 농지 피해) | 지품면 |
| 10 | 영덕-J | 이장(주택전소 및 농지 피해) | 축산면 |

c. 의성 심층면접 대상자 개요

| No | 대상자 | 특징 | 지역 |
|----|------|-----------------------------------|---------|
| 1 | 의성-A | 세입자. 주택 전소 및 가재도구 전실. 보상 사각지대. | 단촌면 구계리 |
| 2 | 의성-B | 투병 거주자. 타지 치료 사유로 실거주 불인정. | 단촌면 |

| | | | |
|----|------|----------------------------|---------|
| 3 | 의성-C | 과수원 피해. 농창고, 농기계, 과수원 전소. | 점곡면 |
| 4 | 의성-D | 의용소방대원. 진화 중 무릎 부상. | 의성읍/단촌면 |
| 5 | 의성-E | 사과 명장. 54년 농사 기반 상실. | 안평면 |
| 6 | 의성-F | 무허가 주택. 서류 미비로 주거 지원 배제. | 옥산면 |
| 7 | 의성-G | 대책위원장. 마을 90% 전소 피해. | 점곡면 사촌리 |
| 8 | 의성-H | 무허가 주택. 지자체 사후 지원 불가 통보. | 안평면 |
| 9 | 의성-I | 임야 경작. 불법 식재 간주로 피해 조사 거부. | 안평면 |
| 10 | 의성-J | 하우스 거주. 면적 미달 사유로 지원 배제. | 안평면 |
| 11 | 의성-K | 대책위 사무국장. 재난관리시스템 한계 지적. | 점곡면 |
| 12 | 의성-L | 청년 농업. 과수원 전소로 장기 소득 공백. | 점곡면 |

5. 조사 지역 산불 피해 및 지원 현황

[산불 발생 경위 및 전체 피해 규모]

2025년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2025년 영남 초대형 산불은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실화가 강풍을 타고 안동, 영양, 청송, 영덕 등 경북 북부 일대로 확산된 사건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와 인명피해를 기록한 산불 사례로 평가된다. 산림청 발표 기준 주불 진화 완료 시점은 3월 28일(금) 14시 30분이다. 행정안전부는 3월 27일 안동·청송·영양·영덕을 포함한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범부처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산림청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기준, 이번 산불의 영남 전역 피해 규모는 다음과 같다.

| 피해항목 | 영남 전역 피해 현황 |
|----------|---|
| 주택 | 주택 3,848동 |
| 이재민 | 사망 27명, 부상 156명 이재민 4,458가구/ 약 92,200명 |
| 농작물 | 농·산림작물 3,419ha |
| 농기계 | 농기계 17,158대 |
| 농업 / 수산업 | 농어업시설 6,106건 |
| 산림 | 104,000ha 산림소실 |
| 기타 |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을 비롯해 총 769건의 피해 |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산불 피해 복구계획 확정 보도자료(2025.05)

본 조사의 대상 지역인 안동, 영덕, 의성은 모두 경북 북부에 위치하며, 면적의 약 70% 이상이 산림으로 구성되어 대규모 산불 발생 시 화산 확대를 억제하기 어려운 지형적

취약성을 공유한다. 세 지역 모두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과수, 논·밭작물, 축산)이 지역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 산불로 인한 생계 기반 상실은 곧 지역사회 전반의 경제적 붕괴로 이어지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다. 이하에서는 세 지역의 피해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본다.

[안동]

안동시는 면적 약 1,522㎢로 경상북도 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이 중 산림 비율이 약 70%를 상회한다. 이번 산불로 인한 안동의 산림 피해 면적은 잠정적으로 26,708ha로, 이는 경북 전체 피해 면적 45,157ha 중 절반 이상이 안동에 집중된 것을 의미하며, 안동시 전체 산림 면적의 약 25%에 달한다. 인명 피해로는 최소 4명의 사망자가 확인되었고, 2,5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주택 피해의 경우 안동시 관내 1,737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경북 전체 피해 주택 3,819채 중 약 43%에 해당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안동이 전국 최대의 사과 주산지 중 하나라는 점에서 피해가 특히 심각했다. 안동 사과 주산지의 직·간접 피해면적은 총 533.1ha로, 이번 산불로 인한 사과산지 전체 피해면적 1,257.2ha의 42%에 해당한다. 과수원 소실은 단순한 1년 치 수확량의 손실을 넘어, 수십 년간 가꾸어온 과수 나무의 전소로 인한 영농 기반의 붕괴를 의미한다. 또한 축사 231동이 소실되어 닭 174,100마리, 돼지 20,574마리, 벌 6,606마리 등이 폐사했으며, 남후농공단지 내 28개 업체가 산불 피해를 입어 산업 기반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에 직면했다.¹

[영덕]

영덕군은 면적 741.2㎢로, 행정구역은 1읍 8면 204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인구는 19,683세대 33,782명이다. 군 전체 경지면적은 54.34㎢로 전체의 약 7.3%에 불과한 반면, 임야는 599.32㎢로 전체 면적의 약 80.85%를 차지해 산림 비율이 세 지역 중 가장 높다.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44.06%로, 의성(49.20%)에 이어 세 지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산불은 2025년 3월 25일 17시 54분경 인근 청송군에서 발생한 불이 지품면 황장리로 확산된 것으로, 초속 25m 이상 강풍으로 인해 약 3~4시간 만에 영덕읍 노물리 해안까지 번졌다. 영덕군 인명 피해는 총 66명으로, 이 중 사망자 10명의 평균 연령이 84세, 최고령 101세로 고령층 피해가 두드러진다². 이재민은 2025년 4월 25일 기준 1,421세대 2,491명으로 집계되며, 이는 영덕군 전체 인구 약 3만 3천 명 중 상당 비율에 해당한다. 영덕군청 자료(2025.4.15 기준)에 따르면, 영덕군 산불 피해면적은 총 16,207ha이며, 이 중 송이산 소실 면적은 4,137ha로 파악된다. 잠정 피해액은 총 3,170억 원(공공시설 1,265억 원, 사유시설 1,905억 원)으로, 이는 영덕군 2025년 본예산 6,171억 원의 절반을 상회하는 규모이다.³

¹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5.06.12), 2025영남지역산불 피해와 농업부문 대응과제, KREI이슈+, 제 36호.p5

² 영덕군 홈페이지(2025. 4. 29), 영덕 초대형산불 피해 및 대처사항

<https://www.yd.go.kr/?pageid=4&p=146709&uid=345711&mod=document&tab=>

³ 손대성(2025. 4. 17), 영덕 산불피해 3천170억 집계...선박 29척·주택 1천624채 타,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7072900053>

[의성]

의성군은 총 면적 1,174.63㎢로 경상북도에서 다섯 번째로 넓으며, 전체 면적의 약 70.2%(824.6㎢)가 산림으로 구성된 산간 지역이다. 행정구역은 1읍 17면 체제이다. 총 인구는 약 49,800명이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44.2%로 전국 최고 수준의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한다. 농업이 지역내총생산의 약 1/3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농업 지역으로, 미곡과 마늘, 사과, 자두 등이 주산물이다.⁴

이번 산불은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와 안계면 용기리에서 시작되어 의성읍을 비롯한 총 13개 읍·면에 걸쳐 확산되었으며, 이는 의성군 전체 행정구역의 약 70%에 달하는 광범위한 범위이다. 발화지인 안계면과 안평면은 울창한 산림이 밀집해 있어 초기 피해가 매우 컸으며, 강한 서풍 속에서 불길이 동쪽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재민은 434가구 753명이 발생하였고, 산림 피해면적은 27,961ha에 달하며, 주택 430호, 농기계 4,555대, 축사 64동(4,515두군), 문화재 41동이 피해를 입었다.⁵

[정부 및 지자체 복구 지원 예산]

A. 중앙정부 복구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체 산불 피해 복구비를 총 1조 8,809억 원으로 확정했으며, 이 중 국비 지원 규모는 64.5%에 해당하는 1조 2,136억 원이고, 나머지 6,673억 원은 지방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⁷

B. 지역별 자체 대응

지역별로는, 안동시의 경우 피해액 3천억 원으로 산정되어 복구비 5,088억 원(국비 3,300억 원, 지방비 1,208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3,375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이 중 약 67%인 2,050억 원을 산불 극복과 피해 복구에 배정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주택 복구비 최소 1억 원 확보(기존 지원금+6천만 원+기부금 등), 경제수단 상실 가구 생계비 지급(2~12개월), 영업장 파손 소상공인 업체당 1천만 원 지원, 세입자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최대 600만 원), 농기계 지원 기종 확대(27종) 및 지원율 상향(50%), 축산·임산물 지원을 100% 상향 등이 있으며, 지방세·상하수도 요금 감면, 이동 의료지원반 운영, 찾아가는 심리상담소 등도 시행되고 있다.⁸

영덕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8,750억 원 규모로 편성했으며(당초 본예산 대비 41.79% 증가), 이 중 산불 피해 복구 관련 예산은 총 1,956억 원이다. 주택 피해 주민 주거비 지원 883억 원, 임시 조립주택 설치비 289억 원, 건축·폐기물 처리비 415억 원 등이 포함된다.⁹ 연말 제2회 추경에서는 역대 최대인 9,89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송이

⁴ 2025 의성군 통계연보 / 행정안전부 지역소멸 대응 마스터플랜

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산불 피해 복구계획 확정 보도자료 (2025.05.02)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id=117540

⁶ 의성군 산불피해주민 간담회 자료(2025.08): 의성 대형산불 관련 추진현황.

⁷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25.05.02), 산불로 무너진 국민의 삶, 정부가 함께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⁸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25.05.02), 산불로 무너진 국민의 삶, 정부가 함께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⁹ 양승미(2025. 6. 9) , 영덕군, 제1회 추경예산 8,750억 원 규모 편성, 데일리대구경북뉴스, <https://www.dailydgnews.com/mobile/article.html?no=219034>

대체작물 조성 109억 원, 산림재해대책비(위험목 제거) 232억 원, 산불지역 마을 단위 복구 재생 사업 45억원 등을 편성하며 중장기 재건 사업으로 정책 초점을 이동하고 있다¹⁰.

의성군은 총 4,061억 원의 복구비가 책정되며, 국비 2,472억 원과 지방비 1,588억 원이 포함된다. 해당 복구비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의성군 내 주택, 농업시설, 산림 및 공공시설 등의 복구에 사용된다.¹¹

의성군은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다른 산불 피해지역과 같이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간접 지원 및 행정적 지원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공공요금 감면 등 세제·요금 부담 완화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피해 주민의 주거 및 생계 회복을 위해 재해주택 복구 및 구입 자금 융자,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등의 금융 지원도 제공되었다.¹²

[민간 성금 현황]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등 8개 단체를 통한 특별 모금액이 1,081억 원에 달하며, 경상북도와 기초 지자체를 통한 자체 구호금은 138억 원, 피해 지역에 직접 전달되는 고향사랑 기부금도 61억 원을 넘어섰다. 최종적으로 1,700억 원을 넘는 국민 성금 및 기부금이 모금되었으며(2025년 5월 기준), 이는 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 모금액인 1,290억 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재난 성금 규모로 기록되었다.¹³

그러나 지자체에서 제출한 피해 건수 파악이 완료되지 못하여 초기 지급이 지연되자, 정부는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피해자 1인당 100만 원씩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전체 모금액의 약 2% 수준이었다. 이후 많은 성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국민재난안전포털¹⁴에 국민성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나, 2026년 3월 현재 시점에도 2025년 산불 피해로 인한 성금의 모금과 배분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기타 특별 조치 및 제도적 대응]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유예 및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다. 또한 공공임대주거 지원, 위기가족 긴급지원, 무료 법률지원, 농기계 수리 지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등 생활 회복을 위한 지원이 병행되었으며,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과태료 징수 유예,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등 행정절차 완화 조치도 함께 시행되었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의 상담 및 지원을 위해 산불 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¹⁰ 천희정, 영덕군(2025. 12. 15), 역대 최대 9897억 추경 편성...산불 극복·경제 회복 총력, 더경북, http://m.thegb.kr/news_gisa/gisa_view.htm?gisa_category=04070000&gisa_idx=51403&date_y=2024&date_m=09

¹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5.5.2), 「산불 피해 복구계획 확정 관련 보도자료」

¹²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경북·경남·울산 산불 이재민 긴급생계비 3백만 원 지원 시작」 보도자료, 2025.4.30.

¹³ KBS 뉴스 대구경북(2025.05.12) 경북 산불 성금 1,700억...집행은 하세월 [/https://www.youtube.com/watch?v=U3SISJJpy7U&t=1s](https://www.youtube.com/watch?v=U3SISJJpy7U&t=1s)

¹⁴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

운영되어 피해 민원 접수, 세금·국민연금 유예 상담, 복구자금 융자 및 보험 상담 등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었다.¹⁵

이상의 피해 현황과 지원 개요는 본 조사의 응답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세 지역이 공유하는 구조적 취약성(고령화, 산림 의존, 농업 중심 경제)과 함께 지역별 피해 특성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 제시한다.

¹⁵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2025.4.30), 「경북·경남·울산 산불 이재민 긴급생계비 3백만 원 지원 시작」 보도자료,

본론

1. 응답자 기초 조사

전체 응답자 296명 중 중년(40세 이상, 60세 미만)이 약 17%(51명), 장년/노년(60세 이상, 80세 미만)이 약 64%(189명), 초고령인 80세 이상이 약 18%(53명)로, 설문에 참여한 산불 피해 주민의 약 82%(242명)가 장년/노년층 및 초고령층인 연령 구성¹⁶이다.

세 지역 모두 장년/노년 이상 응답자 비율이 70% 이상으로 가장 높고(영덕 92%, 의성 약 83%, 안동 70%), 영덕은 세 지역 중 장년/노년층이 가장 많으며, 80세 이상의 초고령 응답자도 34%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표1-1).

성별로는 전체 응답자 중 남성(51%)이 여성(49%)에 비해 소폭 높은 가운데 영덕(57%)이 여성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지만 안동(52%)과 비슷한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남성 응답자가 많은 지역은 의성(62%)이다(표1-2).

피해 유형(복수응답)을 보면, 주택 피해가 2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생계수단 피해(161건), 영업장 피해(112건), 본인 신체피해(26건), 기타(4건) 순이다. 지역별로는 안동은 생계 수단, 영덕은 주택 피해가, 의성은 영업장 피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1-3).

전체 응답자의 거주기간을 보면, 40년 이상 장기 거주자가 51%에 달한다. 20년 미만은 약 29%(85명), 20년 이상 40년 미만은 약 20%(59명), 40년 이상 60년 미만이 24%(71명), 60년 이상 80년 미만이 약 24%(69명), 80년 이상이 3%(10명)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영덕이 60년 이상 거주자 비율이 37%로 가장 높고, 의성(22%)과 안동(21%)이 그 뒤를 잇는다(표1-4).

전체 응답자의 21%(63명)가 1인 가구로 확인됐고, 나머지는 1인 이상 동거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덕은 응답자 중 36%가 혼자 거주했다고 응답해 지역 중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5).

대피 여부와 관련해서 전체 응답자의 90%(269명)가 대피를 경험했고, 영덕은 98%가 대피한 것으로 나타나 세 지역 중 가장 높은 대피율을 보였다(의성 87%, 안동 85%)(표1-6).

산불 이전 건강 상태는 전체의 약 47%(140명) '좋았다'로, 20%(61명)는 '나빴다'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안동이 '좋았다' 응답 비율이 63%로 가장 높고, 영덕(34%)과 의성(43%)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7).

[문항별 응답표]

표 1-1. 귀하의 연령대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 | (사례수) | 40세 미만 | 4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80세 미만 | 80세 이상 |
|----|-----------------|-------------|------------------|------------------|---------------|
| 전체 | 296 (100.0%) | 3 (1.0%) | 51 (17.2%) | 189 (63.9%) | 53 (17.9%) |
| 안동 | 100 (100.0%) | 1 (1.0%) | 29 (29.0%) | 60 (60.0%) | 10 (10.0%) |

¹⁶ 연령 구분은 통계청의 연령계층 구분과 고령 연구에서 사용되는 초고령 기준을 참고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40~59세를 중년, 60~79세를 장년/노년, 80세 이상을 초고령으로 재구성함

| | | | | | |
|----|-----------------|-------------|---------------|---------------|---------------|
| 영덕 | 100 (100.0%) | 1 (1.0%) | 7 (7.0%) | 58 (58.0%) | 34 (34.0%) |
| 의성 | 96 (100.0%) | 1 (1.0%) | 15 (15.6%) | 71 (74.0%) | 9 (9.4%) |

표 1-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사례수) | 남성 | 여성 |
|----|-----------------|----------------|----------------|
| 전체 | 300 (100.0%) | 153 (51.0%) | 147 (49.0%) |
| 안동 | 100 (100.0%) | 48 (48.0%) | 52 (52.0%) |
| 영덕 | 100 (100.0%) | 43 (43.0%) | 57 (57.0%) |
| 의성 | 100 (100.0%) | 62 (62.0%) | 38 (38.0%) |

표 1-3. 귀하는 발생한 재해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복수응답)

| | 주택 | 생계수단 | 영업장 | 본인신체 | 기타 |
|----|-----|------|-----|------|----|
| 전체 | 211 | 161 | 112 | 26 | 4 |
| 안동 | 65 | 73 | 35 | 9 | 0 |
| 영덕 | 92 | 34 | 16 | 2 | 1 |
| 의성 | 54 | 54 | 61 | 15 | 3 |

표 1-4. 해당 마을에서 실제 거주 기간을 합하면 총 몇 년입니까?

| | (사례수) | 20년 미만 | 20년 이상 40년 미만 | 40년 이상 60년 미만 | 60년 이상 80년 미만 | 80년 이상 |
|----|-----------------|---------------|------------------|------------------|------------------|--------------|
| 전체 | 294 (100.0%) | 85 (28.9%) | 59 (20.1%) | 71 (24.1%) | 69 (23.5%) | 10 (3.4%) |
| 안동 | 100 (100.0%) | 28 (28.0%) | 30 (30.0%) | 21 (21.0%) | 21 (21.0%) | 0 (0.0%) |
| 영덕 | 100 (100.0%) | 23 (23.0%) | 18 (18.0%) | 22 (22.0%) | 28 (28.0%) | 9 (9.0%) |
| 의성 | 94 (100.0%) | 34 (36.2%) | 11 (11.7%) | 28 (29.8%) | 20 (21.3%) | 1 (1.1%) |

표 1-5. 재해 이전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함께 거주한 사람의 수는 몇이었습니까?(본인 제외)

| | (사례수)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이상 |
|----|-----------------|---------------|----------------|---------------|---------------|--------------|
| 전체 | 300 (100.0%) | 63 (21.0%) | 141 (47.0%) | 50 (16.7%) | 26 (8.7%) | 20 (6.7%) |
| 안동 | 100 (100.0%) | 16 (16.0%) | 53 (53.0%) | 14 (14.0%) | 11 (11.0%) | 6 (6.0%) |
| 영덕 | 100 (100.0%) | 36 (36.0%) | 39 (39.0%) | 11 (11.0%) | 7 (7.0%) | 7 (7.0%) |
| 의성 | 100 (100.0%) | 11 (11.0%) | 49 (49.0%) | 25 (25.0%) | 8 (8.0%) | 7 (7.0%) |

표 1-6. 귀하는 올해 재해를 피해 살던 주거지를 떠나 대피했습니까?

| | (사례수) | 그렇다 | 아니다 |
|----|-----------------|----------------|---------------|
| 전체 | 299 (100.0%) | 269 (90.0%) | 30 (10.0%) |
| 안동 | 100 (100.0%) | 85 (85.0%) | 15 (15.0%) |

| | | | |
|----|-----------------|---------------|---------------|
| 영덕 | 99 (100.0%) | 97 (98.0%) | 2 (2.0%) |
| 의성 | 100 (100.0%) | 87 (87.0%) | 13 (13.0%) |

표 1-7. 재해 이전 귀하의 건강은 어떠셨습니까?

| | (사례수) | 매우 나빴다 | 조금 나빴다 | 보통이었다 | 조금 좋았다 | 매우 좋았다 |
|----|-----------------|---------------|---------------|---------------|---------------|---------------|
| 전체 | 300 (100.0%) | 18 (6.0%) | 43 (14.3%) | 99 (33.0%) | 47 (15.7%) | 93 (31.0%) |
| 안동 | 100 (100.0%) | 2 (2.0%) | 8 (8.0%) | 27 (27.0%) | 19 (19.0%) | 44 (44.0%) |
| 영덕 | 100 (100.0%) | 5 (5.0%) | 20 (20.0%) | 41 (41.0%) | 12 (12.0%) | 22 (22.0%) |
| 의성 | 100 (100.0%) | 11 (11.0%) | 15 (15.0%) | 31 (31.0%) | 16 (16.0%) | 27 (27.0%) |

2. 재해의 물적 피해

2장은 산불로 인한 주민들의 물적·신체적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는 행정기관의 산불 피해 평가가 실제 손실을 산정하는데 적절했는지, 현실적인 피해를 충분히 반영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주택·영업장·가재도구 등 항목별 피해 체감 정도와 행정기관의 피해 평가 체감도, 그리고 본인 및 가족·지인의 신체적 피해 현황에 대한 응답 결과를 담았다.

[전체 물적 피해]

전체 응답자 297명 중 약 65%(193명)가 주택 피해를 극심한 수준(80% 이상)으로 체감한다고 응답해, 모든 지역에서 주택 피해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3개 지역 공통으로 가장 낮은 피해 체감도 그룹(20% 미만)과 극심한 피해 체감도를 가진 그룹(80% 이상)에 집중된 응답 분포를 보이는데, 이는 지역 내 마을별 산불 피해 정도의 차이 혹은 주택 집중도의 차이 등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표2-1-1).

특히, 1장의 산불 피해 분류(주택, 생계수단, 영업장, 신체, 기타/복수응답)(표1-3)에 대한 응답을 함께 고려하면, 생계수단과 영업장 피해 응답의 합(273건)이 주택(211건)보다도 약 29% 높아, 3개 지역은 극심한 주택 피해에 더해 생계수단과 영업장 피해까지 중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업장(농장, 공장, 상점, 농기구 등) 피해는 응답자 291명 중 45%가 60%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응답했다. 영업장 피해는 주택에 비해 응답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산되어 피해 편차가 존재하나, 20% 미만(약 28%)과 80% 이상(41%)의 양 극단 구간에 응답이 집중되는 경향은 주택과 유사하게 나타났다(표2-1-2).

[지역별 응답]

영덕은 85%의 응답자들이 극심한 주택 피해를 입었다고 답해(표2-1-1), 타 지역 대비 주택 피해 체감도가 가장 높았던 반면, 영업장 피해의 경우는 피해 체감도 20% 미만(약 47%)과 80% 이상(약 42%)으로 응답하여, 타 지역에 비해 영업장 피해가 양극화 되어 있고, 영업장 피해 보다 주택 피해가 큰 특징을 보인다(표2-1-2). 여기에 연령/성별 정보(표1-1, 1-2)를 함께 고려하면, 영덕의 산불 피해 응답자들은 타 지역에 비해 고령화된 피해자들이 가장 큰 주택 피해를 체감하는 거주 불안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이 중 다수는 여성 피해자이다.

안동은 62%의 응답자들이 극심한 주택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고, 타 지역에 비해 영업장 피해 체감도가 높은 편이다(40%이상 피해 체감도 비율: 안동 68%, 의성 약 57%, 영덕 약 52%). 산불 피해 분류 응답(표1-3) 중 안동의 생계수단·영업장 피해 응답 건수(복수응답)는 각각 73건, 35건으로 거주 불안과 소득 손실 및 미래 소득에 대한 피해 우려가 모두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

의성은 극심한 주택 피해로 응답한 비율이 약 47%로 상대적으로 낮고, 20% 미만의 피해를 받았다는 응답도 약 44%를 차지해 주택 피해 체감은 타 지역보다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영업장의 극심한 피해 체감도 응답 비율은 3개 지역 중 가장 높았다.(의성 약 45%, 영덕 42%, 안동 37%) 또, 산불 피해 분류 응답(표1-3) 중 의성의 영업장 피해 응답

건수(복수응답)는 61건으로, 안동(35건), 영덕(16건)에 비해 다소 높아, 3개 지역 중 미래 소득에 대한 피해 우려가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문항별 응답표]

2-1.재해로 인한 귀하의 물적 피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재해 이전의 상태에 비추어 귀하가 체감하시는 피해 정도는 얼마나 되십니까? 0~100% 사이로 응답해 주세요

표 2-1-1. 주택 피해 정도는 몇%입니까? (재해 이전의 상태를 0% 피해로 간주, 10%단위로 기입)

| | (사례수) | 20% 미만 | 2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
|----|-----------------|---------------|------------------|------------------|------------------|----------------|
| 전체 | 297 (100.0%) | 86 (29.0%) | 6 (2.0%) | 11 (3.7%) | 1 (0.3%) | 193 (65.0%) |
| 안동 | 100 (100.0%) | 36 (36.0%) | 2 (2.0%) | 0 (0.0%) | 0 (0.0%) | 62 (62.0%) |
| 영덕 | 100 (100.0%) | 7 (7.0%) | 2 (2.0%) | 6 (6.0%) | 0 (0.0%) | 85 (85.0%) |
| 의성 | 97 (100.0%) | 43 (44.3%) | 2 (2.1%) | 5 (5.2%) | 1 (1.0%) | 46 (47.4%) |

표 2-1-2. 영업장(농장, 공장, 상점, 농기구 등)의 피해정도는 몇%입니까? (재해 이전의 상태를 0% 피해로 간주, 10%단위로 기입)

| | (사례수) | 20% 미만 | 2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
|----|-----------------|---------------|------------------|------------------|------------------|----------------|
| 전체 | 291 (100.0%) | 81 (27.8%) | 38 (13.1%) | 41 (14.1%) | 11 (3.8%) | 120 (41.2%) |
| 안동 | 100 (100.0%) | 15 (15.0%) | 17 (17.0%) | 24 (24.0%) | 7 (7.0%) | 37 (37.0%) |
| 영덕 | 94 (100.0%) | 44 (46.8%) | 1 (1.1%) | 10 (10.6%) | 0 (0.0%) | 39 (41.5%) |
| 의성 | 97 (100.0%) | 22 (22.7%) | 20 (20.6%) | 7 (7.2%) | 4 (4.1%) | 44 (45.4%) |

[일상의 물적 피해]

실태조사 수행 시, 피해자의 실생활과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며, 피해 평가에 제외되어 보상이 되지 않거나, 물적으로 복구될 수 없어 정서적 상실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물적 피해 요소로 가재도구(가전제품, 가구, 옷 등)와 개인이나 가족의 추억이 깃든 물품을 조사 문항에 포함했다.

실태조사를 수행하며 피해 주민들로부터 확인한 결과, 영업장의 가재도구, 가구 피해가 경제적 손실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식품업이거나 냉열 온도 조절이 필수적인 업종인 경우, 냉장고나 냉동 설비에 재고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전제품이나 집기 피해는 재고 손실로도 이어지며, 재구매 비용 역시 보상 받을 수 없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기 때문이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가구나 일반 집기도 동일하다. 또, 생존과 생활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에 포함되는 의류 역시 경제적 피해와 생활 불편으로 인한 피해 체감도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파악됐다.

가재도구 관련 답변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294명 중 68%(200명)가 극단적 피해 체감으로 응답하여, 주택 피해만큼 체감도가 높은 물적 피해에 해당됐다(표2-1-3). 산불로

인한 주택 피해 체감도가 가장 높은 영덕 지역이 가재도구의 극심한 피해 응답율도 가장 높고, 이후 안동, 의성 순이다.

추억이 깃든 물품 항목에서, 전체 응답자 295명 중 66%(196명)가 극심한 피해를 본 것으로 응답했다. 역시 주택의 극심한 산불 피해 응답이 가장 높은 영덕이 3개 지역 중 피해 정도가 가장 큰 것(약 89%)으로 나타나, 체감 피해의 일관성이 확인된다(표2-1-4).

[지역별 심층면접 결과]

안동-I: "포도 과수원 나무 전체가 열기에 타면서 한 그루도 남지 않고 전멸했고 수박 하우스 역시 철주 구조까지 열기에 휘어져 재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수십 년간의 투자가 물거품이 되었다"

안동-F: "작업실이 완전히 소실되었고, 작품들도 다 타버렸습니다. 퇴직한 지 10년 되었는데, 학교 연구실에서 작업하던 모든 작품을 이곳으로 옮겨놓았던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딸이 미술을 공부하면서 만든 작품들도 이곳에 보관했었는데, 그것도 다 타버렸습니다."

영덕-D: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거의 절반이 탔거든요. 주택이 전소됐다고... 창고는 거의 다 타고 판넬 창고는 거의 다 탔다고 봐야 돼."

의성-B: "저희 우리 동네에 10집이 있는데 10집 중에 한 집 빼고 9집이 다 탔어요. 동네 자체가 이제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모든 것이 전소가 됐어요. 집도 전소되고 살림살이도 전부 다."

의성-L: "전소된 밭들이 조금 많고 블루베리 밭도... 전소하고 사과밭도 한 하나 둘 세 군데는 전소했고... 사과밭 피해가 저희는 조금 많이 큰 편이에요."

[문항별 응답표]

표 2-1-3. 가재도구(가전제품, 가구, 옷 등)의 피해정도는 몇%입니까? (재해이전의 상태를 0% 피해로 간주, 10%단위로 기입)

| | (사례수) | 20% 미만 | 2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
|----|-----------------|---------------|------------------|------------------|------------------|----------------|
| 전체 | 294 (100.0%) | 89 (30.3%) | 2 (0.7%) | 3 (1.0%) | 0 (0.0%) | 200 (68.0%) |
| 안동 | 100 (100.0%) | 36 (36.0%) | 0 (0.0%) | 0 (0.0%) | 0 (0.0%) | 64 (64.0%) |
| 영덕 | 98 (100.0%) | 10 (10.2%) | 0 (0.0%) | 1 (1.0%) | 0 (0.0%) | 87 (88.8%) |
| 의성 | 96 (100.0%) | 43 (44.8%) | 2 (2.1%) | 2 (2.1%) | 0 (0.0%) | 49 (51.0%) |

표 2-1-4. 추억이 깃든 물건(사진, 편지, 일기장, 기념품 등)의 피해 정도는 몇%입니까? (재해이전의 상태를 0% 피해로 간주, 10%단위로 기입)

| | (사례수) | 20% 미만 | 2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
|----|-----------------|---------------|------------------|------------------|------------------|----------------|
| 전체 | 295 (100.0%) | 89 (30.2%) | 3 (1.0%) | 6 (2.0%) | 1 (0.3%) | 196 (66.4%) |
| 안동 | 100 (100.0%) | 37 (37.0%) | 0 (0.0%) | 0 (0.0%) | 0 (0.0%) | 63 (63.0%) |
| 영덕 | 98 | 7 | 0 | 3 | 1 | 87 |

| | | | | | | |
|----|----------------|---------------|-------------|-------------|-------------|---------------|
| | (100.0%) | (7.1%) | (0.0%) | (3.1%) | (1.0%) | (88.8%) |
| 의성 | 97 (100.0%) | 45 (46.4%) | 3 (3.1%) | 3 (3.1%) | 0 (0.0%) | 46 (47.4%) |

[행정기관 피해 평가 체감도]

주택장, 영업장, 가재도구에 대해 행정기관의 피해 평가가 자가 평가와 어떻게 달랐는지 묻는 항목에선, 3개 항목 모두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행정기관이 과소평가했다고 응답했다.

주택의 경우, 전체 응답자 223명 중 약 67%(149명)가 행정기관이 피해를 과소평가했다고 밝혔다. 안동 지역(77%)이 과소평가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의성(63%)과 영덕(약 62%) 지역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표2-2-1).

영업장 피해 평가는 전체 응답자의 약 71%가 과소평가됐다고 응답했다. 영업장 과소평가 피해 응답이 가장 높은 곳은 해당 부분 피해 체감도가 가장 높았던 지역과 동일하게 의성(약 74%), 안동(약 69%), 영덕(약 68%) 순이다(표2-2-2).

가재도구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80%가 행정기관이 피해를 과소평가했다고 응답했다(표2-2-3). 이렇게 생각하는 응답자는 지역별로는 안동(약 89%), 의성(약 85%), 영덕(70%) 순으로 나타나, 주택이나 영업장 피해보다 더 과소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심층면접 결과]

안동-G: "NDMS에 주택이랑 농기계는 포함되는데, 빠지는게 많았다. 창고 안에 있던 박스, 파레트, 과일 상자, 보관 곡물(사과·콩·고추·깨 등)이 통째로 불탔으나 보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3000평 이상 과수원이 전파되어도 보상금이 '수십만 원' 수준으로 나온 데도 있다."

안동-H: "임야 20만 평을 1시간 정도 둘러보고 끝나는 수준이다...이 단계에서부터 이미 서류 요건에 안맞다는 이유로 여러가지 피해 복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영덕-A: "주택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도 있고 한옥 판넬 구조도 있는데 단가가 다 다른데 똑같이 50년 된 집이나 1년 된 주택이나 똑같이 판정 해가지고 돈을 줬으니까 불합리하지... 10억짜리 집도 8천만 원 받았고 그냥 평수 항공 사진에 나오는 평수대로 해서 그냥 줘버렸어요."

영덕-B: "손해 사정이 한 사람 와가지고 분명히 나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이 집은 한 80%는 탄 것 같으니 하면서 이려고 갔는데 군에서 와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소파(소규모 파손)가 돼 있더라고... 수리하는데 한 5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소파로 판정을 받으니 보상을 210만 원 나왔단 말이야 이 돈으로 어떻게 수리를 하겠어요."

의성-K: "제가 정리한 피해 리스트는 300가지가 넘는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접수된 건 열 손가락이 안 돼요. 가전제품이나 귀중품은 입력 항목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의성-F: "정신없는 와중에 조사를 하니까 경운기랑 농기계 몇 개를 빠뜨렸어요. 나중에

말하니까 이미 (NDMS 입력이) 끝나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의성-A: “공무원들이 와서 그냥 보고 가는 정도였지, 제대로 된 조사나 주민 의견을 듣는 과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의성-E: “피해액이 대충 계산해도 5억에서 6억 정도인데, 재해 보상은 쥐꼬리만큼 나왔어요. 태양광 시설에 2억 넘게 투자했는데 한 번에 다 녹아내려도 보험 안 들었다고 보상 하나도 안 해줍니다. 같잖치가 않잖아.”

[문항별 응답표]

표 2-2-1. 행정기관의 ‘피해 정도’ 평가는, 귀하의 평가와 비교해 어떠했습니까? [주택]

| | (사례수) | 행정기관이 과소평가했다 | 비슷했다 | 행정기관이 과대평가했다 |
|----|-----------------|-----------------|---------------|-----------------|
| 전체 | 223 (100.0%) | 149 (66.8%) | 70 (31.4%) | 4 (1.8%) |
| 안동 | 70 (100.0%) | 54 (77.1%) | 16 (22.9%) | 0 (0.0%) |
| 영덕 | 96 (100.0%) | 59 (61.5%) | 37 (38.5%) | 0 (0.0%) |
| 의성 | 57 (100.0%) | 36 (63.2%) | 17 (29.8%) | 4 (7.0%) |

표 2-2-2. 행정기관의 ‘피해 정도’ 평가는, 귀하의 평가와 비교해 어떠했습니까?

[영업장(농지, 공장, 상점, 농기구 등)]

| | (사례수) | 행정기관이 과소평가했다 | 비슷했다 | 행정기관이 과대평가했다 |
|----|-----------------|-----------------|---------------|-----------------|
| 전체 | 233 (100.0%) | 165 (70.8%) | 67 (28.8%) | 1 (0.4%) |
| 안동 | 90 (100.0%) | 62 (68.9%) | 28 (31.1%) | 0 (0.0%) |
| 영덕 | 57 (100.0%) | 39 (68.4%) | 18 (31.6%) | 0 (0.0%) |
| 의성 | 86 (100.0%) | 64 (74.4%) | 21 (24.4%) | 1 (1.2%) |

표 2-2-3. 행정기관의 ‘피해 정도’ 평가는, 귀하의 평가와 비교해 어떠했습니까?

[가재도구(가전제품, 가구, 옷 등)]

| | (사례수) | 행정기관이 과소평가했다 | 비슷했다 | 행정기관이 과대평가했다 |
|----|-----------------|-----------------|---------------|-----------------|
| 전체 | 213 (100.0%) | 170 (79.8%) | 39 (18.3%) | 4 (1.9%) |
| 안동 | 70 (100.0%) | 62 (88.6%) | 8 (11.4%) | 0 (0.0%) |
| 영덕 | 90 (100.0%) | 63 (70.0%) | 27 (30.0%) | 0 (0.0%) |
| 의성 | 53 (100.0%) | 45 (84.9%) | 4 (7.5%) | 4 (7.5%) |

[교차분석 결과: 물적 피해와 행정기관 피해 평가 체감도]

피해 체감 정도와 행정기관의 피해 평가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를 교차분석한 결과, 물적 피해 체감도가 높을수록 행정기관이 과소평가 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주택 피해의 경우(분석표 2-1), 피해 체감이 높은 집단(66%)과 피해 체감이 낮은 집단(72%) 모두 피해가 과소평가됐다고 응답했다. 피해 체감이 낮은 집단에서도 과소평가되었다고 응답했다는 것은, 피해 체감도와 무관하게 주택 피해에 대한 행정기관 평가가 전반적으로 피해 주민들의 실제 손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영업장 피해 교차분석 결과(분석표 2-2), 피해 체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84%가 과소평가됐다고 응답한 반면, 피해 체감이 낮은 집단에서는 55%가 과소평가됐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차이는 영업장 피해가 다른 항목에 비해 피해 범위가 넓고 복잡한 데서 비롯된다. 영업장 피해는 직접적인 물적 손실 외에도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간접 손실, 미래 수익 손실까지 포함되지만, 행정 산정 기준에서는 이를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복구 이후에도 영업 재개까지의 공백으로 인한 매출 손실 등 연쇄적인 피해가 이어지지만, 행정기관의 평가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행정기관 평가 과정에서 감가상각이 적용되면 실제 체감 피해와의 괴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가재도구 피해의 경우(분석표 2-3), 피해 체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82%, 체감이 낮은 집단에서는 62%가 과소평가됐다고 응답했다. 가재도구는 품목이 다양하고 피해 전후를 일일이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실제 손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행정기관의 평가 | 주택 피해 체감 정도 높음 | 주택 피해 체감 정도 낮음 |
|----------|-----------------|----------------|
| 과대평가 했다 | 1.0% (2명) | 6.3% (2명) |
| 비슷했다 | 33.0% (63명) | 21.9% (7명) |
| 과소평가했다 | 66.0% (126명) | 71.9% (23명) |

<분석표 2-1> 표 2-1-1과 표 2-2-1의 문항 답변 교차분석 결과. (N=223)

| 행정기관의 평가 | 영업장 피해 체감 정도 높음 | 영업장 피해 체감 정도 낮음 |
|----------|-----------------|-----------------|
| 과대평가 했다 | 0.0% (0명) | 0.9% (1명) |
| 비슷했다 | 16.1% (20명) | 43.9% (47명) |
| 과소평가했다 | 83.9% (104명) | 55.1% (59명) |

<분석표 2-2> 표 2-1-2와 표 2-2-2의 문항 답변 교차분석한 결과. (N=231)

| 행정기관의 평가 | 가재도구 피해 체감 정도 높음 | 가재도구 피해 체감 정도 낮음 |
|----------|------------------|------------------|
| 과대평가 했다 | 1.1% (2명) | 9.5% (2명) |

| | | |
|--------|-----------------|----------------|
| 비슷했다 | 17.4% (33명) | 28.6% (6명) |
| 과소평가했다 | 81.6% (155명) | 61.9% (13명) |

<분석표 2-3> 표 2-1-3과 표 2-2-3의 문항 답변 교차분석한 결과. (N=211)

[신체적 피해]

2025년 영남 초대형 산불은 다수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규모 재난인 만큼,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과 가족, 친척, 지인(이웃)의 신체적 피해 경험을 함께 조사했다.

산불로 인한 본인의 신체 피해(복수응답)는 기존 질환 악화 75건, 부상·질병 발생 69건으로 나타났다(표 2-3-1). 가족 및 친척 피해의 경우 부상·질병 발생 58건(가족 50건, 친척 8건), 기존 질환 악화 53건(가족 43건, 친척 10건)으로 나타났으며, 지인의 경우 기존 질환 악화 22건, 부상·질병 발생 16건으로 나타났다(표2-3-2~표2-3-4)

사망, 실종의 경우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 총 11명이 가족 또는 지인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 보면, 안동 3명, 영덕 7명, 의성 1명으로 집계됐다(표2-3-1~표2-3-4).

[지역별 심층면접 결과]

안동-I: "산불 이후 농장 정리하고 청소하느라고 발목 인대가 파열됐다. 여러 번 접질렸는데 이게 급해서 병원에도 못가고 그냥 뒀더니 완전히 끊어져서 붓고 통증이 심해지더라... 7월에 수술, 한 달 입원하고 재활이 오래 걸리고 있다. 지금도 100m 정도만 걸어도 아파서 쉬어야 하는 상태다. 몸이 힘드니까 단체 활동도 많이 참여하지를 못한다"

영덕-H: "우리 영감쟁이가 아파가 산불 나 충격받아가 영감쟁이가 아파 병원에 가 있었거든. ... 허리도 수술하고 심장이 좀 안 좋아... 충격 받아서 놀래가지고... (결국 사망)"

의성-K: "산불로 직접적인 부상을 입으신 분들도 주변에 많으세요. 산불을 끄러 가셨다가 굴러 떨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지셨거나... 피난 가시다가 넘어지셔서 발목이 부러지신 분도 있으시고."

의성-A: "그때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 계속 타고 있었고 막 물이 없어 가지고 냇가 가서 물 길러와서 막 붓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계속 유독가스를 마셨어요. 그래서인지 요즘에 마을에 폐기능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시는 분도 더 생기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이 뭔가 건강이 왠지 모르게 좀 어디 안 좋은 것 같아요."

의성-D: "계곡에 낙엽이 거의 가슴까지 쌓여 있었는데... 낙엽 속에 바위나 돌 틈 사이에 발이 끼어 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발이 낀 상태에서 넘어지다 보니까 무릎팍이 돌아간 거지. (..) "수술비가 지금 벌써 350에서 400만 원 가까이 들었는데... 소방서에서도 이거를 신청 자료를 내라 그러면 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한도가 300만 원이래요... 나는 300만 원 차라리 안 받고 말겠다고. 자기네들은 면피를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문항별 응답표]

표 2-3-1. 재해로 인해 귀하를 포함한 가족, 친척, 지인 등이 입은 신체적 피해에 대해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복수응답) [본인]

| | 해당 사항 없음 | 기존 질환의 악화 | 부상, 질병발생 | 사망, 실종 | 잘 모름 |
|----|----------|-----------|----------|--------|------|
| 전체 | 150 | 75 | 69 | 0 | 12 |
| 안동 | 45 | 32 | 32 | 0 | 2 |
| 영덕 | 67 | 25 | 10 | 0 | 0 |
| 의성 | 38 | 18 | 27 | 0 | 10 |

표 2-3-2. 재해로 인해 귀하를 포함한 가족, 친척, 지인 등이 입은 신체적 피해에 대해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복수응답) [가족]

| | 해당 사항 없음 | 기존 질환의 악화 | 부상, 질병발생 | 사망, 실종 | 잘 모름 |
|----|----------|-----------|----------|--------|------|
| 전체 | 168 | 43 | 50 | 4 | 8 |
| 안동 | 53 | 22 | 24 | 2 | 4 |
| 영덕 | 73 | 12 | 5 | 2 | 0 |
| 의성 | 42 | 9 | 21 | 0 | 4 |

표 2-3-3. 재해로 인해 귀하를 포함한 가족, 친척, 지인 등이 입은 신체적 피해에 대해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복수응답) [친척]

| | 해당 사항 없음 | 기존 질환의 악화 | 부상, 질병발생 | 사망, 실종 | 잘 모름 |
|----|----------|-----------|----------|--------|------|
| 전체 | 199 | 10 | 8 | 0 | 14 |
| 안동 | 81 | 5 | 3 | 0 | 8 |
| 영덕 | 67 | 3 | 0 | 0 | 4 |
| 의성 | 51 | 2 | 5 | 0 | 2 |

표 2-3-4. 재해로 인해 귀하를 포함한 가족, 친척, 지인 등이 입은 신체적 피해에 대해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복수응답) [지인]

| | 해당 사항 없음 | 기존 질환의 악화 | 부상, 질병발생 | 사망, 실종 | 잘 모름 |
|----|----------|-----------|----------|--------|------|
| 전체 | 176 | 22 | 16 | 7 | 17 |
| 안동 | 75 | 9 | 5 | 1 | 8 |
| 영덕 | 55 | 7 | 4 | 5 | 6 |
| 의성 | 46 | 6 | 7 | 1 | 3 |

3. 재해 직후 대피

3장은 산불 발생 당시 피해 주민들의 대피 과정과 임시 거주 단계에서의 행정 대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재난 문자 수신 여부와 대피 정보 전달 경로, 대피 수단, 임시 대피소 및 임시 거주지에서의 물품 지원과 정보 제공 수준을 조사함으로써, 재난 초기의 행정 대응이 피해 주민의 안전 확보와 기본 생활 지원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능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대피 방법 및 수단]

대형 산불이나 수해와 같은 재난 발생 시, 대피를 알리는 재난문자는 시·군·구 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초기 대응 중 하나다. 사망, 부상 같은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피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난 지역이 광범위하고 산발적일 경우, 소방과 경찰의 제한된 자원만으로는 모든 현장에 구조 인력을 즉각 투입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실태조사 응답 결과, 이번 산불 재난 때 피해자들은 재난문자보다는 마을 방송이나 이웃 주민을 통해 대피 방법 등의 정보를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 297명 중 62%(185명)가 재난문자를 받았다고 답한 반면(표3-1), 대피해야 한다는 사실이나 대피 방법을 확인한 경로는 마을 방송과 마을 주민(237건)이 재난문자(112건)보다 높았다. TV·라디오나 공무원을 통한 정보 전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응답자 중 약 38%(112명)는 재난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표3-2).

대피 수단으로는 승용차(약 85%, 246건)가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됐다. 영덕의 경우, 배(8건)를 이용한 대피가 있었다(표3-3). 차량으로 대피한 응답자들의 차량 이용 방식을 보면, 본인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 60%로 가장 많았고 마을 주민 차량(약 17%), 가족이나 친척 차량(15%)이 뒤를 이었다(표 3-4). 한편, 응답자 중 87%(260명)가 산불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답했다(표3-5).

[지역별 응답]

영덕은 전체 응답자 100명 중 48%만 재난 문자를 받았다고 응답해(표3-1), 3개 지역 중 재난문자 수신율이 가장 저조했고, 마을 방송과 마을 주민(89건)을 통해 대피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3-2). 두 응답 결과를 통해, 재난 문자를 받았다고 응답한 48명 중 산불 당시 이 문자를 통해 대피 정보를 확인한 사례(22건)가 절반에 못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2건, 표 3-2).

안동은 재난문자 수신율이 3개 지역 중 가장 높았지만(70%), 마을 방송과 마을 주민을 통해 대피했다는 응답(79건)이 재난문자(51건)에 비해 높았다. 재난문자를 받았다고 응답한 70명 중 산불 당시 이 문자를 통해 대피 정보를 확인한 것은 51건이었다(표 3-2).

의성의 경우, 재난문자 수신율이 안동만큼 높았지만(69%), 이곳 역시 마을 방송과 마을 주민을 통해 대피했다는 응답(69건)이 재난문자(39건)에 비해 높았다. 재난문자를 받았다고 응답한 67명 중 산불 당시 이 문자를 통해 대피 정보를 확인한 사례는 39건이었다(표 3-2).

결론적으로 재난문자 수신율은 재난 지역 내에서도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고, 마을 방송이나 주민이 대피 정보 입수에 더 직접적인 경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지역별 심층면접 결과]

안동-E: "면사무소에서 대피 요청이 왔지만 어떤 어른들이 '불이 여기까지 오겠나'라며 대피를 안하겠다고 했다. 그 때 당시에는 제대로 안내나 지시가 없었다. 용산초등학교로 대피하라고 해서 갔는데 체육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일부는 88회관으로 가고 나눠서 대피하게 됐다. 산불에 대한 매뉴얼이나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건지 우왕좌왕했다"

안동-J: 남선 주민들한테 구체적인 대피 안내나 지시가 없었다. 대피 문자가 이미 산이 불로 다 포위된 뒤에야 오후 5시 30, 36분 쯤에 전 주민 대피하라고 뒤늦게 왔다. 마을확성기는 지형적 문제인지 들리지 않았다. 거동이 어려운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 대피하는데 차가 꽉 막히고 불 붙은 나뭇가지가 차로 떨어지고 재난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걸 경험했다.

영덕-E: "재난 문자 문자를 사실 문자가 아니고 이장이 방송을 하고 방송을 할 적에는 들었는데 좀 있으니까 정전이 돼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송도 안 되고"

영덕-J: "재난 문자 이거 참 골치 아프네. 이게 내가 방송하고 내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문자를 늦게 받았어. 그게 몇 시간 차이 나지... 저녁 8시에 대피해라 방송해 놓고 나게네 저녁 10시 근처 돼가지고 문자를 받았단 말이야."

의성-K: "우리 마을 '사천1리 주민은 산불 확산됐으니까 인근 체육관으로 피신하세요 대피하세요'라는 문자는 오후 5시에 산불이 우리 마을에 휩싸인 다음에 받았는데 그 전까지는 (...) 산불이 어디 정도까지 오고 있다는 감각은 있었던 거죠. (마을이 탄 건 3시쯤인데 문자는 5시에 음)"

의성-G: "재난 문자 하나도 발송하지 않았고요. 제 핸드폰에 찍히지 않았고요. 누구 하나 대피 명령도 하지 않았고요. 정말 산불이 났을 때 제가 우리 면장님을 불렀는데 우리 면장님께서선 올라오시다가 도망을 가버렸고요."

의성-I: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서로 아는 사람끼리 통화를 해가면서 어느 쪽으로 못 가니까 어느 쪽으로 빠지자 어느 쪽으로 빠지자 이렇게 마을 주민 자체 내로 통화하면 서 피해 나갔어요. 그 다음에 차가 없어서 고립된 분들은 누가 아직 못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 차로 가서 불구덩이 속에서 예 그래서 나가다가 잘못해서 죽을 뻔한 사람도 있었어요."

[문항별 응답표]

표 3-1. 재해 당시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재난 문자를 받으셨습니까?

| | (사례수) | 받았다 | 받지 못했다 |
|----|-----------------|----------------|----------------|
| 전체 | 297 (100.0%) | 185 (62.3%) | 112 (37.7%) |
| 안동 | 100 (100.0%) | 70 (70.0%) | 30 (30.0%) |
| 영덕 | 100 (100.0%) | 48 (48.0%) | 52 (52.0%) |
| 의성 | 97 (100.0%) | 67 (69.1%) | 30 (30.9%) |

표 3-2. 재해 당시 대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들었습니까?(복수응답)

| | 재난 문자 | TV,라디오 | 마을 방송 | 마을 주민 | 경찰,소방관 등 공무원 등 통해 직접 | 기타 | 듣지못했다 |
|----|-------|--------|-------|-------|-------------------------------------|----|-------|
| 전체 | 112 | 21 | 144 | 93 | 27 | 5 | 36 |
| 안동 | 51 | 10 | 44 | 35 | 10 | 0 | 14 |
| 영덕 | 22 | 5 | 62 | 27 | 1 | 2 | 12 |
| 의성 | 39 | 6 | 38 | 31 | 16 | 3 | 10 |

표 3-3. 구조되거나 대피소로 이동할 때 이용한 수단은 다음 중 무엇이었습니까?

| | (사례수) | 승용차 | 도보 | 배 | 버스 | 기타 |
|----|-----------------|----------------|-------------|-------------|-------------|--------------|
| 전체 | 291 (100.0%) | 246 (84.5%) | 9 (3.1%) | 8 (2.7%) | 7 (2.4%) | 21 (7.2%) |
| 안동 | 97 (100.0%) | 83 (85.6%) | 4 (4.1%) | 0 (0.0%) | 2 (2.1%) | 8 (8.2%) |
| 영덕 | 97 (100.0%) | 78 (80.4%) | 1 (1.0%) | 8 (8.2%) | 3 (3.1%) | 7 (7.2%) |
| 의성 | 97 (100.0%) | 85 (87.6%) | 4 (4.1%) | 0 (0.0%) | 2 (2.1%) | 6 (6.2%) |

표 3-4. 차량을 이용해 대피하셨다면, 어떤 종류의 차량이었습니까?

| | (사례수) | 본인의 차 | 마을 주민의 차 | 가족이나 친척의 차 | 경찰,소방, 구급 등 공공구조차량 | 기타 |
|----|-----------------|----------------|---------------|---------------|-----------------------------|--------------|
| 전체 | 278 (100.0%) | 167 (60.1%) | 46 (16.5%) | 42 (15.1%) | 11 (4.0%) | 12 (4.3%) |
| 안동 | 93 (100.0%) | 64 (68.8%) | 9 (9.7%) | 12 (12.9%) | 3 (3.2%) | 5 (5.4%) |
| 영덕 | 89 (100.0%) | 40 (44.9%) | 25 (28.1%) | 17 (19.1%) | 4 (4.5%) | 3 (3.4%) |
| 의성 | 96 (100.0%) | 63 (65.6%) | 12 (12.5%) | 13 (13.5%) | 4 (4.2%) | 4 (4.2%) |

표 3-5. 재해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까?

| | (사례수)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
| 전체 | 299 (100.0%) | 260 (87.0%) | 39 (13.0%) |
| 안동 | 99 (100.0%) | 89 (89.9%) | 10 (10.1%) |
| 영덕 | 100 (100.0%) | 84 (84.0%) | 16 (16.0%) |
| 의성 | 100 (100.0%) | 87 (87.0%) | 13 (13.0%) |

[임시 대피소 경험 및 평가]

임시 대피소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이 위험을 피하여 일시적으로 대피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 또는 시설¹⁷로, 재난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 주민 대다수가 가장 처음 모이는 공간이다.

¹⁷ 행정안전부 재난대피시설 운영·관리 지침

실태조사 팀은 2025년 영남 초대형 산불에 앞선 많은 대형 산불 현장에서, 행정기관의 임시 대피소 운영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해왔다. 이에, 임시 대피소에서의 물품 공급 신속성, 적절성, 공정성을 평가하고 임시 대피소 이동 횟수 등 대피 기간에 경험한 일들을 조사하여, 앞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반영되어야 할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했다. 또, 재난 현황 및 피해 복구 지원 절차 등 피해 주민들의 심신 안정과 차후 대책 수립이 긴요한 정보의 제공 적절성도 조사했다.

전체 응답자 300명 중 약 65%(194명)가 주거지를 떠난 직후부터 임시 대피소에 머물렀다고 응답했다. 앞서 주택 피해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왔던 영덕이 임시 대피소 체류 응답이 가장 높았고(81%), 의성(59%)과 안동(54%)은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표3-6).

놀랍게도 임시 대피소에 체류한 피해 주민(192명) 중 92%가 한 차례 이상 대피소를 옮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2회 이동한 비율이 39%로 가장 높았고, 4회 이상 옮겼던 비율도 약 8%에 달했다(표3-7).

임시 대피소 유형(복수응답)으로는 공공체육시설(119건)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학교(62건), 마을회관(57건), 숙박업소(43건) 순으로 나타났다(표3-8).

[지역별 심층면접 결과]

안동-E: "바닥에 은박지를 깔고 담요 하나로 자고....아침에는 김밥 한 줄과 우유 한 개 받았습시다. 씻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대피소에서는 그냥 개돼지 취급이지 뭐..."

안동-J: "대피소에 들어간 사람에게만 식비·숙박비가 지원됐다. 임시대피소 못가는 사람도 있는데 병간호를 해야 한다거나 치매가 걸렸다거나 또 병이 있거나 해서 친척집에 머문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되는거다"

영덕-D: "그날은 뭐 완전히 막 대피소 안에도 연기가 짝 차 가지고 사람이 수백 명 모였는데 정보도 전할 길도 없었고... 정보 주는 사람이 없었지 밖에 못 나가니까 밖에 상황도 잘 모르겠고 도데체가 어떻게 해야지를 몰랐어요."

영덕-C: "텐트는 첫날은 안 오고 한 3일 만에 들어왔는데... 그전까지는 그냥 바닥에... 밑에 깔판 깔고 그리고 나서 이불을 줘서 이불 깔고 지냈어요 그리고 대피소 내부 공기가 엄청 안 좋았어요. ... 그날 저녁에 불이 대피소 앞산에 붙고 강에도 불이 붙어가... 연기가 대피소 안으로 막 들어오니깐... 호흡 곤란이 제일 힘들어서 눈이 맵고 눈도 제대로 못 떴지."

의성-E: "대피소에서는 잠도 오지도 않고, 잠도 올 수도 없고. 시끄럽고 뭐 복잡하고 좁고. 이 저 환풍기 소리에 마, 잠도 잘 수도 없고 고달파, 있지도 못 해."

의성-K: "체육관에 바로 샤워 시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샤워 시설을 뭐 씻으려면 또 저 위에까지 또 올라 가야되고 그래서 이제 좀 일상생활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문항별 응답표]

표 3-6. 주거지에서 대피한 후, 임시대피소에 거주하셨습니까?

| | (사례수)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
| 전체 | 300 (100.0%) | 194 (64.7%) | 106 (35.3%) |
| 안동 | 100 (100.0%) | 54 (54.0%) | 46 (46.0%) |
| 영덕 | 100 (100.0%) | 81 (81.0%) | 19 (19.0%) |
| 의성 | 100 (100.0%) | 59 (59.0%) | 41 (41.0%) |

표 3-7. 총 몇번 임시대피소를 옮겼습니까?

| | (사례수) | 0번 | 1번 | 2번 | 3번 | 4번 이상 |
|----|-------------------------------|---------------|---------------|---------------|---------------|--------------|
| 전체 | 192 ¹⁸ (100.0%) | 15 (7.8%) | 56 (29.2%) | 75 (39.1%) | 31 (16.1%) | 15 (7.8%) |
| 안동 | 52 (100.0%) | 0 (0.0%) | 12 (23.1%) | 21 (40.4%) | 11 (21.1%) | 8 (15.4%) |
| 영덕 | 81 (100.0%) | 11 (13.6%) | 26 (32.1%) | 27 (33.3%) | 13 (16.1%) | 4 (4.9%) |
| 의성 | 59 (100.0%) | 4 (6.8%) | 18 (30.5%) | 27 (45.8%) | 7 (11.9%) | 3 (5.1%) |

표 3-8. 귀하가 머물렀던 임시대피소는 다음 중 어디에 마련되었습니까? (복수응답)

| | 공공체육시설 | 학교 | 마을회관 | 숙박업소 | 기타 |
|----|--------|----|------|------|----|
| 전체 | 119 | 62 | 57 | 43 | 32 |
| 안동 | 30 | 29 | 23 | 17 | 6 |
| 영덕 | 60 | 9 | 20 | 15 | 19 |
| 의성 | 29 | 24 | 14 | 11 | 7 |

[임시 대피소 보급 물품별 평가]

재난 피해 주민들의 임시 대피소 체류 경험은 ‘재난 속 작은 재난’의 연속이다. 전국적으로 지역별, 행정기관별 재난 경험 이력에 따라 행정 대응 체계, 지원 서비스, 보급 물품의 수준 등에서 큰 차이가 있고, 이는 주민들의 만족도나 편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주민 간 갈등이나 심리적 피해까지 초래하게 된다. 실태조사 팀은 임시 대피소 체류 주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물품으로 침구류, 세면도구, 수건, 옷, 여성용품, 의약품, 물, 음식, 사생활 보호 용품(칸막이, 텐트 등), 기반 시설(전기, 냉난방 등)을 선정하고, 이의 제공이 신속성, 공정성, 적절성을 충족하고 있는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체 물품 중 물이 세 가지 평가항목에서 가장 높은 긍정 응답을 보였다(신속성 72%, 공정성 67%, 적절성 70%). 음식은 신속성(62%)과 공정성(62%)에서 비교적 높은 긍정 응답을 얻었으나 적절성(57%)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위생용품(세면도구, 수건 등)과 의약품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세 항목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위생용품: 신속성 52%, 공정성 53%, 적절성 52%; 의약품: 신속성 49%, 공정성 53%, 적절성 51%). 반면, 여성용품은 여성 응답자만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세 항목 모두 부정 응답(신속성 43%, 공정성 34%, 적절성 38%)이 긍정 응답(신속성 34%, 공정성 31%, 적절성 30%)보다 높게 나타났다.

¹⁸ 임시 대피소 거주자 194명 중 2명 결측 발생함.

침구류는 세 항목에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적절성이 가장 낮았다(신속성 48%, 공정성 49%, 적절성 43%). 옷은 공정성(41%)은 비교적 나은 편이었으나 적절성에서 긍정 응답(26%)보다 부정 응답(45%)이 크게 높아 전 항목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신속성: 긍정 35%, 부정 43%; 공정성: 긍정 41%, 부정 31%/적절성: 긍정 26%, 부정 45%).

기반시설(전기, 냉난방 등)은 공정성(50%)과 적절성(51%)에서 과반이 긍정적이었으나 신속성(47%)은 이보다 낮았다. 사생활 보호(칸막이, 텐트 등)는 세 항목 모두에서 부정 응답이 긍정 응답을 상회했으며(신속성: 긍정 27%, 부정 52%/공정성: 긍정 37%, 부정 42%; 적절성: 긍정 33%, 부정 46%), 신속성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만 37%에 달했다.

[지역별 응답표]

안동은 옷, 여성용품, 사생활 보호에서 세 항목 모두 부정 응답이 긍정 응답을 상회했다. 옷은 적절성에서 53명 중 적절했다(6건)와 그렇지 않다(38건)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신속성에서도 53명 중 신속했다는 11건, 그렇지 않다는 34건이었다. 여성용품은 신속성에서 30명 중 신속했다는 8건이었고 그렇지 않다는 15건으로 절반에 달했다. 사생활 보호 물품은 신속성에서는 53명 중 신속했다 9건, 그렇지 않다 36건이었고, 이 중 23건이 '전혀 그렇지 않다'였다. 침구류는 긍정이 부정보다 많았으나(신속성: 긍정 21건, 부정 18건; 적절성: 긍정 19건, 부정 18건), 그 차이가 조사 대상 세 지역 중 가장 적었다(표 3-9).

영덕은 부정 응답이 긍정을 상회한 항목이 옷 적절성(80명 중 적절했다 26건, 그렇지 않다 29건) 하나뿐이었다. 사생활 보호 물품의 신속성도 78명 중 신속했다 28건, 그렇지 않다 27건으로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여성용품은 세 항목 모두 긍정이 부정보다 많았으나 그 차이가 2~4건으로 근소했다(적절성: 27명 중 적절했다 11건, 그렇지 않다 9건)(표 3-9).

의성은 여성용품과 사생활 보호에서 세 항목 모두 부정이 긍정을 상회했다. 사생활 보호의 신속성에서는 49명 중 신속했다 11건, 그렇지 않다 31건이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가 26건으로 세 지역 중 가장 많았다. 공정성에서도 46명 중 공정했다 9건, 그렇지 않다 29건이었다. 기반시설에서도 신속성은 47명 중 신속했다 14건, 그렇지 않다 17건, 공정성은 45명 중 공정했다와 그렇지 않다가 각각 15건으로 부정이 긍정과 같거나 더 많았다. 옷도 신속성에서 43명 중 신속했다 16건, 그렇지 않다 17건, 적절성에서 45명 중 적절했다 14건, 그렇지 않다 13건으로 긍정과 부정이 거의 비슷했다(표 3-9).

[문항별 응답표]

표 3-9. 임시대피소에 머무면서 필요한 물품(침구, 세면도구, 수건, 옷 등)을 보급하는 과정에 대해 신속성, 공정성, 적절성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물품 | 평가항목 | 지역 | 사례 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옷 | 신속성 | 전체 | 175 | 45 (25.7%) | 31 (17.7%) | 38 (21.7%) | 32 (18.3%) | 29 (16.6%) |
| | | 안동 | 53 | 19 (35.8%) | 15 (28.3%) | 8 (15.1%) | 9 (17.0%) | 2 (3.8%) |

| | | | | | | | | | |
|------|-----|-----|-----|---------------|---------------|---------------|---------------|---------------|---------------|
| | | 영덕 | 79 | 15 (19.0%) | 10 (12.7%) | 20 (25.3%) | 16 (20.3%) | 18 (22.8%) | |
| | | 의성 | 43 | 11 (25.6%) | 6 (14.0%) | 10 (23.3%) | 7 (16.3%) | 9 (20.9%) | |
| | 공정성 | 전체 | 177 | 33 (18.6%) | 21 (11.9%) | 51 (28.8%) | 37 (20.9%) | 35 (19.8%) | |
| | | 안동 | 53 | 10 (18.9%) | 12 (22.6%) | 16 (30.2%) | 13 (24.5%) | 2 (3.8%) | |
| | | 영덕 | 79 | 12 (15.2%) | 5 (6.3%) | 24 (30.4%) | 16 (20.3%) | 22 (27.8%) | |
| | | 의성 | 45 | 11 (24.4%) | 4 (8.9%) | 11 (24.4%) | 8 (17.8%) | 11 (24.4%) | |
| | 적절성 | 전체 | 178 | 50 (28.1%) | 30 (16.9%) | 52 (29.2%) | 24 (13.5%) | 22 (12.4%) | |
| | | 안동 | 53 | 20 (37.7%) | 18 (34.0%) | 9 (17.0%) | 3 (5.7%) | 3 (5.7%) | |
| | | 영덕 | 80 | 24 (30.0%) | 5 (6.2%) | 25 (31.2%) | 11 (13.8%) | 15 (18.8%) | |
| | | 의성 | 45 | 6 (13.3%) | 7 (15.6%) | 18 (40.0%) | 10 (22.2%) | 4 (8.9%) | |
| | 침구류 | 신속성 | 전체 | 180 | 25 (13.9%) | 22 (12.2%) | 46 (25.6%) | 42 (23.3%) | 45 (25.0%) |
| | | | 안동 | 53 | 9 (17.0%) | 9 (17.0%) | 14 (26.4%) | 16 (30.2%) | 5 (9.4%) |
| | | | 영덕 | 80 | 4 (5.0%) | 10 (12.5%) | 20 (25.0%) | 18 (22.5%) | 28 (35.0%) |
| | | | 의성 | 47 | 12 (25.5%) | 3 (6.4%) | 1 (2.1%) | 8 (17.0%) | 12 (25.5%) |
| | | 공정성 | 전체 | 178 | 2 (1.1%) | 17 (9.6%) | 49 (27.5%) | 41 (23.0%) | 46 (25.8%) |
| | | | 안동 | 53 | 6 (11.3%) | 9 (17.0%) | 20 (37.7%) | 14 (26.4%) | 4 (7.5%) |
| 영덕 | | | 79 | 7 (8.9%) | 6 (7.6%) | 18 (22.8%) | 14 (17.7%) | 34 (43.0%) | |
| 의성 | | | 46 | 12 (26.1%) | 2 (4.3%) | 11 (23.9%) | 13 (28.3%) | 8 (17.4%) | |
| 적절성 | | 전체 | 184 | 22 (12.0%) | 24 (13.0%) | 59 (32.1%) | 35 (19.0%) | 44 (23.9%) | |
| | | 안동 | 53 | 7 (13.2%) | 11 (20.8%) | 16 (30.2%) | 14 (26.4%) | 5 (9.4%) | |
| | | 영덕 | 81 | 8 (9.9%) | 8 (9.9%) | 24 (29.6%) | 12 (14.8%) | 29 (35.8%) | |
| | | 의성 | 50 | 7 (14.0%) | 5 (10.0%) | 19 (38.0%) | 9 (18.0%) | 10 (20.0%) | |
| 위생용품 | | 신속성 | 전체 | 175 | 24 (13.7%) | 15 (8.6%) | 46 (26.3%) | 40 (22.9%) | 50 (28.6%) |
| | | | 안동 | 53 | 8 (15.1%) | 5 (9.4%) | 15 (28.3%) | 16 (30.2%) | 9 (17.0%) |
| | | | 영덕 | 76 | 6 (7.9%) | 7 (9.2%) | 18 (23.7%) | 17 (22.4%) | 28 (36.8%) |
| | | | 의성 | 46 | 10 (21.7%) | 3 (6.5%) | 13 (28.3%) | 7 (15.2%) | 13 (28.3%) |
| | 공정성 | 전체 | 175 | 18 (10.3%) | 11 (6.3%) | 53 (30.3%) | 43 (24.6%) | 50 (28.6%) | |
| | | 안동 | 53 | 4 (7.5%) | 4 (7.5%) | 20 (37.7%) | 19 (35.8%) | 6 (11.3%) | |

| | | | | | | | | |
|----------|-----|----|-----|---------------|---------------|---------------|---------------|---------------|
| | | 영덕 | 77 | 5 (6.5%) | 4 (5.2%) | 19 (24.7%) | 15 (19.5%) | 34 (44.2%) |
| | | 의성 | 45 | 9 (20.0%) | 3 (6.7%) | 14 (31.1%) | 9 (20.0%) | 10 (22.2%) |
| | 적절성 | 전체 | 180 | 18 (10.0%) | 11 (6.1%) | 57 (31.7%) | 38 (21.1%) | 56 (31.1%) |
| | | 안동 | 53 | 3 (5.7%) | 6 (11.3%) | 19 (35.8%) | 18 (34.0%) | 7 (13.2%) |
| | | 영덕 | 79 | 8 (10.1%) | 3 (3.8%) | 21 (26.6%) | 13 (16.5%) | 34 (43.0%) |
| | | 의성 | 48 | 7 (14.6%) | 2 (4.2%) | 17 (35.4%) | 7 (14.6%) | 15 (31.2%) |
| 여성 용품 | 신속성 | 전체 | 68 | 18 (26.5%) | 11 (16.2%) | 16 (23.5%) | 12 (17.6%) | 11 (16.2%) |
| | | 안동 | 30 | 9 (30.0%) | 6 (20.0%) | 7 (23.3%) | 5 (16.7%) | 3 (10.0%) |
| | | 영덕 | 24 | 5 (20.8%) | 3 (12.5%) | 5 (20.8%) | 5 (20.8%) | 6 (25.0%) |
| | | 의성 | 14 | 4 (28.6%) | 2 (14.3%) | 4 (28.6%) | 2 (14.3%) | 2 (14.3%) |
| | 공정성 | 전체 | 68 | 16 (23.5%) | 7 (10.3%) | 24 (35.3%) | 8 (11.8%) | 13 (19.1%) |
| | | 안동 | 30 | 7 (23.3%) | 4 (13.3%) | 11 (36.7%) | 5 (16.7%) | 3 (10.0%) |
| | | 영덕 | 25 | 5 (20.0%) | 1 (4.0%) | 9 (36.0%) | 2 (8.0%) | 8 (32.0%) |
| | | 의성 | 13 | 4 (30.8%) | 2 (15.4%) | 4 (30.8%) | 1 (7.7%) | 2 (15.4%) |
| | 적절성 | 전체 | 73 | 21 (28.8%) | 7 (9.6%) | 23 (31.5%) | 10 (13.7%) | 12 (16.4%) |
| | | 안동 | 30 | 7 (23.3%) | 5 (16.7%) | 10 (33.3%) | 6 (20.0%) | 2 (6.7%) |
| | | 영덕 | 27 | 8 (29.6%) | 1 (3.7%) | 7 (25.9%) | 4 (14.8%) | 7 (25.9%) |
| | | 의성 | 16 | 6 (37.5%) | 1 (6.2%) | 6 (37.5%) | 0 (0.0%) | 3 (18.8%) |
| 의약 품 | 신속성 | 전체 | 177 | 25 (14.1%) | 18 (10.2%) | 48 (27.1%) | 40 (22.6%) | 46 (26.0%) |
| | | 안동 | 53 | 11 (20.8%) | 3 (5.7%) | 16 (30.2%) | 17 (32.1%) | 6 (11.3%) |
| | | 영덕 | 78 | 6 (7.7%) | 8 (10.3%) | 21 (26.9%) | 13 (16.7%) | 30 (38.5%) |
| | | 의성 | 46 | 8 (17.4%) | 7 (15.2%) | 11 (23.9%) | 10 (21.7%) | 10 (21.7%) |
| | 공정성 | 전체 | 171 | 20 (11.7%) | 14 (8.2%) | 47 (27.5%) | 41 (24.0%) | 49 (28.7%) |
| | | 안동 | 52 | 7 (13.5%) | 4 (7.7%) | 16 (30.8%) | 21 (40.4%) | 4 (7.7%) |
| | | 영덕 | 76 | 7 (9.2%) | 5 (6.6%) | 19 (25.0%) | 11 (14.5%) | 34 (44.7%) |
| | | 의성 | 43 | 6 (14.0%) | 5 (11.6%) | 12 (27.9%) | 9 (20.9%) | 11 (25.6%) |
| | 적절성 | 전체 | 178 | 21 (11.8%) | 9 (5.1%) | 57 (32.0%) | 44 (24.7%) | 47 (26.4%) |
| | | 안동 | 53 | 7 (13.2%) | 3 (5.7%) | 19 (35.8%) | 19 (35.8%) | 5 (9.4%) |

| | | | | | | | | |
|-------|-----------|------------|----------------------|-----------------------|-----------------------|-----------------------|-----------------------|-----------------------|
| 물 | | 영덕 | 79 | 7 (8.9%) | 3 (3.8%) | 23 (29.1%) | 18 (22.8%) | 28 (35.4%) |
| | | 의성 | 46 | 7 (15.2%) | 3 (6.5%) | 15 (32.6%) | 7 (15.2%) | 14 (30.4%) |
| | 신속성 | 전체 | 181 | 17 (9.4%) | 10 (5.5%) | 23 (12.7%) | 41 (22.7%) | 90 (49.7%) |
| | | 안동 | 54 | 6 (11.1%) | 3 (5.6%) | 10 (18.5%) | 19 (35.2%) | 16 (29.6%) |
| | | 영덕 | 80 | 4 (5.0%) | 6 (7.5%) | 7 (8.8%) | 8 (10.0%) | 55 (68.8%) |
| | | 의성 | 47 | 7 (14.9%) | 1 (2.1%) | 6 (12.8%) | 14 (29.8%) | 19 (40.4%) |
| | 공정성 | 전체 | 181 | 17 (9.4%) | 10 (5.5%) | 32 (17.7%) | 38 (21.0%) | 84 (46.4%) |
| | | 안동 | 54 | 4 (7.4%) | 4 (7.4%) | 13 (24.1%) | 18 (33.3%) | 15 (27.8%) |
| 영덕 | | 80 | 6 (7.5%) | 4 (5.0%) | 12 (15.0%) | 8 (10.0%) | 50 (62.5%) | |
| 의성 | | 47 | 7 (14.9%) | 2 (4.3%) | 7 (14.9%) | 12 (25.5%) | 19 (40.4%) | |
| 적절성 | 전체 | 182 | 14 (7.7%) | 10 (5.5%) | 30 (16.5%) | 41 (22.5%) | 87 (47.8%) | |
| | 안동 | 54 | 3 (5.6%) | 3 (5.6%) | 10 (18.5%) | 19 (35.2%) | 19 (35.2%) | |
| | 영덕 | 81 | 6 (7.4%) | 6 (7.4%) | 9 (11.1%) | 12 (14.8%) | 48 (59.3%) | |
| | 의성 | 47 | 5 (10.6%) | 1 (2.1%) | 11 (23.4%) | 10 (21.3%) | 20 (42.6%) | |
| 음식 | 신속성 | 전체 | 181 | 21 (11.6%) | 11 (6.1%) | 37 (20.4%) | 45 (24.9%) | 67 (37.0%) |
| | | 안동 | 54 | 7 (13.0%) | 4 (7.4%) | 15 (27.8%) | 22 (40.7%) | 6 (11.1%) |
| | | 영덕 | 78 | 5 (6.4%) | 2 (2.6%) | 10 (12.8%) | 11 (14.1%) | 50 (64.1%) |
| | | 의성 | 49 | 9 (18.4%) | 5 (10.2%) | 12 (24.5%) | 12 (24.5%) | 11 (22.4%) |
| | 공정성 | 전체 | 180 | 19 (10.6%) | 10 (5.6%) | 40 (22.2%) | 40 (22.2%) | 71 (39.4%) |
| | | 안동 | 53 | 5 (9.4%) | 5 (9.4%) | 14 (26.4%) | 20 (37.7%) | 9 (17.0%) |
| | | 영덕 | 78 | 5 (6.4%) | 3 (3.8%) | 13 (16.7%) | 8 (10.3%) | 49 (62.8%) |
| | | 의성 | 49 | 9 (18.4%) | 2 (4.1%) | 13 (26.5%) | 12 (24.5%) | 13 (26.5%) |
| | 적절성 | 전체 | 182 | 19 (10.4%) | 14 (7.7%) | 46 (25.3%) | 39 (21.4%) | 64 (35.2%) |
| | | 안동 | 54 | 5 (9.3%) | 6 (11.1%) | 18 (33.3%) | 16 (29.6%) | 9 (16.7%) |
| | | 영덕 | 79 | 7 (8.9%) | 4 (5.1%) | 13 (16.5%) | 12 (15.2%) | 43 (54.4%) |
| | | 의성 | 49 | 7 (14.3%) | 4 (8.2%) | 15 (30.6%) | 11 (22.4%) | 12 (24.5%) |
| 기반 시설 | 신속성 | 전체 | 179 | 21 (11.7%) | 27 (15.1%) | 47 (26.3%) | 35 (19.6%) | 49 (27.4%) |
| | | 안동 | 53 | 7 (13.2%) | 9 (17.0%) | 15 (28.3%) | 14 (26.4%) | 8 (15.1%) |

| | | | | | | | | | |
|-----|---------------|-----|-----|---------------|---------------|---------------|---------------|---------------|---------------|
| | | 영덕 | 79 | 6 (7.6%) | 9 (11.4%) | 16 (20.3%) | 15 (19.0%) | 33 (41.8%) | |
| | | 의성 | 47 | 8 (17.0%) | 9 (19.1%) | 16 (34.0%) | 6 (12.8%) | 8 (17.0%) | |
| | 공정성 | 전체 | 177 | 20 (11.3%) | 19 (10.7%) | 50 (28.2%) | 29 (16.4%) | 59 (33.3%) | |
| | | 안동 | 53 | 4 (7.5%) | 6 (11.3%) | 22 (41.5%) | 13 (24.5%) | 8 (15.1%) | |
| | | 영덕 | 79 | 7 (8.9%) | 7 (8.9%) | 13 (16.5%) | 10 (12.7%) | 42 (53.2%) | |
| | | 의성 | 45 | 9 (20.0%) | 6 (13.3%) | 15 (33.3%) | 6 (13.3%) | 9 (20.0%) | |
| | 적절성 | 전체 | 179 | 19 (10.6%) | 21 (11.7%) | 48 (26.8%) | 34 (19.0%) | 57 (31.8%) | |
| | | 안동 | 53 | 5 (9.4%) | 11 (20.8%) | 12 (22.6%) | 17 (32.1%) | 8 (15.1%) | |
| | | 영덕 | 80 | 7 (8.8%) | 5 (6.2%) | 18 (22.5%) | 11 (13.8%) | 39 (48.8%) | |
| | | 의성 | 46 | 7 (15.2%) | 5 (10.9%) | 18 (39.1%) | 6 (13.0%) | 10 (21.7%) | |
| | 사생 활 보호 | 신속성 | 전체 | 180 | 67 (37.2%) | 27 (15.0%) | 38 (21.1%) | 20 (11.1%) | 28 (15.6%) |
| | | | 안동 | 53 | 23 (43.4%) | 13 (24.5%) | 8 (15.1%) | 8 (15.1%) | 1 (1.9%) |
| 영덕 | | | 78 | 18 (23.1%) | 9 (11.5%) | 23 (29.5%) | 8 (10.3%) | 20 (25.6%) | |
| 의성 | | | 49 | 26 (53.1%) | 5 (10.2%) | 7 (14.3%) | 4 (8.2%) | 7 (14.3%) | |
| 공정성 | | 전체 | 179 | 58 (32.4%) | 18 (10.1%) | 37 (20.7%) | 22 (12.3%) | 44 (24.6%) | |
| | | 안동 | 53 | 19 (35.8%) | 6 (11.3%) | 16 (30.2%) | 9 (17.0%) | 3 (5.7%) | |
| | | 영덕 | 80 | 15 (18.8%) | 7 (8.8%) | 13 (16.2%) | 10 (12.5%) | 35 (43.8%) | |
| | | 의성 | 46 | 24 (52.2%) | 5 (10.9%) | 8 (17.4%) | 3 (6.5%) | 6 (13.0%) | |
| 적절성 | | 전체 | 181 | 61 (33.7%) | 22 (12.2%) | 38 (21.0%) | 18 (9.9%) | 42 (23.2%) | |
| | | 안동 | 53 | 23 (43.4%) | 11 (20.8%) | 9 (17.0%) | 7 (13.2%) | 3 (5.7%) | |
| | | 영덕 | 81 | 16 (19.8%) | 7 (8.6%) | 18 (22.2%) | 8 (9.9%) | 32 (39.5%) | |
| | | 의성 | 47 | 22 (46.8%) | 4 (8.5%) | 11 (23.4%) | 3 (6.4%) | 7 (14.9%) | |

[임시 대피소 보급 물품 제공의 신속성, 공정성, 적절성 분석]

앞서 서술한 보급 물품별 응답 결과를 신속성, 공정성, 적절성을 기준으로 취합해 평가한 결과, 물품 제공에 대한 평가는 신속성(+0.29), 공정성(+0.33), 적절성(+0.42) 모두 소폭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매우 부정)부터 +2(매우 긍정)까지의 척도에서 0을 기준으로 긍정적인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물품 제공에 대해 부정보다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다만 세 항목 모두 표준편차가 약 1.0으로 응답자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들의 평가가 평균을 중심으로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물품 제공이 충분하고 적절했다고 느낀 응답자가 있는 반면, 부족하거나 불공정했다고 느낀 응답자도 상당수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대피소별·시기별 물품 제공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 때문으로 해석된다.¹⁹

| 변수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매우 부정) | 최대값 (매우 긍정) |
|---------------|------|------|----------------|----------------|
| 임시 대피소 물품 신속성 | 0.29 | 1.03 | -2 | 2 |
| 임시 대피소 물품 공정성 | 0.33 | 1.03 | -2 | 2 |
| 임시 대피소 물품 적절성 | 0.42 | 1.03 | -2 | 2 |

<분석표 3-1> 표 3-9에 대한 전체 답변을 신속성, 공정성, 적절성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 신속성(N=184), 공정성(N=187), 적절성(N=188).

[임시 대피소 생활 만족도와 불편사항]

임시 대피소 생활 만족도를 보면, 전체 응답자 189명 중 대체로 만족하지 않았거나 매우 만족하지 않았다는 부정 응답 비율이 약 48%로, 대체로 만족했거나 매우 만족했다는 긍정 응답 비율(약 21%) 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표3-10).

임시 대피소에서 가장 불편했던 사항 1순위로는 협소한 공간(58건), 세면/샤워 등의 어려움(25건), 낯선 사람과의 공존(25건), 소음과 불빛(20건)에 대한 응답 빈도가 높았다(표3-11).

[지역별 응답 결과]

임시 대피소 만족도의 부정 응답 비율은 세 지역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고(안동 50%, 영덕 47%, 의성 46%), 긍정 응답 비율도 대체로 유사했다(영덕 22%, 안동 21%, 의성 약 18%). 임시 대피소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을 지역별 응답으로 보면, 세 지역 모두 협소한 공간을 1순위로 꼽았다.

[지역별 심층면접 결과]

영덕-F: "처음에는 텐트가 없었어요. ... 밑에 까는 것만 있었어요. ... 밤에는 시끄러워 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고 그렇게 사람들이 텐트 없이 그냥 지냈어요."

영덕-C: "텐트가 오더라도 옆에 사생활 보호가 좀 안 되고... 밤새도록 기침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주위에 사람 못 자잖아. 밤새도록 잠 못 자. 공무원들도 이렇게 큰 산불이 처음이다보니 오합지졸이고 대피소가 난리였어요"

의성-C: "물과 김밥을 나눠주고 하는 건 있었지만 그 이후에 그냥 그냥 대피소인 거죠. 그냥 대피소 산불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그런 거와는 상관없어."

¹⁹ 물품 제공에 대한 동의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총 5점 척도로 환산 및 측정하였으며, 이를 긍정, 부정 형태로 평가하기 위해 -2점부터 +2점까지 구간으로 환산하여 평가했다.

의성-K: "일단 행정당국에서 정보 제공을 직접 구두로 한 거는 없었고요. 한 두꺼운 책자 재 난 안전 책자 두꺼운 책자를 비치해 놔줬어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글자 포인트도 10포인트고 그 어르신들이 접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 소위 말하면 그냥 컨트롤 타워가 없었고."

의성-H: "누구 하나가 관계자 공무원들이 와서 그거 설명해 준 것도 없고 전혀 못 들었지. (...)산불 소식은 이발소에서 얘기가 다 나와요. 거기는 사랑방이여. 어디 면에는 뭐가 다 탔더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우리 동네 분들도 이런 방법도 없었고 이장님도 그것까지는 모르지"

[문항별 응답표]

표 3-10. 임시대피소에서의 생활에 만족하셨습니까? 만족하지 않으셨습니까?

| | (사례수) | 매우 만족하지 않았다 | 대체로 만족하지 않았다 | 보통이다 | 대체로 만족했다 | 매우 만족했다 |
|----|-------------------------------|---------------|---------------|---------------|---------------|-------------|
| 전체 | 189 ²⁰ (100.0%) | 44 (23.3%) | 46 (24.3%) | 60 (31.7%) | 36 (19.0%) | 3 (1.6%) |
| 안동 | 52 (100.0%) | 16 (30.8%) | 10 (19.2%) | 15 (28.8%) | 11 (21.2%) | 0 (0.0%) |
| 영덕 | 81 (100.0%) | 16 (19.8%) | 22 (27.2%) | 25 (30.9%) | 16 (19.8%) | 2 (2.5%) |
| 의성 | 56 (100.0%) | 12 (21.4%) | 14 (25.0%) | 20 (35.7%) | 9 (16.1%) | 1 (1.8%) |

표 3-11. 임시대피소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1순위]

| | 협소한 공간 | 소음과 불빛 | 물품의 부족 | 식사어려움 | 낯선 사람들과 공존 | 세면/샤워 어려움 | 화장실 어려움 | 정보으로 부족/하달 | 편의시설 부족 | 없음 | 기타 |
|----|--------|--------|--------|-------|------------|-----------|---------|------------|---------|----|----|
| 전체 | 58 | 20 | 9 | 5 | 25 | 25 | 15 | 13 | 4 | 7 | 5 |
| 안동 | 18 | 5 | 0 | 1 | 7 | 5 | 5 | 5 | 1 | 2 | 3 |
| 영덕 | 24 | 9 | 4 | 3 | 12 | 14 | 2 | 4 | 3 | 4 | 2 |
| 의성 | 16 | 6 | 5 | 1 | 6 | 6 | 8 | 4 | 0 | 1 | 0 |

[가중치 환산표: 임시 대피소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

아래 가중치 환산표는 불편한 사항에 대한 복수응답에서 응답자가 선택한 1~3순위 결과에 점수를 부여해 합산한 결과값이다.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을 부여해 합산했으며, 이는 단순 빈도를 넘어 응답자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가 된다. 점수 총합이 높을수록 해당 항목을 선택한 응답자가 많고, 동시에 상위 순위로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시 대피소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을 최대 3개까지 복수응답으로 받아 순위별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협소한 공간이 256점으로 1위였으며, 세면/샤워 어려움(144점), 소음과 불빛(125점), 낯선 사람과 공존(125점)이 뒤를 이었다(분석표 3-2).

²⁰ 임시 대피소 거주자 194명 중 5명 결측 발생함.

| | 구분 | 협소한 공간 | 소음과 불빛 | 물품의 부족 | 신사아름 | 남성들과의 공존 | 세면/샤워 어려움 | 화장실의 어려움 | 정보제공/답답함 | 편의시설 부족 | 없음 | 기타 |
|----|-----|--------|--------|--------|------|----------|-----------|----------|----------|---------|----|----|
| 전체 | 가중치 | 256 | 125 | 68 | 53 | 125 | 144 | 82 | 82 | 58 | 28 | 22 |
| | 1순위 | 58 | 20 | 9 | 5 | 25 | 25 | 15 | 13 | 4 | 7 | 5 |
| | 2순위 | 34 | 27 | 14 | 13 | 15 | 22 | 13 | 12 | 12 | 2 | 2 |
| | 3순위 | 14 | 11 | 13 | 12 | 20 | 25 | 11 | 19 | 22 | 3 | 3 |
| 안동 | 가중치 | 80 | 35 | 18 | 15 | 38 | 37 | 23 | 28 | 13 | 6 | 9 |
| | 1순위 | 18 | 5 | 0 | 1 | 7 | 5 | 5 | 5 | 1 | 2 | 3 |
| | 2순위 | 11 | 9 | 5 | 4 | 6 | 6 | 3 | 4 | 2 | 0 | 0 |
| | 3순위 | 4 | 2 | 8 | 4 | 5 | 10 | 2 | 5 | 6 | 0 | 0 |
| 영덕 | 가중치 | 104 | 53 | 22 | 20 | 56 | 76 | 23 | 28 | 32 | 19 | 13 |
| | 1순위 | 24 | 9 | 4 | 3 | 12 | 14 | 2 | 4 | 3 | 4 | 2 |
| | 2순위 | 13 | 11 | 4 | 4 | 6 | 13 | 5 | 3 | 8 | 2 | 2 |
| | 3순위 | 6 | 4 | 2 | 3 | 8 | 8 | 7 | 10 | 7 | 3 | 3 |
| 의성 | 가중치 | 72 | 37 | 28 | 18 | 31 | 31 | 36 | 26 | 13 | 3 | 0 |
| | 1순위 | 16 | 6 | 5 | 1 | 6 | 6 | 8 | 4 | 0 | 1 | 0 |
| | 2순위 | 10 | 7 | 5 | 5 | 3 | 3 | 5 | 5 | 2 | 0 | 0 |
| | 3순위 | 4 | 5 | 3 | 5 | 7 | 7 | 2 | 4 | 9 | 0 | 0 |

<분석표 3-2> 표 3-11 임시대피소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 1~3순위에 대한 가중치 환산표.

**가중치는 다중순위형 응답에 대한 각 빈도값에 1순위:3점, 2순위:2점, 3순위:1점을 가중한 값.

[문항별 응답표]

표 3-12. 임시대피소에 머무를 때 행정기관으로부터 재해현황, 복구현황, 보상 등에 대한 정보제공은 적절했습니까, 적절하지 않았습니까?

| | (사례수) | 매우 적절하지 않았다 | 대체로 적절하지 않았다 | 보통이다 | 대체로 적절했다 | 매우 적절했다 |
|----|-------------------------------|---------------|---------------|---------------|---------------|-------------|
| 전체 | 185 ²¹ (100.0%) | 58 (31.4%) | 50 (27.0%) | 42 (22.7%) | 29 (15.7%) | 6 (3.2%) |
| 안동 | 51 (100.0%) | 13 (25.5%) | 14 (27.5%) | 9 (17.6%) | 15 (29.4%) | 0 (0.0%) |
| 영덕 | 80 (100.0%) | 16 (20.0%) | 25 (31.3%) | 24 (30.0%) | 10 (12.5%) | 5 (6.3%) |
| 의성 | 54 (100.0%) | 29 (53.7%) | 11 (20.4%) | 9 (16.7%) | 4 (7.4%) | 1 (1.9%) |

[임시 대피소 외 임시거주지 실태 평가]

임시 대피소 밖에 머문 응답자들도 산불 피해 이후 적절한 지원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임시 대피 장소 선택과 물품 지원 현황을 함께 조사했다.

산불 대피 당시 임시 대피소가 아닌 다른 임시거주지로 대피한 사람은 88명이었으며, 가족·친척 집을 선택한 경우가 35%(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의 다른집(27%, 24건)과 지인 집(14%, 12건)이 뒤를 이었다(표3-13).

대피소 대신 다른 장소를 선택한 이유로는 응답자 79명 중 38%가 대피소 시설의 불편함을

²¹ 임시 대피소 거주자 194명 중 9명 결측 발생함.

가장 많이 꼽았고, 가족·친척의 권유(22%, 17건), 생업(13%, 10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표3-14).

임시 거주지에서 물품 지원이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76명 중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46%)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약 16%)의 두 배를 넘었다(표3-15). 정보 제공을 충분히 받았는지에 대한 응답 또한 응답자 75명 중 부정 답변이 약 45%, 긍정 답변이 약 19%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표3-16).

[지역별 심층면접 결과]

영덕-1: "체육관에 있는 사람들은 물건을 많이 주더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기 받으러 갈 수는 없었어요 거기 안 있으께 그러니 우리는 물건 하나도 못 받았지."

[문항별 응답표]

표 3-13. 귀하가 임시대피를 위해 이동한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 | (사례수) | 가족·친척 집 | 본인의 다른 집 | 지인 집 | 따로 거주지를 구함 | 기타 |
|----|------------------------------|---------------|---------------|---------------|--------------|---------------|
| 전체 | 88 ²² (100.0%) | 31 (35.2%) | 24 (27.3%) | 12 (13.6%) | 4 (4.5%) | 17 (19.3%) |
| 안동 | 44 (100.0%) | 13 (29.5%) | 22 (50.0%) | 4 (9.1%) | 1 (2.3%) | 4 (9.1%) |
| 영덕 | 19 (100.0%) | 9 (47.4%) | 1 (5.3%) | 5 (26.3%) | 2 (10.5%) | 2 (10.5%) |
| 의성 | 25 (100.0%) | 9 (36.0%) | 1 (4.0%) | 3 (12.0%) | 1 (4.0%) | 11 (44.0%) |

표 3-14. 임시대피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사례수) | 대피소 시설의 불편함 | 가족·친척의 권유 | 생업 | 대피소의 접근성 | 기타 |
|----|------------------------------|---------------|---------------|---------------|--------------|---------------|
| 전체 | 79 ²³ (100.0%) | 30 (38.0%) | 17 (21.5%) | 10 (12.7%) | 7 (8.9%) | 15 (19.0%) |
| 안동 | 42 (100.0%) | 16 (38.1%) | 9 (21.4%) | 8 (19.0%) | 3 (7.1%) | 6 (14.3%) |
| 영덕 | 18 (100.0%) | 7 (38.9%) | 5 (27.8%) | 0 (0.0%) | 1 (5.6%) | 5 (27.8%) |
| 의성 | 19 (100.0%) | 7 (36.8%) | 3 (15.8%) | 2 (10.5%) | 3 (15.8%) | 4 (21.1%) |

표 3-15. 임시주거지에서도 물품을 충분히 제공 받을 수 있었습니까?

| | (사례수) | 매우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76 ²⁴ (100.0%) | 26 (34.2%) | 9 (11.8%) | 26 (34.2%) | 9 (11.8%) | 3 (3.9%) |
| 안동 | 41 (100.0%) | 12 (29.3%) | 6 (14.6%) | 18 (43.9%) | 2 (4.9%) | 0 (0.0%) |
| 영덕 | 17 (100.0%) | 8 (47.1%) | 1 (5.9%) | 2 (11.8%) | 5 (29.4%) | 1 (5.9%) |

²² 임시 거주지 거주자 106명 중 18명 결측 발생함.

²³ 임시 거주지 거주자 106명 중 27명 결측 발생함.

²⁴ 임시 거주지 거주자 106명 중 30명 결측 발생함.

| | | | | | | |
|----|----------------|--------------|--------------|--------------|--------------|--------------|
| 의성 | 18 (100.0%) | 6 (33.3%) | 2 (11.1%) | 6 (33.3%) | 2 (11.1%) | 2 (11.1%) |
|----|----------------|--------------|--------------|--------------|--------------|--------------|

표 3-16. 임시주거지에서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을 수 있었습니까?

| | (사례수) | 매우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75 ²⁵ (100.0%) | 17 (22.7%) | 17 (22.7%) | 27 (36.0%) | 11 (14.7%) | 3 (4.0%) |
| 안동 | 41 (100.0%) | 6 (14.6%) | 11 (26.8%) | 21 (51.2%) | 3 (7.3%) | 0 (0.0%) |
| 영덕 | 17 (100.0%) | 6 (35.3%) | 2 (11.8%) | 3 (17.6%) | 5 (29.4%) | 1 (5.9%) |
| 의성 | 17 (100.0%) | 5 (29.4%) | 4 (23.5%) | 3 (17.6%) | 3 (17.6%) | 2 (11.8%) |

²⁵ 임시 거주지 거주자 106명 중 31명 결측 발생함.

4. 임시주택

산불 피해로 거주지가 소실됐거나 거주가 불가해진 주민들은 임시 대피소 체류 이후 임시주택에 머물게 된다. 임시주택은 산불 피해 주민들의 주거 회복 과정에서 피해 주민들이 일상을 재개하는 주요 생활 공간이다. 불안정한 임시대피소 생활의 피로도에서 벗어나, 다시 가족 단위의 생활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에, 4장에서는 임시주택 거주 경험에 대한 만족도, 불편 사항 등을 조사해 임시주택 단계에서의 주거 지원의 효율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번 조사 기간은 임시주택 거주가 진행 중인 단계였기 때문에, 완료형 의견은 아닌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임시주택 거주 만족도 및 제공기간]

2025년 10월 조사 당시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 286명 중 약 63%(180명)가 현재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답했다.(표4-1). 임시주택 거주자 중 73%(132명)가 마을에 가까운 임시주택 단지에 머물고 있었다. 23%(42명)는 산불 이전에 살던 집터에, 나머지 3%(6명)는 마을과 먼 임시주택 단지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표4-2).

임시주택 생활 만족도를 보면, 매우 만족스럽지 않거나 대체로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부정 응답 비율이 54%로 절반을 조금 넘은 반면, 대체로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는 긍정 응답은 19%에 그쳤다(표4-3).

불편 사항으로는 좁은 공간(136건)이 압도적으로 많이 꼽혔으며, 환기·통풍(55건), 내부 시설(53건), 마당 없음(48건) 순이었다(표4-4).

임시주택 제공기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가 2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외 응답자들은 6개월~2년 사이로 제시된 다양한 기간에 대해 대체로 고르게 분포된 응답을 보였고, 6개월 미만 거주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사례는 영덕 뿐이었다(영덕 응답자의 약 10%). 이는 산불 피해 주민의 경제적 상황, 피해 수준, 복구지원비의 손실 회복 수준, 연령 등에 따라 임시주택 거주에 대한 수요가 다른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 응답]

주거 피해가 가장 큰 지역으로 반복 확인된 영덕은 임시주택 거주 비율이 81%로 세 지역 중 가장 높았으며, 살던 집터에 임시주택을 설치한 경우도 약 36%로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 임시주택 생활 만족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약 30%에 그쳤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불편 사항으로는 좁은 공간(60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많았으며, 내부 시설(22건), 마당 없음(17건) 순이었다.

안동은 56%가 임시주택에 거주 중이며, 마을에 가까운 임시주택 단지 거주율(약 93%)이 세 지역 중 가장 높았다. 임시주택 생활 만족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약 11% 수준에 그쳤다. 불편 사항으로는 나머지 지역과 공통적인 좁은 공간(48건) 외에 환기/통풍(26건)을 들었고, 다른 지역에 비해 사생활 비보호(25건)와 이웃의 소음(20건)으로 인한 불편 응답이 눈에 띄게 높았다.

의성은 임시주택 거주와 비거주 비율이 동일(각 43명, 50%)했으며, 임시주택 생활 만족도에

대한 부정 응답이 69%로 세 지역 중 가장 높았다. 불편 사항으로는 좁은 공간(28건) 외에 환기/통풍(17건), 내부시설(11건) 순이었다.

임시주택 제공기간과 관련해서는 세 지역 모두 2년 이상이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의성(71%), 영덕(약 67%), 안동(64%) 순으로 확인된다.

[지역별 심층면접 결과]

안동-C: "처음에는 좋았다. 그런데 살아보니 아니더라. 임시주택은 '숨 쉬지 않는 집'이다. 곰팡이가 피더라. 임시주택은 내 집이 아니라는 마음부터 들고 편하지가 않으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임시주택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울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짓고 비워주고 나왔다. 그래도 임시주택에서 계속 살고 싶은 사람도 있다. 그런데 5년 이내에는 임시주택 매매가 불가하다 해서 그것도 안된다 하고....."

안동-E: "산불 나고 두 달 후에야 임시 주택이 마련되었는데 컨테이너다 보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 공간이 좁아서 손님을 초대하기도 어렵고 명절에 제사도 못 지냈다. 임시 주택 계약은 1년인데 그 이후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영덕-J: "지금 여기 너무 좁고... 싱크대하고 가스레인지도 한 칸, 마음에 드는 거는 없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공간도 좁고 공기 순환이 안 돼버리니... 환풍기도 끄매한 거 하나 있는데 음식 냄새가 온 집에서 빠지지도 않아요."

영덕 C: "마을 사람들이 다 고령인데, 2년 안에 집 지으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돈도 없고 몸도 불편한데... 기간 연장이 절실합니다."

의성-H: "거긴 좁은데 그런대로 버틸 만하고... 좀 좁으니까는 뭐라고 그럴까 저 애들이 오면은, 식구가 만약에 오면 잠자리가 없잖아요. 손주 애들이 굉장히 보고 싶은데 잘 데가 없으니까 (집으로) 가기가 바빠요."

의성-J: "딱 들어갔는데 전기 온수기에 물 받으니까 그게 푹 떨어져 갖고서는 다칠 뻔했어요. 이 스위치 꺾는 저게 덜러덜 덜러덜 다 날림이야 날림. 그 조그만 7평짜리 집에 초인종이 왜 필요합니까? 그 돈 모아갖고 비가림이나 좀 해주지."

의성 -I: "저희가 지금 난방 시설이 전기예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기세가) 거의 20만 원 전후로 나온대요. 농지랑 과수원이 다 타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겨울에 그거를 헤쳐 나가는 게 생활고가 힘들 거 같아요.(...) 또 창고를 다시 동네 가서 보시면 새로 집 지은 집들이 몇 집 있어요. 그분들도 그거 그냥 자기 돈으로 그냥 할 수 없이 지은 거예요. 물건을 당장 넣어야 되니까 농기계에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나중에 보면 그것도 다 불법인 거예요."

의성-K: "대략 한 3m 정도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에서 얘기 좀 크게 하거나 TV 틀어 놓으면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방음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고 지내는 데 굉장히 조심스럽죠."

[문항별 응답표]

표 4-1. 현재 임시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십니까?

| | (사례수) | 그렇다 | 아니다 |
|--|-------|-----|-----|
|--|-------|-----|-----|

| | | | |
|----|-----------------|----------------|----------------|
| 전체 | 286 (100.0%) | 180 (62.9%) | 106 (37.1%) |
| 안동 | 100 (100.0%) | 56 (56.0%) | 44 (44.0%) |
| 영덕 | 100 (100.0%) | 81 (81.0%) | 19 (19.0%) |
| 의성 | 86 (100.0%) | 43 (50.0%) | 43 (50.0%) |

표 4-2. 현재 임시주택의 위치는 다음 중 어디입니까?

| | (사례수) | 마을에 가까운 임시주택단지 | 산불 이전에 살던 집터 | 마을과 먼 임시주택단지 |
|----|-----------------|-------------------|-----------------|-----------------|
| 전체 | 180 (100.0%) | 132 (73.3%) | 42 (23.3%) | 6 (3.3%) |
| 안동 | 56 (100.0%) | 52 (92.9%) | 2 (3.6%) | 2 (3.6%) |
| 영덕 | 81 (100.0%) | 49 (60.5%) | 29 (35.8%) | 3 (3.7%) |
| 의성 | 43 (100.0%) | 31 (72.1%) | 11 (25.6%) | 1 (2.3%) |

표 4-3. 임시주택에서의 생활은 만족스럽습니까?

| | (사례수) | 매우 만족스럽지 않다 | 대체로 만족스럽지 않다 | 보통이다 | 대체로 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 |
|----|-------------------------------|-------------------|--------------------|---------------|---------------|-------------|
| 전체 | 179 ²⁶ (100.0%) | 49 (27.4%) | 48 (26.8%) | 48 (26.8%) | 31 (17.3%) | 3 (1.7%) |
| 안동 | 56 (100.0%) | 18 (32.1%) | 15 (26.8%) | 17 (30.4%) | 6 (10.7%) | 0 (0.0%) |
| 영덕 | 81 (100.0%) | 16 (19.8%) | 19 (23.5%) | 22 (27.2%) | 22 (27.2%) | 2 (2.5%) |
| 의성 | 42 (100.0%) | 15 (35.7%) | 14 (33.3%) | 9 (21.4%) | 3 (7.1%) | 1 (2.4%) |

표 4-4. 임시주택 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 이웃의 소음 | 환기/ 통풍 | 내부시설 (냉난방, 입업차, 전기온수기 등) | 좁다 | 마당없음 | 마을회관/ 경로당이 멀다 | 사생활보호 가 안된다 | 기타 |
|----|-----------|-----------|-----------------------------------|-----|------|---------------------|----------------|----|
| 전체 | 33 | 55 | 53 | 136 | 48 | 27 | 44 | 16 |
| 안동 | 20 | 26 | 20 | 48 | 22 | 12 | 25 | 2 |
| 영덕 | 6 | 12 | 22 | 60 | 17 | 8 | 11 | 10 |
| 의성 | 7 | 17 | 11 | 28 | 9 | 7 | 8 | 4 |

표 4-5. 임시주택 제공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사례수) | 2년 이상 | 1년 6개월 ~2년 미만 | 1년 ~1년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
| 전체 | 179 ²⁷ (100.0%) | 120 (67.0%) | 23 (12.8%) | 17 (9.5%) | 11 (6.1%) | 8 (4.5%) |
| 안동 | 56 (100.0%) | 36 (64.3%) | 11 (19.6%) | 6 (10.7%) | 3 (5.4%) | 0 (0.0%) |
| 영덕 | 81 (100.0%) | 54 (66.7%) | 8 (9.9%) | 5 (6.2%) | 6 (7.4%) | 8 (9.9%) |

²⁶ 임시주택 거주자 180명 중 1명 결측 발생함.

²⁷ 임시주택 거주자 180명 중 1명 결측 발생함.

| | | | | | | |
|----|----------------|---------------|-------------|--------------|-------------|-------------|
| 의성 | 42 (100.0%) | 30 (71.4%) | 4 (9.5%) | 6 (14.3%) | 2 (4.8%) | 0 (0.0%) |
|----|----------------|---------------|-------------|--------------|-------------|-------------|

[임시주택 외 거주 응답자]

임시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응답자(106명, 표4-1) 중 그 이유에 대해 응답한 94명은, 본인 집에서 그대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약 78%)이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 기타 이유가 많았다(약 10%)(표4-6).

임시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며 겪는 불편에 대해서는 83명만 응답했는데, '불편이 없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높았고, '물품 제공에서의 소외(19%)'가 두번째로 높았으며, '고립감 등 심리적 고통(약 15%)'과 '기타(약 15%)' 이유가 뒤를 이었다(표 4-7).

[지역별 응답]

안동은 임시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이유로 '본인 집에서 그대로 살 수 있어서'를 이유로 선택한 비율이 8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기타' 이유가 높았다(약 7%). 임시주택 외 거주 형태에 '불편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세 지역 중 가장 높았고, 두번째 이유로 '고립감 등 심리적인 고통'을 선택한 비율이 약 11%였다.

영덕 역시 '본인 집에서 그대로 살 수 있어서'를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약 74%이고, 다음으로 '기타' 이유가 높았다(약 21%). 임시주택 외 거주 형태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 중 '물품 제공에서의 소외(44%)'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타' 이유가 높았다(약 39%).

의성 역시 앞선 두 지역과 동일하게 '본인 집에서 그대로 살 수 있어서'를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약 68%이고, 임시주택 외 거주 형태에 '불편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세 지역 중 두번째로 높았고, 응답자 중 '고립감 등 심리적인 고통'을 불편 이유로 꼽은 비율이 약 29%였다.

[문항별 응답표]

표 4-6. 임시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사례수) | 본인 집에서 그대로 살 수 있어서 (소파·반파) | 집 피해 없음 | 가족/지인과 살게 돼서 | 임시주택 단지가 싫어서 | 기타 |
|----|------------------------------|-------------------------------------|--------------|-----------------|--------------------|--------------|
| 전체 | 94 ²⁸ (100.0%) | 73 (77.7%) | 7 (7.4%) | 2 (2.1%) | 3 (3.2%) | 9 (9.6%) |
| 안동 | 44 (100.0%) | 38 (86.4%) | 0 (0.0%) | 1 (2.3%) | 2 (4.5%) | 3 (6.8%) |
| 영덕 | 19 (100.0%) | 14 (73.7%) | 0 (0.0%) | 1 (5.3%) | 0 (0.0%) | 4 (21.1%) |
| 의성 | 31 (100.0%) | 21 (67.7%) | 7 (22.6%) | 0 (0.0%) | 1 (3.2%) | 2 (6.5%) |

²⁸ 임시주택 미거주자 106명 중 12명 결측 발생함.

표 4-7. 임시주택이 아닌 거주지에 머물면서 가장 불편함을 느끼신 점은 무엇입니까?

| | (사례수) | 불편이 없다 | 물품 제공에서의 소외 | 고립감 등 심리적인 고통 | 기반시설이용 불편함(수도, 전기 등) | 기타 |
|----|------------------------------|---------------|-------------------|------------------|----------------------------|---------------|
| 전체 | 83 ²⁹ (100.0%) | 39 (47.0%) | 16 (19.3%) | 12 (14.5%) | 4 (4.8%) | 12 (14.5%) |
| 안동 | 44 (100.0%) | 29 (65.9%) | 4 (9.1%) | 5 (11.4%) | 3 (6.8%) | 3 (6.8%) |
| 영덕 | 18 (100.0%) | 1 (5.6%) | 8 (44.4%) | 1 (5.6%) | 1 (5.6%) | 7 (38.9%) |
| 의성 | 21 (100.0%) | 9 (42.9%) | 4 (19.0%) | 6 (28.6%) | 0 (0.0%) | 2 (9.5%) |

[교차분석: 연령별 응답자와 임시주택 제공기간 수요]

산불 피해 주민에게 필요한 임시주택 지원 기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임시주택 제공을 종료하기 앞서 행정기관의 현황조사가 요구된다. 본 조사 당시는 임시주택 초기 거주 기간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팀은 여러 요소 중에서 연령과 임시주택 제공기간 수요를 교차분석했다. 앞서 실태조사의 한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체 응답자 대부분이 장년/노년층 이상으로서 평균 연령이 약 70세이며, 60세 미만 비율이 20%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교차분석 결과, 네 개 연령 집단 간의 평균 희망 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³⁰ 2년 이상을 요구하는 응답 비율이 가장 많은 점은 전체 연령층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연령대별로 60대 미만에서 '2년 이상'을 희망하는 비율이 52%였던 데 비해, 60대 이상에서는 69~71% 수준으로 17~18% 높게 나타났다. 다만 70대 이상에서는 단기 지원을 희망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추이가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기 지원 수요가 단순히 증가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분석표 4-1).

| 거주기간 | 60대 미만 | 60대 | 70대 | 80대 이상 |
|-----------------|----------------|----------------|----------------|----------------|
| 2년 이상 | 52.4% (11명) | 69.2% (36명) | 68.8% (44명) | 70.7% (29명) |
|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 | 33.3% (7명) | 19.2% (10명) | 6.3% (4명) | 4.9% (2명) |
|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 | 4.8% (1명) | 3.8% (2명) | 14.1% (9명) | 9.8% (4명)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4.8% (1명) | 5.8% (3명) | 7.8% (5명) | 4.9% (2명) |
| 6개월 미만 | 4.8% (1명) | 1.9% (1명) | 3.1% (2명) | 9.8% (4명) |

<분석표 4-1> 표 4-5 응답을 296명의 응답자 연령에 따라 재분류한 결과. (N=178)

²⁹ 임시주택 거주자 106명 중 23명 결측 발생함.

³⁰ 교차분석(카이제곱) 결과: $\chi^2 = 21.28, p = .046$ 로 연령대와 임시주택 적정 제공기간 수요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음. ($p < .05$)

5. 재해로 인한 심리적 영향

5장은 산불 이후 심리적인 영향과 응답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형 사건 충격 척도인 IES-R-K(Impact of Event Scale-Revised Korean version, 이하 IES-R-K, 총 22문항)를 활용했다. 해당 척도는 재난 및 재해를 떠올렸을 때 나타나는 침습³¹, 회피, 과각성 반응 등을 기반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PTSD) 위험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 중 하나이다. 5장에서 다루는 문항 조사의 결과는 한국재난심리연구소 이윤호 소장의 기술 분석과 자문을 토대로 작성됐다.

이 조사 역시 다른 설문과 마찬가지로 응답자가 직접 문항에 답변하는 자기기입식(Self-report)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전문의의 면담을 통한 임상적 진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응답자의 주관적 상태와 심리적 방어 기제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특별히 더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PTSD는 의학적 진단명인 만큼 본 분석에서는 'PTSD 위험'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라는 용어로 기술했다.

[전체 IES-R-K 척도검사 결과]

전체 응답자 293명의 평균 점수는 51점으로 집계됐다. 이 결과는 '심각한 PTSD 위험' 점수 범위에 속한다. 응답자의 87%(256명)가 PTSD 위험 범위(25점 이상)에 속하며, 이 중 67%(197명)는 40점 이상으로 '심각한' 혹은 '매우 심각한' PTSD 위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 범위(0~17점)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약 8%(22명)에 불과해, 산불 피해 주민 대다수가 높은 강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PTSD 등급 수준 ³² | 점수 범위 | 인원 | 비율 |
|--------------------------|--------|------|-------|
| 정상 (증상 없음) | 0~17점 | 22명 | 7.5% |
| PTSD 위험 경향성 | 18~24점 | 15명 | 5.1% |
| 부분 PTSD 위험 | 25~39점 | 59명 | 20.1% |
| 심각한 PTSD 위험 | 40~59점 | 87명 | 29.7% |
| 매우 심각한 PTSD 위험 | 60점 이상 | 110명 | 37.5% |

<분석표 5-1> IES-R-K 척도검사 결과 점수 분포도 (N=293). 선행연구(은헌정, 2005)의 기준에 따라 25점 이상을 PTSD 위험군으로 분류했으며, 25점 미만(정상 및 위험 경향성)은 위험군에 포함하지 않았음. 위험군 중 40점 이상은 심각한 PTSD 위험군으로 구분함.

[지역별 척도 검사 결과]

³¹ 외상 경험과 관련된 기억·생각·감정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갑자기 떠오르는 현상'으로 외상 사건의 반복적이고 원치 않는 기억, 외상 관련 악몽, 플래시백(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는 경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자극에 대한 강한 심리적 고통, 관련 자극에 대한 강한 생리적 반응(심장 두근거림, 땀, 공포 반응 등)을 포함한다.

³² 선행연구에 따라 PTSD 등급 구분함; 은헌정, 권태완, 이선미, 김태형, 최말례 and 조수진 (2005).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44(3), 303 - 310.

안동의 평균 IES-R-K 점수는 약 47점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위험 등급별로는 매우 심각(29%), 심각(27%), 부분 위험(2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85%가 PTSD 위험군에 해당했으며, 정상 범위 응답자는 9%에 불과했다.

영덕의 평균 점수는 약 53점으로, 매우 심각(42%), 심각(30%), 부분 위험(15%) 순이었다. 전체의 87%가 위험군에 해당했으며, 정상 범위 응답자는 7%에 그쳤다.

의성의 평균 점수는 53점으로, 매우 심각(약 42%), 심각(32%), 부분 위험(16%) 순이었으며, 전체의 90%가 위험군에 해당했다. 정상 범위 응답자는 약 7%로 영덕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영덕과 의성의 매우 심각한 PTSD 위험 비율이 각각 42%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심각한 PTSD 위험 비율의 경우 세 지역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거나 의성(32%), 영덕(30%), 안동(27%)순으로 나타났다.

<분석표 5-2> 안동 지역 IES-R-K 척도검사 결과 점수 분포도 (N=100)

| PTSD 등급 수준 | 총점 구간 | 인원 | 비율(%) |
|----------------|--------|------|-------|
| 정상 | 0~17점 | 9 | 9% |
| PTSD 위험 경향성 | 18~24점 | 6 | 6% |
| 부분 PTSD 위험 | 25~39점 | 29 | 29% |
| 심각한 PTSD 위험 | 40~59점 | 27 | 27% |
| 매우 심각한 PTSD 위험 | 60점 이상 | 29 | 29% |
| 합계 | | 100 | 100% |
| 평균 PTSD 점수 | | 46.6 | |

<분석표 5-3> 영덕 지역 IES-R-K 척도검사 결과 점수 분포도 (N=100)

| PTSD 등급 수준 | 총점 구간 | 인원 | 비율(%) |
|----------------|--------|------|-------|
| 정상 | 0~17점 | 7 | 7% |
| PTSD 위험 경향성 | 18~24점 | 6 | 6% |
| 부분 PTSD 위험 | 25~39점 | 15 | 15% |
| 심각한 PTSD 위험 | 40~59점 | 30 | 30% |
| 매우 심각한 PTSD 위험 | 60점 이상 | 42 | 42% |
| 합계 | | 100 | 100% |
| 평균 PTSD 점수 | | 52.5 | |

<분석표 5-4> 의성 지역 IES-R-K 척도검사 결과 점수 분포도 (N=93)

| PTSD 등급 수준 | 총점 구간 | 인원 | 비율(%) |
|-------------|--------|----|-------|
| 정상 | 0~17점 | 6 | 6.5% |
| PTSD 위험 경향성 | 18~24점 | 3 | 3.2% |

| | | | |
|----------------|--------|------|-------|
| 부분 PTSD 위험 | 25~39점 | 15 | 16.1% |
| 심각한 PTSD 위험 | 40~59점 | 30 | 32.3% |
| 매우 심각한 PTSD 위험 | 60점 이상 | 39 | 41.9% |
| 합계 | | 93 | 100% |
| 평균 PTSD 점수 | | 53.2 | |

[주요 요인별 외상 후 스트레스 영향]

본 조사는 다각적인 통계적 검증(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여, 심리적 외상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이를 완화하는 보호요인을 분석했다(분석표 5-5).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고령층, 여성집단, 장기 거주자 집단이 심리적 외상에 취약하며, 피해 강도 및 경험 측면에서 신체적 피해(본인가족의 부상 및 사망)와 물리적 재산 손실(주택·농기계 등)이 클수록 IES-R-K 척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적 요인으로 임시 대피소 체류 경험은 PTSD 고위험군 등급에 속할 확률을 약 2.3배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복구 과정에서 벌어지는 공동체 내 갈등은 외상 증상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정부·지자체의 적절한 정보 및 물품 제공, 공정한 구호지원 배분이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을 완화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행정 대응에 대한 신뢰와 경제활동 회복 수준이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 요인 | 내용 | 영향 |
|--------------|-----------------------|-------------------------------|
| 연령, 성별, 거주기간 | 고령, 여성, 장기간 거주 | 해당할 수록 PTSD 위험 높음 ↑ |
| 건강 피해 | 본인·가족의 부상 또는 사망 | 클수록 PTSD 위험 높음 ↑ |
| 피해 규모 | 주택·농기계·영업장 등 재산 손실 정도 | 클수록 PTSD 위험 높음 ↑ |
| 임시 대피소 경험 | 대피소에서 머문 경험 | 경험 집단의 PTSD 위험 약 2.3배 ↑ |
| 정보·물품 제공 | 정부·지자체의 적절한 지원 | 적절한 지원이 있을수록 PTSD 위험 수준 낮아짐 ↓ |
| 구호지원 공정성 | 공정 배분 인식 | PTSD 고위험 가능성 32% 감소 ↓ |
| 소득 수준 | 소득 및 일상 회복 수준 | 낮을 수록 PTSD 위험 높음 ↑ |
| 행정 대응 신뢰 | 행정기관 피해 평가 신뢰 | 신뢰 높을수록 PTSD 위험 수준 낮음 ↓ |
| 공동체 갈등 경험 | 복구 과정에서의 갈등 | PTSD 장기화 위험 ↑ |

<분석표 5-5> 주요 요인별 외상 후 스트레스 영향 분석 결과

1) 인구학적 요인: 연령, 성별, 거주기간

연령이 높을수록, 또 마을 거주 기간이 길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60~70대에서 침투와 회피 반응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것에 대해 오래 살아온 집과 마을에 대한 상실감이 심리적 어려움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국내외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와 유사하다.

2) 피해 규모와 행정 평가

주택, 영업장, 가재도구 등 물적 피해가 클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뚜렷하게 높아졌다. 집과 생계 기반(농장, 영업장)의 피해가 클수록 침투와 과각성 점수가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산불로 인해 본인, 가족, 친척 및 이웃 등에게 인명 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도 높았다.

물적 피해에 대한 행정 조사가 합리적이지 않았거나, 복구 지원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피해 규모뿐 아니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았다고 느끼는지 여부가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3) 산불 당시 경험: 대피, 생명위협, 대피소

응답자의 87%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응답했으며(표3-5), 생명의 위협을 경험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 전 영역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임시 대피소를 경험한 집단은 PTSD 고위험군에 속할 확률이 약 2.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피소 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회피와 과각성 반응이 높아졌는데, 대피 경험 과정에서 느낀 혼란스러움, 두려움, 대피소 환경의 열악함이 외상 후 스트레스에 더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4) 정보 제공, 구호 서비스 만족도 및 공정성

피해 평가, 복구지원비, 성금, 향후 복구 계획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만족하지 않을수록 침투, 회피, 과각성 반응이 모두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이나 불충분한 정보제공에 대한 경험이 무력감, 분노,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산불에 대한 경험을 잊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5) 행정 대응 신뢰: 피해사실 합리성, 복구지원비 충분성, 차별 경험

피해 사실 조사가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느낄수록, 복구지원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졌다. 복구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집단은 척도 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 2차 피해 경험이 트라우마를 장기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임을 보여준다.

6) 소득 회복 정도와 회복 기대

소득 회복 수준이 낮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 회복 수준이 30% 미만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 특히 높은 척도 점수를 보여, 생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래 소득 회복 수준에 대해서도 기대가 낮을수록 척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경제적 상황뿐 아니라 앞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전망 자체가 심리적 회복의 중요한 토대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7) 공동체 갈등과 회복

복구 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주민보다 척도 점수가 높았으며, 현재까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매우 심한 PTSD 위험에 해당하는 높은 척도 점수를 보였다.

반면, 공동체 결속 지수(이웃 간 배려, 서로 돕는 경험, 이웃 간 관계 개선에 대한 응답 결과)가 높을수록 척도 점수의 총점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사건의 충격은 여전히 크더라도 공동체성이 강할수록 이를 견뎌낼 수 있는 심리적 회복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8) 산불특별법 평가

산불특별법에 주민 의견을 잘 반영했다고 응답한 집단이 척도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법·제도 영역에서 피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회복 과정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역별 심층면접 결과]

안동-A: "저희는 지금은 이렇게 앉아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때 연기 속에 있는 거랑 똑같은 마음이다...희망 고문을 많이 받았지만 여전히 연기속에 있다. 거의 수면제 안 먹으면 잠을 못 잤다. 두 달 동안. 가슴이 답답한 게 막 갑자기 숨이 멎고 그렇죠? 자다가도 금방 10분 자다 깨고 가슴이 답답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내가 무기력해 보이고 내가 이때까지 뭘 하고 살았나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다 한숨이.. .."

안동-G: "꼭 공황장애같이 겪었다. 자다가 숨이 막히고, 벌떡 일어나고, 불 나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재생이 된다. 사고 직후보다 2~3개월째가 더 힘들더라. 물건을 찾으러 잣더미가 된 집에 간다. '다 사라졌구나' 하는 것을 자꾸 자꾸 실감하는 거다. 다 돈과 연결되다 보니까 사소하게 생각했던 물건 하나하나가 다 스트레스가 된다."

안동-I: "'전 재산과 앞으로의 수입을 모두 잃었다'는 상실감이 너무 크다. 사과꽃이 피어도 내가 없는데 저 꽃이 왜 피나 싶다. 우울하고 허무하다. 너무 화가 난다. 산불 낸 놈을 때려 죽이고 싶다"

영덕-B: "내 진짜 병원에 가 입원하려고 그랬거든... 보건소에 가가 사실 내가 저녁에 잠도 못 자고 마음도 불안하고... 포항을 나가가지고 정신병원으로 가세요 이러더라고. 우리촌 사람들이 정신병원까지 갈 그게 되는겨.", "그리고 우리 아내는 잠 못 자고요. 안정제 먹어서 먹고 자고 이럽니다. 밤에 잠 깬다 하면...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생각이 나서무서워가지고 다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영덕-H: "내가 죽겠지 요새는 사람도 싫고 귀찮아요. 죽고 싶고 그래 생활도 힘들고... 우울증도 좀 약간 와서 내가요. ... 집에도 들어오기 싫고 물만 보면 내가 여기가 물해가 죽어 볼까 안 그러면 산에 가 목내가 죽고... 그 생각만 자꾸 나요."

의성-H: "자살의 충동까지도 사실은 느꼈고 했었는데... 매일 팬티를 적셔 가지고 살았으니 (소변 조절 불가). (...) 고혈압이라는 병을 얻었다는 거죠. 고혈압이라는 이 병을 얻고 나니까 시력이 가버리더라는 거죠."

의성-K: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거의 아직도 이제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 막내 딸이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괴물 그림을 계속 그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여기가 좀 그런

충격을 받았구나..."

[문항별 응답표]

표 5-1. 그 사건(산불)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이 나에게 그때의 감정을 다시 불러 일으켰다.

| | (사례수) | 전혀 아니다 | 약간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꽤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293 | 20 | 46 | 52 | 63 | 112 |
| 안동 | 100 | 5 | 17 | 24 | 21 | 33 |
| 영덕 | 99 | 8 | 13 | 15 | 17 | 46 |
| 의성 | 94 | 7 | 16 | 13 | 25 | 33 |

표 5-2. 나는 수면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 (사례수) | 전혀 아니다 | 약간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꽤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296 | 39 | 53 | 43 | 68 | 93 |
| 안동 | 100 | 13 | 23 | 17 | 19 | 28 |
| 영덕 | 99 | 13 | 19 | 7 | 25 | 35 |
| 의성 | 97 | 13 | 11 | 19 | 24 | 30 |

표 5-3. 나는 다른 일들로 인해 그 사건을 생각하게 된다

| | (사례수) | 전혀 아니다 | 약간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꽤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297 | 26 | 40 | 56 | 76 | 99 |
| 안동 | 100 | 10 | 17 | 23 | 24 | 26 |
| 영덕 | 100 | 11 | 10 | 20 | 22 | 37 |
| 의성 | 97 | 5 | 13 | 13 | 30 | 36 |

표 5-4. 나는 그 사건 이후로 예민하고 화가 난다고 느꼈다.

| | (사례수) | 전혀 아니다 | 약간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꽤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295 | 35 | 42 | 48 | 58 | 112 |
| 안동 | 100 | 12 | 15 | 18 | 21 | 34 |
| 영덕 | 100 | 13 | 14 | 12 | 18 | 43 |
| 의성 | 95 | 10 | 13 | 18 | 19 | 35 |

표 5-5. 나는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하거나 떠오를 때마다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했다.

| | (사례수) | 전혀 아니다 | 약간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꽤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294 | 45 | 48 | 59 | 53 | 89 |
| 안동 | 100 | 25 | 20 | 16 | 16 | 23 |
| 영덕 | 100 | 15 | 13 | 21 | 18 | 33 |
| 의성 | 94 | 5 | 15 | 22 | 19 | 33 |

표 5-6.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사건이 생각난다.

| | (사례수) | 전혀 아니다 | 약간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꽤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297 | 21 | 36 | 52 | 72 | 116 |
| 안동 | 100 | 8 | 20 | 17 | 25 | 30 |
| 영덕 | 100 | 9 | 7 | 16 | 23 | 45 |
| 의성 | 97 | 4 | 9 | 19 | 24 | 41 |

표 5-7.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꼈다.

| | (사례수) | 전혀 아니다 | 약간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꽤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292 | 42 | 52 | 50 | 61 | 87 |
| 안동 | 100 | 13 | 23 | 17 | 21 | 26 |
| 영덕 | 100 | 16 | 13 | 18 | 27 | 26 |
| 의성 | 92 | 13 | 16 | 15 | 13 | 35 |

표 5-8. 그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들을 멀리하며 지냈다.

| | (사례수) | 전혀 아니다 | 약간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꽤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294 | 34 | 50 | 79 | 54 | 77 |
| 안동 | 100 | 16 | 21 | 28 | 10 | 25 |
| 영덕 | 99 | 10 | 15 | 27 | 22 | 25 |
| 의성 | 95 | 8 | 14 | 24 | 22 | 27 |

표 5-9. 그 사건의 영상이 나의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곤 했다.

| | (사례수) | 전혀 아니다 | 약간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꽤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296 | 21 | 48 | 53 | 61 | 113 |
| 안동 | 100 | 12 | 17 | 18 | 23 | 30 |
| 영덕 | 100 | 7 | 17 | 16 | 19 | 41 |
| 의성 | 96 | 2 | 14 | 19 | 19 | 42 |

표 5-10. 나는 신경이 예민해졌고 쉽게 깜짝 놀랐다.

| | (사례수) | 전혀 아니다 | 약간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꽤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294 | 34 | 46 | 50 | 59 | 105 |
| 안동 | 100 | 14 | 18 | 17 | 22 | 29 |
| 영덕 | 100 | 14 | 14 | 14 | 15 | 43 |
| 의성 | 94 | 6 | 14 | 19 | 22 | 33 |

표 5-11. 그 사건에 관해 생각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 | (사례수) | 전혀 아니다 | 약간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꽤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295 | 22 | 39 | 82 | 54 | 98 |
| 안동 | 100 | 9 | 18 | 29 | 15 | 29 |
| 영덕 | 100 | 6 | 11 | 29 | 18 | 36 |
| 의성 | 95 | 7 | 10 | 24 | 21 | 33 |

표 5-12. 나는 그 사건에 관해 여전히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신경쓰고 싶지 않았다.

| | (사례수) | 전혀 아니다 | 약간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꽤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297 | 26 | 42 | 87 | 65 | 77 |
| 안동 | 100 | 12 | 17 | 29 | 19 | 23 |
| 영덕 | 100 | 5 | 11 | 31 | 27 | 26 |
| 의성 | 97 | 9 | 14 | 27 | 19 | 28 |

표 5-13. 그 사건에 대한 나의 감정은 무감각한 느낌이었다.

| | (사례수) | 전혀 아니다 | 약간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꽤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296 | 103 | 48 | 64 | 49 | 32 |
| 안동 | 100 | 41 | 19 | 22 | 11 | 7 |
| 영덕 | 100 | 29 | 15 | 24 | 18 | 14 |
| 의성 | 96 | 33 | 14 | 18 | 20 | 11 |

표 5-14. 나는 마치 사건 당시로 돌아간 것처럼 느끼거나 행동할 때가 있었다.

| | (사례수) | 전혀 아니다 | 약간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꽤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294 | 66 | 69 | 57 | 48 | 54 |
| 안동 | 100 | 23 | 29 | 19 | 12 | 17 |
| 영덕 | 100 | 26 | 15 | 19 | 19 | 21 |
| 의성 | 94 | 17 | 25 | 19 | 17 | 16 |

표 5-15. 나는 그 사건 이후로 잠들기가 어려웠다.

| | (사례수) | 전혀 아니다 | 약간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꽤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296 | 48 | 56 | 45 | 54 | 93 |
| 안동 | 100 | 19 | 22 | 15 | 16 | 28 |
| 영덕 | 100 | 18 | 12 | 9 | 22 | 39 |
| 의성 | 96 | 11 | 22 | 21 | 16 | 26 |

표 5-16. 나는 그 사건에 대한 강한 감정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 | (사례수) | 전혀 아니다 | 약간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꽤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295 | 28 | 56 | 48 | 68 | 95 |
| 안동 | 100 | 10 | 30 | 14 | 19 | 27 |
| 영덕 | 100 | 11 | 13 | 15 | 25 | 36 |
| 의성 | 95 | 7 | 13 | 19 | 24 | 32 |

표 5-17. 내 기억에서 그 사건을 지워버리려고 노력했다.

| | (사례수) | 전혀 아니다 | 약간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꽤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295 | 22 | 49 | 80 | 56 | 88 |

| | | | | | | |
|----|-----|---|----|----|----|----|
| 안동 | 99 | 9 | 20 | 26 | 17 | 27 |
| 영덕 | 100 | 7 | 13 | 26 | 22 | 32 |
| 의성 | 96 | 6 | 16 | 28 | 17 | 29 |

표 5-18. 나는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 (사례수) | 전혀 아니다 | 약간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꽤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295 | 41 | 51 | 66 | 59 | 78 |
| 안동 | 100 | 16 | 20 | 19 | 23 | 22 |
| 영덕 | 100 | 13 | 18 | 26 | 17 | 26 |
| 의성 | 95 | 12 | 13 | 21 | 19 | 30 |

표 5-19.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에도 식은땀, 호흡곤란, 오심, 심장 두근거림 같은 신체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 | (사례수) | 전혀 아니다 | 약간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꽤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293 | 63 | 60 | 53 | 47 | 70 |
| 안동 | 100 | 20 | 27 | 16 | 17 | 20 |
| 영덕 | 100 | 26 | 16 | 15 | 17 | 26 |
| 의성 | 93 | 17 | 17 | 22 | 13 | 24 |

표 5-20. 나는 그 사건에 관한 꿈들을 꾸 적이 있었다.

| | (사례수) | 전혀 아니다 | 약간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꽤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293 | 87 | 51 | 56 | 38 | 61 |
| 안동 | 100 | 28 | 21 | 20 | 12 | 19 |
| 영덕 | 100 | 33 | 22 | 15 | 9 | 21 |
| 의성 | 93 | 26 | 8 | 21 | 17 | 21 |

표 5-21. 내가 주위를 경계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느꼈다.

| | (사례수) | 전혀 아니다 | 약간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꽤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292 | 78 | 61 | 55 | 42 | 56 |
| 안동 | 100 | 37 | 25 | 11 | 10 | 17 |
| 영덕 | 100 | 27 | 15 | 23 | 17 | 18 |
| 의성 | 92 | 14 | 21 | 21 | 15 | 21 |

표 5-22. 나는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 | (사례수) | 전혀 아니다 | 약간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꽤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295 | 37 | 56 | 89 | 36 | 77 |
| 안동 | 100 | 20 | 19 | 29 | 9 | 23 |
| 영덕 | 100 | 9 | 19 | 31 | 16 | 25 |
| 의성 | 95 | 8 | 18 | 29 | 11 | 29 |

[심리지원 서비스의 실태 및 평가]

산불 피해 이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마음상담, 마음치료 등 다양한 명칭의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본 조사는 이렇게 행정기관이 제공한 심리지원 서비스의 이용 경험과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전체 응답자 299명 중 약 42%가 행정기관이 제공한 산불 관련 심리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절반 이상(58%)은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심리지원 형식의 주된 방식은 1:1 대화 상담(75%) 집단 상담(23%)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은 응답자 124명 중 32%는 효과적이라고 긍정 응답한 반면, 35%는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하여 심리지원의 이용 편의성, 효과성, 만족도의 질적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심리지원 경험자 124명 중 62%가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중장기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심리지원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심리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 중 58%는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었고, 27%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 몰랐다고 응답했다.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던 응답자들은 심리지원이 필요하지 않아서(약 28%) 원했으나 시간이 없어서(19%),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11%) 응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지역별 응답결과]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은 응답 비율은 안동(68%), 의성(약 68%), 영덕(39%) 순으로 높았다.

심리지원 서비스를 경험한 응답자 비율과 사유를 분석한 결과, 참여 접근성과 효과성 인식에 지역 간 격차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영덕(61%)에서 심리지원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동시에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부정 응답 비율(39%)도 가장 높아 심리지원을 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안동과 의성은 심리지원 경험 비율이 각각 3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동시에 서비스가 효과적이었다는 긍정 응답 비율도 낮았다(의성 약 36%, 안동 31%). 한편 1년 이상의 장기간 심리지원 제공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안동(56%), 의성(약 55%), 영덕(41%) 순으로 확인되어, 지역별 피해 상황과 회복 속도에 맞는 맞춤형 심리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심층면접 결과]

안동-E: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가끔 와서 '어떠신가요? 힘들지요?'라고 묻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시에서 제공하는 상담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안동-G: "길안·기남면 등에서 산불 피해 주민 위로 명목으로 노래자랑·가요방 행사를 두 차례 진행했다. 실제로 그날 온 산불 피해자들은 소수였다. 불 난 집에서 잔치 여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위로는 아픔을 같이 느끼고 울어주는 거고, 살 방도를 같이 고민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영덕-C: "심리 치료를 해준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노인들은 잘 몰라요. 직접 찾아와서 꾸준히 봐주면 좋겠는데..."

영덕-E: "그 당시에 대화했던 것뿐이지 지나고 나니까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

의성-A: "심리 상담 지원을 받을 때... 계속 받을 수 없는 것도 조금 아쉬웠지만, 여건상 오래 1:1 상담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니까."

의성-L: "지원이 있다고 해서 보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았지만 별 게 없었다, 약을 먹었다, 그랬다고 얘기했고... 마을 회관에도 심리치료 차 들어오는 걸 보기는 봤는데 그것 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모르지만 전문성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였다)."

[문항별 응답표]

표 5-23. 산불 피해 관련 심리지원(마음상담, 마음치료)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사례수) | 있음 | 없음 |
|----|-----------------|----------------|----------------|
| 전체 | 299 (100.0%) | 125 (41.8%) | 174 (58.2%) |
| 안동 | 100 (100.0%) | 32 (32.0%) | 68 (68.0%) |
| 영덕 | 100 (100.0%) | 61 (61.0%) | 39 (39.0%) |
| 의성 | 99 (100.0%) | 32 (32.3%) | 67 (67.7%) |

표 5-24. 심리지원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 (사례수) | 상담사와 1:1 대화 | 상담사와 집단 대화 | 팀으로 연수 | 상담사와 1:1 대화, 상담사와 집단 대화 |
|----|-------------------------------|---------------|---------------|-------------|-------------------------|
| 전체 | 122 ³³ (100.0%) | 92 (75.4%) | 28 (23.0%) | 1 (0.8%) | 1 (0.8%) |
| 안동 | 32 (100.0%) | 25 (78.1%) | 6 (18.8%) | 1 (3.1%) | 0 (0.0%) |
| 영덕 | 59 (100.0%) | 45 (76.3%) | 14 (23.7%) | 0 (0.0%) | 0 (0.0%) |
| 의성 | 31 (100.0%) | 22 (71.0%) | 8 (25.8%) | 0 (0.0%) | 1 (3.2%) |

표 5-25. 심리지원은 효과적이었습니까?

| | (사례수) | 매우 효과적이지 않았다 | 대체로 효과적이지 않았다 | 보통이다 | 대체로 효과적이었다 | 매우 효과적이었다 |
|----|-------------------------------|---------------|---------------|---------------|---------------|-------------|
| 전체 | 124 ³⁴ (100.0%) | 20 (16.1%) | 23 (18.5%) | 41 (33.1%) | 35 (28.2%) | 5 (4.0%) |
| 안동 | 32 (100.0%) | 2 (6.3%) | 7 (21.9%) | 13 (40.6%) | 8 (25.0%) | 2 (6.3%) |
| 영덕 | 61 (100.0%) | 11 (18.0%) | 13 (21.3%) | 18 (29.5%) | 17 (27.9%) | 2 (3.3%) |

³³ 심리지원 경험자 125명 중 3명 결측 발생함.

³⁴ 심리지원 경험자 125명 중 1명 결측 발생함.

| | | | | | | |
|----|----------------|--------------|-------------|---------------|---------------|-------------|
| 의성 | 31 (100.0%) | 7 (22.6%) | 3 (9.7%) | 10 (32.3%) | 10 (32.3%) | 1 (3.2%) |
|----|----------------|--------------|-------------|---------------|---------------|-------------|

표 5-26. 재난 이후 심리지원은 얼마나 오래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 (사례수) | 장기간 (1년 이상) 이어질 필요가 있다 | 몇 달 정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 | 짧은 기간 (몇 주 내)으로 충분하다 | 잘 모르겠다 |
|----|-------------------------------|------------------------------|-------------------------|----------------------------|---------------|
| 전체 | 124 ³⁵ (100.0%) | 60 (48.4%) | 17 (13.7%) | 18 (14.5%) | 29 (23.4%) |
| 안동 | 32 (100.0%) | 18 (56.3%) | 7 (21.9%) | 2 (6.3%) | 5 (15.6%) |
| 영덕 | 61 (100.0%) | 25 (41.0%) | 6 (9.8%) | 12 (19.7%) | 18 (29.5%) |
| 의성 | 31 (100.0%) | 17 (54.8%) | 4 (12.9%) | 4 (12.9%) | 6 (19.4%) |

표 5-27. 심리지원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사례수) | 서비스에 대해 몰라서 |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심리지원이 필요하지 않아서 | 서비스에 대해 알고 원했으나 시간이 없어서 |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 기타 |
|----|-------------------------------|----------------|---|-------------------------------|---------------------------------------|---------------|
| 전체 | 170 ³⁶ (100.0%) | 46 (27.1%) | 47 (27.6%) | 33 (19.4%) | 19 (11.2%) | 25 (14.7%) |
| 안동 | 68 (100.0%) | 17 (25.0%) | 21 (30.9%) | 15 (22.1%) | 8 (11.8%) | 7 (10.3%) |
| 영덕 | 39 (100.0%) | 10 (25.6%) | 14 (35.9%) | 3 (7.7%) | 3 (7.7%) | 9 (23.1%) |
| 의성 | 63 (100.0%) | 19 (30.2%) | 12 (19.0%) | 15 (23.8%) | 8 (12.7%) | 9 (14.3%) |

³⁵ 심리지원 경험자 125명 중 1명 결측 발생함.

³⁶ 심리지원 미경험자 174명 중 4명 결측 발생함.

6. 재난 지원

6장은 재난 발생 이후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의 정보 제공 경로와 만족도, 구호서비스 및 물품 제공에 대한 평가, 성금 배분 관련 인식, 그리고 현재 필요한 지원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경로로 정보를 접했는지, 공식 행정 채널의 역할이 충분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정보 전달 및 구호 서비스 평가]

영남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3월부터 7개월이 지난 조사 시점(10월)까지 피해 평가, 복구지원비, 구호금, 복구 계획,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받았는지 묻는 질문에서(복수응답) 이장을 통한 전달이 156건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웃(78건), 문자·우편·전화(78건), 공무원을 통한 직접 전달(77건)이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표6-1). 공식 행정 채널보다 이장·이웃 등 비공식 통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정보 제공 만족도는 피해평가, 복구지원비, 구호금, 향후 복구 계획,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등 5개 항목 모두에서 매우 만족하지 않았거나 대체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불만족 응답이 만족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피해 평가에 대해서는 8%만 대체로 만족했거나 매우 만족했다는 긍정 응답을 선택했다. 복구지원비 정보 제공에 대한 긍정 응답은 약 8%였고, 구호금 정보 제공은 13%였다. 향후 복구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만족도도 긍정 응답은 7%에 그쳤다.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제공 만족도는 10%였다(표6-2-1~ 표6-2-5).

[지역별 응답]

지역별 결과를 살펴보면, 피해 평가, 보상액, 구호금, 복구계획, 지자체 담당자나 연락처 등을 제공받은 경로는(복수응답), 세 지역 모두 '이장을 통해 들었다'고 응답한 사례수가 많았는데 영덕(64건)이 비중이 가장 높고 의성(44건)과 안동(48건)은 동일한 수준이었다.

지역별로 2순위 경로는 안동이 문자 메시지, 우편 등을 통해 받았다고 응답했으며(43건), 영덕은 공무원을 통해 직접 들었다 응답했고(35건), 의성은 이웃으로부터 전해 들었다(27건)고 답했다(표6-1).

위의 정보 제공에 대해 만족했다는 비율은 세 지역 모두 매우 낮아, 긍정 응답율이 20%를 넘지 않는 수준이었다(표6-2-1~6-2-5). 특히, 의성에서 정보 제공 불만족, 구호서비스 불만족 및 배분 불공정성 응답이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 평가와 복구지원비 항목에서도 의성 응답자의 80% 이상이 제공된 정보에 불만족을 표했다(표6-2-1, 표 6-2-2).

[지역별 심층면접 결과]

안동-A: "자신이 어떤 법의 지원 대상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특별법에 시행령이 초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안동시는 지금 이 정보를 잘 모르고 있고 또 정보를 빨리 만들어서 전달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좀 무능력한..그런 상황인데..."

안동-H: "시의회 산불 피해 위원회, 안동시 위원회, 산림청·경북도 회의 등은 모두 참여했다. 의견 청취와 기록 수준에 그치고 결론은 '특별법에 올리겠다, 시행령에 반영하겠다' 그 소리 뿐이었다."

안동-G: "행정이 우리한테 상의를 하고 물어보고 해야 하는데, 피해자들인 주민들이나 대책위를 오히려 배제하고 견제한다. 행정과 주민 대표가 함께 논의했다면 불만과 불신이 훨씬 줄었을 것이다"

영덕-A: "군에서 뭐 문서로 오고 이런 건 잘 없어요. 주로 이장들 모아놓고 회의하면 이장님이 와서 전달해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군청 찾아가서 물어봐야 알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도 안 가르쳐줍니다."

영덕-G: "이장님이 방송으로 '나오소' 하면 나가고, '뭐 가져가소' 하면 가고... 공무원? 공무원은 여기 잘 안 와요. 이장님이 다 하지."

의성-K: "처음에는 대책위 활동을 못하게 좀 휘방을 많이 냈어요. 그 행정에서 그래서 이제 대책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줄 건데 알아서 챙겨주고 알아서 지원을 해 줄 건데 뭐 하러 대책위 같은 거 하나 시끄럽게 뭐 이런 얘기들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제 좀 전달을 하거나 그랬죠."

의성-J: "면장 자체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책위원회 이 모임 이런 것도 이 면장 자체에서 못하게 해. (...) 안평면에서 이런 걸 하면 군수가 불러들인대 면장. 왜 이런 거 막지 못하고 하냐고."

의성-C: "설명이 없었죠. (...) 지자체에서 그 정보를 교육을 해 주고... 당신이 그 제출한 피해 내용은 이거다. 그래서 그거와 이거를 비교 산출을 해봐라...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았죠. (...) 사람들이 돈을 받고 좋아한 게 아니고 당황을 했잖아요. 돈이 뭘 돈이나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의성-K: "설명을 받지 못했고 제가 인터넷 뒤졌어요. (...) 행정에서 이런 설명이나 간담회나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과정들은 없었어요. (...) 돈이 한 달 있다가 5월 말부터 이 돈이 좀 들어왔는데 이게 뭐 주택 파손비 해서 얼마 농기계 파손비 해서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주거비 산불 농업복구 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들어왔어요."

의성-J: "통장으로 얼마가 들어갔으니까 이걸 어디서 준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런 것도 그냥... 어디에서 가 어떻게 해야 돼 이 돈이 뭔지 이 돈이면 전혀 모르는 거야."

[문항별 응답표]

표 6-1. 재해 발생 이후 현재까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재난피해회복과 관련한 정보(피해평가, 복구지원비, 보상액, 구호금, 복구계획,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등)를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받았습니까? (복수응답)

| | 이웃으로부터 들었다 | 이장을 통해 들었다 | 문자 메시지, 우편, 개인전화 등을 통해 받았다 | 공고문, 책자 등을 통해 받았다 | 공무원을 통해 직접 들었다 | 기타 |
|----|------------|------------|----------------------------|-------------------|----------------|----|
| 전체 | 78 | 156 | 78 | 14 | 77 | 32 |
| 안동 | 25 | 48 | 43 | 12 | 30 | 8 |
| 영덕 | 26 | 64 | 15 | 1 | 35 | 11 |
| 의성 | 27 | 44 | 20 | 1 | 12 | 13 |

표 6-2-1. 재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의 정보 제공(피해평가, 복구지원비, 구호금, 향후복구계획, 지자체담당자 연락처 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피해평가]

| | (사례수) | 매우 만족하지 않았다 | 대체로 만족하지 않았다 | 보통이다 | 대체로 만족했다 | 매우 만족했다 |
|----|--------------|-------------|--------------|------------|------------|----------|
| 전체 | 295 (100.0%) | 138 (46.8%) | 78 (26.4%) | 55 (18.6%) | 19 (6.4%) | 5 (1.7%) |
| 안동 | 100 (100.0%) | 36 (36.0%) | 34 (34.0%) | 24 (24.0%) | 5 (5.0%) | 1 (1.0%) |
| 영덕 | 100 (100.0%) | 38 (38.0%) | 27 (27.0%) | 23 (23.0%) | 10 (10.0%) | 2 (2.0%) |
| 의성 | 95 (100.0%) | 64 (67.4%) | 17 (17.9%) | 8 (8.4%) | 4 (4.2%) | 2 (2.1%) |

표 6-2-2. 재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의 정보 제공(피해평가, 복구지원비, 구호금, 향후복구계획, 지자체담당자 연락처 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복구지원비]

| | (사례수) | 매우 만족하지 않았다 | 대체로 만족하지 않았다 | 보통이다 | 대체로 만족했다 | 매우 만족했다 |
|----|--------------|-------------|--------------|------------|------------|----------|
| 전체 | 295 (100.0%) | 150 (50.8%) | 72 (24.4%) | 50 (16.9%) | 19 (6.4%) | 4 (1.4%) |
| 안동 | 100 (100.0%) | 45 (45.0%) | 35 (35.0%) | 17 (17.0%) | 2 (2.0%) | 1 (1.0%) |
| 영덕 | 100 (100.0%) | 42 (42.0%) | 22 (22.0%) | 22 (22.0%) | 12 (12.0%) | 2 (2.0%) |
| 의성 | 95 (100.0%) | 63 (66.3%) | 15 (15.8%) | 11 (11.6%) | 5 (5.3%) | 1 (1.1%) |

표 6-2-3. 재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의 정보 제공(피해평가, 복구지원비, 구호금, 향후복구계획, 지자체담당자 연락처 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구호금]

| | (사례수) | 매우 만족하지 않았다 | 대체로 만족하지 않았다 | 보통이다 | 대체로 만족했다 | 매우 만족했다 |
|----|--------------|-------------|--------------|------------|------------|----------|
| 전체 | 292 (100.0%) | 118 (40.4%) | 68 (23.3%) | 67 (22.9%) | 32 (11.0%) | 7 (2.4%) |
| 안동 | 100 (100.0%) | 36 (36.0%) | 30 (30.0%) | 25 (25.0%) | 7 (7.0%) | 2 (2.0%) |
| 영덕 | 100 (100.0%) | 31 (31.0%) | 22 (22.0%) | 27 (27.0%) | 18 (18.0%) | 2 (2.0%) |
| 의성 | 92 (100.0%) | 51 (55.4%) | 16 (17.4%) | 15 (16.3%) | 7 (7.6%) | 3 (3.3%) |

표 6-2-4. 재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의 정보 제공(피해평가, 복구지원비, 구호금, 향후복구계획, 지자체담당자 연락처 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향후 복구계획]

| | (사례수) | 매우 만족하지 않았다 | 대체로 만족하지 않았다 | 보통이다 | 대체로 만족했다 | 매우 만족했다 |
|----|-----------------|----------------|---------------|---------------|--------------|-------------|
| 전체 | 286 (100.0%) | 138 (48.3%) | 65 (22.7%) | 64 (22.4%) | 16 (5.6%) | 3 (1.0%) |
| 안동 | 100 (100.0%) | 35 (35.0%) | 31 (31.0%) | 29 (29.0%) | 4 (4.0%) | 1 (1.0%) |
| 영덕 | 96 (100.0%) | 41 (42.7%) | 24 (25.0%) | 22 (22.9%) | 8 (8.3%) | 1 (1.0%) |
| 의성 | 90 (100.0%) | 62 (68.9%) | 10 (11.1%) | 13 (14.4%) | 4 (4.4%) | 1 (1.1%) |

표 6-2-5. 재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의 정보 제공(피해평가, 복구지원비, 구호금, 향후복구계획, 지자체담당자 연락처 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 | (사례수) | 매우 만족하지 않았다 | 대체로 만족하지 않았다 | 보통이다 | 대체로 만족했다 | 매우 만족했다 |
|----|-----------------|----------------|---------------|---------------|---------------|-------------|
| 전체 | 284 (100.0%) | 139 (48.9%) | 47 (16.5%) | 69 (24.3%) | 20 (7.0%) | 9 (3.2%) |
| 안동 | 98 (100.0%) | 29 (29.6%) | 25 (25.5%) | 30 (30.6%) | 12 (12.2%) | 2 (2.0%) |
| 영덕 | 98 (100.0%) | 53 (54.1%) | 9 (9.2%) | 27 (27.6%) | 4 (4.1%) | 5 (5.1%) |
| 의성 | 88 (100.0%) | 57 (64.8%) | 13 (14.8%) | 12 (13.6%) | 4 (4.5%) | 2 (2.3%) |

[임시 대피 기간 이후 구호서비스 및 물품 제공]

구호서비스 및 물품 제공에 대해 전체 응답자 290명 중 불만족 응답은 약 44%로 만족(약 26%) 응답보다 높았으며, 공정성에 대해서는 292명 중 불공정 평가 응답(37%)이 공정 평가 응답(약 30%)에 비해 조금 높았다.

지역별 만족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물품 제공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의성 약 54 %, 안동 43%, 영덕 35% 순이었다. 구호 물품이나 서비스가 공정하게 배분됐는지 묻는 질문에선 공정하지 않았다는 부정 응답이 의성 45%, 영덕 36%, 안동 30% 순으로 높았다(표6-3, 표6-4).

[지역별 심층면접 결과]

안동-J: "안동시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와 피해 상황을 충분히 조사한 적은 없어요. 큰 산불이 처음이라 그럴 수 있겠지만 너무 둔감하다. 구호품 나눌 때도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들이 먼저 가져가는 방식이다. 내는 집이 다 탔는데 한동안 기본 물품도 제공받지 못했다. 엉망이다"

의성-G: "물품을 나눠 줄 때 어느 동네는 냉장고가 507리터, 520리터까지 가는 걸 봤는데, 어느 동네는 317리터가 갔어요. 크기가 상당히 차이 나서 바꿔 달라고 하니 절대 안 된대요.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제가 되게 따지니까 (관에서)

'이장님 거 한 개 하고 국장님 거 한 개는 큰 거 줄게'라고 해요. 제가 '노(No)'라고 했어요. 당신들 주민들하고 싸움 시킬 일 있느냐고요."

의성-G: "산불 피해 주민 중에 전소자들에게는 창고를 3, 3 곱하기 3 그러니까, 그런 창고를 컨테이너 창고를 주기로 도지사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 어느 날 영양에 가보니까 그 지역에는 창고가 70%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의성군청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했죠. 우리 창고가 왜 안 나올까? (공무원 답변이) 아니 우리 군에는 안 주게 돼 있습니다. 그냥 안 주게 했습니다.(...) "이게 의성군 재정으로 주는 게 아니고 도비로 지원하는 건데, 왜 의성군에서 준다 안 준다는 판단을 하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나? 아니에요. ... 제가 백방으로 수소문해 보니까 의성군에서 그냥 반력을 해버렸어요. 창고를 도로. 도 예산이 있느냐고 가서 따져보니까, 그 예산은 아예 없어서 버렸어요."

의성-F: "한 형님은 평상시에 여기 안 살고 외부에 있다가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집(등기된 집)이 탔어요. 그 집은 보상이 다 됐고, 실제 사는 우리는 하나도 안 됐어요. 형평성이 안 맞죠."

의성-B: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었던 건데 자꾸 안 되는 쪽으로 꼬투리를 잡아요. 담당 공무원들은 막 물어요. 그러면 어디서 식사했죠? 병원에서 하고 몸을 보호하느라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잠을 잤다. 하면 공무원이 '그게 바로 실거주입니다. 거기서 실거주하셨잖아요.' 그렇게 황당한 사례에 맞지 않는 말을 갖다 대면서 안 된다."

의성-J: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니 본인이 직접 와서 내야 된대요.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 보고 오라 가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담당자한테 와서 가져가 달라 해도 도저히 안 된대요."

표 6-3. 임시대피기간 이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한 구호서비스와 물품 제공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 | (사례수) |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대체로 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 |
|----|-----------------|---------------|---------------|---------------|---------------|--------------|
| 전체 | 290 (100.0%) | 58 (20.0%) | 69 (23.8%) | 89 (30.7%) | 61 (21.0%) | 13 (4.5%) |
| 안동 | 100 (100.0%) | 19 (19.0%) | 24 (24.0%) | 39 (39.0%) | 16 (16.0%) | 2 (2.0%) |
| 영덕 | 99 (100.0%) | 13 (13.0%) | 22 (22.0%) | 28 (28.0%) | 27 (27.0%) | 9 (9.0%) |
| 의성 | 91 (100.0%) | 26 (28.6%) | 23 (25.3%) | 22 (24.2%) | 18 (19.8%) | 2 (2.2%) |

표 6-4. 임시대피기간 이후, 제공된 구호지원(물품, 서비스 등)은 공정하게 배분되었습니까?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았습니까?

| | (사례수) | 매우 공정하지 않았다 | 대체로 공정하지 않았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공정했다 | 매우 공정했다 |
|----|-----------------|---------------|---------------|---------------|---------------|--------------|
| 전체 | 292 (100.0%) | 55 (18.8%) | 53 (18.2%) | 98 (33.6%) | 72 (24.7%) | 14 (4.8%) |
| 안동 | 100 (100.0%) | 15 (15.0%) | 15 (15.0%) | 39 (39.0%) | 29 (29.0%) | 2 (2.0%) |
| 영덕 | 99 (100.0%) | 18 (18.2%) | 18 (18.2%) | 31 (31.3%) | 26 (26.3%) | 6 (6.1%) |
| 의성 | 93 (100.0%) | 22 (23.7%) | 20 (21.5%) | 28 (30.1%) | 17 (18.3%) | 6 (6.5%) |

[성금 정보 전달 실태 및 필요 지원 현황]

본 실태조사에서 다룬 성금이란, 재난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모금된 기부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등 지정 기관을 통해 모금되며, 행정안전부 산하 성금배분위원회에서 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 피해 주민에게 지급된다.

성금 규모와 배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296명 중 85%가 전혀 알지 못하거나 대체로 알지 못한다고 답했으며(표6-5), 이를 알게 된 경로(복수응답, 전체 127건) 역시 이웃(28건), 언론·방송(25건), 이장(25건) 등 비공식 경로가 공무원을 통한 직접 전달(19건)이나 문자·우편·전화(15건) 등 공식 채널보다 더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표6-6). 배분 결정 과정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288명 중 약 75%에 달해 성금 관련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표6-7).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의 경우(복수응답), 주거 환경 개선, 주택 수리 등의 주거 지원(137건)이 압도적 1순위였으며, 재난 피해 입증 및 피해자 지원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 안내(61건), 일자리·소득 지원(40건), 복구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지원(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민들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이 재난 피해에 대한 행정 지원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표6-8).

[지역별 응답]

성금 규모와 배분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부정 응답이 안동 90%, 의성 약 89%, 영덕 78% 순으로 높았다(표6-5). 또, 이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경로로는 세 지역 모두 공무원으로 들었다는 응답이 이웃이나 이장을 통해 들은 경우보다 낮아, 초대형 산불로 모집된 성금의 규모와 배분에 대한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정보 제공이 그 수혜자인 주민에게 적시에 좀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표6-6).

성금 배분 결정 과정에 피해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다는 긍정 응답 비율은 영덕이 13%로 가장 높았고, 의성은 5%, 안동은 1% 뿐이었다(표 6-7).

현재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 안동은 재난 피해 입증 및 피해자 지원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 안내가 가장 많았고(35건), 다음으로는 주거 지원이 많았다(34건)(표6-8).

영덕은 주거 지원에 가장 많은 응답이 있었고(63건), 일자리 및 소득 지원(11건)과 의료 지원(11건)이 뒤를 이었다(표6-8).

의성은 주거 지원(40건)이 가장 많았고, 재난 피해 등에 대한 행정절차 안내(20건)가 2순위로 응답이 많았다(표6-8).

[지역별 심층면접 결과]

안동-H: "보상을 신청하려니까 조경수·임산물 피해 보상 관련해서 4개 서류(농업경영체, 임업경영체, 임업경영계획 인가서,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모두 요구한다. 내가 박사다.

그런데도 행정이 요구하는 네 가지 서류를 다 갖추기 어려웠는데, 일반 임업인들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은 뭐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영덕-A: "무슨 돈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니 지금도 모릅니다. 군에 가고 군 직원들 모릅니다. 뭘 돈을 어떻게 줬나 하면 다 모릅니다. 그냥 뭐 나오는 대로 그냥 줬데요. 리스트가 나와주면 아 내가 이 돈을 받았구나 이걸 알고 받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이거지 그냥 나오는 대로 받는데 안내도 없고 그리고 성금 배분 과정에 대해 "전혀 (반영) 안 됐죠."

영덕-J: "할배들도 모르고 할머니들도 모르고 이장인 나는 알긴 아는데... 제목이 희망브리지에서 500만 원 나오고 내일 모레 얼마 나오고 이런걸 알려줘야 되는데 두서없이 막 나오니... 우리는 그게 뭐 주택 복구 비용인지 우리 저거 버섯 재배사 복구 비용인 건지 그걸 모르는 거죠."

의성-K: "성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하는 그 구조 논의 구조의 대책위에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 오히려 그냥 저기 녹색 어머니회 이정협의회 노인회 뭐 이런 데서... 외 부적인 외부 사람들인 거죠."

의성-H: "군수님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대책위 그 위원회에 우리 대책위 사람들 5명을 넣어 달라, (그럼) 안 된다(고 답변을 받는다). (...) 다른 지역에 가 보니까 다 들어갔어요. 성금위원회에 청송, 영덕, 영양 다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의성군만큼은 절대로 거기(성금위원회)에 넣어줄 수가 없다. 왜 그럴까? 저는 생각이 그렇죠. (의성군청이) 감추기 위해서."

[문항별 응답표]

표 6-5. 민간으로부터 모아진 성금 규모(모금액)와 배분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습니까?

| | (사례수) | 전혀 알지 못한다 | 대체로 알지 못한다 | 대체로 알고 있다 | 매우 잘 알고 있다 |
|----|---------|-------------|------------|------------|------------|
| 전체 | 296 (%) | 202 (68.2%) | 51 (17.2%) | 40 (13.5%) | 3 (1.0%) |
| 안동 | 100 (%) | 67 (67.0%) | 23 (23.0%) | 10 (10.0%) | 0 (0.0%) |
| 영덕 | 100 (%) | 65 (65.0%) | 13 (13.0%) | 20 (20.0%) | 2 (2.0%) |
| 의성 | 96 (%) | 70 (72.9%) | 15 (15.6%) | 10 (10.4%) | 1 (1.0%) |

표 6-6. 성금규모(모금액) 및 배분에 대한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까?

(복수응답)

| | 가족으로부터 들었다 | 이웃으로부터 들었다 | 이장을 통해 들었다 | 문자메시지, 우편, 개인 등, 전화 등을 통해 받았다 | 언론 및 방송매체 | 공무원을 통해 직접 들었다 | 기타 |
|----|------------|------------|------------|-------------------------------|-----------|----------------|----|
| 전체 | 5 | 28 | 25 | 15 | 25 | 19 | 10 |
| 안동 | 0 | 8 | 5 | 10 | 14 | 8 | 0 |
| 영덕 | 5 | 13 | 14 | 3 | 5 | 9 | 3 |
| 의성 | 0 | 7 | 6 | 2 | 6 | 2 | 7 |

표 6-7. 성금 배분 결정 과정에 피해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사례수) |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 대체로 반영되지 않았다 | 보통이다 | 대체로 반영되었다 | 매우 잘 반영되었다 |
|----|-----------------|----------------|---------------|---------------|--------------|-------------|
| 전체 | 288 (100.0%) | 144 (50.0%) | 71 (24.7%) | 55 (19.1%) | 15 (5.2%) | 3 (1.0%) |
| 안동 | 100 (100.0%) | 41 (41.0%) | 33 (33.0%) | 25 (25.0%) | 1 (1.0%) | 0 (0.0%) |
| 영덕 | 92 (100.0%) | 38 (41.3%) | 22 (23.9%) | 20 (21.7%) | 9 (9.8%) | 3 (3.3%) |
| 의성 | 96 (100.0%) | 65 (67.7%) | 16 (16.7%) | 10 (10.4%) | 5 (5.2%) | 0 (0.0%) |

표 6-8. 현재 본인에게 더 필요한 지원 사항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복수응답) [1순위]

| | 주거지원 (주거환경 개선, 주택 수리 등) | 일자리 및 소득 지원 | 의료지원 (병·의원 연계 등) | 생필품지원 (식료품, 위생용품, 가재도구 등) | 심리 지원 서비스 | 재난 피해 입증 및 피해자 지원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 안내 | 복귀 과정에 의견 제시 및 참여 지원 |
|----|----------------------------------|-------------------|------------------------|---------------------------------|-----------------|--|----------------------------|
| 전체 | 137 | 40 | 15 | 9 | 3 | 61 | 28 |
| 안동 | 34 | 13 | 1 | 3 | 2 | 35 | 12 |
| 영덕 | 63 | 11 | 11 | 5 | 0 | 6 | 3 |
| 의성 | 40 | 16 | 3 | 1 | 1 | 20 | 13 |

[가중치 환산표: 응답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아래 가중치 환산표는 표6-8과 같이,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한 복수응답에서 응답자가 선택한 1~3순위 결과에 점수를 부여해 합산한 결과값이다.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을 부여해 합산했으며, 이는 단순 빈도를 넘어 응답자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가 된다. 점수 총합이 높을수록 해당 항목을 선택한 응답자가 많고, 동시에 상위 순위로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출 결과, 주거 지원이 482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행정절차 안내(336점), 일자리 및 소득지원(252점)이 뒤를 이었다.

안동의 경우 1~3순위를 종합한 가중치 기준에서도 행정절차 안내(162점)가 주거 지원(138점)을 앞서며, 의견 제시 및 참여 지원(108점)이 세 지역 중 가장 높았다.

영덕은 가중치 기준에서는 주거 지원(209점)에 이어 생필품 지원(75점), 일자리 및 소득지원(73점), 의료지원(73점)이 2·3순위를 차지했으며, 의료 지원은 안동(19점), 의성(37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의성은 가중치 기준으로도 같은 순위를 유지해, 주거 지원(135점)이 가장 많았고, 재난 피해 등에 대한 행정절차 안내(112점)가 2순위, 일자리 및 소득 지원(95점)이 3순위였다(분석표 6-1).

| 지역 | 구분 | 주거지원 (주거환경 개선, 수리 등) | 재난 피해 입증 및 피해자 신원 확인 절차 안내 | 일자리 및 소득 지원 | 복구 과정 에 의견 제시 및 참여 지원 | 의료지원 (병원 연계 등) | 생필품 지원 (식료품, 위생용품, 가재도구 등) | 심리지원 서비스 |
|----|-----|-------------------------------|--|----------------------|--|-------------------------|---|-------------|
| 전체 | 가중치 | 482 | 336 | 252 | 233 | 129 | 154 | 31 |
| | 1순위 | 137 | 61 | 40 | 28 | 15 | 9 | 3 |
| | 2순위 | 24 | 58 | 46 | 49 | 29 | 48 | 4 |
| | 3순위 | 23 | 37 | 40 | 51 | 26 | 31 | 14 |
| 안동 | 가중치 | 138 | 162 | 84 | 108 | 19 | 42 | 14 |
| | 1순위 | 34 | 35 | 13 | 12 | 1 | 3 | 2 |
| | 2순위 | 13 | 22 | 14 | 26 | 5 | 13 | 1 |
| | 3순위 | 10 | 13 | 17 | 20 | 6 | 7 | 6 |
| 영덕 | 가중치 | 209 | 62 | 73 | 42 | 73 | 75 | 9 |
| | 1순위 | 63 | 6 | 11 | 3 | 11 | 5 | 0 |
| | 2순위 | 6 | 16 | 16 | 8 | 16 | 22 | 3 |
| | 3순위 | 8 | 12 | 8 | 17 | 8 | 16 | 3 |
| 의성 | 가중치 | 135 | 112 | 95 | 83 | 37 | 37 | 8 |
| | 1순위 | 40 | 20 | 16 | 13 | 3 | 1 | 1 |
| | 2순위 | 5 | 20 | 16 | 15 | 8 | 13 | 0 |
| | 3순위 | 5 | 12 | 15 | 14 | 12 | 8 | 5 |

<분석표 6-1>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 1~3순위에 대한 가중치 환산표.

**가중치는 다중순위형 응답에 대한 각 빈도값에 1순위: 3점, 2순위:2점, 3순위:1점을 가중한 값.

[상관분석: 정보 제공과 행정 신뢰의 연쇄 구조]

6장의 빈도표 결과를 종합해, 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평가로 -2(매우 부정)부터 +2(매우 긍정)까지의 척도로 측정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났다. 지원 규모, 정보 접근, 민원 처리, 피해 평가 등 행정 경험의 어느 단계에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정 절차에 대한 불만이 아닌 재난 대응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복구지원비의 충분 정도(-1.57)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성금 규모·배분 정보 접근성(-1.38)과 지자체 문제제기 처리 합당성(-1.38)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행정기관의 피해 평가(-0.70)는 상대적으로 낮은 부정 수준을 보였으나, 이 역시 부정적 평가에 해당한다. 전반적으로 금전적 지원과 정보 접근에 대한 불만이 크며,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신뢰도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제공이 부족했다고 인식하는 주민은 자신이 입은 피해 행정기관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나아가 정보 제공이 부족했다고 인식할수록 그 피해 산정 또한 불합리하다고 인식하는 관계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분석표 6-2).

또한 피해 산정이 불합리하다는 인식과 자신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과소평가되었다는 인식 사이에도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난다. 이는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을

통해 확인된 결과로³⁷, 피해 산정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주민일수록 보상 결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연쇄적인 양상이 확인되었다(분석표 6-3).

| 행정 평가 항목 | 평균 점수 | 최소값 (매우 부정) | 최대값 (매우 긍정) |
|-----------------|-------|----------------|----------------|
| 복구지원비 충분 정도 | -1.57 | -2 | 2 |
| 성금 규모·배분 정보 접근성 | -1.38 | -2 | 2 |
| 지자체 문제제기 처리 합당성 | -1.38 | -2 | 2 |
| 피해사실조사 합리성 | -1.11 | -2 | 2 |
| 정부·지자체 물품/정보 제공 | -0.92 | -2 | 2 |
| 행정기관의 피해 평가 | -0.70 | -2 | 2 |

<분석표 6-2> 복구지원비 충분 정도(표 7-6), 성금 규모·배분 정보 접근성(표 6-5), 지자체 문제제기 처리 합당성(표 7-15), 피해사실 조사 합리성(표 7-5), 정부·지자체 물품/정보 제공(표 6-2, 6-3), 행정기관의 피해 평가(표 2-2)에 대한 기술통계량.

| 관계 | 상관계수 | 해석 |
|---------------------|-------------------|--------------------------------------|
| 정보 부족 인식 ↔ 피해 과소평가 | $r = 0.179^{***}$ | 정보가 부족하다고 인식할수록 피해가 과소평가되었다고 인식 |
| 정보 부족 인식 ↔ 피해산정 합리성 | $r = 0.500^{***}$ | 정보가 부족하다고 인식할수록 피해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식 |
| 피해산정 합리성 ↔ 피해 과소평가 | $r = 0.286^{***}$ | 피해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식할수록 피해 또한 과소평가했다고 인식 |

<분석표 6-3> $***p < .001$. '정보 부족 인식', '피해 산정 불합리성 인식', '피해 과소평가 인식' 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정보 제공의 미흡함이 산정 절차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피해가 과소평가되었다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연쇄 기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함.

³⁷ 피어슨 상관계수(r)는 두 변수 간의 선형적 관계의 강도와 방향을 나타내는 값으로,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0에 가까울수록 관계가 약하고,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양의 관계를 의미한다. 본 분석에서 확인된 상관계수는 정보 부족 인식 ↔ 피해 과소평가 $r=0.179$, 정보 부족 인식 ↔ 피해산정 합리성 $r=0.500$, 피해산정 합리성 ↔ 피해 과소평가 $r=0.286$ 이다.

7. 복구와 회복

7장은 산불 피해 이후 복구지원비 산정 과정, 피해사실 조사 절차, 주거 형태별 차별 경험,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제기 및 처리 결과, 주택 복구 및 소득 피해 현황, 그리고 마을 복구와 공동체 회복에 대한 바람 등 복구와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피해 주민들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복구지원비 평가]

전체 응답자 296명 중 약 93%가 복구지원비 지원 대상이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84%가 복구지원비를 수령했다고 응답했다(표7-1, 표7-2).

복구지원비의 내역과 산정 근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거나 대체로 알지 못한다는 부정 응답이 전체 273명 중 약 75%에 달했다. 산정 근거를 대체로 잘 알고 있거나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약 13%에 불과했다(표7-3).

복구지원비의 액수와 산정 근거 확인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방법을 알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270명 중 48%로 가장 많았으며(표7-4), 확인을 시도한 경우에도 지자체 공무원(약 32%)이나 이장(약 17%)에게 문의하는 방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 스스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 이는 피해 주민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중요 정보에 대해 행정기관의 지원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 응답]

주택이나 생활과 생계 수단 피해로 복구지원비 대상이 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지역별로 안동 100%, 영덕 93%, 의성 약 85%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했다(표7-1). 2025년 10월 조사 시점 기준으로, 복구지원비 수령율은 안동 90%, 영덕 89%, 의성 72% 순으로, 의성의 복구지원비 수령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표7-2).

복구지원비의 내역과 산정 근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거나 대체로 알지 못한다는 부정 응답은 지역별로 의성(약 83%), 안동(약 76%), 영덕(약 67%) 순으로 높았다(표7-3).

액수와 산정 근거의 확인과 관련해, 방법을 알지 못해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의성(약 54%)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안동(약 46%)과 영덕(46%) 순이었다. 지자체 공무원에 문의한 경우는 안동(44%)이 세 지역 중 가장 높았고, 마을 이장을 통해 확인한 비율은 영덕(약 24%)과 의성(약 21%)로 확인됐다(표7-4).

[지역별 심층면접 결과]

영덕-C: “(상세내역을 물으러) 몇번 찾아갔지 근데 담당자 아니면 몰라 따로 물어봐야 되고 아직 못 받은 분이있어서 물어보면 좀 기다리래”

영덕-A: "무슨 돈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니 지금도 모릅니다. 군 직원들도 모르네요. 농업 비료 지원비라고 다섯 글자만 찍혀서 나오는데, 리스트를 줘야 내가 뭘 받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의성-F: "과수원 2천 평 탄 것에 대해... 한 2천여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 그 외에는 소소하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들어온 거 다 합해서 한 하여튼 2천만 원 조금 넘고... 집에 대한 거는 이제 한 푼도 이제 안 됐죠."

의성-I: "1년 부부 소득이 3700(만원) 이상 되면은 맞아 보상에서 제외돼요. ... 그래서 난 보상 하나도 못 받았어요."

[문항별 응답표]

표 7-1. 주택, 농업, 어업, 임업 등 생활/생계 수단의 피해를 입어, 복구지원비 지원 대상이십니까?

| | (사례수) | 그렇다 | 아니다 |
|----|-----------------|-----------------|---------------|
| 전체 | 296 (100.0%) | 275 (92.9%) | 21 (7.1%) |
| 안동 | 100 (100.0%) | 100 (100.0%) | 0 (0.0%) |
| 영덕 | 100 (100.0%) | 93 (93.0%) | 7 (7.0%) |
| 의성 | 96 (100.0%) | 82 (85.4%) | 14 (14.6%) |

표 7-2. 복구지원비를 수령하십니까?

| | (사례수) | 그렇다 | 아니다 |
|----|-----------------|----------------|---------------|
| 전체 | 272 (100.0%) | 229 (84.2%) | 43 (15.8%) |
| 안동 | 100 (100.0%) | 90 (90.0%) | 10 (10.0%) |
| 영덕 | 91 (100.0%) | 81 (89.0%) | 10 (11.0%) |
| 의성 | 81 (100.0%) | 58 (71.6%) | 23 (28.4%) |

표 7-3. 복구지원비의 내역과 산정 근거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 | (사례수) | 전혀 알지 못한다 | 대체로 알지 못한다 | 보통이다 | 대체로 알고 있다 | 매우 잘 알고 있다 |
|----|-----------------|----------------|---------------|---------------|---------------|-------------|
| 전체 | 273 (100.0%) | 124 (45.4%) | 80 (29.3%) | 33 (12.1%) | 34 (12.5%) | 2 (0.7%) |
| 안동 | 99 (100.0%) | 35 (35.4%) | 40 (40.4%) | 12 (12.1%) | 12 (12.1%) | 0 (0.0%) |
| 영덕 | 93 (100.0%) | 38 (40.9%) | 24 (25.8%) | 13 (14.0%) | 16 (17.2%) | 2 (2.2%) |
| 의성 | 81 (100.0%) | 51 (63.0%) | 16 (19.8%) | 8 (9.9%) | 6 (7.4%) | 0 (0.0%) |

표 7-4. 복구지원비의 액수와 산정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 | (사례수) | 방법을 알지 못해서 못했다. | 지자체 공무원에 문의 | 마을 이장에 문의 | 정보가 충분해 잘 알고 있다. | 기타 |
|--|-------|-----------------|-------------|-----------|------------------|----|
|--|-------|-----------------|-------------|-----------|------------------|----|

| | | | | | | |
|----|-----------------|----------------|---------------|---------------|-------------|-------------|
| 전체 | 270 (100.0%) | 130 (48.1%) | 85 (31.5%) | 45 (16.7%) | 8 (3.0%) | 2 (0.7%) |
| 안동 | 100 (100.0%) | 46 (46.0%) | 44 (44.0%) | 7 (7.0%) | 3 (3.0%) | 0 (0.0%) |
| 영덕 | 92 (100.0%) | 42 (45.7%) | 23 (25.0%) | 22 (23.9%) | 5 (5.4%) | 0 (0.0%) |
| 의성 | 78 (100.0%) | 42 (53.8%) | 18 (23.1%) | 16 (20.5%) | 0 (0.0%) | 2 (2.6%) |

[피해 사실 조사 합리성과 복구지원비]

피해 사실 조사가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부정 응답도 273명 중 약 72%로 나타났다(표7-5). 조사 이후 지급된 복구지원비 또한 피해를 충분히 보전하지 못한다는 부정 응답이 8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충분하다는 긍정 응답은 약 4%에 불과했다(표7-6). 복구지원비가 부족한 항목으로는 주택(157건)이 압도적 1순위였으며, 과수 및 과수농지(36건), 영업장 회복(28건), 농지(25건)가 뒤를 이었다(표7-7).

[지역별 응답]

지역별로 살펴보면, 피해 사실 조사의 합리성에 대해 의성(약 82%), 안동(77%), 영덕(약 58%) 순으로 부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표7-5). 복구지원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 응답은 안동(92%), 의성(91%), 영덕(약 84%) 순이었다(표7-6). 복구지원비가 부족한 항목의 경우 영덕은 주택(73건)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의성은 주택(34건), 과수 및 과수농지(20건)가 뒤따랐다. 안동은 주택(50건), 영업장 회복(20건)으로, 세 지역이 공통적으로 주택 손실 피해를 복구지원비가 충분히 보전하지 못한 대표적인 항목이라고 응답했다(표7-7).

[지역별 심층면접 결과]

안동-A: "저희 같은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은 농가나 주택에 비해 지원이 너무 적고, 피해액 산정 기준도 모호해서 재고나 원자재 같은 필수 자산은 아예 보상받지 못했어요. 피해 규모에 비례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소액만 주어지는 데다가, 임차인 등은 기준이 불명확해서 지원에서 빠지는 등 실질적인 현금성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안동-C: "29평 집이 타서 보상금과 지원금을 다 합쳐 1억 원 남짓 받았는데, 이 돈으로는 집 짓고 살림살이 채울라하면 절반도 안됩니다. 신축이나 오래된 집이나 보상금 차등이 없다는 것도 좀 그렇구요. 게다가 실거주자라도 집주인이 아니면 3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서 살 데도 없는데 보상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안동-I: "보상 기준이 무조건 평수 중심이라 수년씩 해 온 과수나 시설 투자는 아예 반영되지 않았습시다. 보험들었다고 추가 보상에서 빠니까 대비한 사람만 억울하죠. 보조금 기준도 너무 낮아서 내 돈을 보태 더 좋은 걸로 사면 또 보조 대상에서 제외해 버립니다. 수박 하우스는 보험도 안 들었는데 수박 모종값도 안 되는 130만 원을 보상이라고 주더라고요."

안동-J: "별정우체국은 수십 년간 국가 우편망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한 공공시설인데도, 재난안전법 시행령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개인 사유재산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보상을 아예 안 해줘서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0원을

받았습니다."

영덕-C: "공무원들이 나와서 사과발을 조사하는데 나무수로 하는게 아니라 평수로 하는거라 1년 생하고 10년 생하고는 1년생은 열매도 안 달리는데 이거 똑같이 처분을 하면 안된다고 그랬어요 공무원들이 뭘 어떻게 해알지를 모르는거라"

영덕-J: "(복구지원비 항목)서류를 뽑아 우편이나 모바일로 보내주면 좋을 텐데, 그냥 '재해 복구 비용'으로만 나오니까 이게 주택 복구비인지 버섯 재배사 복구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의성-C: "사과나무는 다년생이니까... 한창 수확을 보던 나무에 불이 나서 수확을 보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 몇 년 동안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건지..."

의성-L: "이 나무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거의 4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 이 몇 년 간의 소득이 없어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보상이 없고."

[문항별 응답표]

표 7-5. 피해 사실 조사는 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 (사례수) | 전혀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 대체로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 보통이다 | 대체로 합리적으로 이뤄졌다 | 매우 합리적으로 이뤄졌다 |
|----|--------------|-------------------|--------------------|------------|----------------|---------------|
| 전체 | 273 (100.0%) | 131 (48.0%) | 65 (23.8%) | 54 (19.8%) | 21 (7.7%) | 2 (0.7%) |
| 안동 | 100 (100.0%) | 53 (53.0%) | 24 (24.0%) | 20 (20.0%) | 3 (3.0%) | 0 (0.0%) |
| 영덕 | 92 (100.0%) | 33 (35.9%) | 20 (21.7%) | 24 (26.1%) | 13 (14.1%) | 2 (2.2%) |
| 의성 | 81 (100.0%) | 45 (55.6%) | 21 (25.9%) | 10 (12.3%) | 5 (6.2%) | 0 (0.0%) |

표 7-6. 복구지원비는 피해를 복구하는데 충분합니까?

| | (사례수) | 전혀 충분하지 않다 | 대체로 충분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대체로 충분하다 | 매우 충분하다 |
|----|--------------|-------------|-------------|-----------|----------|----------|
| 전체 | 272 (100.0%) | 196 (72.1%) | 46 (16.9%) | 20 (7.4%) | 9 (3.3%) | 1 (0.4%) |
| 안동 | 100 (100.0%) | 77 (77.0%) | 15 (15.0%) | 6 (6.0%) | 1 (1.0%) | 1 (1.0%) |
| 영덕 | 93 (100.0%) | 61 (65.6%) | 17 (18.3%) | 8 (8.6%) | 7 (7.5%) | 0 (0.0%) |
| 의성 | 79 (100.0%) | 58 (73.4%) | 14 (17.7%) | 6 (7.6%) | 1 (1.3%) | 0 (0.0%) |

표 7-7. 복구지원비가 부족하다면 어떤 점에서 부족합니까?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복수응답) [1순위]

| | 주택 | 가재도구, 살림물품 | 농지 | 농기계 | 영농도구 | 과수 및 과수농지 | 영업장 회복 |
|----|-----|------------|----|-----|------|-----------|--------|
| 전체 | 157 | 4 | 25 | 16 | 6 | 36 | 28 |
| 안동 | 50 | 1 | 8 | 6 | 2 | 12 | 20 |

| | | | | | | | |
|----|----|---|----|---|---|----|---|
| 영덕 | 73 | 2 | 7 | 0 | 0 | 4 | 5 |
| 의성 | 34 | 1 | 10 | 5 | 4 | 20 | 3 |

[가중치 환산표: 복구지원비 부족 항목]

아래 가중치 환산표는 표7-7과 같이, 복구지원비의 부족에 대한 복수응답에서 응답자가 선택한 1~3순위 결과에 점수를 부여해 합산한 결과값이다.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을 부여해 합산했으며, 이는 단순 빈도를 넘어 응답자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가 된다. 점수 총합이 높을수록 해당 항목을 선택한 응답자가 많고, 동시에 상위 순위로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출 결과를 보면, 주택(504점)이 1순위, 가재도구·살림 물품(244점)이 2순위, 농기계(187점)가 3순위 복구지원비 부족 항목으로 확인된다.

지역별 가중치 결과, 영덕은 주택(229점), 가재도구·살림물품(119점), 과수 및 과수농지(38점) 순으로 나타났고, 안동은 주택(169점), 영업장 회복(85점), 농기계(93점)순이었으며, 의성은 주택(106점), 농기계와 과수 및 과수농지(각각 72점) 순으로 복구지원비 부족 항목이 확인됐다(분석표 7-1).

| 지역 | 구분 | 주택 | 가재도구, 살림물품 | 과수 및 과수농지 | 영업장 회복 | 농기계 | 농지 | 영농도구 | 주택, 가재도구, 살림물품 |
|----|-----|-----|------------|-----------|--------|-----|-----|------|----------------|
| 전체 | 가중치 | 504 | 244 | 181 | 153 | 187 | 120 | 98 | 1 |
| | 1순위 | 157 | 4 | 36 | 28 | 16 | 25 | 6 | 0 |
| | 2순위 | 14 | 100 | 23 | 24 | 46 | 15 | 17 | 0 |
| | 3순위 | 5 | 32 | 27 | 21 | 47 | 15 | 46 | 1 |
| 안동 | 가중치 | 169 | 75 | 71 | 85 | 93 | 39 | 34 | 0 |
| | 1순위 | 50 | 1 | 12 | 20 | 6 | 8 | 2 | 0 |
| | 2순위 | 7 | 28 | 10 | 8 | 28 | 4 | 7 | 0 |
| | 3순위 | 5 | 16 | 15 | 9 | 19 | 7 | 14 | 0 |
| 영덕 | 가중치 | 229 | 119 | 38 | 28 | 22 | 27 | 15 | 1 |
| | 1순위 | 73 | 2 | 4 | 5 | 0 | 7 | 0 | 0 |
| | 2순위 | 5 | 51 | 9 | 4 | 6 | 1 | 2 | 0 |
| | 3순위 | 0 | 11 | 8 | 5 | 10 | 4 | 11 | 1 |
| 의성 | 가중치 | 106 | 50 | 72 | 40 | 72 | 54 | 49 | 0 |
| | 1순위 | 34 | 1 | 20 | 3 | 10 | 10 | 4 | 0 |
| | 2순위 | 2 | 21 | 4 | 12 | 12 | 10 | 8 | 0 |
| | 3순위 | 0 | 5 | 4 | 7 | 18 | 4 | 21 | 0 |

<분석표 7-1> 복구지원비가 부족한 이유 1~3순위에 대한 가중치 환산표.

**가중치는 다중순위형 응답에 대한 각 빈도값에 1순위: 3점, 2순위:2점, 3순위:1점을 가중한 값.

[주택 피해 유형 및 차별 경험]

응답자 274명 중 81%가 자가주택(토지 소유)에 거주했으며, 약 4%가 임대 거주자(반전세, 월세, 전세)인 것으로 나타났다(표7-8). 임대 거주자라고 응답한 12명 중 약 67%가 집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복구 지원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표7-10), 세입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주거 보상이 집주인에게 지급된 사례(58%)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또 차별을 겪은 임대 거주자의 약 42%는 집수리나 리모델링 등에 투자한 비용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표7-11).

응답자 266명 중 약 12%가 건축물 신고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에 거주했다고 답했으며(표7-9), 무허가 주택에 살던 응답자 24명 중 약 71%가 무허가라는 점 때문에 피해보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표7-12). 어려움을 겪은 이유로는 피해조사는 이뤄졌으나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약 65%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절차를 밟지 못해 피해조사에서 누락된 사례가 약 18%로 뒤를 이었다. 무허가 주택 거주 응답자의 사례수는 적으나 임차인과 무허가 거주자가 재난으로 인한 거주지 보상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 응답 결과]

주택 피해 유형 및 차별과 경험 관련, 세 지역의 산불 피해 주택은 대다수가 자가 소유의 주택(토지 소유)으로, 토지는 임대이나 주택은 자가인 응답자까지 합하면 영덕 약 97%, 안동 92%, 의성 약 81% 순이다. 영덕은 임대 비율이 0%고, 안동이나 의성의 임대 거주 유형도 각각 3% 수준이다(표7-8).

산불 이전 거주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답한 비중은 영덕 14%, 의성 약 18%, 안동 약 4% 수준이었고(표7-9), 이 중 무허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보상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대답한 비중은 의성(100%), 영덕(약 55%) 안동(33%)순으로 확인됐다(표7-12). 어려움을 겪은 이유로는 피해조사는 되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이 의성(80%), 영덕(50%)순이었고, 행정절차를 밟지 못해 피해조사에서 누락되었다는 응답은 의성(20%), 영덕(약 17%)순이었다. 안동은 위의 두 경우 모두 0%지만 보상을 받았으나 매우 적었다는 응답이 1건 확인됐다(표7-13).

[지역별 심층면접 결과]

안동-D: "농막이나 컨테이너같이 정상적인 주거 형태가 아니거나 무허가인 경우에는 아예 지원을 받지 못했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지원 금액 차이도 커서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안동-E: "10년 이상 산 세입자인 저희는 수집한 솔이나 가재도구 등 개인 재산이 싹 다 타도 전혀 보상을 못 받고 위로금 몇 백만 원이 전부인데, 정작 서울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한 집주인이나 그물만 쳐놓고 세금 낸 땅주인은 1억 2천만 원을 받아 가는 게 정말 불합리해요. 또, 키우던 닭이나 칠면조 등 동물이 싹 다 죽었는데도 보상은커녕 일상생활 복구가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안동-F: "저는 45년 동안 안동에 살며 이웃들과 지내왔지만, 주민등록상 실거주지가 아니고 작업실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지원금 절반만 나왔어도 비바람 피할 곳을 지었을 텐데 참 막막하네요. **영덕-E** "세입자들은 더 피해가 많아요. ... 집주인들은 집을 태웠지만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다는 세입자들은 1100만 원밖에 못 받아. 그리고 집주인은 설계비 감면이나 취득세·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지만 세입자는 다 내야 되는 거야."

영덕-C: "실제로 주거를 안 했지만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이 집 이 사람은 건축물 대장이 있어 ... 대장이 있는데도 못 받는 거예요. (거주를 안 해서)"

의성-A: "저는 세입자라 세입자 500만원 지원 그것만 주시고 제 살림이나 추억이나 뭐 가재도구 전자제품 이런 거 다 탔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못받고, 그냥 세입자니까 500만원."

의성-D: "처음에는 산불 나기 전 1년 전부터 여기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안 된다.(...)나는 거주하지 않았던 게 맞는데 고의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는 거주하고 싶어도 못 했다. 병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느라. 요 차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의성-F: "집이 이제 불법 건축물이에요... 40평 되는 게 두 동이었는데 이제 그게 다 탄 거죠."

의성-H: "나는 이제 그게 가장 실망이 큰 거죠. 솔직히 해서 우리 같은 사람 뭐 몇천만 원도 큰돈인데 아니 이게 이게 전혀 지원이 안 된다니까"

의성-J: "무허가라고 전혀 뭐 전혀 뭐 10원 한 장 뭐 받아본 게 없으니까 대신 이제 구호 물품은 쌀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거는 좀 받았지."

의성-I: "창고 보상도 허가된 창고만 보상을 해줬거든요. 근데 시골에 제가 알기로 우리 동네 100이라면은 98가 무허가 창고예요."

[문항별 응답표]

표 7-8. 재해 이전 귀하의 주택의 소유 /임대 상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 (사례수) | 자가주택 (토지소유) | 자가주택 (토지임대) | 임대 (반전세, 월세) | 임대 (전세) | 기타 |
|----|-----------------|----------------|----------------|-----------------|-------------|--------------|
| 전체 | 274 (100.0%) | 223 (81.4%) | 26 (9.5%) | 8 (2.9%) | 4 (1.5%) | 13 (4.7%) |
| 안동 | 100 (100.0%) | 78 (78.0%) | 14 (14.0%) | 5 (5.0%) | 2 (2.0%) | 1 (1.0%) |
| 영덕 | 99 (100.0%) | 86 (86.9%) | 10 (10.1%) | 0 (0.0%) | 0 (0.0%) | 3 (3.0%) |
| 의성 | 75 (100.0%) | 59 (78.7%) | 2 (2.7%) | 3 (4.0%) | 2 (2.7%) | 9 (12.0%) |

표 7-9. 재해 이전 귀하가 살던 주택은 건축물 신고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었습니까?

| | (사례수) | 그렇다 | 아니다 | 모르겠다 |
|----|-----------------|---------------|----------------|-------------|
| 전체 | 266 (100.0%) | 31 (11.7%) | 228 (85.7%) | 7 (2.6%) |
| 안동 | 92 (100.0%) | 4 (4.3%) | 88 (95.7%) | 0 (0.0%) |
| 영덕 | 100 (100.0%) | 14 (14.0%) | 86 (86.0%) | 0 (0.0%) |
| 의성 | 74 (100.0%) | 13 (17.6%) | 54 (73.0%) | 7 (9.5%) |

표 7-10.(기존 주택이 임대였다고 답한 경우) 실거주한 집이 재해피해를 입었지만
집주인(소유자)이 아니라서 피해복구지원에 있어 차별을 겪었습니까? 겪지 않았습니까?

| | (사례수) | 겪었다 | 아니다 |
|----|----------------|--------------|--------------|
| 전체 | 12 (100.0%) | 8 (66.7%) | 4 (33.3%) |
| 안동 | 7 (100.0%) | 4 (57.1%) | 3 (42.9%) |
| 영덕 | 0 (0.0%) | 0 (0.0%) | 0 (0.0%) |
| 의성 | 5 (100.0%) | 4 (80.0%) | 1 (20.0%) |

표 7-11. 구체적으로 다음 중 어떤 점에서 가장 차별을 겪었다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 | 세입자에게 들어가야할 주거보상이 집주인에게 지급됐다. | 집수리나 리모델링 등에 투자한 비용을 보상받지 못했다. |
|----|----------------------------------|-----------------------------------|
| 전체 | 7 (58.3%) | 5 (41.7%) |
| 안동 | 3 (60.0%) | 2 (40.0%) |
| 영덕 | 0 (0.0%) | 0 (0.0%) |
| 의성 | 4 (57.1%) | 3 (42.9%) |

표 7-12. 주택이 피해를 입었지만 무허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보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겪지 않았습니까?

| | (사례수) | 어려움을 겪었다 |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
|----|------------------------------|----------------|--------------|
| 전체 | 24 ³⁸ (100.0%) | 17 (70.8%) | 7 (29.2%) |
| 안동 | 3 (100.0%) | 1 (33.3%) | 2 (66.7%) |
| 영덕 | 11 (100.0%) | 6 (54.5%) | 5 (45.5%) |
| 의성 | 10 (100.0%) | 10 (100.0%) | 0 (0.0%) |

표 7-13. 구체적으로 다음 중 어떠한 점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 | (사례수) | 피해조사는 되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 | 행정절차를 밟지 못해 피해조사에서 누락되었다. | 보상을 받았으나 매우 적었다 | 땅 주인과 합의가 원만하지 못했다. |
|----|------------------------------|---------------------------------|------------------------------------|-----------------------|------------------------------|
| 전체 | 17 ³⁹ (100.0%) | 11 (64.7%) | 3 (17.6%) | 2 (11.8%) | 1 (5.9%) |
| 안동 | 1 (100.0%) | 0 (0.0%) | 0 (0.0%) | 1 (100.0%) | 0 (0.0%) |
| 영덕 | 6 (100.0%) | 3 (50.0%) | 1 (16.7%) | 1 (16.7%) | 1 (16.7%) |
| 의성 | 10 (100.0%) | 8 (80.0%) | 2 (20.0%) | 0 (0.0%) | 0 (0.0%) |

[피해보상 문제 제기 여부 및 경험]

피해보상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지자체에 문제 제기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270명 중 절반 이상(약 56%)이었고(표7-14), 이 중 자신의 민원이 대체로 합당하게

³⁸ 무허가 주택 대상자 31명 중 7명 결측 발생함.
³⁹ 무허가 주택 대상자 31명 중 17명 결측 발생함.

처리되었거나 매우 합당했다고 답한 긍정 응답 비율은 약 5%에 불과했다(표7-15). 이는 피해보상 이의신청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 응답]

지역별로 살펴보면, 피해보상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안동(68%), 의성(61%), 영덕(40%) 순이었고(표7-14), 이 중 문제제기의 처리가 합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긍정 응답은 모두 극소수로(안동 약 6%, 영덕 약 8%, 의성 0%)(표7-15), 세 지역의 산불 피해자 거의 대부분이 행정기관의 피해사실 조사와 피해보상에 관계된 대응에 만족하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심층면접 결과]

안동-H: "제가 입은 전체 피해액이 38억 원인데 지원은 고작 2,200만 원 수준에 불과해요. 행정에서는 임산물 피해를 보상해 준다면서 현실적으로 다 갖추기 불가능한 4가지 서류를 요구하고, 규격에 안 맞는 비닐하우스나 임차인, 실이용자는 서류나 소유권 핑계를 대며 보상에서 다 배제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안동-J: "별정우체국은 수십 년간 국가 우편망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한 공공시설인데 재난안전법 시행령 어디에도 명시가 안되어 있다고 하면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보상을 아예 안 해줘서 완전히 뭐 사각지대..... 0원을 받았습니다."

영덕-D: "보상 문제도 뭐 보니까 뭐 진짜 억울한 사람들 못 받는 사람들 많고 또 뭐 택도 하지 않다는 사람들도 보상도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이게 확실한 조사가 안 됐다는 얘기지. 저장고 보상도 뭐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나왔고, 플라스틱 그게 나 한 2천 개 넘게 탔거든요. 그런 거는 보상이 전혀 없지." (중략) "창고가 무너져 버려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 컨테이너 박스 이런 거는 플라스틱이니까 흔적도 없이 다 타버렸잖아. 사진으로도 남길 수도 없고 다 타보고 없는데 증명할 수가 없죠."

영덕-B: "조금 뭐 문한 틀 타고 조금 요래 탄 거 소파 그리고 벽이 한쪽이 넘어가야 반파 준다 이러더라고 한쪽 벽 넘어가면 집이 남아 있어 그건 완파지 집이 안 남아 있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고 (군에)수차례 항의도 하고 가 가지고 그 사람들 설득도 하고 해봐도 안 돼."

[문항별 응답표]

표 7-14. 본인이 입은 피해가 피해사실 조사에서 누락되거나 피해보상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지자체에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 | (사례수) | 있다 | 없다 |
|----|-----------------|----------------|----------------|
| 전체 | 270 (100.0%) | 151 (55.9%) | 119 (44.1%) |
| 안동 | 100 (100.0%) | 68 (68.0%) | 32 (32.0%) |
| 영덕 | 100 (100.0%) | 40 (40.0%) | 60 (60.0%) |
| 의성 | 70 (100.0%) | 43 (61.4%) | 27 (38.6%) |

표 7-15. 지자체는 귀하의 문제제기를 합당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사례수) | 전혀 합당하지 않았다 | 대체로 합당하지 않았다 | 보통이다 | 대체로 합당했다 | 매우 합당했다 |
|----|-----------------|-------------------|--------------------|--------------|-------------|-------------|
| 전체 | 151 (100.0%) | 87 (57.6%) | 43 (28.5%) | 14 (9.3%) | 6 (4.0%) | 1 (0.7%) |
| 안동 | 69 (100.0%) | 36 (52.2%) | 22 (31.9%) | 7 (10.1%) | 3 (4.3%) | 1 (1.4%) |
| 영덕 | 40 (100.0%) | 23 (57.5%) | 10 (25.0%) | 4 (10.0%) | 3 (7.5%) | 0 (0.0%) |
| 의성 | 42 (100.0%) | 28 (66.7%) | 11 (26.2%) | 3 (7.1%) | 0 (0.0%) | 0 (0.0%) |

[통계분석: 문제 제기 유무와 행정기관 및 피해산정 합리성 평가]

행정기관 대응의 불합리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던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 간 행정기관 대응의 평가에서 차이가 나지 추가 분석했다.

각 항목을 '매우 그렇지 않다'(-2점)부터 '매우 그렇다'(+2점)까지 5단계로 평가 분석한 결과, 문제를 제기한 경험이 있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 사이에는 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수치를 보였으나, 문제 제기 경험이 있는 집단의 부정적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 평가와 관련해, 정보 제공 적절성에서 문제를 제기한 집단(-1.28)이 그렇지 않은 집단(-0.68)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피해 산정 합리성의 문제를 제기한 집단도(-1.34) 그렇지 않은 집단(-0.64)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평가를 했다(분석표 7-2).⁴⁰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행정에 불만이 있는 주민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불만이 행동으로 이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이 더해지며 행정 불신이 심화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 같은 결론으로 귀결된다. 즉 행정기관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불신을 해소하지 못했으며, 나아가 문제를 제기할수록 행정에 대한 신뢰가 더 낮아지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재난 이후 정보 제공이나, 피해보상에 대한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대응 체계와 처리 방식의 실질적인 개선되지 않는 한 행정기관을 향한 피해 주민의 불신이 심화되고 장기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행정 평가 항목 | 문제제기 없음 | 문제제기 있음 | 최소값 (매우 부정) | 최대값 (매우 긍정) |
|------------------|---------|---------|----------------|----------------|
| 행정기관 정보제공 평가 | -0.68 | -1.28 | -2 | 2 |
| 피해산정기준 합리성 평가 | -0.64 | -1.34 | -2 | 2 |

⁴⁰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은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는 분석 방법이다. t값은 두 집단 간 차이의 크기를 나타내며, p값이 0.001 미만이라는 것은 이 차이가 우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0.1% 미만으로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분석표 7-2> 표 7-14에서 문제를 제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표 6-2의 행정기관 정보 제공과 표 7-5의 피해 산정 기준 합리성에 대한 응답을 통계분석한 결과. 통계 검정($t=-6.00, p < .001$ / $t=-5.77, p < .001$).

[주택 복구]

주택 복구와 관련해서는 응답자 284명 중 약 69%가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며(표7-16), 이 중 83%은 임시 주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주택 복구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7-17). 복구 방식으로는 신축(약 83%)이 압도적으로 많아 피해 규모가 수리로 해결될 수준을 넘어선 경우가 대부분임을 보여준다(표7-18). 복구 시 가장 큰 걱정으로 비용(약 96%)이 꼽혔으며(표7-19), 복구지원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표7-6, 272명 중 89%)과 연결하면 지원비 부족이 복구 착수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복구 계획이 없는 응답자 중에서 이유를 밝힌 30명의 40%는 임시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답했다(표7-20). 이처럼 임시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응답자 16명 중 약 69%는 생활이 불편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편리해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응답이 약 19%였다(표7-21). 또, 응답자 280명 중 91%가 산불 이전에 살던 마을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답해, 주거 지원이 다른 곳으로의 이주보다 산불 피해 전 거주지에서의 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표7-22).

[지역별 응답 결과]

산불 피해로 주택 복구가 필요한 상황인지 묻는 질문에 영덕 89%, 안동 60%, 의성 약 55% 순으로 그렇다고 응답하여 영덕이 주택 피해가 가장 큰 지역임을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표7-16).

주택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들 중 지역별로 안동 약 92%, 의성 87%, 영덕 75%가 임시 주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주택 복구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표7-17). 복구 계획이 없는 경우는, 안동은 비용이 부족해 복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0%에 달했고, 기타 이유가 20%였다. 영덕은 임시주택 잔류를 희망하는 응답 비율이 52%였고, 비용 부족으로 계획 세울 수 없다(약 24%)는 이유가 2순위로 높았다. 의성은 비용 부족으로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0%고 임시주택 잔류 희망과 살 곳을 정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각각 25%로 확인됐다(표7-20).

영덕의 경우 주택 피해 복구 필요(89%)가 가장 높지만(표7-16), 임시주택 잔류와 비용 부족을 이유로 주택 복구 계획 응답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7-20). 임시주택 잔류 희망의 이유는 응답자 중 69%가 생활이 불편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서라고 응답했다(표7-21).

안동과 의성의 경우, 주택 복구 필요 응답이 각각 60%, 약 55% 응답 비율이고(표7-16), 신축을 통해 복구하려는 비중이 각각 약 91%, 약 85%로 영덕보다 높지만 비용 문제가 방해 요인이라는 응답도 높았다(안동 약 95%, 의성 97%)(표7-18, 7-19).

산불 이전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 비율은 영덕 95%, 안동 약 91%, 의성 약 88% 순으로 높아, 세 지역 주택 피해자의 대부분이 산불 이전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표7-22).

[지역별 심층면접 결과]

안동-B: "요새 평당 700에서 800만 원 정도는 잡아야 하는데 보상금만으로는 어렵도 없죠. 옛날 집 사시던 분들은 그나마 유리할지 몰라도, 새 집이나 큰 집 사시던 분들은 손해가 큼니다. 도로 같은 기반 시설은 시에서 해준다지만, 결국 집은 각자 알아서 지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어르신들 보상금이 자녀 통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부모님은 집을 다시 짓고 싶어 하셔도 자녀들이 동의 안 해주거나 돈을 가져가 버려서 못 짓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어요."

안동-E: "저는 지금 1억 4천5백만 원을 빚내서 집을 짓고 있어요. 실제로 다 지으려면 3억 정도는 들어가요. 그래서 인건비라도 좀 아껴보려고 한 달 내내 매달려서 제가 직접 미장도 하고, 돌도 쌓고, 못질까지 다 혼자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집 지으려고 새로 측량을 해보니까 옛날 눈대중으로 알던 거랑 경계가 달라서 아예 집을 못 짓거나 다 지어놓고 준공 검사를 못 받는 분들도 생겼어요. 이웃으로 잘 살던 사람들끼리 토지 경계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안동-J: "저희 집은 콘크리트로 지은 거라 겉모양은 멀쩡하게 남아서 보상은 별로 못받았는데, 내부 벽돌이나 시멘트가 다 부식이 돼서 사실상 다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해요. 산불 나고 보니까, 어르신들이 전소라고 최소 1억씩 목돈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와서 '여기다 집 다시 짓지 말고 그 돈으로 시내에 아파트 사서 나가자'고 권유를 해요. 실제로 그렇게 집을 안 짓고 동네를 떠나버린 가구가 여럿이에요. 그러다 보니 마을에 빈집만 늘어나고, 농촌 소멸이 확 빨라질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영덕-E: "우리 집 같은 데를 지었는지 가 3년 빼 안 됐는데 싹 탔는데 보상금이라는 부분은 뭐 1억 얼마밖에 못 받았으니까 그거는 얼토당토 안 하고 (중략) (불 나기전에 살던 집을)시가로 하면 집하고 가재도구 다 합해서 한 4억 5천만 원인데...(지금 받은 보상은) 1억도 못 받았으니까 엄청나게 불합리하죠 이것으로 집 못지어요."

영덕-C: "지금은 사실 뭐 1억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없잖아. 그러면은 2억 이상은 지고 있어야 조립도 집을 지을 것 같아 좀 괜찮게 지으려면" 라고 하면서 지원비 부족을 이야기 했다.

[문항별 응답표]

표 7-16.재해로 주택이 피해를 입어, 그대로 거주할 수 없고 복구가 필요한 상황입니까?

| | (사례수) | 그렇다 | 아니다 |
|----|-----------------|----------------|---------------|
| 전체 | 284 (100.0%) | 195 (68.7%) | 89 (31.3%) |
| 안동 | 100 (100.0%) | 60 (60.0%) | 40 (40.0%) |
| 영덕 | 100 (100.0%) | 89 (89.0%) | 11 (11.0%) |
| 의성 | 84 (100.0%) | 46 (54.8%) | 38 (45.2%) |

표 7-17. 주택 복구 계획이 있습니까?(임시주거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 | (사례수) | 있다 | 없다 |
|--|-------|----|----|
|--|-------|----|----|

| | | | |
|----|-------------------------------|----------------|---------------|
| 전체 | 194 ⁴¹ (100.0%) | 161 (83.0%) | 33 (17.0%) |
| 안동 | 60 (100.0%) | 55 (91.7%) | 5 (8.3%) |
| 영덕 | 88 (100.0%) | 66 (75.0%) | 22 (25.0%) |
| 의성 | 46 (100.0%) | 40 (87.0%) | 6 (13.0%) |

표 7-18. 주택 복구(회복) 방식은 무엇입니까?

| | (사례수) | 새로 건축 | 일부 수리 | 주택 구입 | 주택 임대 (전세/월세 등) |
|----|-------------------------------|----------------|---------------|--------------|--------------------|
| 전체 | 160 ⁴² (100.0%) | 132 (82.5%) | 13 (8.1%) | 12 (7.5%) | 3 (1.9%) |
| 안동 | 55 (100.0%) | 50 (90.9%) | 0 (0.0%) | 5 (9.1%) | 0 (0.0%) |
| 영덕 | 66 (100.0%) | 49 (74.2%) | 11 (16.7%) | 5 (7.6%) | 1 (1.5%) |
| 의성 | 39 (100.0%) | 33 (84.6%) | 2 (5.1%) | 2 (5.1%) | 2 (5.1%) |

표 7-19. 주택 복구를 고민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사례수) | 비용 | 안전 (산사태, 폭우, 산불 재발 등) | 이웃과의 갈등 |
|----|-------------------------------|----------------|--------------------------|-------------|
| 전체 | 158 ⁴³ (100.0%) | 151 (95.6%) | 4 (2.5%) | 3 (1.9%) |
| 안동 | 55 (100.0%) | 52 (94.5%) | 2 (3.6%) | 1 (1.8%) |
| 영덕 | 65 (100.0%) | 62 (95.4%) | 1 (1.5%) | 2 (3.1%) |
| 의성 | 38 (100.0%) | 37 (97.4%) | 1 (2.6%) | 0 (0.0%) |

표 7-20.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사례수) | 비용이 부족해 세우지 않고 있다 | 임시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 | 어디에 살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 | 계획을 세울 마음의 여유가 없다 | 기타 |
|----|------------------------------|-------------------------|------------------------|-------------------------|-------------------------|--------------|
| 전체 | 30 ⁴⁴ (100.0%) | 11 (36.7%) | 12 (40.0%) | 4 (13.3%) | 1 (3.3%) | 2 (6.7%) |
| 안동 | 5 (100.0%) | 4 (80.0%) | 0 (0.0%) | 0 (0.0%) | 0 (0.0%) | 1 (20.0%) |
| 영덕 | 21 (100.0%) | 5 (23.8%) | 11 (52.4%) | 3 (14.3%) | 1 (4.8%) | 1 (4.8%) |
| 의성 | 4 (100.0%) | 2 (50.0%) | 1 (25.0%) | 1 (25.0%) | 0 (0.0%) | 0 (0.0%) |

표 7-21. 임시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사례수) | 임시주택 생활이 불편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 | 임시주택 생활이 편리하다. | 임시주택 단지는 불편하지만 옮겨서 살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
|----|----------------|---------------------------------|-------------------|---|
| 전체 | 16 (100.0%) | 11 (68.8%) | 3 (18.8%) | 2 (12.5%) |
| 안동 | 2 | 1 | 0 | 1 |

⁴¹ 주택 복구가 필요한 응답자 195명 중 1명 결측 발생함.

⁴² 주택 복구 계획이 있는 응답자 161명 중 1명 결측 발생함.

⁴³ 주택 복구 계획이 있는 응답자 161명 중 3명 결측 발생함.

⁴⁴ 주택 복구 계획이 없는 응답자 33명 중 3명 결측 발생함.

| | | | | |
|----|----------------|---------------|--------------|-------------|
| | (100.0%) | (50.0%) | (0.0%) | (50.0%) |
| 영덕 | 13 (100.0%) | 9 (69.2%) | 3 (23.1%) | 1 (7.7%) |
| 의성 | 1 (100.0%) | 1 (100.0%) | 0 (0.0%) | 0 (0.0%) |

표 7-22. 재해 이전에 살던 마을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향이 없다고 한 경우, 기타에 이유 추가 기술)

| | (사례수) | 의향이 있다 | 잘 모르겠다 | 의향이 없다 | 기타 |
|----|-----------------|----------------|--------------|-------------|-------------|
| 전체 | 280 (100.0%) | 256 (91.4%) | 13 (4.6%) | 9 (3.2%) | 2 (0.7%) |
| 안동 | 98 (100.0%) | 89 (90.8%) | 5 (5.1%) | 3 (3.1%) | 1 (1.0%) |
| 영덕 | 100 (100.0%) | 95 (95.0%) | 3 (3.0%) | 2 (2.0%) | 0 (0.0%) |
| 의성 | 82 (100.0%) | 72 (87.8%) | 5 (6.1%) | 4 (4.9%) | 1 (1.2%) |

[소득 피해 현황 및 회복 전망]

산불 이전의 주요 소득 활동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292명 중 약 33%가 농업(논/밭 작물), 약 28%가 농업(과수)로 응답했고, 연금소득(기초/노령/국민) 16%, 기타 16%, 상업/서비스업이 7%로 확인됐다(표7-23).

소득 활동 수단의 형태로는 전체 응답자 234명 중 78%가 자영업, 고용직 약 12%, 임대 사업자가 10% 였다(표7-24).

전체 응답자 267명 중 약 85%가 산불로 인해 경제활동에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고(표 7-25), 소득 회복 측면에서는 응답자 225명 중 약 38%가 소득 회복률 10% 미만이라고 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30~50% 수준 회복으로 응답한 비율이 약 22%, 50~80% 수준 회복으로 응답한 비율이 약 18%, 10~30% 수준 회복으로 응답한 비율이 12%였다. 80~100% 수준 회복으로 응답한 비율은 11%에 그쳐, 모든 지역의 응답자들이 경제 활동 피해 복구 및 소득 회복이 절실한 상황으로 보인다(표7-26).

응답자 225명 중 52%가 앞으로도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회복 수준이 점차 높아지지 않을 거라고 부정 응답했다(표7-27).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현재 소득 피해의 회복이 더딜 뿐 아니라 장기적 전망도 밝지 않음을 보여준다.

경제활동 회복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으로는 복구지원비 확대(66%)가 압도적으로 많이 꼽혔으며, 소득이 회복될 때까지의 기본소득 지원(약 24%)이 뒤를 이었다(표 7-28). 두 항목을 합산하면 전체의 90%로, 현금의 우선적인 지원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별 응답 결과]

산불로 인한 소득 피해와 관련해 안동은 응답자 100명 중 농업(논, 밭, 작물)과 농업(과수) 비율이 각각 30%였고, 상업/서비스업 14%, 연금소득 7% 순이었다. 영덕은 응답자 99명 중

연금소득 32%, 농업(논, 밭, 작물) 26%, 기타19%, 농업(과수) 16%, 상업/서비스업 6% 순으로 응답했다. 의성은 응답자 93명 중 농업(논, 밭, 작물) 43%, 농업(과수) 약 38%, 기타 약 10%, 연금소득 약 9%, 상업/서비스업 1% 순이었다.

응답자 중엔 농업(논, 밭, 작물, 과수 포함)을 소득으로 둔 지역의 산불 피해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각각 의성(약 81%), 안동(60%), 영덕(약 43%) 순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 중 주 소득 수단이 연금인 응답자 비율은 영덕이 약 32%로 세 지역 중 눈에 띄게 높았다. 세 지역 전체 응답자 중 상업/서비스업 종사 비율이 가장 낮았는데, 그 중엔 안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14%)(표7-23).

주요 소득활동 유형은 안동이 응답자 92명 중 자영업(약 72%), 임대(약 16%), 고용직(약 12%)순으로 확인됐다. 영덕은 응답자 65명 중 자영업(약 77%) 고용직(약 17%), 임대(약 6%) 순이었고, 의성은 응답자 77명 중 자영업(87%), 고용직(약 7%), 임대(약 7%) 순이었다. 자영업 비율은 의성이 가장 높고, 고용직 비율은 영덕, 임대업 비율은 안동이 제일 높았다(표7-24).

이번 산불로 경제활동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지역별 응답 비율은 안동 93%, 약 영덕 79%, 의성 80%였다(표7-25). 세 지역 모두 피해가 10% 미만 복구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그 중 영덕이 세 지역 중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약 51%), 의성(38%), 안동(29%)이 뒤를 이었다(표7-26).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회복 수준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은 영덕과 의성에서 모두 0%로 확인됐고, 안동에서만 전체 93명 중 3%였다. 소득 회복 수준이 점차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부정 응답한 비율은 영덕(61%), 의성(59%), 안동(약 40%) 순으로 높았다(표 7-27).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회복을 위해 우선 필요한 지원으로는 세 지역 모두에서 복구지원비 혹은 회복이 될 때까지 소득지원 등 현금으로의 우선적/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수가 높았는데, 의성(약 96%), 영덕(87%), 안동(86%) 순으로 나타났다(표7-28).

[지역별 심층면접 결과]

안동-C: "다들 농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산이 탄 재가 냇가로 흩으로 들어왔는데, 곡식이고 뭐고 자라지를 않는다고 하는데, 올해 농사는 다 망쳤다고 그러합니다. 농사 짓던 사람은 거의 당장 올해 작물 팔아서 소득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안동-E: "가게를 다시 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1억 4천만 원이라는 대출금이랑 매달 50만 원이 넘는 이자를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워요. 장사도 못 하고 있는데 54만 원씩 꼬박꼬박 빚을 갚아나가야 하거든요. 거기다 올해 3월부터 애지중지 키우던 닭 100마리랑 칠면조 같은 동물들이 싹 다 죽었는데 한 푼도 보상을 못 받아서 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안동-I: "수박 하우스에 철주랑 비닐, 안에 있던 작물까지 몽땅 망가졌어요, 3년, 5년, 10년을 내다보고 투자한 포도 과수원도 싹 타버려서 수익 구조가 한 번에 다 무너졌어요. 한 해 예상 소득이 완전히 '0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수는 나무를 새로 심는다 해도 수확까지 4~5년은 걸리니까 당장 앞으로 최소 3년에서 5년 동안은 꿈쩍없이 소득이 없는 겁니다."

영덕-J: "우리는 생활비 자체가 끊겨버렸어. 지금 우리는 농사 지어서 먹는 거잖아. ... 농사가 일단은 중단이 돼 버렸으니까 (중략) 갚아야 될 이자나 원금은 계속 돌아오고..."

보상은 쥐꼬리만큼 쥐놓고 그것도 대출금 갚으라 카는데 다 합당하지 않아요. (중략) 내 이대로 그냥 난 더 좋은 집도 필요 없고 더 좋은 트랙터도 필요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만 그냥 공장(버섯 재배사) 복구만 하면 되는데... 보상공금은 저거 마음대로 정해주는 거."

영덕-B: "산에 대한 보상이 실질적인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대체 작물을 하라 그러면 도라지, 더덕, 산양삼 이런 걸 하라 카는데 과연 이게 아무 기술도 없는 사람이 이걸 해가지고 성공할 수가 있겠는가? 못한다고 봐요... 산에 대한 보상이 너무 미비하다. (중략) 송이산이 내 생계 수단이었거든요. ... 1년에 그래도 한 4~5천(만 원) 나오니까 이거 보고 (귀촌해) 들어온 사람들인데 지금은 그게 없단 말입니다. ... 수확 자리가 없어졌을 때 이걸 대체할 방도가 없어요 (중략) 송이는 이제 한 50년 돼야 돼요. ... 솔나무가 없잖아요 다 타버려가 (중략) 실질적인 보상이 최고 첫째예요. ... 이재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의성-B: "그 문항에도 보니까 그 소득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던데 ... 사과 농사는 올해 농사 지어서 올해 소득을 보는 그 품목이 아니잖아요. 특수성이 있으니까. ... 그에 대한 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돼야지 뭐 이렇게 농촌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의성-B)

의성-C: "마늘이 굶어야 되는데 굶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게 보니까 면에서나 행정에서는 당장 (마늘이)죽어야 보상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 보상은 보상대로 못 받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의료비 지원이 아니에요. ... 하루에 일당을 나가는 게 지금 27일째 나가는데 그 돈만 해도 의료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성-I: "농지랑 과수원이 다 타 갖고 수입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겨울에 그거를 헤쳐 나가는 게 생활고가 지금 전부 다들 힘들 거 같아요.(...)“가장 시급한 게 뭐가? 의료 지원.... 앞으로의 생활 보장이 안 되는 거죠. ... 생계 지원이 가장 큰 문제죠."

의성-L: "사과밭이 이제 밭을 이제 새로 이렇게 뭐지 조성을 하면서 올해가 4년 차예요. ... 이 나무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거의 4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보상이 없고."

[문항별 응답표]

표 7-23. 재해 이전의 주요 소득활동은 무엇이었습니까?

| | (사례수) | 농업 (논/밭 작물) | 농업 (과수) | 연금소득 (기초/노령/ 국민) | 상업/서비스업(소매, 숙박, 기타 음식 서비스) | 기타 |
|----|-----------------|----------------|---------------|------------------------|-----------------------------------|---------------|
| 전체 | 292 (100.0%) | 96 (32.9%) | 81 (27.7%) | 47 (16.1%) | 21 (7.2%) | 47 (16.1%) |
| 안동 | 100 (100.0%) | 30 (30.0%) | 30 (30.0%) | 7 (7.0%) | 14 (14.0%) | 19 (19.0%) |
| 영덕 | 99 (100.0%) | 26 (26.3%) | 16 (16.2%) | 32 (32.3%) | 6 (6.1%) | 19 (19.2%) |
| 의성 | 93 (100.0%) | 40 (43.0%) | 35 (37.6%) | 8 (8.6%) | 1 (1.1%) | 9 (9.7%) |

표 7-24. 주요소득활동 수단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 | (사례수) | 자영이다 | 고용되어 임금을 받았다 | 임대했다 |
|----|--------------|-------------|--------------|------------|
| 전체 | 234 (100.0%) | 183 (78.2%) | 27 (11.5%) | 24 (10.3%) |
| 안동 | 92 (100.0%) | 66 (71.7%) | 11 (12.0%) | 15 (16.3%) |
| 영덕 | 65 (100.0%) | 50 (76.9%) | 11 (16.9%) | 4 (6.2%) |
| 의성 | 77 (100.0%) | 67 (87.0%) | 5 (6.5%) | 5 (6.5%) |

표 7-25. 재해로 인해 경제활동에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입지 않으셨습니까?

| | (사례수) | 피해를 입었다 | 피해를 입지 않았다 |
|----|--------------|-------------|------------|
| 전체 | 267 (100.0%) | 226 (84.6%) | 41 (15.4%) |
| 안동 | 100 (100.0%) | 93 (93.0%) | 7 (7.0%) |
| 영덕 | 75 (100.0%) | 59 (78.7%) | 16 (21.3%) |
| 의성 | 92 (100.0%) | 74 (80.4%) | 18 (19.6%) |

표 7-26. 귀하의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은 재해 이전 대비 얼마나 회복되었습니까? (재해 이전이 100%)

| | (사례수) | 10% 미만 | 10~30% | 30~50% | 50~80% | 80~100% |
|----|----------------------------|------------|------------|------------|------------|------------|
| 전체 | 225 ⁴⁵ (100.0%) | 85 (37.8%) | 27 (12.0%) | 49 (21.8%) | 40 (17.8%) | 24 (10.7%) |
| 안동 | 93 (100.0%) | 27 (29.0%) | 11 (11.8%) | 26 (28.0%) | 16 (17.2%) | 13 (14.0%) |
| 영덕 | 59 (100.0%) | 30 (50.8%) | 6 (10.2%) | 10 (16.9%) | 9 (15.3%) | 4 (6.8%) |
| 의성 | 73 (100.0%) | 28 (38.4%) | 10 (13.7%) | 13 (17.8%) | 15 (20.5%) | 7 (9.6%) |

표 7-27. 귀하의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회복 수준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 (사례수) | 매우 그렇지 않다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225 ⁴⁶ (100.0%) | 53 (23.6%) | 64 (28.4%) | 59 (26.2%) | 46 (20.4%) | 3 (1.3%) |
| 안동 | 93 (100.0%) | 14 (15.1%) | 23 (24.7%) | 27 (29.0%) | 26 (28.0%) | 3 (3.2%) |
| 영덕 | 59 (100.0%) | 21 (35.6%) | 15 (25.4%) | 15 (25.4%) | 8 (13.6%) | 0 (0.0%) |
| 의성 | 73 (100.0%) | 18 (24.7%) | 26 (35.6%) | 17 (23.3%) | 12 (16.4%) | 0 (0.0%) |

표 7-28. 경제활동의 회복을 위해 다음 중 어떠한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사례수) | 복구지원비 확대 | 회복이 될 때까지의 소득지원 (기본소득) | 금융지원 (무/저이자) |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 기타 |
|--|-------|----------|------------------------|--------------|-------------|----|
|--|-------|----------|------------------------|--------------|-------------|----|

⁴⁵ 경제활동 피해 입은 응답자 226명 중 1명 결측 발생함.

⁴⁶ 경제활동 피해 입은 응답자 226명 중 1명 결측 발생함.

| | | | | | | |
|----|-------------------------------|----------------|---------------|--------------|--------------|-------------|
| 전체 | 225 ⁴⁷ (100.0%) | 149 (66.2%) | 53 (23.6%) | 10 (4.4%) | 10 (4.4%) | 3 (1.3%) |
| 안동 | 93 (100.0%) | 63 (67.7%) | 17 (18.3%) | 6 (6.5%) | 5 (5.4%) | 2 (2.2%) |
| 영덕 | 59 (100.0%) | 35 (59.3%) | 17 (28.8%) | 3 (5.1%) | 3 (5.1%) | 1 (1.7%) |
| 의성 | 73 (100.0%) | 51 (69.9%) | 19 (26.0%) | 1 (1.4%) | 2 (2.7%) | 0 (0.0%) |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피해조사 합리성과 소득 회복 인식 정도]

피해사실 조사에 대한 합리성 인식이 현재의 소득 회복 인식 정도와 향후 소득 회복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피해사실 조사의 합리성 인식은 현재의 소득 회복 인식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뿐만 아니라, 향후 소득 회복 전망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핵심 동인으로 나타났다.

첫째, 피해조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식할수록 현재 더 높은 소득 회복 인식 정도를 보일 가능성(승산)이 1.38배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과정의 합리성에 대한 신뢰가 현재 체감하는 경제적 회복 상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만드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피해조사에 대한 합리성 인식은 현재의 소득 회복 인식 정도(OR=1.38)보다 향후 소득 회복 전망 인식(OR=1.53)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2%)이 소득 회복 인식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피해조사 과정과 결과, 이의신청에서의 불합리한 경험은 단순한 심리적 불만을 넘어 미래 전망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고착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피해조사에 대한 합리성 인식은 주민들의 현재 경제 상황 인식 뿐만 아니라 향후 재기 의지와 전망을 결정짓는 예측지표로 작용한다. 따라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보상의 규모와 같은 양적 지원뿐만 아니라 그 과정과 결과에서의 투명성·공정성·정당성·합리성을 확보하는 질적 개선과 신뢰 형성을 위한 행정기관의 재난 지원 대응 체계 구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승산비 (Odds Ratio) | p-value | 해석 |
|-------------|----------|------------------|---------|---|
| 소득 회복 정도 | 피해조사 합리성 | 1.38 | .024* | 합리적이라고 인식할수록 더 높은 소득 회복 구간에 속할 가능성 38%↑ |
| 향후 소득 회복 전망 | 피해조사 합리성 | 1.53 | .003** | 합리적이라고 인식할수록 향후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을 가능성 53%↑ |

<분석표 7-3> 표 7-5 와 표 7-26, 표 7-27 문항 간의 통계 분석 결과 (* $p < .05$, ** $p < .01$, N=215)

고용 형태에 따른 회복 수준 인식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고용 및 임대 소득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경우 경제활동이 10% 미만으로 회복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⁴⁷ 경제활동 피해 입은 응답자 226명 중 1명 결측 발생함.

50% 이상 회복되었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경제 회복 인식에 더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분석표 7-4).

소득 유형과 회복 수준 인식을 분석했을 때, 모든 소득 유형에서 10% 미만 회복 인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특정 집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피해 주민 전반의 경제 회복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상황임을 보여준다. 다만 소득 유형에 따라 그 정도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임업과 어업 종사자의 경우 경제 회복 인식이 부정적인 비율이 높았으나 각각 11명, 8명으로 표본 수가 매우 작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임업은 산불이라는 재난의 특성상 피해가 더욱 직접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일괄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자영업자나 임업·어업 종사자와 같이 회복 인식이 더딘 집단의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분석표 7-5).

| 소득 회복 정도 | 고용 및 임대업 | 자영업 |
|----------|----------------|----------------|
| 10% 미만 | 11명 (26.8%) | 66명 (39.3%) |
| 10~30% | 7명 (17.1%) | 19명 (11.3%) |
| 30~50% | 6명 (14.6%) | 41명 (24.4%) |
| 50~80% | 13명 (31.7%) | 27명 (16.1%) |
| 80~100% | 4명 (9.8%) | 15명 (8.9%) |

<분석표 7-4> 표 7-24와 표 7-26의 응답 결과를 교차분석한 결과. 고용 및 임대업(N=41), 자영업(N=168)

| 소득 회복 정도 | 농업(과수) | 농업(논/밭작물) | 상업/서비스 | 어업 | 임업 | 연금소득 | 기타 |
|----------|----------------|----------------|---------------|---------------|---------------|---------------|---------------|
| 10% 미만 | 26명 (34.8%) | 29명 (35.4%) | 7명 (36.8%) | 5명 (62.5%) | 8명 (72.7%) | 4명 (50.0%) | 5명 (27.8%) |
| 10~30% | 10명 (13.2%) | 10명 (12.2%) | 3명 (15.8%) | 0명 (0.0%) | 2명 (18.2%) | 0명 (0명) | 2명 (11.1%) |
| 30~50% | 21명 (27.6%) | 18명 (22.0%) | 3명 (15.8%) | 0명 (0.0%) | 1명 (9.1%) | 1명 (12.5%) | 4명 (22.2%) |
| 50~80% | 14명 (18.4%) | 14명 (17.1%) | 5명 (26.3%) | 3명 (37.5%) | 0명 (0.0%) | 0명 (0명) | 4명 (22.2%) |
| 80~100% | 5명 (6.6%) | 11명 (13.4%) | 1명 (5.3%) | 0명 (0.0%) | 0명 (0.0%) | 3명 (37.5%) | 3명 (16.7%) |

<분석표 7-5> 표 7-23과 표 7-26의 응답 결과를 교차분석한 결과. 농업 과수(N=76), 농업 논/밭작물(N=82), 상업/서비스(N=19), 어업(N=8), 임업(N=11), 연금소득(N=8), 기타(N=18)

[새로운 마을을 위한 보완점]

응답자 292명 중 63%가 마을 공간을 새로 조성해야 한다고 긍정 응답 했으며(표7-29), 재조성 시 최우선 과제(복수응답)로 폭우,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마을(138건)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표7-30).

[지역별 응답]

지역별로 살펴보면, 마을 공간을 새로 조성해야 한다고 한 긍정 응답은 안동 73%, 영덕 68%, 의성 약 48% 순으로 나타났다. 마을을 새롭게 조성할 때 폭우,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마을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세 지역 모두 1순위로 유사했고, 영덕이 약 70%로 가장 높았으며, 안동과 의성이 각각 약 64%로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표7-30).

[지역별 심층면접 결과]

영덕-H: "여기도 좀 안전하게 해주면 좋겠어. 불 안 나게 ... 불이 제일 무섭잖아요."

영덕-E: "여기는 마을을 조성이 아니라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소방차가 왔다 갔다 해야 하거든요. 그게 안 되거든 그래 그거는 일단은 해야 돼."

의성-K: 마을회관이 타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니 소통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 회복이 절실합니다."

[문항별 응답표]

표 7-29. 재해로 마을 공간의 피해가 커서 새로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292 (100.0%) | 39 (13.4%) | 40 (13.7%) | 28 (9.6%) | 81 (27.7%) | 104 (35.6%) |
| 안동 | 100 (100.0%) | 5 (5.0%) | 14 (14.0%) | 8 (8.0%) | 39 (39.0%) | 34 (34.0%) |
| 영덕 | 100 (100.0%) | 14 (14.0%) | 9 (9.0%) | 9 (9.0%) | 27 (27.0%) | 41 (41.0%) |
| 의성 | 92 (100.0%) | 20 (21.7%) | 17 (18.5%) | 11 (12.0%) | 15 (16.3%) | 29 (31.5%) |

표 7-30. 재해 이후 마을을 새롭게 조성할 때 어떤 보완이 필요하십니까?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복수응답) [1순위]

| | 폭우, 산불 등으로부터 안전한 마을 | 공동편의시설 (운동기구, 전자, 마을회관 등) | 도로, 상수도 폐기물처리장 등 부족한 인프라 보완 | 대중교통 연결 | 아름다운 경관 회복 |
|----|---------------------|---------------------------|-----------------------------|---------|------------|
| 전체 | 138 | 25 | 27 | 3 | 15 |
| 안동 | 52 | 7 | 13 | 1 | 8 |
| 영덕 | 54 | 11 | 7 | 2 | 3 |
| 의성 | 32 | 7 | 7 | 0 | 4 |

[가중치 환산표: 새로운 마을을 위한 보완점]

아래 가중치 환산표는 표7-30과 같이, 보완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복수응답에서 응답자가 선택한 1~3순위 결과에 점수를 부여해 합산한 결과값이다.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을 부여해 합산했으며, 이는 단순 빈도를 넘어 응답자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가 된다. 점수 총합이 높을수록 해당 항목을 선택한 응답자가 많고, 동시에 상위 순위로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출 결과, 폭우, 산불 등으로부터 안전한 마을(496점)이 1순위, 도로, 상수도, 폐기물 처리장 등 부족한 인프라 보완(246점)이 2순위, 공동편의시설 보완이 3순위로 나타났다.

지역별 결과로는, 세 지역 모두 안전한 마을이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안동(125점)과 의성(61점)은 인프라 보완(2순위)에 대한 수요가 공통적으로 높았다. 영덕은 공동편의시설보완(97점)이 2순위로 확인됐다.

| 지역 | 구분 | 폭우, 산불 등으로부터 안전한 마을 | 도로, 상수도, 폐기물처리장 등 부족한 인프라 보완 | 공동편의시설 (운동기구, 정자, 마을회관 등) | 아름다운 경관 회복 | 대중교통 연결 |
|----|-----|---------------------|------------------------------|---------------------------|------------|---------|
| 전체 | 가중치 | 496 | 246 | 201 | 191 | 40 |
| | 1순위 | 138 | 27 | 25 | 15 | 3 |
| | 2순위 | 32 | 67 | 43 | 38 | 8 |
| | 3순위 | 18 | 31 | 40 | 70 | 15 |
| 안동 | 가중치 | 195 | 125 | 58 | 86 | 15 |
| | 1순위 | 52 | 13 | 7 | 8 | 1 |
| | 2순위 | 14 | 35 | 10 | 16 | 4 |
| | 3순위 | 11 | 16 | 17 | 30 | 4 |
| 영덕 | 가중치 | 185 | 60 | 97 | 60 | 23 |
| | 1순위 | 54 | 7 | 11 | 3 | 2 |
| | 2순위 | 9 | 17 | 25 | 12 | 4 |
| | 3순위 | 5 | 5 | 14 | 27 | 9 |
| 의성 | 가중치 | 116 | 61 | 46 | 45 | 2 |
| | 1순위 | 32 | 7 | 7 | 4 | 0 |
| | 2순위 | 9 | 15 | 8 | 10 | 0 |
| | 3순위 | 2 | 10 | 9 | 13 | 2 |

<분석표 7-8> 마을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보완점 1~3순위에 대한 가중치 환산표.

**가중치는 다중순위형 응답에 대한 각 빈도값에 1순위: 3점, 2순위:2점, 3순위:1점을 가중한 값.

[새로운 마을에 대한 기대사항]

실태조사 응답자들은 새롭게 조성된 마을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82건)이길 기대한다고 1순위로 답했고, 전기료, 난방비 걱정 없는 에너지 자립 마을(52건)로 기대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으며, 3순위로는 마을 공동체가 활발한 마을(13%)을 꼽았다(표 7-31).

[지역별 심층면접 결과]

안동-C: “집을 서둘러 지었어요. 그 전에 산림과에 산사태 방지 대책을 해달라고 했는데, 조치는 없었어요. 작년에는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우리 마을은 산사태 위험 때문에 여러 번 대피했었는데 올해는 큰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다행이긴 했지만 앞으로 큰 비가 오면 어찌 되는건지 많이 불안하긴 합니다”

안동-B: “안그래도 마을을 새롭게 아름답게 꾸미자는 의견이 모였다. 마을에 교수님도 있고 해서 같이 설계를 해보고 있다. 마을 길도 넓히는 김에 아름답고 환경도 좋은 마을로 재건하고 싶다”

안동-C: “마을에 생겼으면 하는 것은...어르신들이 식사를 챙기는거를 이제 어려워한다. 공동식당이 생기면 좋겠다.”

안동-J: 어르신들이 마을을 안 떠나고 계속 살 수 있으려면 마을 단위로 소규모 공동주택 공간을 짓고, 공용 식당 공용 공간이 있어서 복지사가 한 집 한 집 방문하는 대신, 여러 노인을 함께 돌볼 수 있는 방식이 되면 좋겠고(....) 불이 났을때 마을에 상수도가 끊겼었다. 마을마다 지하수 관정이나 소형 물탱크, 펌프 같은 것을 비상시에 쓸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한다. 이번에 마을에 지형 문제로 마을 방송이 전달이 안 됐다. 비상시 주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수신 여부까지 확인하는 '스마트 방송 시스템'이 동네 전역에 전면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영덕-A: “시골에서는 햇빛 연금이 최고입니다. 전부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과수나무가 타버렸는데 5년이 있어야 그게 열매가 열려요. 그럼 그동안에 뭐가 먹고 삽니까? ... 200kw 하면 300만 원 되면은 먹고 살만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지 불타고 불 탄 땅에다 좀 하겠다 이 말입니다.”

영덕-G: (어떤 마을이 되면 좋을지 예시 중) “전기세 난방비 걱정 없는 마을 ... 발전이 되면 좋아”

의성-A: “불은 어차피 났고 이제 복구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도 좀 어루만지면서 저희들이, 여기 의성에 사는 사람들이 ‘좀 그래도 행복하다’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복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성-B: “마을 회관에 운동기구나 혈압 재는 기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공용 물건을 쓰는 공간이 주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의성-F: “마을 단위의 조금 더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서 마을 단위의 사업들을 조금 예산들을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좀 있어. ... 꽃길 조성 같은, 그거라도 보면서 '아이고 예쁘다'라는 말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만 하고 싶어요.”

의성-H: “우리 주민들한테 '나도 안 나간다. 우리 주민들 한 분도 나가지 맙시다. 여기서 같이 사십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주민들은 지금 같이 살 계획을 하고 한 분 한 분 지금 주택을 짓고 계시고... 저는 그게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성-F: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끼리 이런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고민들은 하고 있는 거지. 그 속에서 법인체나 협동조합 형태라든지... 우리끼리의 공동체 팀을 만들자라고 해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려고 그래요.”

[문항별 응답표]

표 7-31. 재해 이후 마을을 새롭게 조성한다면 어떤 마을이 되길 기대합니까? (3개까지 복수응답) [1순위]

| |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 전기료, 난방비 걱정없는 에너지자립 마을 | 마을공동체가 활발한 마을 | 난방, 수도 등 마을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마을 | 소득이 높은 마을 |
|----|--------------|------------------------|---------------|---------------------------|-----------|
| 전체 | 82 | 52 | 28 | 20 | 28 |
| 안동 | 30 | 16 | 5 | 12 | 18 |
| 영덕 | 29 | 31 | 8 | 5 | 4 |
| 의성 | 23 | 5 | 15 | 3 | 6 |

[가중치 환산표: 새로운 마을에 대한 기대사항]

아래 가중치 환산표는 표7-31과 같이 같이, 기대 사항에 대한 복수응답에서 응답자가 선택한 1~3순위 결과에 점수를 부여해 합산한 결과값이다.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을 부여해 합산했으며, 이는 단순 빈도를 넘어 응답자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된다. 점수 총합이 높을수록 해당 항목을 선택한 응답자가 많고, 동시에 상위 순위로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출 결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332점)이 1순위, 에너지 자립 마을(292점)이 2순위, 공동체가 활발한 마을(202점)이 3순위이었다.

지역별 결과로, 안동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133점)이 1순위, 에너지 자립 마을(108점)이 2순위, 소득이 높은 마을(95점)이 3순위로 나타났다. 영덕은 에너지 자립 마을(130점)이 1순위,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109점)이 2순위, 소득이 높은 마을(69점)이 3순위로 나타났다. 의성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90점)이 1순위, 마을공동체가 활발한 마을(69점)이 2순위, 에너지 자립 마을(54점)이 3순위로 확인된다.

| 지역 | 구분 |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 전기료, 난방비 걱정없는 에너지자립 마을 | 소득이 높은 마을 | 마을공동체가 활발한 마을 | 난방, 수도 등 마을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마을 |
|----|------------|--------------|------------------------|------------|---------------|---------------------------|
| 전체 | 가중치 | 332 | 292 | 198 | 202 | 157 |
| | 1순위 | 82 | 52 | 28 | 28 | 20 |
| | 2순위 | 31 | 51 | 33 | 43 | 30 |
| | 3순위 | 24 | 34 | 48 | 32 | 37 |
| 안동 | 가중치 | 133 | 108 | 95 | 67 | 76 |
| | 1순위 | 30 | 16 | 18 | 5 | 12 |
| | 2순위 | 15 | 21 | 12 | 20 | 11 |
| | 3순위 | 13 | 18 | 17 | 12 | 18 |
| 영덕 | 가중치 | 109 | 130 | 69 | 66 | 53 |
| | 1순위 | 29 | 31 | 4 | 8 | 5 |
| | 2순위 | 7 | 14 | 17 | 16 | 14 |
| | 3순위 | 8 | 9 | 23 | 10 | 10 |
| 의성 | 가중치 | 90 | 54 | 34 | 69 | 28 |
| | 1순위 | 23 | 5 | 6 | 15 | 3 |
| | 2순위 | 9 | 16 | 4 | 7 | 5 |
| | 3순위 | 3 | 7 | 8 | 10 | 9 |

<분석표 7-9> 새로운 마을에 대한 기대사항 1~3순위에 대한 가중치 환산표.

**가중치는 다중순위형 응답에 대한 각 빈도값에 1순위: 3점, 2순위:2점, 3순위:1점을 가중한 값.

[마을 공동체 결속과 갈등]

마을 재조성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절차로는 주민 의견 수렴(약 69%)이 가장 많아, 전문가나 행정기관의 주도보다 주민 참여를 우선시해야한다는 인식이 세 지역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표7-32).

산불 발생 이후 이웃 관계와 마을 공동체 결속 변화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재해 직후 서로를 도왔다는 긍정 응답이 291명 중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표7-33-2), 물품 배분 과정에서 상호 배려가 있었다는 긍정 응답도 약 50%였다(표7-33-1). 그러나 이웃 관계가 더 좋아졌다거나 공동체가 더 돈독해졌다는 긍정 응답은 각각 38%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표7-33-3, 7-33-4).

한편, 응답자 290명 중 약 52%가 주민 간 갈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으며(표7-34), 이 중 응답자 147명은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복구지원비 배분의 불공정한 기준으로 인한 불편한 감정(약 52%)을 지적했다(표7-35). 실태조사 진행 시점까지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응답이 약 54%였으며, 해결을 포기한 경우(14%)까지 포함하면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가 68%에 달했다(표7-36).

산불 피해 주민들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복구지원비 배분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불편함인 만큼, 배분 기준과 산정 과정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을 공동체 훼손을 방지하는데에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지역별 응답]

마을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세 지역 모두 마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1순위로 꼽았으며, 의성이 약 77%, 영덕이 68%, 안동 64%순으로 응답했다. 2순위 역시 세 지역이 동일하게 도시 계획 전문가들의 도움을 선택했고, 안동과 영덕이 약 20%로 동일한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의성이 약 10% 였다. 역시 세 지역 모두 3순위로 마을 리더들의 결정을 꼽았고 지역별로 약 4~7% 수준이었다(표7-32).

산불 발생 후 이웃간 관계나 마을 공동체 결속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물품 배분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 상호간 배려했다는 긍정 응답은 세 지역이 모두 절반 수준으로 유사했다(영덕 53%, 의성 48%, 안동 47%). 상호간 배려하지 않았거나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부정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안동 19%, 의성 약 19%, 영덕 17%)(표7-33-1).

산불 재난 이후 회복 과정에서 서로를 도운 경험에 대한 긍정 응답 역시 세 지역 모두 높았으나(안동 63%, 의성 약 60%, 영덕 약 59%)(표7-33-2), 이웃 간 관계가 산불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부정 응답도 다소 확인됐다(안동 28%, 의성 약 28%, 영덕 20%)(표7-33-3). 재난 이후 마을 공동체 전체가 재난 이전보다 더 돈독해졌다는 긍정 응답이 더 높지만(영덕 45%, 의성 35%, 안동 32%), 재난 이전보다 돈독하지 않다는 부정 응답도 적지 않았다(안동 30%, 의성 약 29%, 영덕 20%)(표7-33-4).

재난 이후 이웃 간 갈등을 직접 경험하거나 듣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안동(64%),

의성(약 59%), 영덕(33%) 순으로 높았고(표7-34),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세 지역 모두 복구지원비 배분의 불공정한 기준으로 인한 불편한 감정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응답했다(영덕 약 61%, 의성 50%, 안동 48%). 의성은 불충분한 피해 지원 수준(24%)을 2순위 갈등 이유로 꼽았다. 3순위는 피해 지원과 복구 과정에 대한 정보 부족(18%)을 이유로 꼽았고,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이었다.

안동은 피해 지원과 복구 과정에 대한 정보 부족(15%)이 2순위 갈등 이유였고, 임시주택 단지의 불편함으로 인한 이웃과의 갈등(14%)이 3순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표7-35). 세 지역 모두 실태조사 당시 시점에도 갈등이 지속 중이라고 답한 비중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유사했다(표7-36).

[지역별 심층면접 결과]

안동-B: “임시주택 단지에 모여 사니까 예전에는 마을회관에 잘 안 모이던 분들도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는 점은 좋습니다. 주민들 간의 결속력이 훨씬 강해지는 것 같고요 사생활이 부족할까 봐 걱정도 했지만 다행히 큰 갈등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동-E: “원래 우리 동네는 남자들은 같이 밭 일구고 여자들은 음식도 같이 해 먹으면서 단합이 엄청 잘 되고 참 화목했거든요. 그런데 산불 이후에 보상 문제나 토지 경계 문제로 집 지으려고 새로 측량을 해보니 옛날 눈대중으로 알던 경계랑 달라서, 집을 못 짓거나 다 지어놓고 준공 검사를 못 받는 분들이 생기면서 오래된 이웃들끼리 갈등이 엄청 심해진 거죠.”

안동-G: “보상금이 원래 집 가치랑 안 맞게 지급되다 보니까 이웃들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속으로는 '저 집은 불타서 돈 잘 받았다'며 수군대는 일도 있어요. 부모님 집이 타서 보상금이 목돈으로 나오면 형제들이 와서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가족이 아예 파탄 나는 경우까지 있다는 거예요. 또, 임시주택에 강제로 모여 살게 되니까 고기 한 번 구워 먹어도 사생활 침해나 옆집 눈치가 보이고 뒷말이 나와서 주민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되게 깊어졌습니다.”

영덕-C: “청사진을 보고 우리가 이제 그건 아니다. 주민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그 이야기하고 ... 집을 지으려면 이제 길을 너무 (길)위주로 너무 넓히다 보면 슈트(대지)가 좁아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 설명회가 중요한 게 그런 거라”

영덕-A: “옆집에서 돈 받았다 하니까 뭐 불만이 있고 뭐 저 집은 안 탔는데 돈 받았니? 뭐 조금 탔는데 다 받았니 뭐 이런 갈등이 지금 심해요. 지금 그리고 2천만 원짜리 집인데 저 사람은 1억 받아가지고 또 받았단다... 안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2천만 원짜리도 안 되는 집을 1억 받았으니 배 아플 거 아닙니까?”

의성-F: 거기서는 나름 그래도 그렇게 극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다 어려운 모습들을 보고 하다 보니까 서로서로 이제 '우리 용기 내자'고 이제 그런 말도 하고... 함께하는 분들이 되게 소중한 거라.”

의성-J: “동네 사람들이 착하고 좋으니까 그래도 뭐 쌀 갖다 주는 분, 또 뭐 고춧가루, 하다못해 참기름... 당신들이 입던 거라도 다 챙겨 주는 거지. 그게 고마운 거지.”

의성-H: “냉장고를 나눠주는데 어떤 행태를 했느냐, 어느 동네에서 냉장고가 다 507리터, 520리터까지 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네에 10개가 냉장고가 317리터가 갖 어요. (...) 그 사람들이 노. 군수 말 잘 듣는 사람이었겠죠? (...) 우리 동네에 와서는 바꿔 달라고 하니까 절대 안 된대요. (...)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충성 경쟁을

시킨 거죠."

의성-F: "주변에서 '돈 1억 얼마씩 받고 살림살이 찢지'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굉장히 뼈아픈 말들이에요. 아픈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할망정 속 없는 말들을 뱉을 때는 충격이 큼니다."

의성-K: "우리 마을 10집 중 한 집만 안 탔는데, 라면 10박스가 오면 9박스만 오는 거예요. 집 탄 집만 주는 거죠. 그럼 안 탄 집은 라면을 못 받으니 마음에 서운함이 남죠."

의성-B: "마을 회관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자기들은 피해를 본다고 막 불편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이고 원성 듣는 게 힘들었죠."

[문항별 응답표]

표 7-32. 재해 이후 마을을 새롭게 조성한다면 이 중 어떤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까?

| | (사례수) | 마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 |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도움 | 지자체의 결정 | 마을리더들의 결정 | 기타 |
|----|-----------------|------------------|---------------------|--------------|--------------|-------------|
| 전체 | 208 (100.0%) | 143 (68.8%) | 36 (17.3%) | 14 (6.7%) | 12 (5.8%) | 3 (1.4%) |
| 안동 | 81 (100.0%) | 52 (64.2%) | 16 (19.8%) | 6 (7.4%) | 5 (6.2%) | 2 (2.5%) |
| 영덕 | 76 (100.0%) | 52 (68.4%) | 15 (19.7%) | 4 (5.3%) | 5 (6.6%) | 0 (0.0%) |
| 의성 | 51 (100.0%) | 39 (76.5%) | 5 (9.8%) | 4 (7.8%) | 2 (3.9%) | 1 (2.0%) |

표 7-33-1. 재해 발생 후 이웃과의 관계와 마을공동체의 결속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재해 이후 물품 배분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 상호간에 배려했다.]

| | (사례수) | 전혀 아니다 | 대체로 아니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291 (100.0%) | 27 (9.3%) | 26 (8.9%) | 94 (32.3%) | 102 (35.1%) | 42 (14.4%) |
| 안동 | 100 (100.0%) | 11 (11.0%) | 8 (8.0%) | 34 (34.0%) | 35 (35.0%) | 12 (12.0%) |
| 영덕 | 100 (100.0%) | 6 (6.0%) | 11 (11.0%) | 30 (30.0%) | 39 (39.0%) | 14 (14.0%) |
| 의성 | 91 (100.0%) | 10 (11.0%) | 7 (7.7%) | 30 (33.0%) | 28 (30.8%) | 16 (17.6%) |

표 7-33-2. 재해 발생 후 이웃과의 관계와 마을공동체의 결속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재해 이후 재난 회복 과정에 있어서 서로를 도왔다.]

| | (사례수) | 전혀 아니다 | 대체로 아니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291 (100.0%) | 14 (4.8%) | 18 (6.2%) | 83 (28.5%) | 120 (41.2%) | 56 (19.2%) |
| 안동 | 100 (100.0%) | 3 (3.0%) | 7 (7.0%) | 27 (27.0%) | 46 (46.0%) | 17 (17.0%) |
| 영덕 | 99 | 3 | 6 | 32 | 36 | 22 |

| | | | | | | |
|----|----------------|-------------|-------------|---------------|---------------|---------------|
| | (100.0%) | (3.0%) | (6.1%) | (32.3%) | (36.4%) | (22.2%) |
| 의성 | 92 (100.0%) | 8 (8.7%) | 5 (5.4%) | 24 (26.1%) | 38 (41.3%) | 17 (18.5%) |

표 7-33-3.재해 발생 후 이웃과의 관계와 마을공동체의 결속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재해 이후 이웃 간 관계가 더 좋아졌다.]

| | (사례수) | 전혀 아니다 | 대체로 아니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289 (100.0%) | 31 (10.7%) | 42 (14.5%) | 105 (36.3%) | 78 (27.0%) | 33 (11.4%) |
| 안동 | 100 (100.0%) | 10 (10.0%) | 18 (18.0%) | 37 (37.0%) | 25 (25.0%) | 10 (10.0%) |
| 영덕 | 99 (100.0%) | 9 (9.1%) | 11 (11.1%) | 36 (36.4%) | 29 (29.3%) | 14 (14.1%) |
| 의성 | 90 (100.0%) | 12 (13.3%) | 13 (14.4%) | 32 (35.6%) | 24 (26.7%) | 9 (10.0%) |

표 7-33-4.재해 발생 후 이웃과의 관계와 마을공동체의 결속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재해 이후 우리 마을(공동체)는 재난 이전보다 더 돈독해졌다.]

| | (사례수) | 전혀 아니다 | 대체로 아니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291 (100.0%) | 32 (11.0%) | 44 (15.1%) | 106 (36.4%) | 75 (25.8%) | 34 (11.7%) |
| 안동 | 100 (100.0%) | 9 (9.0%) | 21 (21.0%) | 38 (38.0%) | 23 (23.0%) | 9 (9.0%) |
| 영덕 | 100 (100.0%) | 7 (7.0%) | 13 (13.0%) | 35 (35.0%) | 28 (28.0%) | 17 (17.0%) |
| 의성 | 91 (100.0%) | 16 (17.6%) | 10 (11.0%) | 33 (36.3%) | 24 (26.4%) | 8 (8.8%) |

표 7-34. 재해 복구 과정 중 이웃간의 갈등을 직접 경험하거나 간접적으로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사례수) | 없다 | 듣거나 목격했다 | 직접 경험했다 |
|----|-----------------|----------------|---------------|---------------|
| 전체 | 290 (100.0%) | 140 (48.3%) | 91 (31.4%) | 59 (20.3%) |
| 안동 | 100 (100.0%) | 36 (36.0%) | 44 (44.0%) | 20 (20.0%) |
| 영덕 | 100 (100.0%) | 67 (67.0%) | 19 (19.0%) | 14 (14.0%) |
| 의성 | 90 (100.0%) | 37 (41.1%) | 28 (31.1%) | 25 (27.8%) |

표 7-35. 재난 후 갈등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사례수) | 복구지원비 배분에서 불합리한(불공정한) 기준으로 불편한 감정 | 불충분한 피해 지원 수준 | 피해지원복구 과정에 대한 정보 부족 | 임시주택단지의 인접한 이웃과의 갈등 | 기타 |
|----|-------------------------------|-----------------------------------|---------------|---------------------|---------------------|--------------|
| 전체 | 147 ⁴⁸ (100.0%) | 76 (51.7%) | 25 (17.0%) | 22 (15.0%) | 11 (7.5%) | 13 (8.8%) |

⁴⁸ 직.간접적으로 갈등을 경험한 응답자 150명 중 3명 결측 발생함.

| | | | | | | |
|----|----------------|---------------|---------------|---------------|--------------|-------------|
| 안동 | 64 (100.0%) | 31 (48.4%) | 8 (12.5%) | 10 (15.6%) | 9 (14.1%) | 6 (9.4%) |
| 영덕 | 33 (100.0%) | 20 (60.6%) | 5 (15.2%) | 3 (9.1%) | 2 (6.1%) | 3 (9.1%) |
| 의성 | 50 (100.0%) | 25 (50.0%) | 12 (24.0%) | 9 (18.0%) | 0 (0.0%) | 4 (8.0%) |

표 7-36. 해당 갈등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 | (사례수) | 현재도 갈등 중이다. |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 해결을 포기했다. | 잘 모르겠다. |
|----|-------------------------------|----------------|----------------|---------------|---------------|
| 전체 | 147 ⁴⁹ (100.0%) | 79 (53.7%) | 27 (18.4%) | 21 (14.3%) | 20 (13.6%) |
| 안동 | 64 (100.0%) | 34 (53.1%) | 12 (18.8%) | 10 (15.6%) | 8 (12.5%) |
| 영덕 | 33 (100.0%) | 17 (51.5%) | 6 (18.2%) | 7 (21.2%) | 3 (9.1%) |
| 의성 | 50 (100.0%) | 28 (56.0%) | 9 (18.0%) | 4 (8.0%) | 9 (18.0%) |

[교차분석: 피해사실 조사 합리성 인식과 갈등 원인]

지원금 배분의 불합리성을 갈등 원인으로 꼽은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피해사실 조사를 불합리하게 평가한 비율이 훨씬 높았다. 단순히 조사 결과에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나와 이웃의 피해사실 조사 단계부터 공정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갈등으로 이어졌음을 시사한다(분석표 7-6).

| 피해사실 조사 합리성 | 갈등 원인: 지원금 배분의 불합리성 | 갈등 원인: 나머지 |
|---------------------|---------------------|----------------|
| 매우 합리적으로 이뤄졌다. | 0명 (0.0%) | 0명 (0.0%) |
| 대체로 합리적으로 이뤄졌다. | 3명 (4.2%) | 3명 (3.0%) |
| 보통이다. | 9명 (12.7%) | 13명 (19.7%) |
| 대체로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 9명 (12.7%) | 17명 (25.8%) |
| 전혀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 50명 (70.4%) | 34명 (51.5%) |

<분석표 7-6> 표 7-5와 표 7-35의 응답 결과를 교차분석한 결과. 갈등원인: 재난 배분 불합리성(N=71), 갈등원인: 나머지(N=66)

더욱 주목할 점은 갈등 원인으로 지원금 배분의 불합리성을 꼽은 집단이 복구지원비 산정 내역과 관련 정보에 대해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보가 없어서 불만인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정보 공개만으로는 갈등을 해소할 수 없으며, 복구지원비 산정 기준 자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지원금 배분이 불합리하다는 인식을 낮출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피해 주민간 갈등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분석표 7-7).

⁴⁹ 직·간접적으로 갈등을 경험한 응답자 150명 중 3명 결측 발생함.

| 복구지원비 산정 내역 정보 인식 | 갈등 원인: 지원금 배분의 불합리성 | 갈등 원인: 나머지 |
|----------------------|---------------------|----------------|
| 매우 잘 알고 있다. | 1명 (1.5%) | 1명 (1.4%) |
| 대체로 알고 있다. | 9명 (13.6%) | 5명 (7.0%) |
| 보통이다. | 10명 (15.2%) | 8명 (11.3%) |
| 대체로 알지 못한다. | 21명 (31.8%) | 19명 (26.8%) |
| 전혀 알지 못한다. | 25명 (37.9%) | 38명 (53.5%) |

<분석표 7-7> 표 7-3과 표 7-35의 응답 결과를 교차분석한 결과. 갈등원인: 재난 배분 불합리성(N=66), 갈등원인: 나머지(N=71)

8. 산불특별법

8장은 산불 피해 주민들이 2025년 9월 제정된 산불특별법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담았다.

2026년 1월 시행된 산불특별법은 대규모 산불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과 직결되는 법령이다. 해당 법은 2025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28일 공포됐으며, 본 실태조사는 법 통과 후인 10월 중순 이후에 진행됐다. 법이 공포되기까지 수개월간 관련 부처 및 국회 산불특별법위원회의 논의와 입법 과정이 진행된 만큼, 직접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해당 법의 존재와 주요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시점이었다. 이에, 본 실태조사에서는 피해 주민들의 법 인지도와 법 제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인식하는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6%(76명)가 산불특별법의 존재 자체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54%(159명)는 들어봤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은 16%(48명),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3%(10명)에 그쳐, 직접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특별법 제정 사실이나 법의 주요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8-1).

법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67명 중 피해 주민 의견이 반영됐다는 긍정 응답은 11%(7명)에 불과했고, 절반 이상(58%, 39명)이 피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표 8-2).

피해 주민 의견이 산불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로는 실질적 피해 평가 계획 부족(41건)이 가장 많았으며, 생계 회복 내용 부족(22건), 산림·생태계 회복 내용 부족(17건), 마을 재건 내용 부족(12건) 순이었다. 피해 평가와 생계 회복 관련 내용이 상위를 차지해 주민들이 법에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표 8-3).

[지역별 응답]

법 인지도 측면에서는 영덕에서 전혀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이 36%로 세 지역 중 가장 높았고, 의성(28%), 안동(14%) 순이었다. 반면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안동(23%)이 가장 높았으며, 영덕과 의성은 각각 19%, 17%에 그쳤다(표 8-1).

주민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세 지역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안동 15건, 영덕 12건, 의성 12건)이 반영됐다는 응답(안동 1건, 영덕 4건, 의성 2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8-2).

법에서 부족한 내용으로는 안동에서 실질적 피해 평가 계획 부족(18건)과 생계 회복 내용 부족(10건)이 주를 이뤘고, 영덕은 실질적 피해 평가(11건), 생계 회복(5건), 산림·생태계 회복(5건)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성은 실질적 피해 평가(12건), 생계 회복(7건), 산림·생태계 회복(5건), 마을 재건(5건) 순으로 나타났다(표 8-3).

[지역별 심층면접 결과]

안동-A: "위원회 중심의 집행 구조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실제 지원 규모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특별법에 기대가 컸는데 피해자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에 실망감이 크다. 특별법 시행령 초안이 이미 배포되었다고 들었는데 피해자들한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피해 규모에 비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지 모르겠다."

안동-C: "특별법이 통과되었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체감이 잘 안 되네요."

안동-H: "특별법이 제정됐어도 세부 지원은 내년 1월 시행령 제정 때까지 몽땅 보류되어 있고, 경북도에서 특별법에 반영해 달라고 낸 건의사항이 600건이나 되는데, 기본 원칙이나 우선순위 정리가 하나도 안 된걸로 알고 있다. 경북도가 제대로 역할을 안하고 있다는거고요"

안동-J: "특별법이나 시행령이 딱 적힌 것만 보상해 주는 식인데 구체적으로 사각지대 사례를 법에 명시해 주지 않으면 아예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특별법은 다른 혜택을 이미 조금이라도 받은 분들보다 아예 0원을 받은 완전한 무보상 피해자들을 우선적으로 구제하는 방향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들 특별법만 얘기하고 있고, 산불 피해 관련 민간협의체 회의도 특별법 통과 이후로는 중단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영덕-A: (특별법에 주민 의견이 잘 반영되었는지 묻자) "전혀 안 됐죠. 우리가 저기 걸어놓은 특별법 보면 아직까지 뭐 거의 없잖아요. ... 위원회는 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필요안하다 생각하면 의견도 청취 안할 것이고, 돈을 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거는 쓰여 있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될런지는 모는 것죠"

영덕-C: "정부에서 뭐가 좀 이래 적극적으로 해줘야하는데 우리 이재민들은 답이 없다. 근데 한두 명 국회의원이 힘을 쓴다고 해봐야 큰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는 정책이 문제야 정책."

의성-I: "특별법 통과됐다는 것만 알지 거기에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물어보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잘 몰라요. 시행령은 어떻게 이루어질 거다 이런 공문을 좀 만들어 배포해 주면 주민들이 알 수 있을 텐데..."

의성-K: "사과를 다시 심어서 정상적으로 수확되는 기간까지라도 채무를 유예시켜 주거나 이런 금융 지원이 절무한데, 특별법 안에는 이런 농업 기반에 대한 지원 지침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의성-F: "특별법은 25일 날 통과가 되는데 한숨은 크게 쉰다라고. (...) 이쪽을 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쪽이니 저놈들이니 옳은 방향으로 만들어졌겠나 라는 생각인데... 이쪽에 의성 쪽이나 남동 쪽에 청동 쪽에는 지역구 의원들이 옳은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네들 항상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별로 기대는 없습니다."

의성-C: "특별법이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은 방향이 많이 빗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난개발 같은 게 우려가 많이 되고, 정경유착이 돼서 업자들이 돈을 빼먹는 식으로 진행될까 봐 걱정입니다."

[문항별 응답표]

표 8-1. 2025년 9월 제정된 산불특별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 | (사례수) |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 들어봤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다 | 매우 잘 알고 있다 |
|----|-----------------|---------------|--------------------|-----------------|--------------|
| 전체 | 293 (100.0%) | 76 (25.9%) | 159 (54.3%) | 48 (16.4%) | 10 (3.4%) |
| 안동 | 100 (100.0%) | 14 (14.0%) | 63 (63.0%) | 21 (21.0%) | 2 (2.0%) |
| 영덕 | 100 (100.0%) | 36 (36.0%) | 45 (45.0%) | 14 (14.0%) | 5 (5.0%) |
| 의성 | 93 (100.0%) | 26 (28.0%) | 51 (54.8%) | 13 (14.0%) | 3 (3.2%) |

표 8-2. 2025년 9월 제정된 산불특별법에 피해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사례수) |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 대체로 반영되지 않았다 | 보통이다 | 대체로 잘 반영되었다 | 매우 잘 반영되었다 |
|----|----------------|---------------|---------------|---------------|--------------|-------------|
| 전체 | 67 (100.0%) | 16 (23.9%) | 23 (34.3%) | 21 (31.3%) | 5 (7.5%) | 2 (3.0%) |
| 안동 | 25 (100.0%) | 6 (24.0%) | 9 (36.0%) | 9 (36.0%) | 1 (4.0%) | 0 (0.0%) |
| 영덕 | 26 (100.0%) | 6 (23.1%) | 6 (23.1%) | 10 (38.5%) | 3 (11.5%) | 1 (3.8%) |
| 의성 | 16 (100.0%) | 4 (25.0%) | 8 (50.0%) | 2 (12.5%) | 1 (6.3%) | 1 (6.3%) |

표 8-3.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 실질적 피해 평가 계획이 부족하다. | 생계 회복을 위한 내용이 부족하다. | 산림과 생태계 회복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 마을재건을 위한 내용이 부족하다. | 기타 |
|----|---------------------|---------------------|--------------------------|--------------------|----|
| 전체 | 41 | 22 | 17 | 12 | 6 |
| 안동 | 18 | 10 | 7 | 5 | 0 |
| 영덕 | 11 | 5 | 5 | 2 | 2 |
| 의성 | 12 | 7 | 5 | 5 | 4 |

결론

9. 종합 시사점

본 실태조사는 2025년 영남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물적 피해, 대피 경험, 임시주택, 심리적 영향, 재난지원, 복구 과정, 산불특별법 인식 등 재난 대응 전 과정을 조사했다.

각 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밀 진단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이다.

이번 민간 공동 조사는 초대형 산불이 단순한 물적 피해를 넘어 피해주민의 삶과 공동체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민간 차원의 조사는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전체 피해 양상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산불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 없는 회복을 실현하려면, 화재 면적이나 재산 피해액 등 단기적 지표에만 치중했던 기존 정부 조사의 관성을 깨고 국가 차원의 정밀 조사와 진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피해주민의 대피 과정은 물론 임시거주의 안정성, 생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고통, 장기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PTSD) 등을 면밀히 추적 조사해야 한다. 특히 재난의 영향은 시간이 흐를수록 고착되거나 변형되므로, 시기별·단계별 변화를 반영한 '국가 표준 데이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숫자에 가려졌던 사람의 삶을 회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국가 책임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조사와 진단이 있기를 기대하며, 본 조사를 통해 도출된 각 장별 정책 시사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고령 피해자와 주택·생계 기반 피해를 고려한 소통 및 복구 지원 체계 필요

1장은 응답자 기초 조사로 연령, 성별, 가족 규모, 거주 기간, 피해 유형(복수응답),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강 상태 정보를 확인했다. 정부 공식 자료⁵⁰에 따르면 경북의 고령화율⁵¹은 27.46%로 전국 2위 수준이며, 안동, 영덕, 의성 세 지역⁵² 모두 전국 평균 고령화율(21.21%) 보다 높다.

이는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특징이다. 응답자 중 약 82%가 60세 이상으로 확인됐고, 이중 초고령 계층인 80세 이상도 약 18%를 차지했다. 40년 이상 장기 거주자가 51%, 1인가구가 21%인 점도 확인됐다. 피해 유형을 보면, 이와 같이 고령화로 취약한 인구학적 구성 가운데 주택, 생계 수단, 영업장 피해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고령이자 독거인 피해 주민들은 자력 대피가 매우 어려웠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영남 초대형 산불 피해에 노출된 세 지역은 연령, 거주 특성, 피해 유형 면에서 재난 복구 관련 정보 접근성, 복구 역량 등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산불특별법의 이행에 있어 인구학적 구성 및 피해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및 소통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⁵⁰ 행정안전부,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⁵¹ 만 65세 이상 기준

⁵² 의성 49.20%, 영덕 44.06%, 안동 약 29.73%

2.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의 업종별 특수성과 피해 단가 현실화 개선 필요

2장은 산불로 인한 주민들의 물적·신체적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응답자들이 행정기관의 산불 피해 평가가 실제 손실을 산정하는 데 적절했다고 평가하는지, 현실적인 피해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인식하는지 확인했다.

실태조사 팀은 이전의 대형 산불 현장 경험에 근거해, 영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며 정신적 피로도에 크게 기여하는 추억이 깃든 물품에 대한 피해 인식도 조사에 포함했다. 대형 재난은 주민들의 주거, 생계, 신체적·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평생의 기억을 통째로 앗아가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사진·편지·일기장·기념품 등 추억이 깃든 물건의 극심한 피해 수준에 대한 응답은 66%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록으로 일부 복원이 가능한 젊은 세대와 달리, 대다수가 고령층인 산불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이는 개인 및 공동체 역사의 영구적 소멸을 의미한다.

자료^{53,54}에 따르면, 이번 영남 초대형 산불 피해 규모는 총 10만 4천ha로 1987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294ha)의 약 353배에 이른다. 사유시설은 주택 3,848동,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7,158대, 농·산림작물 3,419ha 등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297명 중 약 65%가 주택 피해를 80% 이상의 극심한 수준으로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삶의 터전 자체가 소멸했음을 의미하는 수준이다. 생계 기반의 훼손 또한 치명적인 수준이다. 농장·공장·상점·농기구 등의 영업장 피해의 경우, 극심한 피해 수준으로 응답한 비율이 41%, 가전제품·가구·옷 등의 가재도구도 68%에 달했다. 그러나 응답자 절반 이상이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피해 평가가 과소하여 현실적인 피해 수준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교차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 체감도가 낮은 응답자 집단도 행정기관 평가가 과소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물적 피해로 인해 산불 이전보다 본인의 기존 질환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50%에 달했다.

정부는 산불 피해액을 1조 818억원으로 확정 짓고, 이에 따라 피해지원 기준을 상향·확대하여 역대 최고 규모인 복구비 1조 8,809억원을 발표⁵⁵했다. 이는 2025년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산불피해 지원 예산 3,000여 억원이 반영된 결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장·상가 철거·복구 지원 또한 최초로 반영됐으며 종전 최대 규모 복구비로 알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이 행정기관 피해평가에 대해 과소평가로 인식하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시사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의 재난 복구비 지원 기준인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이하 NDMS)이 실질적인 피해 규모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NDMS의 입력 항목이 가전, 농업 필수 자재와 농업 시설, 필수 농자재와 장비, 미등록 수확물, 냉동 필수품의 재고, 축산·임산물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 대규모 재난 상황임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입력을 마쳐야 하는

⁵³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산불 피해 복구 계획 확정 발표자료> 2025.5.2.

⁵⁴ 행정안전부, <산불 피해복구 지원 종합대책 보도자료>, 2025.5.2.

⁵⁵ 행정안전부, <산불 피해복구 지원 종합대책 보도자료>, 2025.5.2.

촉박한 일정 정보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정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누락된 사례 제보가 실태조사 기간 내내 속출했다.

둘째, 재난 복구비 단가가 현실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예로, 산불로 전소된 주택은 기존 지원금, 추가 지원금 및 기부금을 통해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는 기존의 사회재난 주택 피해 복구비에 비해 약 3배 상향했다는 게 정부 발표다. 또, 저이자의 대출 지원도 더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 복구비 지원 규모가 산불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복구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정도의 큰 피해를 입은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실태조사 응답 결과에 반영됐다고 봐야한다.

셋째, 농·축산·임업, 식품 서비스업 등 업종별 특수성이 NDMS에 반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년생 작물의 특성으로 인한 장기적 소득 단절은 정부 피해 보상 규모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년생 작물과 달리 사과, 자두 등 과수는 묘목 식재 후 정상 수확까지 5-7년의 소득 공백기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주민들에게 당장의 시설, 수확물 등의 소실뿐만 아니라 향후 수년간 이어져야 하는 미래 소득에 대한 부분도 모두 실질적인 손실이다.

넷째, 복구비의 종류, 기준, 지급 금액과 일정의 불명확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특정 시기 안에 파종과 수확을 마쳐야 하는 농작물의 경우, 복구비의 지원 일정이 특정되지 않고, 규모를 알 수 없어 추가 자본 확보를 못해 절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 지급되는 복구비의 종류와 산정 기준을 지자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진술 역시 많았다.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은 주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안겼다. 한편, 산불 발생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성금 배분이나 복구비 지급 일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 기간인 10월 말 기준으로 복구비의 지급율이 낮았고 지역별로 상이했던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재난 초기 대피 전달 체계 및 정보 제공 개선

전체 응답자의 87%가 산불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며, 대피 경로로는 마을 방송 및 마을주민이 재난문자 보다 활용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산불에서 재난문자를 받지 못한 응답자가 38%에 달했음에도, 마을을 통한 대피 경로 정보가 재난 시 생존에 직결된 핵심 경로가 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규모 재난 시 공식 행정 채널의 한계를 마을 공동체가 사실상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재난 대비 체계에서 마을 단위의 방재·대피 역량을 공식적인 재난 대응 자원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전체 응답자의 65%가 대피 직후 임시 대피소에 머물렀으며, 이 중 92%가 1회 이상 대피소를 이동한 경험이 있었다. 임시 대피소는 재난 직후 피해 주민 대다수가 거쳐가는 공간인 만큼 재난 초기 피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 관점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임시 대피소에서의 물품 제공 경험을 신속성, 공정성, 적절성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소폭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났다. 다만 응답자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 물품 제공이 충분했다고 느낀 응답자와 부족하거나 불공정했다고 느낀 응답자가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피소별·시기별로 물품 제공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반면, 이러한 물품 제공과 달리 피해 현황, 복구 계획, 보상 절차 등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부정 응답이 58%로 적절했다는 응답 19%의 약 3배에 달해, 재난 초기 임시 대피소·거주지 단계에서 정보 전달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태조사 팀은 이 시기의 정보 공백이 이후 행정기관 대응 전반에 대한 불신을 형성할 수 있고, 심지어 보상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재난 초에 향후 복구 및 보상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 전달 체계의 확립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닌 피해자들의 재난 회복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재난 초기 대피 및 정보 제공 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재난 문자 중심의 일방향 경보 체계가 고령 농촌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난 경보·대피 전달 방식의 다층화가 필요하다. 지역별 재난 문자 미수신율은 영덕(52%), 의성(31%), 안동(30%)으로 나타났으며, 의성에서는 산불로 인한 기지국 소실로 통신망 자체가 단절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처럼 디지털 기반 전달 체계가 물리적 인프라 손상과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 한계 앞에서 기능적 공백을 드러낸 만큼, 고령·1인 가구 등에 맞춘 비디지털 수단을 공식 재난 대응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마을 공동체가 사실상 공적 대피 체계의 공백을 보완하고 있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고려하고 이의 평시 사전 대비를 지원해야 한다. 세 지역 모두에서 마을 방송과 주민 간 전달이 재난 문자보다 실질적인 대피 경로로 작동했으며, 고령층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이웃의 도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평시부터 읍·면·리 단위로 재난 취약자를 사전 등록하고, 마을 내 대피 지원 인력을 지정하는 등 마을 내 사전 재난 대응·대비 구조를 마련하는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임시 대피소 단계에서의 재난 복구 및 보상 정보 제공 체계가 반드시 확립되어야 한다. 물품 제공에 비해 피해 현황·복구 계획·보상 절차 등의 정보 제공은 크게 부족했으며, 이러한 초기 정보 공백이 이후 행정 불신과 보상 과정 갈등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의성의 경우, 임시 대피소에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안내할 현장 책임자(컨트롤 타워)가 부재했으며, 행정 인력은 물품 전달 등 단기 구호 업무만을 위해 일시적으로 머물렀을 뿐 재난 진행 상황이나 복구 계획을 상시 공유할 담당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다. 임시 대피소의 운영이 단순 수용 인원 중심의 설계에서 벗어나, 재난 상황과 복구·보상 관련 정보를 상시 공유할 수 있는 인력과 체계가 갖춰진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4. 임시주택 정책의 단기 대응에서 중장기 주거 안정화 정책으로 전환

전체 응답자의 63%가 현재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73%가 마을에 가까운 임시주택단지에 머물고 있다. 임시주택 생활 만족도에서는 불만족 응답이 54%로 만족 응답 19%의 약 3배였으며, 불편 사항으로는 좁은 공간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환기·통풍, 내부시설, 사생활 미보호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67%가 2년 이상의 제공 기간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는 60대 미만(52%)부터 80대 이상(71%)까지 전 연령층에서 일관되게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타나, 임시주택 제공 기간 설정 시 피해 주민들의 수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임시주택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임시주택 제공 기간의 유연한 운영과 함께 주거 회복 모델의 다변화가 요구된다. 세 지역 모두 2년 이상을 적정 제공 기간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의성 71%, 영덕 67%, 안동 64%), 임시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응답자 중 상당수가 자발적 선택이 아닌 대안 부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한시적 임대주택 거주와 개별 신축 유도만이 제시되고 있으나, 고령 1인 가구가 많은 피해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면 마을형 소규모 공동주택,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조합 구성 등 피해자의 연령·가구 구성·경제적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거 회복 경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임시주택 거주 기간 중 발생하는 에너지 비용 부담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임시주택은 냉난방, 조리, 온수 공급 등이 전기화된 시설로, 복사난방 효과가 없는 전기패널식 난방과 단열 성능이 낮은 컨테이너 벽체로 인해 겨울철 전력 수요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구조이다. 안동의 경우, 전기료 감면 기간 종료 후 에너지 비용이 고스란히 피해 주민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이미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 주민의 생활고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시주택 거주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거주 기간 동안의 에너지 비용 보전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재난 심리 피해 회복의 장기적·통합적 지원 체계로의 전환

본 조사는 한국형 사건 충격 척도인 IES-R-K를 활용하여 산불 피해 응답자의 심리적 상태를 측정했다. 다만, 본 조사가 전문의의 임상적 진단이 아닌 응답자의 주관적 답변에 의존하는 자기기입식(Self-report)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재난 직후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는 응답자의 심리적 방어 기제나 당시의 감정 상태가 투영될 수 있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피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관적 고통의 깊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전체 응답자의 약 87%가 PTSD 위험 범위에 속하며, 이 중 67%는 '심각한 PTSD 위험' 이상(40점 이상)에 해당한다. 응답자 중 정상 범위는 8%에 불과해 산불 피해 주민 대다수가 높은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심리적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며, 본 조사에서 확인된 분석 결과는 심리지원의 방향이 상담·치료에만 국한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은 고령·여성·장기 거주자일수록, 신체적 피해와 재산 손실이 클수록, 생명의 위협을 강하게 경험한 집단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소득 회복 수준이 낮을수록, 미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져, 생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반면 정부·지자체의 적절한 정보·물품 제공, 구호지원의 공정한 배분, 행정 대응에 대한 신뢰, 공동체 결속이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정보 제공이 부족하고, 구호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높으며, 행정 신뢰가 낮은 현재 상황이 피해 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위험을 더욱 높이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재난 이후 피해 주민의 심리가 경제·생계 상황,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동체의 회복 등 복구 과정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 역시 확인됐다. 생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상담과 치료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불투명한 행정절차와 의사결정은 재난 자체의 충격보다 더 오래 남는 외상 후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피해 주민의 심리적 회복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계 회복,

행정 신뢰, 공동체 재건이라는 복구의 모든 과정이 곧 심리적 회복의 과정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피해 주민의 심리적 회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가 요구된다.

첫째, 재난 이후 심리적 회복은 상담·치료에 국한되지 않고 생계 회복, 행정 신뢰, 공동체 재건 등 복구 과정 전반과 통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낮은 소득 수준, 피해조사의 불합리성 인식, 복구 과정에서의 차별 경험 등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심화·장기화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된 만큼, 이러한 구조적 요인의 경감 없이 심리 상담·치료 프로그램 단독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반대로 정보·물품의 적절한 제공, 구호지원의 공정한 배분, 공동체 결속 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를 강화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 회복의 핵심 경로임을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만성화·신체화되고 가족 단위로 전이되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어, 단기 상담을 넘어선 장기 추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안동 지역 조사에서는 사고 직후보다 2~3개월째가 가장 힘들었다는 응답이 나타나 심리적 외상의 시간차 발현이 확인되었고, 의성 지역 조사에서는 침습적 기억과 수면 장애가 지속되면서 고혈압 등 구체적인 신체 증상으로 전이되는 만성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아가 배우자의 우울감이나 자녀의 불안 징후 등 외상이 가족 구성원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최소 1~3년을 내다보는 장기 심리사회지원 계획의 수립과 함께, 특히 생명의 위협을 강하게 경험한 집단, 피해 규모가 크고 소득 회복이 지연되는 집단에 대해서는 우선적이고 집중적인 심리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초기 전수 스크리닝을 통한 고위험군 선별, 장기적 코호트 조사를 통한 체계적 추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현행 심리 회복 지원 서비스의 기관 간 연계 체계가 단절되어 있고 고령 주민의 접근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심리지원 서비스 경험 비율은 영덕(61%)이 가장 높았으나 안동과 의성은 각각 32%에 불과했으며, 미이용 응답자 중 상당수가 서비스의 존재를 몰랐거나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이용하지 않은 잠재적 수요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덕 지역 조사에서는 보건소에서 지역 병원으로, 다시 타 지역 전문기관으로 안내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서비스 연계가 사실상 단절되는 사례가 보고됐다. 고령 주민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행정이 직접 찾아가는 형태의 심리 회복 지원을 제도화하고,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지역 병원·전문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서비스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6. 재난 행정의 정보 전달 체계 확립과 신뢰 회복

6장은 재난 발생 이후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의 정보 제공 경로와 만족도, 구호서비스 및 물품 제공에 대한 평가, 성금 배분 관련 인식, 그리고 현재 필요한 지원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경로로 정보를 접했는지, 공식 행정 채널의 역할이 충분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영남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3월부터 7개월이 지난 조사 시점(10월)까지 피해 평가, 복구비, 구호금, 복구 계획,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제공 받았는지 묻는 응답에서, 이장·이웃 등을 통한 정보 확인이 공식 행정 채널보다 높게 나타났다. 재난 관련 정보 전달이 공식적 안내 체계보다 마을 공동체를 통한 경로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이는 곧 이장이나 이웃과의 관계성, 이장의 대표성에 따라 마을별, 피해 주민별로 재난 관련 정보 전달의 사각지대에 쉽게 놓일 수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정보 제공 만족도 역시 모든 항목에서 불만족이 만족을 크게 웃돌았으며, 복구지원비(75%)와 피해평가(73%) 항목에서 불만족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복구지원비 내역과 산정 근거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13%에 불과하고, 확인 방법조차 몰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48%에 달했다.

조사 결과, 주민들의 불만을 심화시킨 결정적 요인은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행정 처리다. 어떤 지원금도 세부 항목에 대한 상세 안내 없이 총액 위주로 지급되었고,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산불 피해 주민들은 지원금의 성격을 스스로 추정해야만 하는 공통적 상황에 놓여있다. 주민들은 본인의 생업 복구와 피해 수습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시군청을 상대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이중, 삼중의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성금 정보 실태 역시 마찬가지다.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은 전국에서 모인 성금의 전체 규모나 구체적인 배분 기준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하고 있다. 성금 규모와 배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85%가 전혀 알지 못하거나 대체로 알지 못 한다고 부정 응답했으며(표6-5), 배분 결정 과정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 응답도 약 75%에 달했다(표6-7). 행정기관이 성금 운용 현황을 상시적으로 공유하는 공적 소통 체계를 충분히 가동하지 않았으므로, 주민들은 대책위원회, 발소와 같은 일상 공간에서 이웃 간의 비공식적인 대화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는 재난 이후 보장되어야 할 주민들의 알 권리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보 제공과 행정기관 신뢰에 대한 상관분석 진행 결과, 행정 평가 항목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확인됐다. 이는 재난 대응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또, 피어슨 상관분석을 통해,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주민은 본인의 피해가 과소평가되었다고 느끼고, 피해가 과소평가되었다고 느끼는 주민은 피해 산정 절차 자체를 불합리하다고 인식하는 연쇄적 양상을 확인했다.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응답 가중치 산출 결과, 주거 지원, 행정절차 안내, 일자리 및 소득지원 순으로 확인됐다(분석표 6-1). 주거지와 생계에 대한 복구 만큼 행정절차의 명확한 안내에 대한 갈급이 세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의 수요인 것이다.

전체 응답 결과를 토대로, 재난으로부의 회복을 위한 과정에서 행정 신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고, 이는 보상 절차의 투명한 공개와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이 요구된다.

첫째, 재건위원회는 재난 정보 전달을 위한 통합 안내 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이때, 각 지역 행정기관별 자원 동원력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재난 발생 이후 피해평가, 복구지원비, 구호금, 복구계획, 담당자 연락처 등 핵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재난 정보 안내 플랫폼’ 구축 혹은 ‘전담 창구’ 확보와 이를 위한 인력과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 문자, 마을 방송, 온라인 시스템 등 다중 채널을 활용한 공식 정보 전달 체계를 마련하여 특정 개인(이장·이웃)에 의존하는 정보 전달 구조를 개선해야, 축적된 행정 불신을 해소하며 신속한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 피해 주민에게 개별 안내문 및 정기 정보 업데이트를 제공해 정보 사각지대를 최소화 해야한다.

둘째, 지원금·성금 운용의 투명한 공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복구지원비와 성금

지급 시 세부 항목, 산정 기준, 지급 내역을 포함한 설명 자료 제공이 의무화 되어야 한다. 재난 성금의 총액, 사용 계획, 배분 기준, 집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공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성금 배분 과정에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정성과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피해 주민 대상 행정절차 안내 및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고령자·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현장 상담, 방문 안내) 투입이 필요하다. 행정절차 안내 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뉴얼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피해 주민과 행정기관 간 정기적인 설명회 및 소통 회의가 이때 활용될 수 있다. 이후 재난 대비를 위해서는 정보 제공 수준을 행정 평가 지표에 포함해 재난 대응 과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개선점을 환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7. 피해 주민들의 권리 확보에 기반한 재난 회복 대응 체계

7장은 산불 피해 이후 복구지원비 산정 과정, 피해사실 조사 절차, 주거 형태별 차별 경험,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제기 및 처리 결과, 주택 복구 및 소득 피해 현황, 그리고 마을 복구와 공동체 회복에 대한 바람 등 복구와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피해 주민들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A. 불합리한 피해사실 조사로 인한 복구지원비 부족과 불투명한 행정 소통

응답자 중 복구지원비의 내역과 산정 근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거나 대체로 알지 못한다는 부정 응답이 전체 응답자 273명 중 약 75%에 달했다(표7-3). 복구지원비 액수와 산정 근거를 확인하려 했으나 방법을 알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다는 답이 48%로 가장 많았고(표7-4), 복구지원비가 피해를 충분히 보전하지 못한다는 부정 응답이 89%로 매우 높았다(표7-6). 복구지원비 부족 항목 응답을 가중치 산출한 결과 주택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가재도구 및 살림 물품, 농기계 등 순으로 나타났다(분석표7-1). 그 배경으로, 피해사실 조사가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부정 응답 약 72% 결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표7-5). 복구지원비가 충분히 손실을 보전하지 못 하는 수준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사실 조사가 불합리 했던 것과, 근거와 내역을 제공 받지 못 하는 불투명한 정보 소통에 불만족한 경험 역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B. 실거주 현실 간의 괴리, 임대 세입자, 비거주 시설 운영자들의 피해 보상 누락

응답자 274명 중 81%가 자가 주택(토지 소유)에 거주했으며, 약 4%가 임대 거주자(반전세, 월세, 전세)인 것으로 확인됐다(표7-8). 임대 거주자 중 67%가 집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복구 지원에서 차별을 경험했고(표7-10), 세입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주거 보상이 집주인에게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58%)고 응답했다(표7-11). 또, 무허가 건물에 거주했다고 응답한 주민들 중 약 71%가 피해보상 과정에서 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표7-12).

의성 조사에서는 수십 년간 세금을 납부하며 실제 거주해 온 무허가 건축물과 농막형 주거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상에서 전면 제외한 상황을 확인했다. 서류상 요건을 갖춘 일부 외지인이 보상금 수혜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안동 역시 10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가 전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고, 외지 거주하는 집주인들이 모두 보상금을 수령하는 일이 발생했다.

C. 피해보상 민원 제기의 불합리한 처리

피해보상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지자체에 문제 제기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270명 중 절반 이상(약 56%)이었고(표7-14), 이 중 자신의 민원이 대체로 합당하게 처리되었거나 매우 합당했다고 답한 긍정 응답 비율은 약 5%에 불과했다(표7-15). 이는 피해보상 이의신청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기관 대응의 불합리성에 대해 문제 제기 했던 집단과 그렇지 않은 응답자 간 행정기관 대응 평가에 대해 통계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수치를 보였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불신을 해소하지 못했으며, 나아가 문제를 제기할수록 행정에 대한 신뢰가 더 낮아지는 구조가 형성된 것을 확인했다. 현행 이의신청 절차가 주민의 문제 제기를 수용하고 해소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 방식의 실질적 개선 없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D. 임시주택 계속 거주 이유는 ‘대안 없음’

주택 복구와 관련해, 응답자 284명 중 약 69%가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며(표7-16), 복구 방식으로는 신축(약 83%)이 압도적으로 많았다(표7-18). 복구 시 가장 큰 걱정으로 비용(약 96%)이 꼽혔다(표7-19). 복구 계획이 없는 응답자 중 이유를 밝힌 30명 중 40%는 임시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답했는데(표 7-20), 이 중 약 69%는 생활이 불편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표7-21). 응답자 280명 중 91%가 산불 이전에 살던 마을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답해, 주거 지원이 다른 곳으로의 이주보다 산불 피해 전 거주지에서의 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표7-22).

E. 피해사실 조사 불합리성은 현재와 미래 소득 회복 인식에 부정 영향

전체 응답자 중 85%가 경제활동에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고(표7-25), 소득 회복률이 10% 미만에 머물고 있는 응답자가 225명 중 38%, 앞으로도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52%로 나타났다(표7-27).

소득 회복 수준과 향후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피해사실 조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식하는 주민일수록 현재 소득 회복 수준과 미래 기대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 기대수준에 대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피해사실 조사 과정의 합리적 진행이 주민들의 경제적 회복 수준 인식 뿐아니라 향후 회복에 대한 전망까지 좌우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F. 공동체 갈등의 핵심 원인은 지원금 배분의 불공정 인식

응답자 중 63%가 마을 공간을 새로 조성해야 한다고 답했으며(표7-29), 가중치 환산을 통해 새로운 마을을 위한 보완점을 묻은 결과 폭우, 산불 등으로부터 안전한 마을이 압도적으로 1순위였고, 도로, 상수도, 폐기물 처리장 등 부족한 인프라 보완, 공동 편의 시설 보완이 뒤를 이었다(분석표7-8). 새로운 마을에 대한 기대사항 응답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에너지 자립 마을, 공동체가 활발한 마을로 응답 가중치 결과가 산출됐다(분석표7-9).

마을 재조성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절차로 주민 의견 수렴이 69%로 압도적으로 꼽혔다(표7-34). 재해 직후 서로를 도왔다는 응답이 60%로 높았으나(표7-33-2), 이웃 관계가 좋아졌다(38%)거나 공동체가 돈독해졌다(38%)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아(표7-33-3, 표7-33-4), 협력 경험이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갈등의 핵심 원인이 행정이 결정한 지원금 배분의 공정성 문제(표7-35)라는 점에서, 공동체 갈등의 해소는 주민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행정의 역할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피해사실 조사 합리성 인식과 갈등 원인을 교차분석한 결과, 갈등 원인으로 지원금 배분을 꼽은 집단이 복구지원비 내역과 산정 근거에 대해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 나타났다(분석표7-7). 정보가 없어서 불만인 것이 아니라, 알수록 불공정하다고 느낀 결과로, 정보 공개만으로는 갈등을 해소할 수 없으며 산정 기준 자체의 공정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복구와 회복 과정에서 피해 주민들의 권리 확보와 재난 피해 회복을 고려한 개선 제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재건위원회의 시행령 이행 과정에서 피해조사·지원금 산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 강화가 필요하다. 피해사실 조사 기준과 복구지원비 산정 방식(항목·단가·산정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표준 설명서가 의무화 되어야 한다. 또, 현재 지역의 행정 시스템으로 피해 주민 규모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 결과와 지원금 산정 내역 등을 개별 통지 및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재건위원회는 실제 거주 현실을 반영한 주거 피해 지원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 보상 기준을 소유 중심에서 '실거주 기준'으로 확대하여 세입자·장기 거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및 보상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 무허가 주택·농막 등 장기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주거 형태에 대해 최소한의 주거 복구 지원을 인정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세입자 주거 보상이 집주인에게 일괄 지급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피해보상 이의신청 및 민원 처리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시행령상 추가 지원만 접수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축적된 이의신청에 대한 해소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 현재 산불특별법 시행령에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 처리 결과 기한 필요성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주민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설명 의무와 처리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질적인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주택 복구 및 생계 회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피해 규모에 따라 주택 재건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 저리 융자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농업 등 생계 기반 피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복구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소득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 참여형 마을 재건이 필요하다. 마을 재건은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닌, 재난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을 갖춘 마을로의 전환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세 지역 모두에서 '폭우, 산불 등으로부터 안전한 마을'이 재조성 시 최우선 보완 사항으로 꼽혔다. 안동 지역 조사에서는 산림 파괴로 지반이 약화되어 집중호우 시 산사태로 이어지는 2차 피해의 위험이 확인되었으나, 행정기관은 폐기물 처리 등 가시적 복구에 치중할 뿐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보강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재건 과정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재난 대응력 강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주민들이 높은 기대를 보인 에너지 자립 마을 등 지속 가능한 설계 방향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마을 재조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하고, 재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8. 산불특별법의 실효성 강화 및 피해자 참여 거버넌스 구축

8장은 산불 피해 주민들이 2025년 9월 제정된 산불특별법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담았다.

본 조사에서 확인된 피해 산정 기준과 피해 현실 간 괴리, 보상 정보 접근성 부재, 이의신청 절차와 행정 소통의 폐쇄성, 소득 회복 지연, 심리사회적 피해의 회복 등의 문제는 산불특별법이 실질적으로 다루어야 할 핵심 과제들이다.

그러나 산불 발생 이후 7개월이 지난 조사 시점에도, 응답자의 80%가 산불특별법의 내용을 전혀 들어본적이 없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부정 응답했고, 내용을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표 8-1). 법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자 중 58%가 피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해(표 8-2), 피해 당사자들이 특별법 제정 사실이나 주요 내용 전달에서 지극히 소외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피해 주민 의견이 산불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이유로, 실질적 피해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생계 회복 지원 내용 부족을 꼽았다(표 8-3). 법에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산불특별법은 일상 회복을 갈망하는 주민들의 갈급함과 현장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공청회, 설명회 등 공적 소통이 미흡하여 주민들은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수혜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지원 결정권이 재건위원회에 일임되면서 주민 참여의 통로는 더욱 축소됐다. 또, '재난 회복'을 명분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대목은 산림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피해 당사자가 법의 존재도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법이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다. 법의 내용적 보완과 함께, 개정 과정에서 피해 주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불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불특별법과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 및 지원 절차가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특히 추가 지원 접수를 위한 정보가 고령층이 다수인 피해 주민의 특성을 고려해 충분히 도달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둘째, 재건위원회는 산불특별법이 업종별 특성을 간과하여 누락한 장기 소득 공백 대책을 반영해야 한다. 예로 농업의 경우, 사과, 자두 등 다년생 작물들을 특정하고, 이의 농작물 손해 일부만 손실 보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공백기 동안의 채무 유예나 금융 지원 같은 실질적 생계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재건위원회는 산불특별법이 주거 지위에 따른 보상 차별과 임대 영업자, 비거주 시설 운영자들의 피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세입자들은 화마로 인해 가재도구와 전자제품 등 생활 집들 모두 잃었지만, '세입자 500만원 일괄 지원'과 같은 소액의 지원 외에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수십 년간 토지와 건물에 대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거주했으나, 재난 보상 시에는 무허가 건축물, 토지라는 이유로 권리를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산불특별법 시행령이 제공하는 추가 피해 지원 접수 양식은 이러한 사각지대의 취약성을 반영하지 못 한다.

넷째, 특별법의 시행 과정에서 피해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 당사자 참여 기회가 부재했다는 점은 세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시행령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피해 주민의 목소리가 형식적 의견 제출을 넘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참여 구조가

보장되어야 한다.

산불특별법 재건위원회는 본 조사에서 확인된 사각지대가 충분히 해소되지 있는지 고려하고 필요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또, 정부와 국회는 대다수의 국민이 잠재적 피해자로 노출되어 있는 향후의 초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해 기존 재난관리 기본법의 제도적 보완을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

10. 지역별 시사점

앞서 종합 시사점에서는 세 지역에 걸쳐 공통적으로 확인된 문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만 피해의 양상과 복구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의 경중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접근이 함께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에 각 지역의 실태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제도 제언을 지역별로 제시한다.

[안동]

1) 1. 실태조사 결과의 요약

[행정 일방적 거버넌스에 대한 불만]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안동의 응답자들은 필요한 지원사항에 있어서 "복귀과정에 의견 제시 및 참여 지원"를 들었다. 산불 이후 재난 대응 및 복구 과정은 행정 중심의 일방향적 거버넌스로 특징지어진다. 재난 이후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할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피해자들의 관점과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단순히 더 많은 지원금만이 아니라 피해 입증을 위한 도움, 회복 과정에 대한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 일방의 대응은 피해자들을 수동적인 지원의 대상으로만 위치짓는 것으로,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 심리적 충격과 더불어 무기력한 상황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의 회복 의지를 북돋우기는커녕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주거불안정의 지속]

안동시 내 주택 피해는 총 1,637채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경북 전체 피해 주택의 약 43%에 이르는 높은 비중이다. 산불 발생 이후 2,5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나, 이들을 위한 주거 대책은 여전히 임시방편에 머물러 있어 장기적인 주거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1억 원을 넘는 높은 보상 수준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주택의 건축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임시주택에 대해 주민들은 공간이 좁다는 문제와 더불어 환기와 단열이 안 되는 기능적인 문제점을 겪고 있었다. 안동시가 임시주택단지의 토지 임대를 1년 단위로 제한함에 따라, 1년 내에 집을 다시 지을 여력이 없는 고령의 주민들은 임시주택단지에서도 지속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처해왔다.

[보상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인식]

설문조사 결과, 피해 조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답변이 77%에 달했으며, 대다수 항목에서 행정기관이 피해를 '과소평가했다'는 응답이 70%를 상회하였다. 특히 주택 보상에 있어서 세입자들은 피해 주택에 실거주하였어도 보상금이 소유주(집주인)에게만 지급되는 등 실질적인 주거지원책에서 소외되었다. 남후농공단지의 중소기업 등 영업장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주택에 비해 피해를 인정받는 것이 어려운 데다 피해 수준을 반영하는 복구비 산정 제도까지 미비하여 향후 경제기반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을 갖기 어려웠다. 이러한 보상 과정에 대한 불만은 행정기관을 통해 해소되지 못했고, 이웃과 피해와 보상의 경중을 비교하는 불편한 감정들이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경제적 회복에 대한 낮은 전망]

응답 주민의 약 69%가 현재 소득이 재해 이전에 비해 50%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향후

소득이 회복될 전망에 대해서도 약 40%가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고령의 농민들은 다시 빚을 내어 영농을 재개할 기력이 없으며, 이는 지역 공동체의 인구 유출과 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재난 반복에 대한 우려]

안동의 지형적 특성과 기후 변화로 인해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며, 산불 이후의 2차 피해 우려도 있으나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 산불로 산림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산사태나 홍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서둘러 새 집을 지은 주민들도 큰 비가 올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산사태 위험에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의 재건 과정에서 시설 건설이나 도로 확장에 비해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는 구조적 조치가 미흡하고, 마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다.

2) 재난 이후의 안동을 위한 제언

[참여적 재난대응 거버넌스의 구축]

현재의 행정 중심적 의사결정 구조를 탈피하여, 피해 당사자가 복구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신속한 재건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한지 등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난회복을 위한 민간협력체의 역할을 제도화하여 주민대표, 피해자대표 등이 마을의 상황을 전달하는 등 참여적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참여적 재난거버넌스를 통해 피해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장기적 전망을 예측할 수 있을 때 실질적 회복과정이 촉진 될 것이다.

[주민 친화적인 정보 체계의 구축]

고령화된 안동의 인구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문맹이거나 신체적 제약이 있는 주민들도 소외되지 않는 다층적인 정보 전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주민들이 수동적인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주체라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피해와 보상금 산정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가독성 있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복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마을별 '재난 복구 코디네이터' 등을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서류 구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행정 절차를 돕는 주민 밀착형 서비스가 될 것이다.

[재난에 강한 마을, 주민주도의 마을 재건]

마을을 재건할 때 단순히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산불과 폭염, 폭우, 산사태 등 기후재난에 강한 '회복력(Resilience)'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산사태였다. 지자체는 주택 신축 전에 마을의 산사태 위험을 점검하고 예방조치들을 시행해야 한다. 산불, 산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화된 주거지와 건축물 규정이 필요하고 이를 주택 신축과 마을 재건 과정에 적용해야 한다. 물론 이는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마을재건계획 과정에 주민들이 그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토론, 협의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행정기관의 적극적 개입도 필요하다.

[주택 회복 모델의 다양화]

현재의 개별적 신축 지원 방식은 공사비 상승과 자금 부족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해 있다. 피해자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적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거 회복 모델을 제공해야 한다. '마을형 소규모 공동주택' 모델은 고령의 1인 가구가 많은 안동에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을 단위로 공용 식당과 돌봄 공간을 갖춘 공동 주택을 건설하여, 개인의 주택 복구 부담을 줄이고 공동체적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발생하는 과도한 에너지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재난 에너지 바우처'를 신설하고, 주택 재건이 완료될 때까지 임대 기간을 유연하게 연장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주민 친화적 심리지원서비스 확대]

산불 피해자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지수가 평균 약 47점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직시하고, 단기적인 상담을 넘어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심리 치유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현재의 심리지원은 부족하고 효과적이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동수단 제공 등을 통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정보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심리지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56%)를 반영하여, 재난 이후 최소 3년까지 추적 관찰과 지원이 가능한 전담 시스템을 안동시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영덕]

1) 실태조사 결과의 요약

[물리적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 산정의 괴리]

응답자의 다수가 주택·가재도구·영업장을 '80% 이상 피해'로 인식할 정도로 피해 규모는 사실상 '전소' 수준이다. 그럼에도 주택 피해 평가가 과소평가되었다고 느낀 이가 약 62%, 영업장 피해는 68%에 달해, 주민 체감 피해와 행정 피해 판정 사이의 괴리가 매우 크다. NDMS 상에 실제 농업·임업 장비와 설비 항목이 없어 애초에 등록·평가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과수·임야는 나무 연령·생산력과 무관하게 평수만 기준으로 산정되는 등 피해 실체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가 확인되었다.

[재난경보·대피 체계의 취약성과 이웃 의존]

재난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52%에 이르고, 문자 내용을 읽지 못하는 고령자도 적지 않았다. 실제 대피 정보는 마을방송(62건), 마을 주민(27건) 등에 의존했고, 고령자는 "설마 여기까지 오겠나"라는 인식과 이동의 어려움으로 대피가 늦어졌다. 대피수단도 승용차(80%) 중심이었으며, 이 중 마을 주민 차량 이용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 재난취약자의 안전이 공적 시스템보다 이웃의 즉흥적 도움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임시대피소·임시주택의 불편과 주거 불안정 장기화]

대피소를 이용한 응답자 81% 중 47%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협소한 공간, 세면·샤워 시설 부족, 낯선 사람과의 공존 등이 주요 불편으로 지적됐다. 산불 7개월 뒤에도 응답자 81%가 임시주택에 거주 중이며, 43%가 불만족을 표시했다. 불만족 이유는 좁은 평수(60건), 내부시설 불편(22건)으로, 농기구·작업복을 둘 곳이 없는 농촌 현실과 단열 부족으로 인한 '감옥 같은 답답함'이 반복 증언되었다. 임시주택 거주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약 67%가 "2년 이상 거주 필요"를 언급했고, 고령·저소득 주민은 주택 복구를 포기한 채 '다른 대안이 없어' 임시주택에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심리적 외상 장기화와 심리지원 단절]

한국형 사건 충격 척도(IES-R-K)결과 산불 이후 주민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관련 증상을 집중적으로 호소했다. “잠을 못 자 안정제를 먹는다”, “평생 살던 집이 없어져 하루 종일 멍하다”는 증언처럼, 주거·생계 불안정과 심리적 외상이 서로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다.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았다는 응답이 61%였음에도, 39%는 지원을 받지 않았고, 지원을 받은 이들도 “어디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보건소와 병원 사이에서 책임만 떠넘기다가 포기했다”고 답해, 장기·정기 심리개입과 서비스 연계 체계가 매우 취약함이 드러났다.

[정보 전달·재난지원 체계의 비공식 의존과 불투명성]

피해평가, 복구지원금, 향후 복구계획, 담당자 연락처 등 핵심 정보를 얻는 경로는 ‘이장을 통해 들었다’(64건), 공무원 직접 전달(35건), 이웃(26건) 순이었고, 문자·우편 등 공식 비대면 채널은 15건 안팎에 불과했다. 행정의 정보 제공 전반에 대한 불만족이 64%를 넘었으며, 특히 담당자 연락처에 ‘매우 불만족’ 비율이 54%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의·협의할 창구가 실질적으로 부재함을 보여준다. 민간 성금의 모금액·배분 기준·내역을 “알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이 78%로, 성금 역시 이웃·이장 등 비공식 경로로만 소문이 돌 뿐, 공식적인 설명과 공개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성금과 지원금 배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과 행정 불신이 구조화되고 있다.

[주거·생계 기반 회복의 심각한 지연]

주거 복구 계획이 있다고 밝힌 66명 중 결측을 제외한 65명⁵⁶에게 주택 복구를 고민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나 물었을 때 95%가 ‘비용 부족’을 꼽았고, 복구 지원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84%였다. 실제로 ‘집 짓는 비용에 비해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증언이 반복되며, 지원 부족으로 인해 주택 복구를 포기하고 임시주택에 남는 비율이 높다. 소득 회복 수준은 절반 미만이라는 응답이 약 78%, 그 중 약 51%는 10% 미만 회복에 그쳤다. 주민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복구지원비 확대(59%), 회복 시까지의 소득지원(약 29%)을 꼽아, 단기 현금 보상만으로는 생계 복구가 불가능한 현실을 드러냈다. 특히 임업 피해는 별도 평가 기준이 없어 “수십 년 가꾼 산에 대한 보상이 거의 없다”는 구조적 사각지대가 확인되었다.

[행정에 대한 불신, 공동체 갈등, 특별법에서의 배제]

피해사실 조사가 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보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했고, 약 58%는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으며, 피해 누락·보상 불합리를 이유로 지자체에 문제제기했지만 약 83%가 “합당하게 처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보상금 산정 근거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9%,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약 67%로, 주민 다수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가 나왔는지 모른 채 돈이 들어오면 받는” 상황이었다. 이런 불투명성과 불공정성 속에서 이웃 간 지원금·성금 배분을 둘러싼 갈등을 목격·경험했다는 응답이 33%에 달했고, 재난이 공동체 연대를 강화했다기보다 분열을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특별법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묻는 질문에서도 46%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해, 재난 관련 핵심 법제도 설계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⁵⁶ 주택 복구 계획이 있는 응답자 66명 중 1명 결측 발생함.

2) 재난대응을 위한 정책·제도 제언

위 실태조사는 영덕 산불이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초고령 산촌지역의 구조적 취약성과 행정·제도적 한계가 중첩된 ‘재난불평등’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령 농촌 지역 맞춤형 재난경보·대피 시스템 구축]

재난문자와 방송 중심의 일방향 경보만으로는 고령·문해 취약·1인가구 중심 지역에서 적절한 대피 행동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평상시 읍·면·리 단위로 고령자, 장애인, 1인가구를 ‘재난취약자’로 등록하고, 재난 발생 시 이들을 담당할 ‘대피지원 공무원·마을 안전지킴이’를 지정하여, 전화 확인·직접 방문·동행 대피를 수행하는 체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적 대피수송(마을별 차량, 이동 경로 사전 지정) 마련과 더불어 이웃과 가족이 함께하는 커뮤니티 방재도 중요하다.

[피해산정·보상 체계의 현실 반영과 투명성 강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피해 항목을 농업·임업·영세 자영업 실태에 맞게 전면 개편하여, 농기계·저온저장고·버섯 시설·산림 설비 등 실제 생계 기반 자산이 누락 없이 등록·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택·과수·임야 피해는 면적만이 아니라 건축 연식·구조, 나무 수령·생산력, 투자기간을 반영하는 다층적 평가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모든 피해산정과 복구지원비 산정 근거는 문서로 개인에게 통지하고, 산정 기준·계산식·이의신청 절차·담당자 연락처를 명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합리한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임시대피소·임시주택의 기준 재설계와 장기 주거 안정]

임시대피소는 단순 수용 인원 중심 설계에서 벗어나, 고령자·장애인·아동 등을 고려한 충분한 공간, 세면·샤워와 개인사생활 보호, 심리안정을 위한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임시주택은 농촌·임업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농기구·작업복과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작업공간을 포함한 평수 기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는 임시주택 제공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지침을 개정해, 시간이 부족해 주택 복구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마을 단위 재건·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재난 이후 주거권 보장’을 위한 별도 정책축을 설정해야 한다.

[장기·정기 재난심리지원과 서비스 연계 시스템 구축]

심리적 고위험군이 광범위하게 존재함에도 심리지원 접근과 연계가 취약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재난 발생 시점부터 최소 1~3년을 내다보는 장기 심리사회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초기에는 전수 심리스크리닝과 고위험군 선별을 실시하고, 이후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지역 병원·전문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정기 상담, 집단 회복 프로그램, 방문상담을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고령 주민을 위해 “어디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아도, 행정이 직접 찾아가는 형식의 심리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생계·소득 지원을 축으로 한 경제 회복 로드맵]

소득 회복이 10% 미만인 주민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대출 중심 지원은 부채만 키울 뿐 실질적인 회복책이 되지 못한다. 산불 피해 지역에는 회복지원금 상향과 함께, 일정 기간(예:

2~3년) 기본소득형 재난 소득지원 제도를 도입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임업 피해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형성된 산림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별도 기준을 만들고, 대체 작목 권유에 그치지 않고 전문 기술 교육과 장기 저리 융자를 결합한 실질적 회복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재난 정보·성금·지원금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 소통 강화]

재난 관련 정보·성금·지원금 배분 과정은 기준·절차·규모·결과를 주민에게 상시 공개하는 투명성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청·복지재단 홈페이지, 마을 게시판, 문자·우편 안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설명회·공청회를 통해 질문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성금의 경우 모금액, 배분 기준,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성금 공개 시스템'을 마련해,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연대의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

[피해자 참여형 재난 거버넌스와 공동체 회복 지원]

산불 특별법과 같은 핵심 제도 설계 과정에서 피해 주민의 의견이 배제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피해지역 주민·이장·현장 단체가 참여하는 '재난 복구·재건 협의체'를 상설화해야 한다. 이 협의체는 피해산정 기준, 보상·지원 정책, 마을 재건 방향, 산림 복원·재해예방 사업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하는 공식 통로가 되어야 한다. 또한 재난 이후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 연대를 회복하기 위해, 마을 단위 갈등 조정·중재 프로그램, 공동 복구 프로젝트, 추모·기억 사업 등을 지원하는 '공동체 회복 정책'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성]

1) 실태조사 결과의 요약

[물적 피해 평가 방식과 주민의 실제 체감 손실 사이의 구조적 괴리]

현재 행정기관의 피해 산정은 주택, 영업장, 가재도구 등 전 항목에서 주민들의 실질적 손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정부 복구 지원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은 입력 항목이 표준화·최소화되어 있어, 농촌 현장의 특수성인 무허가 창고, 소규모 농기계, 가전제품 및 개인적 가치가 큰 귀중품 등이 조사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결함을 안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수십 년간 일궈온 삶의 자산이 단 몇 분간의 서류 조사로 '잔존 가치 없음'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깊은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재난 이후 '원상복구'가 아닌 '최소 구호'에 그치는 행정적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며,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자력으로 회복할 수 없는 구조적 빈곤 상태에 놓이게 한다.

[공식 재난 정보 전달 체계의 실효성 상실과 비공식 경로에 대한 높은 의존도]

디지털 기반의 재난 문자 송출 시스템은 산불로 인한 기지국 소실 등 물리적 단절 상황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실제 대피 정보를 확인한 경로의 77%가 마을 방송이나 이웃 간의 구두 전달에 의존했다는 점은, 고령층이 밀집한 농촌 현장에서 스마트 기기 중심의 공식 채널이 실질적인 '생존 정보'로 기능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심지어 불길의 눈앞에 닥칠 때까지 공식적인 대피 지시를 받지 못한 채 이웃의 소리를 듣고 맨몸으로 탈출해야 했던 경험은, 국가의 보호망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작동하지 않았다는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는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상황 전파 시스템의 부재를 의미한다.

[중장기 거주 공간으로서의 임시주택 및 대피소의 물리적·심리적 부실]

임시 대피소와 주택 모두 공간의 협소함, 사생활 보호 체계 미비, 위생 시설 부족 등에 대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임시주택은 단순한 단기 대피를 넘어선 중장기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단열 부실과 좁은 면적으로 인해 주민들이 '수용 시설에 갇힌 느낌'을 받게 함으로써 일상의 존엄성을 회복하기에 역부족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조사 결과 주민들은 컨테이너의 좁은 공간에서 가재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생활하며 "내 집에서 누리던 인간다운 삶이 정지되었다"는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주거 불만족과 심리적 위축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광범위하게 확산된 PTSD 위험과 형식적 수준에 머문 심리지원 체계]

전체 응답자의 약 87%가 PTSD 위험군으로 분류될 만큼 심리적 내상이 깊으나, 공공의 심리지원 서비스는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실질적인 회복을 돕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보건소 등의 상담이 단순한 '수면제 처방'이나 '형식적 문답'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이는 재난 이후의 정서적 보살핌이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평생 보존해온 영정 사진, 유품 등 '대체 불가능한 정서적 자산'을 잃은 고령층에게 단순한 문진 중심의 상담은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공동체 내부의 정서적 지지체계마저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회복 과정에서의 철저한 당사자 소외와 이로 인한 공적 불신의 고착화]

피해 주민의 80%가 산불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금 배분과 같은 중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권이 실종된 상태이다. 주민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와 직결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조차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내용을 확인하는 철저한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당사자 없는 복구'는 주민들에게 "국가가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깊은 소외감과 무력감을 안겨주었으며, 이는 행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영업장 피해 중심의 산업 구조적 타격과 '매출 제로' 장기화에 따른 생존권 위협]

의성은 주택 피해가 주를 이루는 타 지역과 달리, 과수원과 부속 시설을 포함한 '영업장 피해(61건)'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사과와 자두 등 고부가가치 과수 산업이 지역 경제의 중추(GRDP의 1/3)를 담당하는 산업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농민들에게 과수원은 단순한 농지가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영업장이며, 고가의 방제기나 트랙터는 단순 물건이 아닌 필수 경영 장비로 인식된다. 특히 묘목 식재 후 상품성을 갖추기까지 5~7년이 소요되는 다년생 작물의 특성상, 주민들은 당장의 물적 소실보다 향후 수년간 이어질 '매출 제로' 상태를 실질적인 파산이자 근본적인 생계 붕괴로 체감하며 극심한 미래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구호 행정의 자의적 원칙과 독단적 운영에 따른 공적 신뢰의 총체적 붕괴]

의성군은 구호 물품 배분부터 지원 사업 집행에 이르기까지 객관적 기준이 결여된 자의적 행정 운영으로 일관하였다. 마을별로 구호 가전의 규격이 상위 모델과 하위 모델로 나뉘어 배정되는 등 일관성 없는 배분은 주민 간 불필요한 비교와 갈등을 야기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더욱이 형평성을 제기하는 주민 대표에게만 선별적 혜택을 제안하며 사태를 무마하려 한 임기응변식 대응은 공적 구호 체계를 행정의 '협상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이러한 독단성은 도비 지원이 약속된 '컨테이너 창고' 사업을 주민 동의 없이 반려한 사례에서 극명히

드러나며, 지자체가 재난 회복의 조력자가 아닌 주민의 수혜 권리를 가로막는 행정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 형식주의와 정보 소외가 결합된 원주민 보상 사각지대의 고착화]

의성은 3개 지역 중 무허가 건물 비중(약 18%)이 가장 높았으며, 이에 따른 보상 갈등 또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다. 수십 년간 세금을 납부하며 실제 거주해온 원주민들이 등기 여부라는 '법적 지위'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반면, 실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이 서류 요건을 갖춰 혜택을 받는 역설적인 상황은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형식주의적 태도는 복구지원비 산정 근거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약 83%)에서 드러나듯 정보의 폐쇄적 구조와 맞물려 있다. 의성군이 주민 자발적 조직인 '대책위'를 공식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소통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한 정보의 병목 현상은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심화시켰다.

[공동체 와해와 '정서적 역사' 소멸이 결합된 최고 수준의 심리적 재난 상태]

의성 지역의 PTSD 위험군 비중은 90.3%로 타 지역을 압도한다. 이는 조사의 한계에 과대표집의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또 한편, 고령 주민들이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이자 영정 사진, 유품, 기록물 등 '대체 불가능한 추억'이 깃든 물건들이 한꺼번에 소실되면서 개인의 역사가 영구 삭제되었다는 상실감에서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여기에 임시주택 생활의 높은 불만족도(69%)와 소통 거점이었던 마을회관의 소실, 주민들의 산발적 거주 형태가 결합되면서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의 상호 부조 체계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결국 물리적 복구보다 더 깊은 심리적·사회적 내상이 지역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리며 장기적인 심리적 재난 상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회복을 소외시킨 '개발 우선 정책'과 국가 책임 부재에 대한 배신감]

산불 복구 정책이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삶을 재건하기보다 대규모 위락시설 개발이나 관광 단지 조성 등 정치적 성과 달성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 주민들은 좁고 부실한 임시주택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골프장, 콘도 개발 계획 발표를 접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주민의 고통을 개발의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배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재난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행정의 무능과 결합되어, 공적 기관이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하기보다 자본과 개발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불신으로 귀결되고 있다.

2) 재난대응을 위한 정책·제도 제언

[피해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체적 회복 거버넌스의 구축]

의성은 행정 당국이 주민들의 자발적 결사체인 '의성주민대책위'의 대표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통을 거부하면서, 타 지역에 비해 정보의 병목 현상과 행정 불신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배제는 주민들을 복구 과정의 능동적 주체가 아닌 수동적 수혜자로 전락시켰으며, 결과적으로 행정의 주인의 접근을 찾는 데 실패하는 결과를 낳았다. 인권적 관점에서의 회복은 피해자를 시혜의 대상이 아닌 자기 삶을 재건하는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은 의성주민대책위를 공식적인 거버넌스 파트너로 명확히 명문화하고, 피해 조사부터 복구 계획 수립, 성금 배분 원칙 논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대등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보 소외를 해소하고 공동체 신뢰를 회복하는 실질적 '알 권리'의 실현]

조사 결과 의성 주민의 약 83% 이상이 피해 평가나 복구지원비 산정 근거를 알지 못했으며, 행정의 정보 제공에 대한 불만족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정보의 불투명성과 불균형은 주민들 사이에 보상금을 둘러싼 오해와 시기를 양산하여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은 단순히 총액을 통보하는 시혜적 방식을 탈피하여, 세부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 등 회복 전 과정의 정보를 주민들이 평등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고령층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메시지 중심의 공지를 지양하고, '마을 단위 대면 설명회'를 상설화하여 정보 접근성이 권리로서 보장되는 소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생존권' 보호와 경제적 정의의 실현]

의성은 사과와 자두 등 고부가가치 과수 산업이 지역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과수원은 단순한 농지가 아닌 삶을 영위하는 핵심적인 '영업장'이다. 그러나 현재의 보상 체계는 당장의 물적 피해에만 집중되어 있어, 묘목 식재 후 수확까지 5~7년이 소요되는 다년생 작물의 특성상 발생하는 장기 소득 공백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며 이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 구호의 범위를 '최소 구호'에 가두지 말고, 생산 주기를 고려한 실질적인 생계 소득 보전 대책으로 확대하여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권리인 '생존권'을 수호해야 한다. 또한 산불의 열기로 인한 작물의 상품 가치 하락 등 눈에 보이지 않는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농민들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두터운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법적 형식을 넘어선 '실체적 거주권' 보장과 포괄적 '건강권' 체계의 운영]

의성은 타 지역에 비해 무허가 건축물 거주 비중이 높으며, 행정의 등기나 허가 여부라는 법적 형식 논리에 매몰되어 수십 년간 거주해온 원주민들을 보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실질적인 거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주거의 법적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자의 존엄한 삶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상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들이 겪는 최고 수준의 PTSD 위험 수준은 생존 위협과 더불어 영정 사진 등 '대체 불가능한 정서적 자산' 소실에 따른 역사적 단절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심리적 외상과 산불 연기 흡입으로 인한 잠복된 건강 침해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일회성 상담을 넘어 장기적인 코호트 조사를 실시하고 마을 단위 소통 거점을 활용한 통합 의료 및 트라우마 케어 시스템을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민간 조사의 한계 극복을 위한 공공 차원의 '정밀 실태조사' 실시와 국가 책임 강화]

본 실태조사는 민간 차원의 한정된 자원으로 수행되었기에 피해 규모의 세부적인 확정이나 장기적인 영향 분석에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의성 지역의 경우 행정의 폐쇄성으로 인해 누락된 피해 사례나 은폐된 권리 침해 요소가 더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본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전수 조사를 포함한 '국가 차원의 면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피해액을 산출하는 통계 작업을 넘어, 재난이 지역 공동체와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유사 재난 시 권리 기반의 회복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11.부록 - 지역 심층 보고서

[안동 지역 보고서 : 회복과 재건을 위한 재난거버넌스의 방향]

I. 산불피해 현황

1. 2025년 영남산불의 안동 피해 현황

표1. 안동시 개요

| 구분 | 주요 지표 및 상세 내용 | 비고 |
|-------|------------------------|--|
| 면적 | 1,522km ² | 임야 면적 1,060km ² (전체면적의 70%) |
| 행정체계 | 1읍 13면 10동 (총 24개 읍면동) | 피해 지역: 7개 면 집중 |
| 인구/연령 | 약 15만 명 | 65세 이상 인구 비중 28.6% |
| 주요 산업 | 농업(사과, 마), 관광업, 바이오 산업 | 과수농가 및 남후농공단지 피해 집중 |
| 산림 특성 | 침엽수(소나무) 위주 및 높은 임상밀도 | 산불 확산에 취약한 구조 |

출처 : 2023 안동시 통계연보

안동시는 경북 거점도시이면서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안동의 2025년 초 기준 인구는 15만 명 내외이며 고령화율은 28.6%에 이른다.

1개 읍, 13개 면, 10개 동으로 구성된 24개 읍면동 체계를 갖춘 안동에서 산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지역은 남동권의 길안, 임하, 임동면과 남서부권의 일직, 남후, 남선, 풍천면 등 총 7개 면이다.산불 피해가 집중된 길안면, 임하면, 임동면 등은 인구 밀도가 낮고 65세 이상의 고령화율이 40% 이상으로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가구당 인원이 1.6~1.8명으로 홀로 거주하는 고령인구의 비중도 높다.

| 지역 | 인구수 | 가구수 | 가구당 인원 | 65세인구수 | 고령화율 |
|-----|------|------|--------|--------|-------|
| 남선면 | 2019 | 1137 | 1.8 | 853 | 42.2% |
| 길안면 | 2615 | 1595 | 1.6 | 1341 | 51.3% |
| 임하면 | 2679 | 1698 | 1.6 | 1284 | 47.9% |
| 일직면 | 2546 | 1453 | 1.7 | 1292 | 50.7% |
| 남후면 | 1667 | 973 | 1.7 | 883 | 53% |

| | | | | | |
|-----|------|------|-----|------|-------|
| 임동면 | 1686 | 1022 | 1.6 | 860 | 51% |
| 풍천면 | 7251 | 4215 | 1.7 | 1846 | 25.5% |

출처 : 2023안동시통계연보(기준: 2023.12.31)

안동시는 면적 약1,522km로 경상북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지자체에 해당한다. 이 중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70%를 상회하며, 넓은 면적의 산림은 지역 경제의 자산인 동시에 대규모 산불 발생시, 화산 확대를 억제하기 어려운 취약점으로 작용하였다.

이번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잠정적으로 26,708ha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경북 전체 피해 면적인 45,157ha 중 절반 이상이 안동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안동시 전체 산림 면적의 25%에 달하여, 탄소 흡수원 상실 및 생태계 파괴에 따른 무형적 손실은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표2. 2025년 3월 안동시의 공식 산불 피해 집계

| 피해 항목 | 세부 집계 내역 | 비고 |
|--------|---|----------------|
| 영향 면적 | 26,708ha (경북 전체 45,157ha) | |
| 사망자 | 최소 4명 (임하면, 임동면 등) | 영남 전체 사망 27명 |
| 주택 피해 | 1,637채 (전소, 반소 등 포함) | 주택 3,819동 |
| 산업 피해 | 남후농공단지 28개 업체 피해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포함 |
| 농업 피해 | 농작물 883ha(이중 사과778ha) 60억 원, 농기계(11종) 3,445개, 농업시설 2,620개소 | |
| 축산 피해 | 231개 축사에서 202,866마리 피해 | 닭174,100마리 |
| 사회적 피해 | 하나로마트 임하점, 남선우체육국 소실 등 | 생활 기반 시설 타격 |

출처 : 안동시홈페이지 산불대응 및 피해 현황), 경상북도 보도자료(250507) 경북 초대형 산불, 초고속 회복을 위한 복구계획 최종 확정

경북 7개 시군에서 2만 3,300여 명, 안동시에서는 2,5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산불이 도심 인근인 정하동 아파트 단지 뒤편까지 접근함에 따라 주민들의 대규모 피난 행렬이 이어졌다.

주택 피해의 경우 안동시 관내 1,637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경북 전체 피해 주택 3,819채 중 약 43%에 해당한다.

농업 및 축산업 분야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였다. 안동은 전국 최대의 사과 주산지 중 하나로, 산불이 발생한 길안면과 임하면 일대는 고품질 사과 생산의 핵심 지역이다. 안동 사과 주산지의 과수원들이 소실되었는데 직간접 피해면적은 533.1ha(직접 125.1 간접 4089.0)로, 이는 이번 산불로 인한 사과산지 전체 피해면적 1257.2ha의 42%에 해당하며 전국 사과 재배면적(34,000ha)의 1.57%에

해당하는 큰 규모이다. 산불로 인한 과수원 소실은 단순한 1년 치 수확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가꾸어온 과수 나무의 전소는 영농 기반 자체의 붕괴를 의미한다⁵⁷.

또한 축사 231동이 불에 타면서 닭174,100마리, 돼지20,574마리, 벌6,606마리 등이 폐사하였다. 특히 안동 남후농공단지 내 28개 업체가 산불 피해를 입어 산업 기반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2. 재난 복구를 위한 예산 및 정책

[대한민국 정부의 복구 지원 예산 및 정책 규모]

정부는 2025년 3월 27일 안동시를 포함한 경북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체 산불 피해 복구비를 총1조 8,809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 중 64.5%에 해당하는 1조 2,136억 원을 국비로, 나머지 6,673억 원은 지방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중 안동의 경우 피해액 3천억 원으로 산정하고, 복구비 5,088억원(국비3,306억, 지방비1,782억원)

으로 배정했다.⁵⁸

표3. 정부의 산불 복구 지원 예산

| 지원 항목 | 정부 예산 및 지원 내용 | 비고 |
|----------|----------------------------|-----------------|
| 총 복구비 | 1조 8,809억 원 (국비 1조 2,136억) | 안동시 5,088억 원 배정 |
| 주택 전소 지원 | 1억 원 이상 (성금 포함) | 철거비 국비 100% 부담 |
| 임대주택 공급 | 신축 매입 임대 1,000호 공급 | 이재민 주거 안정책 |
| 농업 분야 지원 | 지원 단가 100% 현실화, 농기계 38종 확대 | 영농 재개 집중 지원 |
| 소상공인 지원 | 생계안정 지원금 1,000만 원으로 상향 | 기존 대비 2배 증액 |

[안동시의 복구 지원 예산 내용 및 자체 대응 규모]

안동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3,37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특히 일반회계 증액분 3,050억 원 중 약 67%인 2,050억 원을 산불 극복과 피해 복구에 배정했다.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한 국비 1,204억 원에 시비 245억 원을 매칭하여 총 1,449억 원 규모의 생활안정 지원비를 우선 편성하였다.

이에 더해 농가의 농기계지원에 170억 원, 재난폐기물 처리에 100억 원, 상품권할인 보전에 33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프로젝트에 4억 원 등을 배정하였다. 그외에도 다양한 재난지원과

⁵⁷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5.06.12), 2025영남지역산불 피해와 농업부문 대응과제, KREI이슈+, 제 36호.p5

⁵⁸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25.05.02), 산불로 무너진 국민의 삶, 정부가 함께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회복 정책에 예산을 배정하였다.⁵⁹

- 경제수단을 상실 경우 생계비 지원(2~12개월간) : 1인가구 73만원 / 2인가구 120만원
- 주택 복구비 최소 1억원(기존지원금+6,000만원+기부금 등) 지원
- 영업장 파손 소상공인 업체당 1,000만원 지원
-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시비) 자가 300만원 / 세대 세입자 200만원 / 세대
- 세입자 보증금 (혹은 6개월간 임대료, 최대 600만원) 지원
- 농기계 피해 기종 27종으로 확대 및 지원을 상향(35→50%)
- 농업시설 종류 11개로 확대 및 지원을 상향(35→45%)
- 축산가축 피해 지원을 상향(50% →100%)
- 임산물 지원을 상향(50→100%)
- 지방세 감면(건축물, 농지, 임야, 자동차, 대체취득 자동차 등)
- 이동 의료지원반 운영
- 재난심리지원(찾아가는 심리상담소, 마음치유프로그램 등)
- 중소기업, 농어임업 대출 이자 지원 (3억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연 1.4% 고정금리에 대출기간은 10년(5년 거치)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국 공유림 사용료 감면
- 농기계 장기 무상 임대 (62개 마을 단위)
- 공공임대주택 임대지원(6개월)
- 산불 재해 단독주택 설계 감리비 지원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수수료 면제
- 국민건강보험료 3개월간 경감(30~50%)

[민간의 구호금(성금) 내용 및 모금 규모]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등 8개 단체를 통한 특별 모금액이 1,081억 원에 달하며, 경상북도와 기초 지자체를 통한 자체 구호금은 138억 원, 피해 지역에 직접 전달되는 '고향사랑 기부금'도 61억 원을 넘었다. 최종적으로 1,700억 원 이상의 국민 성금 및 기부금이 모였다(2025년 5월 기준). 이는 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 모금액인 1,290억 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재난 성금 규모로 기록되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제출한 피해 건수 파악이 완료되지 못하여 초기 지급이 지연되자 정부는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피해자 1인당 100만 원씩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체 모금액의 약 2%가 긴급 자금으로 활용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 많은 성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은 국민성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2026년 3월 현재 시점에도 2025년 산불 피해로 인한 성금의 모금과 배분 내역은 공개되고 있지 않다.

II. 산불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1. 설문조사 및 인터뷰 연구 개요

안동에서의 설문조사는 2025년 10월 20일~11월 7일, 약 2주간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대표 허승규)에 의해 대면방식으로 수행되었다.

59 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2025.5), 안동시 산불 피해 지원 안내서

표4. 설문조사 응답자 개요

| 지역(면) | 응답자 수 | 연령대 | 응답자 수 | 성별 | 응답자 수 |
|-------|-------|--------|-------|----|-------|
| 일직면 | 30 | 40대 이하 | 4 | 여성 | 51 |
| 임하면 | 30 | 50대 | 29 | 남성 | 49 |
| 길안면 | 20 | 60대 | 37 | | |
| 남선면 | 20 | 70대 이상 | 30 | | |
| 계 | 100 | | 100 | | 100 |

설문조사에 참여한 안동의 산불피해 주민 100명 중 60대 이상이 67%로 고령화된 안동 사회를 반영하였다. 또한 설문 응답자는 산불 피해가 집중되었던 안동시 남부 4개 면(面) 지역에서 대상자를 찾았고,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면별 응답자 수를 할당하였다. 또한 성별에서도 숫자가 비슷하도록 전체 응답자를 구성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 소속 연구원 4인(고이지선, 황정화, 여미영, 박은옥)에 의해 2025년 10월 2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수행되었다. 산불 이후의 피해 복구 및 회복 과정에 있어 여러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들을 섭외하여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표5. 심층인터뷰 대상자 개요

| No | 대상자 | 특징 | 지역 |
|----|------|---------------------------------|-----|
| 1 | 안동-A | 남후농공단지 입주업체 | 남후면 |
| 2 | 안동-B | 전소된 마을의 이장 | 남선면 |
| 3 | 안동-C | 전소된 마을의 이장 | 남선면 |
| 4 | 안동-D | 피해 지역 면장 | 임하면 |
| 5 | 안동-E | 자영업자, 세입자, 마을총무, 안동시 일상회복지원단 활동 | 남선면 |
| 6 | 안동-F | 은퇴자, 개인 작업장 전소피해 | 남선면 |
| 7 | 안동-G | 농지 피해, 안동시대책위활동 | 길안면 |
| 8 | 안동-H | 임업피해 | 정상동 |
| 9 | 안동-I | 새마을부녀회장/여성농민회 | 임하면 |
| 10 | 안동-J | 별정우체국 시설 피해 | 남선면 |

2. 산불의 물적 피해

물적피해에 대해 응답자의 다수는 주택, 가재도구, 추억이 깃든 물건 등이 80% 이상 상실되었다고 응답했다. 영업장의 피해에 있어서도 응답자의 68%가 40% 이상 상실되었다고 답했다.

표6. 피해정도에 대한 피해자의 평가 (재해이전의 상태를 0% 피해로 간주, 10%단위로 기입)

| 구분 | (사례수) | 20% 미만 | 2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
|-------------------|-----------------|------------|------------------|------------------|------------------|---------------|
| 주택 | 100 (100.0%) | 36 (36.0%) | 2 (2.0%) | 0 (0.0%) | 0 (0.0%) | 62 (62.0%) |
| 영업장(농장, 공장, 상점 등) | 100 (100.0%) | 15 (15.0%) | 17 (17.0%) | 24 (24.0%) | 7 (7.0%) | 37 (37.0%) |
| 가재도구(가전제품 가구 옷 등) | 100 (100.0%) | 36 (36.0%) | 0 (0.0%) | 0 (0.0%) | 0 (0.0%) | 64 (64.0%) |
| 추억이 깃든 물건 | 100 (100.0%) | 37 (37.0%) | 0 (0.0%) | 0 (0.0%) | 0 (0.0%) | 63 (63.0%) |

안동-C: "마을의 25가구 중 24가구가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마을이 완전히 사라졌다"

안동-H: "임야 20만 평: 조경수·약초·산양삼·송이 등 30년간 가꿔온 산림 소득 기반 전반을 다 잃었다. 직접 산정해보면 피해액은 총 38억 원에 달한다"

안동-I: "포도 과수원 나무 전체가 열기에 타면서 한 그루도 남지 않고 전멸했고 수박 하우스 역시 철주 구조까지 열기에 휘어져 재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수십 년간의 투자가 물거품이 되었다"

안동-F: "작업실이 완전히 소실되었고, 작품들도 다 타버렸습니다. 퇴직한 지 10년 되었는데, 학교 연구실에서 작업하던 모든 작품을 이곳으로 옮겨놓았던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딸이 미술을 공부하면서 만든 작품들도 이곳에 보관했었는데, 그것도 다 타버렸습니다."

표7. 행정기관의 '피해 정도' 평가에 대한 의견

| 구분 | (사례수) | 행정기관이 과소평가했다 | 비슷했다 | 행정기관이 과대평가했다 |
|------------------------|----------------|-----------------|------------|-----------------|
| 주택 | 70 (100.0%) | 54 (77.1%) | 16 (22.9%) | 0 (0.0%) |
| 영업장(농지, 공장, 상점, 농기구 등) | 90 (100.0%) | 62 (68.9%) | 28 (31.1%) | 0 (0.0%) |
| 가전제품 | 70 (100.0%) | 62 (88.6%) | 8 (11.4%) | 0 (0.0%) |

그러나 피해자들이 인식하는 피해정도와 행정기관의 평가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과 영업장, 가재도구에서 행정기관이 과소평가했다고 답한 비중은 모두 70% 전후로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안동시는 기존의 피해보상규모와 기준을 보완하여 피해보상 수준을 높였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았다. 생계기반을 이루던 수많은 요소들 중 일부만이 피해로 인정받았는데, 보상대상이라 하더라도 피해를 증명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안동-E: "시에서 큰 건물이나 농기구, 비닐하우스만 조사했지 세입자의 개인 재산은 전혀 조사하지

않았어요. 올해 3월부터 키우던 닭 100마리, 칠면조 등 모든 동물이 싹 다 죽었는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안동-G: "NDMS에 주택이랑 농기계는 포함되는데, 빠지는게 많았다. 창고 안에 있던 박스, 파레트, 과일 상자, 보관 곡물(사과·콩·고추·깨 등)이 통째로 불탔으나 보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3000평 이상 과수원이 전파되어도 보상금이 '수십만 원' 수준으로 나온 데도 있다."

안동-H: "임야 20만 평을 1시간 정도 둘러보고 끝나는 수준이다...이 단계에서부터 이미 서류 요건에 안맞다는 이유로 여러가지 피해 복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안동-J: "안동시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와 피해 상황을 충분히 조사한 적은 없는거 같다"

산업 부문에서는 남후농공단지 내 28개 업체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공장 시설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원자재와 재고 자산까지 소실되었으나, 기존 재난법상의 지원 근거 부족으로 인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정부의 대피 명령에 따라 대피하는 바람에 재산을 지키지 못했고, 소방인력이 문화재 보호를 우선시한 결과 기업 시설이 피해를 보았음에도 회복을 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안동-A: "재고, 원자재 등 기업 운영에 투입하고 있던 필수적인 자산에 대한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대피를 하라고 명령을 해놓고, 그거 당하면은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저희들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이 부분이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한 부분이죠"

산불로 인해 본인이 받은 신체적 피해에 대해 답변한 45명 중 32명(71%)이 기존질환이 악화되었다고 답변했고, 32명(71%)이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가족이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53명 중 22명(40%)이 기존질환이 악화되었고, 24명(43%)이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부상은 산불 발생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피해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복구를 서두르는 과정에서도 발생했다.

안동-I: "산불 이후 농장 정리하고 청소하느라고 발목 인대가 파열됐다. 여러 번 접질렸는데 이게 급해서 병원에도 못가고 그냥 뒀더니 완전히 끊어져서 붓고 통증이 심해지더라... 7월에 수술, 한 달 입원하고 재활이 오래 걸리고 있다. 지금도 100m 정도만 걸어도 아파서 쉬어야 하는 상태다. 몸이 힘드니까 단체 활동도 많이 참여하지를 못한다"

안동-G: "대책위 활동 하면서 대표를 맡다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든 상황들을 다 듣게 되고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니 건강이 많이 안좋아졌습니다. 체중이 약 90kg이었는데 거의 10kg이 빠졌는데 올해 정말 확 늙은 것 같습니다"

3. 재난 직후 대피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재난문자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00명 중 70명(70%)으로, 산불 발생 당시 재난문자를 수신하지 못한 비율이 30%에 달했으며, 14명(14%) 대피 방법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선제적인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긴급한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 100명 중 1인 거주 중으로 답한 인원은 16명(16%), 2인의 경우 53명(53%)이었다. 고령의 1인가구의 경우 재난정보의 습득과 긴급대피에 있어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안동-E: "면사무소에서 대피 요청이 왔지만 어떤 어르신들이 '불이 여기까지 오겠나'라며 대피를 안하겠다고 했다. 그 때 당시에는 제대로 안내나 지시가 없었다. 용산초등학교로 대피하라고 해서 갔는데 체육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일부는 88회관으로 가고 나눠서 대피하게 됐다. 산불에 대한 매뉴얼이나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건지 우왕좌왕했다"

안동-J: "남선 주민들한테 어디로 가라 하는 대피 안내나 지시가 없었다. 대피 문자가 이미 산이 불로 다 포위된 뒤에야 오후 5시 30, 36분 쯤에 전 주민 대피하라고 뒤늦게 왔다. 마을 확성기는 지형적 문제인지 들리지 않았다. 거동이 어려운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 대피하는데 차가 꽉 막히고 불 붙은 나뭇가지가 차로 떨어지고 재난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걸 경험했다."

산불로 인해 임시대피했던 97명 중 83명(약 86%)이 승용차를 이용했다. 승용차를 이용했다고 답한 93명 중 본인의 차가 64명(약 69%), 가족이나 친척의 차 12명(약 13%), 마을주민의 차가 9명(약 10%) 순이었다. 긴급한 상황에서 가족과 이웃이 가장 중요한 재난대응의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표8. 재해 당시 대피 방법에 대한 정보습득 경로(복수응답)

| 구분 | 재난 문자 | TV,라디오 | 마을 방송 | 마을 주민 | 경찰, 소방관 등 통해 공무원 직접 | 기타 | 듣지못했다 |
|----|-------|--------|-------|-------|------------------------------|----|-------|
| 안동 | 51 | 10 | 44 | 35 | 10 | 0 | 14 |

대피 이후 임시대피소에 머물렀다고 답한 응답자는 54명이었으며, 이 중 2번 옮겼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이들이 머물렀던 임시대피소는 공공체육시설, 학교, 마을회관, 숙박업소 순이었다. 임시대피소 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은 26명(50%), 긍정적인 답변은 11명(21%)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구분 | 순위 | 협소한 공간 | 소음과 불빛 | 물품의 부족 | 식사의 어려움 | 낮선 사람들과 공존 | 세면/샤워 등 어려움 | 화장실 사용의 어려움 | 정보부족으로 인한 답답함 | 편의시설 부족 | 없음 | 기타 |
|----|-----|--------|--------|--------|---------|------------|-------------|-------------|---------------|---------|----|----|
| 안동 | 가중치 | 80 | 35 | 18 | 15 | 38 | 37 | 23 | 28 | 13 | 6 | 9 |
| | 1순위 | 18 | 5 | 0 | 1 | 7 | 5 | 5 | 5 | 1 | 2 | 3 |
| | 2순위 | 11 | 9 | 5 | 4 | 6 | 6 | 3 | 4 | 2 | 0 | 0 |
| | 3순위 | 4 | 2 | 8 | 4 | 5 | 10 | 2 | 5 | 6 | 0 | 0 |

표9. 임시대피소의 불편함에 대한 답변(3개까지 복수응답)

**가중치는 다중순위형 응답에 대한 각 빈도값에 1순위:3점, 2순위:2점, 3순위:1점을 가중한 값.

임시대피소에 머물렀던 응답자들은 '협소한 공간', '낮선사람들과의 공존', '세면이나 샤워 등의 어려움' '소음과 불빛' 같은 문제로 불편했다고 응답했다. 산불피해로 재산과 주거공간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당장의 거처로서 임시대피소는 불가피한 대안이었지만, 불편을 최소화하고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은 부족했다.

응답자 중 44명은 산불로 대피가 필요했음에도 임시대피소로 가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피 시설의 불편함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이 경우 대피 장소는 본인의 다른 집 22명(50%), 가족이나 친척의 집 13명(약 30%) 등으로 나타났다.

임시대피소나 다른 곳에 대피한 응답자들 모두 정보제공에 대해 불만족했다. 임시대피소 51명 중 27명(53%), 비임시대피소 41명 중 17명(41%)이 정보제공에 대해 부족했다고 응답했다.

안동-J: "대피소에 들어간 사람에게만 식비·숙박비가 지원됐다. 임시대피소 못가는 사람도 있는데 병간호를 해야 한다거나 치매가 걸렸거나 또 병이 있거나 해서 친척집에 머문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되는거다."

4. 임시주택

응답자 중 56명(56%)은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임시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44명(44%)의 경우는 그 이유가 '본인 집에서 그대로 살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8명(86.3%)으로 가장 많았다.

임시주택에 거주 중인 응답자의 대다수인 52명(약 93%)은 임시주택 단지가 마을에 가깝다고 응답했다.

또한 임시주택에서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는데 56명 중 33명(약 59%)이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했다.

표10. 임시주택의 불편함에 대한 답변 (복수응답)

| 구분 | 이웃의 소음 | 환기/통풍 | 내부시설 (냉난방, 이력선, 전기온수기 등) | 좁다 | 마당없음 | 마을회관/경로당이 멀다 | 사생활보호가 안된다 | 기타 |
|----|--------|-------|-----------------------------|----|------|--------------|------------|----|
| 안동 | 20 | 26 | 20 | 48 | 22 | 12 | 25 | 2 |

불편함의 이유로 '좁다'가 가장 많았다. 이어 '사생활보호가 안된다', '이웃의 소음', '마당없음'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가 의미하는 바는 의식주의 해결이라는 기능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집은 사적인 공간이기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하려면 타인과의 일정한 거리가 매우 중요한 요건이지만 임시주택단지에서 주택간 거리는 2미터 내외로 매우 좁았다.

인터뷰 연구에서는 임시주택단지에서 주민들이 더 잘 모일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일부 나타났다. 특히 기존에 살던 주택이 열악했던 경우에는 편리한 공간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공간밀집으로 인한 불편함, 구조물의 부실함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왔다.

안동-B: "기존 농촌 주택이 화장실도 그렇고 불편했으니까 노인들이 좋아한다. 이거 주변 집에 갖다 놓고 그대로 살겠다고 한다. 그래도 집이 작아 두 명이 살기에는 충분하지 않기는 하다. 혼자 살기는 괜찮다. 그런데 1년 후에는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지"

안동-E: "산불 나고 두 달 후에야 임시 주택이 마련되었는데 컨테이너다 보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 공간이 좁아서 손님을 초대하기도 어렵고 명절에 제사도 못 지냈다. 임시 주택 계약은 1년인데 그 이후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안동-G: "난민촌 같은거다. 고기를 한 번 구워 먹어도 옆집 눈치 보이고 뒷말이 나오고 자꾸 이웃간에 갈등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56명 중 26명(46%)이 환기와 통풍 문제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안동-C: "처음에는 좋았다. 그런데 살아보니 아니더라. 임시주택은 '숨 쉬지 않는 집'이다. 곰팡이가 피더라. 임시주택은 내 집이 아니라는 마음부터 들고 편하지가 않으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임시주택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울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짓고 비워주고 나왔다. 그래도 임시주택에서 계속 살고 싶은 사람도 있다. 그런데 5년 이내에는 임시주택 매매가 불가하다 해서 그것도 안된다 하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임시 주택의 높은 에너지 비용이다. 임시주택은 냉난방, 조리, 온수공급 등이 전기화된 시설로서 임시주택의 전기료에 대한 감면 기간이 끝나면, 높은 전기요금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복사난방효과가 없는 전기패널식 난방과 단열성능이 낮은 컨테이너 벽체 때문에 겨울철 난방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안동-E: "지금은 추위도 난로 하나 주지 않고, 12월이면 전기세 지원도 끝나는데 그 이후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해 막막하다"

*기사참조 :[단독]한 달 전기료 100만원…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덮친 ‘요금 폭탄’(경향신문 260212)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120600011>

답변자 36명(64.3%)은 임시주택 제공기간이 2년 이상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안동시가 임시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1년간 임대함에 따라 임시주택에서의 생활은 1년 내로 제한되는 것으로 공지되었다. 하지만 전소된 마을과 집의 복구가 1년 내에 가능한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집의 복구와 관리 등을 위한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경우 임시주택에서의 생활이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임시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처한 다양한 여건들을 고려하여 임시주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심리적 피해

표11. 안동 지역 IES-R-K 척도검사 결과 점수 분포도 (N=100)

| PTSD 등급 수준 | 총점 구간 | 인원 | 비율(%) |
|----------------|--------|------|-------|
| 정상 | 0~17점 | 9 | 9% |
| PTSD 위험 경향성 | 18~24점 | 6 | 6% |
| 부분 PTSD 위험 | 25~39점 | 29 | 29% |
| 심각한 PTSD 위험 | 40~59점 | 27 | 27% |
| 매우 심각한 PTSD 위험 | 60점 이상 | 29 | 29% |
| 합계 | | 100 | 100% |
| 평균 PTSD 점수 | | 46.6 | |

산불 피해자들은 불길을 목격한 순간의 공포와 상실감으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우려되는 위험군이 85명(8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안동-A: "저희는 지금은 이렇게 앉아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때 연기 속에 있는 거랑 똑같은 마음이다...희망 고문을 많이 받았지만 여전히 연기속에 있다. 거의 수면제 안 먹으면 잠을 못 잤다. 두 달 동안. 가슴이 답답한 게 막 갑자기 숨이 멎고 그렇죠? 자다가도 금방 10분 자다 깨고 가슴이 답답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내가 무기력해 보이고 내가 이때까지 뭘 하고 살았나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다 한숨이..."

안동-B: "밤이 되면 우울하고, 동물들이 죽는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멧돼지, 고라니 등 동물들이 불에 쫓기고 죽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이 꿈에 자꾸 나왔다."

안동-G: "꼭 공황장애같이 겪었다. 자다가 숨이 막히고, 벌떡 일어나고, 불 나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재생이 된다. 사고 직후보다 2~3개월째가 더 힘들더라. 물건을 찾으러 잣더미가 된 집에 간다. '다 사라졌구나' 하는 것을 자꾸 자꾸 실감하는 거다. 다 돈과 연결되다 보니까 사소하게 생각했던 물건

하나하나가 다 스트레스가 된다."

안동-I: "내 전 재산과 앞으로의 수입을 다 잃었다'는 상실감이 너무 크다. 사과꽃이 피어도 내가 없는데 저 꽃이 왜 피나 싶다고 우울하고 허무하다. 너무 화가 난다. 산불 낸 놈을 때려 죽이고 싶다"

안동시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 다양한 심리지원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산불 피해 관련 심리지원(마음상담, 마음치료)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 있음이 32명(32%), 없음 68명(68%)으로 답변했다. 심리지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사와 1:1 대화가 25명(78%)로 높았고, 상담사와 집단대화도 6명(약 19%)이었다.

심리지원의 효과에 대해 '효과적이었다'는 응답은 10명(31%)이고, 부정적인 응답은 9명(28%)으로 긍정적 평가가 약간 우세했다. 그런데 긍정적 응답보다 1.8배 많은 18명(56%)의 응답자가 심리지원이 1년 이상 장기간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심리지원서비스가 기대한만큼의 효과가 없었음에도 회복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과반 이상임을 의미한다.

표12. 심리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

| 구분 | (사례수) | 서비스에 대해 몰라서 |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심리지원이 필요하지 않아서 | 서비스에 대해 알고 원했으나 시간이 없어서 |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 기타 |
|----|----------------|---------------|--------------------------------|-------------------------|------------------------------|--------------|
| 안동 | 68 (100.0%) | 17 (25.0%) | 21 (30.9%) | 15 (22.1%) | 8 (11.8%) | 7 (10.3%) |

심리지원을 받지 않은 68명의 경우 21명(약 31%)은 '심리지원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필요하지 않다'에 답했다. 그런데 '잘 몰라서' 17명(25%), '시간이 없어서' 15명(22%),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8명(약 12%)으로 대답한 사람도 있었다. 이들의 경우 심리지원서비스가 개선된다면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 수요자라고 볼 수 있다.

재난 이후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회복을 위한 마음의 힘을 복구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대화와 위로를 나누는 것은 피해자가 재난 그 자체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안동시에서는 찾아가는 심리지원프로그램 등을 제공했지만, 실제로 회복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관찰하고 그 평가를 수렴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 따라서는 집단적인 방식을 선호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익명화된 방식을 선호할 수도 있다. 거주지로 찾아오는 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다. 피해자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접근성을 높인다면 재난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안동-E: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가끔 와서 '어떠신가요? 힘들지요?'라고 묻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시에서 제공하는 상담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안동-G: "길안·기남면 등에서 산불 피해 주민 위로 명목으로 노래자랑·가요방 행사를 두 차례 진행했다. 실제로 그날 온 산불 피해자들은 소수였다. 불 난 집에서 잔치 여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위로는 아픔을 같이 느끼고 울어주는 거고, 살 방도를 같이 고민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6. 재난지원

산불 이후 피해자들의 재난 극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재난지원 활동이 곧바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거와 생계 기반이 무너져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되고 전달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의 정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재난극복과 일상회복의 방향과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또한 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재난으로부터의 회복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들이 소외되지 않는다는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안동의 산불 피해자들이 주로 정보(피해평가, 보상액, 구호금, 복구계획,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등)를 제공받은 방법으로는 ‘마을이장’, ‘문자메시지 우편 개인전화 등’, ‘공무원’, ‘이웃’, ‘공고문 책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장직 또한 행정체계의 일부로 본다면, 행정체계를 통한 공식적인 정보전달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제공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피해평가’ 70명(70%) ‘복구지원비’ 80명(80%) ‘구호금’ 66명(66%) ‘향후복구계획’ 66명(66%)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54명(55%) ‘구호서비스와 물품제공’ 43명(43%)등이 해당 정보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민간으로부터의 모아진 성금 규모(모금액)와 배분에 대해서는 67명(67%)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피해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74명(74%)에 달했다.

표13. 정보제공에 대한 만족도

| 구분 | (사례수) | 매우 만족하지 않았다 | 대체로 만족하지 않았다 | 보통이다 | 대체로 만족했다 | 매우 만족했다 |
|----------------|-----------------|---------------|---------------|---------------|---------------|-------------|
| 피해평가 | 100 (100.0%) | 36 (36.0%) | 34 (34.0%) | 24 (24.0%) | 5 (5.0%) | 1 (1.0%) |
| 복구지원비 | 100 (100.0%) | 45 (45.0%) | 35 (35.0%) | 17 (17%) | 2 (2.0%) | 1 (1.0%) |
| 구호금 | 100 (100.0%) | 36 (36.0%) | 30 (30.0%) | 25 (25.0%) | 7 (7.0%) | 2 (2.0%) |
| 향후복구계획 | 100 (100.0%) | 35 (35.0%) | 31 (31.0%) | 29 (29.0%) | 4 (4.0%) | 1 (1.0%) |
| 지자체담당자 연락처 | 98 (100.0%) | 29 (29.6%) | 25 (25.5%) | 30 (30.6%) | 12 (12.2%) | 2 (2.0%) |
| 구호서비스와 물품제공 | 100 (100.0%) | 19 (19.0%) | 24 (24.0%) | 39 (39.0%) | 16 (16.0%) | 2 (2.0%) |

이는 정보가 피해자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전달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피해산정 기준과 보상액수만이 아니라 피해산정의 내역, 향후 복구와 지원의 방향과 계획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들이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보가 명료하게 전달되지 못하거나 주어진 정보에 대해 질문할 수 없다면, 피해자들은 행정의 조치만을 마냥 기다려야 하는 수동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재난으로 일상이 멈추어 무력해진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일방적 행정 행위는 재난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며, 장기적으로 피해자들이 주체적으로 일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약화시킬 수 있다. 빠르고 효율적인 회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회복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조력하는 행정기관의 상호적인 정보소통이 요구된다.

| 지역 | 구분 | 주거지원 (주거환경 개선, 주택 수리 등) | 재난 피해 입증 및 지원 신청을 위한 피해자 절차 안내 | 일자리 및 소득 지원 | 복구 과정에 의견 제시 및 참여 지원 | 의료지원 (병원·의원 연계 등) | 생필품 지원 (식료품, 위생용품, 가재도구 등) | 심리지원서 비스 |
|----|-----|----------------------------------|--|----------------|-------------------------------|-------------------------|---|-------------|
| 안동 | 가중치 | 138 | 162 | 84 | 108 | 19 | 42 | 14 |

| | | | | | | | | |
|--|-----|----|----|----|----|---|----|---|
| | 1순위 | 34 | 35 | 13 | 12 | 1 | 3 | 2 |
| | 2순위 | 13 | 22 | 14 | 26 | 5 | 13 | 1 |
| | 3순위 | 10 | 13 | 17 | 20 | 6 | 7 | 6 |

표14. 재난 후 회복을 위해 더 필요한 지원

**가중치는 다중순위형 응답에 대한 각 빈도값에 1순위: 3점, 2순위:2점, 3순위:1점을 가중한 값.

조사 시점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한 지원사항은 ‘재난피해입증과 피해자지원신청을 위한 행정절차안내’, ‘주거지원’, ‘복귀과정에 의견 제시 및 참여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이 피해를 과소평가했다는 답변이 우세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증하고 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는 인식은 피해자들이 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어렵게 한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행정적 절차에 대한 어려움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H: "보상을 신청하려니까 조경수·임산물 피해 보상 관련해서 4개 서류(농업경영체, 임업경영체, 임업경영계획 인가서,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모두 요구한다. 내가 박사다. 그런데도 행정이 요구하는 네 가지 서류를 다 갖추기 어려웠는데, 일반 임업인들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은 뭐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2026년 1월부터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추가 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다. 보상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후속적 조치인데, ‘피해자지원신청서’에는 특별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산불로 경제적 기반을 잃은 사람들은 일자리와 소득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상당한 부채를 안고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경우 소득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부채를 갚을 여력마저 상실하게 되어 이중적인 경제난에 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제적 위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자 지원이 요구된다.

안동-G: “창고 안에 있던 박스, 파레트, 과일 상자, 보관 곡물(사과, 콩, 고추, 깨 등)이 통째로 다 불탔다. 그런 피해는 10원 하나 보장이 안 된다.”

또한 복구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답변도 많았다. 산불 이후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지원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된다. 피해자들은 더 많은 지원액만이 아니라 복구 과정에 피해자들의 의견과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다. 행정기관은 피해자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복구 과정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회복에 대한 효능감을 제공하고 회복 의지를 북돋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의 의지야말로 회복의 가장 큰 자원이다.

안동-A: “자신이 어떤 법의 지원 대상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특별법에 시행령이 초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안동시는 지금 이 정보를 잘 모르고 있고 또 정보를 빨리 만들어서 전달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좀 무능력한..그런 상황인데...”

안동-H: "시의회 산불 피해 위원회, 안동시 위원회, 산림청·경북도 회의 등은 모두 참여했다. 의견 청취와 기록 수준에 그치고 결론은 특별법에 올리겠다, 시행령에 반영하겠다 그 소리 뿐이었다."

안동-G: "행정이 우리한테 상의를 하고 물어보고 해야 하는데, 피해자들인 주민들이나 대책위를 오히려 배제하고 견제한다. 행정과 주민 대표가 함께 논의했다면 불만과 불신이 훨씬 줄었을 것이다"

7. 복구와 회복

[보상의 사각지대]

응답자의 대다수(90명)가 복구지원비를 수령했다고 답변했으나, 그 내역과 산정근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75명(약 76%)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사실 조사가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답변도 77%에 달했다. 이는 피해규모가 과소평가되었다는 답변과 일맥상통하면서도 그 이유가 '피해사실 조사' 과정에 있었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행정기관은 빠른 재난 복구를 목표로 피해산정과 보상을 서두르지만, 이로 인해 피해사실조사 과정은 부실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인식이었다.

안동-A: "저희 같은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은 농가나 주택에 비해 지원이 너무 적고, 피해액 산정 기준도 모호해서 재고나 원자재 같은 필수 자산은 아예 보상받지 못했어요. 피해 규모에 비례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소액만 주어지는 데다가, 임차인 등은 기준이 불명확해서 지원에서 빠지는 등 실질적인 현금성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안동-C: "29평 집이 타서 보상금과 지원금을 다 합쳐 1억 원 남짓 받았는데, 이 돈으로는 집 짓고 살림살이 채울라하면 절반도 안됩니다. 신축이나 오래된 집이나 보상금 차등이 없다는 것도 좀 그렇구요. 게다가 실거주자라도 집주인이 아니면 3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서 살 데도 없는데 보상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안동-I: "보상 기준이 무조건 평수 중심이라 수년씩 해 온 과수나 시설 투자는 아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험들었다고 추가 보상에서 빠니까 대비한 사람만 억울하죠. 보조금 기준도 너무 낮아서 내 돈을 보태 더 좋은 걸로 사면 또 보조 대상에서 제외해 버립니다. 수박 하우스는 보험도 안 들었는데 수박 모종값도 안 되는 130만 원을 보상이라고 주더라고요."

안동-J: "별정우체국은 수십 년간 국가 우편망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한 공공시설인데 재난안전법 시행령 어디에도 명시가 안되어 있다고 하면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보상을 아예 안 해주어서 완전히 뭐 사각지대..... 0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산불 복구 과정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은 실거주 세입자와 비주거시설 운영자들이었다.

안동-D: "농막이나 컨테이너같이 정상적인 주택이 아니거나 또 무허가인 경우에는 아예 지원이 안되고, 집주인이냐 세입자냐 따라서 금액 차이도 커서.."

안동-E: "10년 이상 산 세입자인 저희는 수집한 술이나 가재도구 등 개인 재산이 싹 다 타도 전혀 보상을 못 받고 위로금 몇 백만 원이 전부인데, 정작 서울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한 집주인이냐 그물만 쳐놓고 세금 낸 땅주인은 1억 2천만 원을 받아 가는 겁니다. 또, 키우던 닭이나 칠면조..동물이 싹 다 죽었는데도 보상은 없었습니다."

안동-F: "저는 45년 동안 안동에 살며 이웃들과 지내왔지만, 주민등록상 실거주지가 아니고 작업실로 썼다는 이유로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지원금 절반만 나왔어도 비바람 피할 곳을 지었을 텐데"

이는 재난 이후 주택복구가 주거권의 보장이 아닌 주택자산 즉 소유권의 보장에 우선적으로 맞춰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이다. 농촌의 경우, 주택 소유자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고 세입자들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고쳐서 거주하는 경우도 많다. 오래살기 위해 집에 투자하였으니, 당장 거주할 공간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다시 비슷한 조건의 집을 임대하여 살기 위해 새로 투자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 세입자의 실질적인 주거회복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줄수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응답자 68명(68%)은 본인이 입은 피해가 조사에서 누락되거나 피해보상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지자체에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합당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58명(84%)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사실조사과정이 부실하거나 비합리적이라는 불만이 쌓여도 그러한 문제 제기가 수용되지 않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안동-A: "NDMS를 열람하거나 집계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행안부밖에 없습니다. 안동시에 권한이 없어요... 시에서도 우리가 요구를 해도 못 해주고 우리가 내 거를 내가 설명해 주세요. 해도 안 해줘요. 그냥 보세요. 밖에 안 돼. 사진도 못 찍게. 몰라요"

안동-I: "피해 확인서를 떼러 갔을 때, 전산상에서 하우스 피해 기록이 통째로 삭제되어 있었다. 이후 정정 시도에도 '시스템상 수정이 어렵다는' 답변만 듣고 있다"

안동-J: "안동시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와 피해 상황을 충분히 조사한 적은 없어요. 큰 산불이 처음이라 그럴 수 있겠지만 너무 둔감하다. 구호품 나눌 때도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들이 먼저 가져가는 방식이다. 내는 집이 다 탔는데 한동안 기본 물품도 제공받지 못했다. 엉망이다"

경황이 없던 와중에 직접 전산시스템으로 기입한 피해사실을 수정하거나 열람하는 것도 자유롭지 않았다. 게다가 안동시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사실기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시스템의 한계를 이유로 주민들을 제약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상과 생계가 무너진 시점에 주민들이 미처 깨닫지 못할 정도로 피해는 광범위함에도 행정편의적 피해집계방식은 주민들의 상실과 울분을 더욱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시스템이 낡은 불만과 갈등은 결국 일선 공무원들에게 집중되었다.

안동-D : 이번 인사에서 총4명이 휴직 냈고, 한 분은 다른 곳 갔다. 다섯 명이나 바뀐거다. 고생 많이 했다. 사표 안 쓴 것 다행이다 싶다. 산불이 났으니 주민들이 격한 것은 당연하다. 주거비, 자기 보상 확정되었는지 등. 민원이 계속되었다. 업무경감을 위해 시에서 현장 조사 지원해줬지만 측정/확정되기 전까진 미결이고 민원은 계속 발생하게 되었다"

빠른 피해산정과 보상만이 아니라, 피해보상 과정의 절차와 원칙에 대해 충분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이견 제시의 창구를 열어 두어 주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피해보상 과정이 될 때에 오히려 행정비용을 줄이고 피해자의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복구지원비의 부족]

| 지역 | 구분 | 주택 | 가재도구, 살림물품 | 과수 및 과수농지 | 영업장 회복 | 농기계 | 농지 | 영농도구 | 주택, 가재도구, 살림물품 |
|----|-----|-----|------------|-----------|--------|-----|----|------|----------------|
| 안동 | 가중치 | 169 | 75 | 71 | 85 | 93 | 39 | 34 | 0 |
| | 1순위 | 50 | 1 | 12 | 20 | 6 | 8 | 2 | 0 |
| | 2순위 | 7 | 28 | 10 | 8 | 28 | 4 | 7 | 0 |
| | 3순위 | 5 | 16 | 15 | 9 | 19 | 7 | 14 | 0 |

표15. 복구지원비가 부족한 영역

**가중치는 다중순위형 응답에 대한 각 빈도값에 1순위:3점, 2순위:2점, 3순위:1점을 가중한 값.

100명 명중 92명(92%)은 복구지원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한 결과, 부족한 부분은 주택, 영업장회복, 농기계, 가재도구나 살림물품, 과수 및 과수농지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복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60명 중 55명(약 92%)이 주택복구계획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중 50명(약 91%)은 신축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비용이었으며, 주택복구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5명(8%)의 경우도 비용 때문에 계획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산불 이후 일상회복에서 주거의 회복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재난으로 생긴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휴식의 공간이 필요하다. 정부의 주거 회복 지원방식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개별적으로 신축하거나, 보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신축을 계획하기에는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안동-B: "요새 평당 700에서 800만 원 정도는 잡아야 하는데 보상금만으로는 어림도 없죠. 옛날 집 사시던 분들은 그나마 유리할지 몰라도, 새 집이나 큰 집 사시던 분들은 손해가 큼니다. 도로 같은 기반 시설은 시에서 해준다지만, 결국 집은 각자 알아서 지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어르신들 보상금이 자녀 통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부모님은 집을 다시 짓고 싶어도 자녀들이 동의 안 해주거나 돈을 가져가 버려서 못 짓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어요."

안동-E: "저는 지금 1억 4천5백만 원을 빚내서 집을 짓고 있어요. 실제로 다 지으려면 3억 정도는 들어가요. 그래서 인건비라도 좀 아껴보려고 한 달 내내 매달려서 제가 직접 미장도 하고, 돌도 쌓고, 못질까지 다 혼자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집 지으려고 새로 측량을 해보니까 옛날 눈대중으로 알던 거랑 경계가 달라서 아예 집을 못 짓거나 다 지어놓고 준공 검사를 못 받는 분들도 생겼어요. 이웃으로 잘 살던 사람들끼리 토지 경계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안동-J: "저희 집은 콘크리트로 지은 거라 겉모양은 멀쩡하게 남아서 보상은 별로 못받았는데, 내부 벽돌이나 시멘트가 다 부식이 돼서 사실상 다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해요. 산불 나고 보니까, 어르신들이 전소라고 최소 1억씩 목돈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와서 '여기다 집 다시 짓지 말고 그 돈으로 시내에 아파트 사서 나가자'고 권유를 해요. 실제로 그렇게 집을 안 짓고 동네를 떠나버린 가구가 여럿이에요. 그러다 보니 마을에 빈집만 늘어나고, 농촌 소멸이 확 빨라질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소득의 회복]

조사 시점에서 소득이 이전에 비해 얼마나 회복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50% 미만이라는 응답이 64명(약 69%)으로 전체의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소득 회복 수준이 점차 높아질것인지 묻는 질문에도 93명 중 부정적인 답변은 37명(40%), 긍정적 답변은 29명(31%)으로 부정적인 전망이 더 높았다.

경제활동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복구지원비의 확대63명(약 68%), 회복이 될 때까지의 소득 지원 17명(18%), 무이자나 저이자 같은 금융지원 6명(약 7%), 지역경제활성화정책 5명(5%) 순으로 나타났다.

안동-A: "저희 같은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은 농가나 주택에 비해 지원이 너무 적고, 피해액 산정 기준도 모호해서 재고나 원자재 같은 필수 자산은 아예 보상받지 못했어요. 피해 규모에 비례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소액만 주어지는 데다가, 임차인 등은 기준이 불명확해서 지원에서 빠지는 등 실질적인 현금성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안동-C: "다들 농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산이 탄 재가 냇가로 흩으로 들어왔는데, 곡식이고 뭐고 자라지를 앓는다고 하는데, 올해 농사는 다 망쳤다고 그러합니다. 농사 짓던 사람은 거의 당장 올해 작물 팔아서 소득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안동-E: "가게를 다시 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1억 4천만 원이라는 대출금이란 매달 50만 원이 넘는 이자를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워요. 장사도 못 하고 있는데 54만 원씩 꼬박꼬박 빚을 갚아나가야 하거든요. 거기다 올해 3월부터 애지중지 키우던 닭 100마리랑 칠면조 같은 동물들이 싹 다

죽었는데 한 톨도 보상을 못 받아서 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안동-I: "수박 하우스에 철주랑 비닐, 안에 있던 작물까지 몽땅 망가졌어요, 3년, 5년, 10년을 내다보고 투자한 포도 과수원도 싹 타버려서 수익 구조가 한 번에 다 무너졌어요. 한 해 예상 소득이 완전히 '0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수는 나무를 새로 심는다 해도 수확까지 4~5년은 걸리니까 당장 앞으로 최소 3년에서 5년 동안은 꿈쩍없이 소득이 없는겁니다."

[마을 공간의 회복]

마을공간의 피해 복구에 대해서는 복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3명(73%)으로 다수를 이뤘다.

| 지역 | 구분 | 폭우, 산불 등으로부터 안전한 마을 | 도로, 상수도 등 폐기물처리장 등 부족한 인프라 보완 | 공동편의시설 (운동기구, 정자, 마을회관 등) | 아름다운 경관 회복 | 대중교통 연결 |
|----|-----|---------------------|-------------------------------|---------------------------|------------|---------|
| 안동 | 가중치 | 195 | 125 | 58 | 86 | 15 |
| | 1순위 | 52 | 13 | 7 | 8 | 1 |
| | 2순위 | 14 | 35 | 10 | 16 | 4 |
| | 3순위 | 11 | 16 | 17 | 30 | 4 |

표16. 마을 재건시 보완사항

**가중치는 다중순위형 응답에 대한 각 빈도값에 1순위: 3점, 2순위:2점, 3순위:1점을 가중한 값.

마을의 회복에 있어서 ‘폭우, 산불 등으로부터 안전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산불로 인해 마을의 산과 숲이 파괴된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를 읽을 수 있다. 실제로 산불의 피해가 집중된 마을은 대부분 산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폭우 시 산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관심은 폐기물 처리, 안길 조성 등에 집중될 뿐, 재난에 강한 마을을 조성하는 데는 저조하다.

안동-C: “집을 서둘러 지었어요. 그 전에 산림과에 산사태 방지 대책을 해달라고 했는데, 조치는 없었어요. 작년에는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우리 마을은 산사태 위험 때문에 여러 번 대피했었는데 올해는 큰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다행이긴 했지만 앞으로 큰 비가 오면 어찌 되는건지 많이 불안하긴 합니다”

안동-E: "산불 후에 여름에 물난리가 났다. 산에 나무가 없어 물이며 흙이며 모두 마을로 흘러 들어왔다”

향후 마을이 조성될 경우 바라는 마을의 모습으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전기세, 난방비 걱정없는 에너지자립마을’, ‘소득이 높은 마을’, ‘난방수도 등 마을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마을’ 순으로 많은 응답이 나타났다.

| 지역 | 구분 |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 전기료, 난방비 걱정없는 에너지자립 마을 | 소득이 높은 마을 | 마을체가 활발한 마을 | 난방, 수도 등 마을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마을 |
|----|-----|--------------|------------------------|-----------|-------------|---------------------------|
| 안동 | 가중치 | 133 | 108 | 95 | 67 | 76 |
| | 1순위 | 30 | 16 | 18 | 5 | 12 |
| | 2순위 | 15 | 21 | 12 | 20 | 11 |
| | 3순위 | 13 | 18 | 17 | 12 | 18 |

표17. 마을의 재건방향에 대한 기대

**가중치는 다중순위형 응답에 대한 각 빈도값에 1순위:3점, 2순위:2점, 3순위:1점을 가중한 값.

마을은 주민들의 삶에서 중요한 공간으로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마을이 편리하고 아름답다는 인식은 거주에 대한 만족도와 정주의식을 높인다. 이는 외부인구 유입에 있어서도 유리하기에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과정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81명 중 52명(64%)이 ‘마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들었다. 주민들이 마을의 재건 과정에 상당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상을 살아온 농촌사회에서 재난 이후 회복에 있어 마을이 갖는 의미 또한 크다. 좋은 마을로 재건하고 싶다는 주민들의 기대와 참여 의지가 회복과정에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안부는 안동·의성·청송 등 5개 지구에 ‘마을 단위 복구재생사업’을 추진하며 4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구체적으로 도로확장, 방재시설 등 안전인프라 정비, 주민 커뮤니티공간 마련, 소득창출 기반 마련 등으로, 2026년 상반기까지 모두 착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⁶⁰ 이와 같은 사업의 추진에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재생과정이 물리적 공간의 복구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서로 돌보면서 함께 일상을 영위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가 강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안동-B: “안그래도 마을을 새롭게 아름답게 꾸미자는 의견이 모였다. 마을에 교수님도 있고 해서 같이 설계를 해보고 있다. 마을 길도 넓히는 김에 아름답고 환경도 좋은 마을로 재건하고 싶다”

안동-C: “마을에 생겼으면 하는 것은...어르신들이 식사를 챙기는거를 이제 어려워한다. 공동식당이 생기면 좋겠다.”

안동-J: 어르신들이 마을을 안 떠나고 계속 살 수 있으려면 마을 단위로 소규모 공동주택 공간을 짓고, 공용 식당 공용 공간이 있어서 복지사가 한 집 한 집 방문하는 대신, 여러 노인을 함께 돌볼 수 있는 방식이 되면 좋겠고(...) 불이 났을때 마을에 상수도가 끊겼었다. 마을마다 지하수 관정이나 소형 물탱크, 펌프 같은 것을 비상시에 쓸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한다. 이번에 마을에 지형 문제로 마을 방송이 전달이 안 됐다. 비상시 주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수신 여부까지 확인하는 '스마트 방송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마을 공동체의 변화]

재해발생 후 마을공동체의 관계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 답변보다 우세했다.

표18. 산불 이후 이웃과의 관계와 마을공동체의 결속에 변화

| 구분 | (사례수) | 전혀 아니다 | 대체로 아니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재해 이후 물품 배분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 상호간에 배려하였다. | 100 (100.0%) | 11 (11.0%) | 8 (8.0%) | 34 (34.0%) | 35 (35.0%) | 12 (12.0%) |
| 재해 이후 재난 회복 과정에 있어서 서로를 도왔다. | 100 (100.0%) | 3 (3.0%) | 7 (7.0%) | 27 (27.0%) | 46 (46.0%) | 17 (17.0%) |
| 재해 이후 이웃 간 관계가 더 좋아졌다. | 100 (100.0%) | 10 (10.0%) | 18 (18.0%) | 37 (37.0%) | 25 (25.0%) | 10 (10.0%) |
| 재해 이후 우리 마을(공동체)는 재난 이전보다 더 돈독해졌다. | 100 (100.0%) | 9 (9.0%) | 21 (21.0%) | 38 (38.0%) | 23 (23.0%) | 9 (9.0%) |

⁶⁰ 경상북도보도자료(2025-12-21), 초대형 산불피해 극복과 혁신적 재창조 총력.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웃은 함께 대피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돌보는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었다. 무너진 일상을 지탱하는 것도 함께 재난을 당한 이웃의 피해자들이었다.

재난으로 인해 돈독해진 공동체적 관계는 재난 회복의 중요한 자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재난은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응답자의 64%가 이웃간 갈등을 경험했으며, 이중 31명(48%)은 주된 이유로 '지원금 배분에서 불합리한(불공정한) 기준으로 불편한 감정'을 꼽았다.

안동-B: “임시주택 단지에 모여 사니까 예전에는 마을회관에 잘 안 모이던 분들도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는 점은 좋습니다. 주민들 간의 결속력이 훨씬 강해지는 것 같고요 사생활이 부족할까 봐 걱정도 했지만 다행히 큰 갈등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동-E: “원래 우리 동네는 남자들은 같이 밭 일구고 여자들은 음식도 같이 해 먹으면서 단합이 엄청 잘 되고 참 화목했거든요. 그런데 산불 이후에 보상 문제나 토지 경계 문제로 집 지으려고 새로 측량을 해보니 옛날 눈대중으로 알던 경계랑 달라서, 집을 못 짓거나 다 지어놓고 준공 검사를 못 받는 분들이 생기면서 오래된 이웃들끼리 갈등이 엄청 심해진 거죠.”

안동-G: “보상금이 원래 집 가치랑 안 맞게 지급되다 보니까 이웃들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속으로는 '저 집은 불타서 돈 잘 받았다'며 수군대는 일도 있어요. 부모님 집이 타서 보상금이 목돈으로 나오면 형제들이 와서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가족이 아예 파탄 나는 경우까지 있다는 거예요. 또, 임시주택에 강제로 모여 살게 되니까 고기 한 번 구워 먹어도 사생활 침해나 옆집 눈치가 보이고 뒷말이 나와서 주민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되게 깊어졌습니다.”

산불 이후 '주거피해'는 보상금 지급의 최우선 영역이었다. 정부는 높은 보상금과 빠른 집행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피해당사자들 사이에는 보상의 경중을 비교하는 불편한 상황이 이어졌다. 획일화된 빠른 보상만이 능사는 아니다. 보상 기준을 점검하고 동시에 피해자들의 상황을 반영하여 보상과 회복 방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재난 이후 회복에 있어서 마을공동체는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을 재건의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이웃 간 결속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8. 산불특별법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이 2025년 9월 제정되고 10월 28일 공포되었다. 피해자들은 피해규모가 큰 만큼 국가적인 수준의 보상과 복구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기대해 왔다. 안동시나 경북도의 경우도 특별법을 통한 피해 복구를 해결책으로 제시해왔다. 그럼에도 실제로 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현황조사 의견수렴 같은 과정은 부실했다.

표19. 2025년 9월 제정된 산불특별법에 대한 인지

| 구분 | (사례수) | 전혀 없다 | 들어본 적이 없다 | 들어봤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다 | 매우 잘 알고 있다 |
|----|-----------------|---------------|---------------|--------------------------|-----------------------|------------|
| 안동 | 100 (100.0%) | 14 (14.0%) | 63 (63.0%) | 21 (21.0%) | 2 (2.0%) | |

조사 시점에서는 법의 제정이 완료되었음에도 산불특별법의 내용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지 수준은 매우 낮았다. 100명 중 77명(77%)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산불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기간(2025.12.12 ~2026.01.05) 전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공유되기 어려웠을 수 있다. 하지만 특별법의 초안을 작성하고 수정해나가는 과정에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확인하며 조율하는 과정은 미진했다. 법률 제정 과정에 당사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못하면 재난 거버넌스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안동-C: "특별법이 통과되었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체감이 잘 안 되네요."

안동-I: "농지 피해는 항상 뒷전인 데다가, 정부 뉴스 같은 걸 봐도 늘 특별법은 우선 집부터 챙긴다는 식의 메시지만 계속 나와서 서운합니다."

안동-A: "위원회 중심의 집행 구조로 책임 소재가 어딘지 불분명하고, 지원 규모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특별법에 기대가 컸는데 피해자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감이 크다. 특별법 시행령 초안이 이미 배포되었다고 들었는데 피해자들한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피해 규모에 비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지 모르겠다."

안동-H: "특별법이 제정됐어도 세부 지원은 내년 1월 시행령 제정 때까지 몽땅 보류되어 있고, 경북도에서 특별법에 반영해 달라고 낸 건의사항이 600건이나 되는데, 기본 원칙이나 우선순위 정리가 하나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다. 경북도가 제대로 역할을 안하고 있다는 거고요"

안동-J: "특별법이나 시행령이 딱 적힌 것만 보상해 주는 식인데 구체적으로 사각지대 사례를 법에 명시해 주지 않으면 아예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특별법은 다른 혜택을 이미 조금이라도 받은 분들보다 아예 0원을 받은 완전한 무보상 피해자들을 우선적으로 구제하는 방향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들 특별법만 얘기하고 있고, 산불 피해 관련 민간협의체 회의도 특별법 통과 이후로는 중단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안동-F: "모금된 성금이나 정부 지원금이 있어도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안동시장이 그걸 어떻게 쓸지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특별법 제정 관련 설명회가 열린다고 해서 저도 한번 참석해 보려고 합니다."

산불특별법은 산불 이후의 회복과 재건에 있어 가장 강조된 키워드였다. 특별법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우며 지자체는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를 확인하거나 재건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미뤘다. 그러나 정작 법 제정 과정에 피해자들과 정부를 매개하는 지자체의 역할은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 제정의 책임을 맡은 국회 산불특별위원회와 피해자들과의 소통 역시 충분치 못했다. 특별법은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실질적인 회복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기에 피해자들 관점이 반영되어야 하며 제정과 개정 등에 있어 피해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9. 회복 주체로서의 피해자

피해자 10인을 인터뷰하며 재난 속에서 서로를 지켜내고 돌보는 주체로서의 피해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대면적인 관계 속에서 일상을 구성해온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갑작스럽게 닥친 재난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찾아오는 안전망이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대가를 받는 일이 아니지만 서로에게 손을 내밀면서 어느 새 재난의 공동체는 회복과 연대의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었다. 물품이나 구호금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허물어진 것들을 함께 치우고 끼니걱정을 덜어주고, 답답한 속사정에 귀기울여주는 이웃의 소중함을 새롭게 발견하는 경험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웃되기'의 실천은 비단 안동에만 머물지 않고 재난을 당한 다른 지역의 피해자들과의 연대로 확장되고 있었다.

안동-B: "또 전국 각지의 자치단체나 봉사단체, 일반 주민분들이 양말을 비롯해 다양한 구호품을 보내주셔서 정말 큰 위로와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보내주신 구호물품과 따뜻한

봉사활동을 겪다 보니 '아, 우리나라가 참 살만하구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안동-C: “가장 많이 도움된 분이 있어요. OO씨라고. 이장이고 하니까, 나한테 다 얘기하잖아요. 정작 나는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을회관에서 임시대피소 생활할 때는 하루하루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임시주택 들어오고 나서부터 딱 우울해지고 잠도 못자고. OO씨가 찾아와서 편안하게 무슨 얘기든지 들어주고 그게 정말 고맙고 제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동-E: “산불 이후에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시기 답답하실까 봐, 비닐하우스 안에 모기장도 치고 TV도 가져다 놔서 다 같이 모여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직접 마련해 드렸어요. '우리 이렇게 재미있게 살고 맛있는 것도 해 먹자' 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해 소불고기도 해 드리고요”

안동-F: “저는 25년 동안 이 동네에 살면서 평소에도 할머니들이 제 작업실에 놀러 와서 고스톱도 치실 만큼 문지기처럼 이웃들과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도 지체 없이 동네 할머니들을 제 차에 모시고 남성초등학교로 무사히 대피시켜 드렸습니다.”

안동-G: “제가 피해대책위 대표를 맡아 이웃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같이 싸워보려고 했어요. 우리 대책위 분들이 뜻을 모아서 산청에 물난리가 났을 때 포크레인이라 인력을 직접 끌고 가서 복구 봉사도 했고요, '물불 가리지 말고 열심히 살아보자'는 슬로건을 걸고 산청 피해 마을에 김장 봉사까지 갔습니다. 이게 다 다같이 연대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세상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켜 보려는 우리만의 생존 전략이었죠”

안동-J: “저는 동네에서 보안관이나 어시스트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동네 분들에게 억울한 일이 있으면 다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해서 피해 내용과 요구사항을 수십 장의 서류로 정리해 민간협의회에 내고 대변인 역할을 했어요. 남은 성금도 보상을 아예 못 받은 사각지대 분들부터 먼저 챙겨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걱정은 어르신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서 마을이 텅 빈 유령 마을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우리 집 짓고 여기서 계속 같이 살자고 설득하면서 민원이나 서류 작성을 다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고령화와 소멸위기 속에서도 마을을 지탱해온 주민들 사이의 공동체적 관계는 재난 후에 가장 중요한 회복의 자원이었다. 재난의 고통에서 서로를 구해온 주민들이, 회복과 재건의 주체로서 재난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주민들은 재난에 강하고 지속가능한 마을이라는 비전을 함께 세우고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III. 요약과 제언

1. 실태조사 결과의 요약

[행정 일방적 거버넌스에 대한 불만]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안동의 응답자들은 필요한 지원사항에 있어서 "복귀과정에 의견 제시 및 참여 지원"를 들었다. 산불 이후 재난 대응 및 복구 과정은 행정 중심의 일방향적 거버넌스로 특징지워진다. 재난 이후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할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피해자들의 관점과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단순히 더 많은 지원금만이 아니라 피해 입증을 위한 도움, 회복 과정에 대한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 일방의 대응은 피해자들을 수동적인 지원의 대상으로만 위치짓는 것으로,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 심리적 충격과 더불어 무기력한 상황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의 회복 의지를 북돋우기는커녕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놓고 있다.

[주거불안정의 지속]

안동시 내 주택 피해는 총 1,637채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경북 전체 피해 주택의 약 43%에 이르는 높은 비중이다. 산불 발생 이후 2,5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나, 이들을 위한 주거 대책은 여전히 임시방편에 머물러 있어 장기적인 주거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1억 원을 넘는 높은 보상 수준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주택의 신축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임시주택에 대해 주민들은 공간이 좁다는 문제와 더불어 환기와 단열이 안 되는 기능적인 문제점을 겪고 있었다. 안동시가 임시주택단지의 토지 임대를 1년 단위로 제한함에 따라, 1년 내에 집을 다시 지을 여력이 없는 고령의 주민들은 임시주택단지에서도 지속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처해왔다.

[보상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인식]

설문조사 결과, 피해 조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답변이 77%에 달했으며, 대다수 항목에서 행정기관이 피해를 '과소평가했다'는 응답이 70%를 상회하였다. 특히 주택 보상에 있어서 세입자들은 피해 주택에 실거주하여도 보상금이 소유주(집주인)에게만 지급되는 등 실질적인 주거지원책에서 소외되었다. 남후농공단지의 중소기업 등 영업장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주택에 비해 피해를 인정받는 것이 어려운 데다 피해 수준을 반영하는 복구비 산정 제도까지 미비하여 향후 경제기반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을 갖기 어려웠다. 이러한 보상 과정에 대한 불만은 행정기관을 통해 해소되지 못했고, 이웃과 피해와 보상의 경중을 비교하는 불편한 감정들이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경제적 회복에 대한 낮은 전망]

응답 주민의 약 69%가 현재 소득이 재해 이전에 비해 50%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향후 소득이 회복될 전망에 대해서도 약 40%가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고령의 농민들은 다시 밭을 내어 영농을 재개할 기력이 없으며, 이는 지역 공동체의 인구 유출과 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재난 반복에 대한 우려]

안동의 지형적 특성과 기후 변화로 인해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며, 산불 이후의 2차 피해 우려도 있으나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 산불로 산림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산사태나 홍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서둘러 새 집을 지은 주민들도 큰 비가 올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산사태 위험에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의 재건 과정에서 시설 건설이나 도로 확장에 비해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는 구조적 조치가 미흡하고, 마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다.

2. 재난 이후의 안동을 위한 제언

[참여적 재난대응 거버넌스의 구축]

현재의 행정 중심적 의사결정 구조를 탈피하여, 피해 당사자가 복구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신속한 재건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한지 등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난회복을 위한 민간협력체의 역할을 제도화하여 주민대표, 피해자대표 등이 마을의 상황을 전달하는 등 참여적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참여적 재난거버넌스를 통해 피해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장기적 전망을 예측할 수 있을 때 실질적 회복과정이 촉진 될 것이다.

[주민 친화적인 정보 체계의 구축]

고령화된 안동의 인구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문맹이거나 신체적 제약이 있는 주민들도 소외되지 않는 다층적인 정보 전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주민들이 수동적인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주체라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피해와 보상금 산정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가독성 있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복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마을별 '재난 복구 코디네이터' 등을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서류 구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행정 절차를 돕는 주민 밀착형 서비스가 될 것이다.

[재난에 강한 마을, 주민주도의 마을 재건]

마을을 재건할 때 단순히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산불과 폭염, 폭우, 산사태 등 기후재난에 강한 '회복력(Resilience)'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산사태였다. 지자체는 주택 신축 전에 마을의 산사태 위험을 점검하고 예방조치들을 시행해야 한다. 산불, 산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화된 주거지와 건축물 규정이 필요하고 이를 주택 신축과 마을 재건 과정에 적용해야 한다. 물론 이는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마을재건계획 과정에 주민들이 그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토론, 협의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행정기관의 적극적 개입도 필요하다.

[주택 회복 모델의 다양화]

현재의 개별적 신축 지원 방식은 공사비 상승과 자금 부족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해 있다. 피해자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적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거 회복 모델을 제공해야 한다. '마을형 소규모 공동주택' 모델은 고령의 1인 가구가 많은 안동에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을 단위로 공용 식당과 돌봄 공간을 갖춘 공동 주택을 건설하여, 개인의 주택 복구 부담을 줄이고 공동체적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발생하는 과도한 에너지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재난 에너지 바우처'를 신설하고, 주택 재건이 완료될 때까지 임대 기간을 유연하게 연장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주민 친화적 심리지원서비스 확대]

산불 피해자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지수가 평균 약 47점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직시하고, 단기적인 상담을 넘어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심리 치유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현재의 심리지원은 부족하고 효과적이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동수단 제공 등을 통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정보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심리지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56%)를 반영하여, 재난 이후 최소 3년까지 추적 관찰과 지원이 가능한 전담 시스템을 안동시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영덕 지역 보고서: 2025년 영남 초대형산불 피해 실태조사로 본 기후재난 대응 거버넌스의 과제]

I. 산불피해 현황

1. 경상북도 영덕군의 일반 현황 및 지역적 특성 분석

영덕군은 경상북도 동해안 중북부에 위치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로, 1읍(영덕읍) 8면(강구·남정·달산·지품·축산·영해·병곡·창수면)의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다. 2023년 통계연보와 2024년 12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전체 면적은 약 741km², 인구는 33,210명, 19,486가구로 집계된다.

군 전체 경지 면적은 54.34km²로 전체의 약 7.3%에 불과한 반면, 임야는 599.32km²로 전체 면적의 약 80.9%를 차지해 산림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임을 보여준다.

영덕군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2023년 34,617명(남성 16,470명, 여성 18,147명)에서 2025년 33,123명(남성 15,853명, 여성 17,270명)으로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어 왔다. 주민 연령 구조는 65세 이상인구가 2023년 14,023명에서 2025년에는 445명이 늘은 14,468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4%를 차지하여, 고령화가 심화된 전형적인 농어촌·산촌형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다.

주요 산업은 농업(사과, 복숭아, 포도 등 과수와 시설원예), 임업(송이 등 산림자원), 어업 및 수산물 가공업, 관광(해안 관광자원 및 축제) 등 1차 산업과 관광 서비스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2. 2025년 3월 영덕군 초대형 산불 발생 경위 및 공식 피해 현황 분석

[산불 발생 경위 및 확산 경로]

2025년 3월 '의성-안동 산불'로 명명된 초대형 산불은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실화가 강풍을 타고 안동, 영양, 청송, 영덕 등 경북 북부 일대로 확산된 사건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기록한 산불로 평가된다. 영덕군의 공식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25년 3월 25일 17시 54분경 인근 청송군에서 발생한 불이 지품면 황장리로 확산되었고, 초속 25m 이상 강풍으로 인해 3~4시간 만에 영덕읍 노물리 해안까지 번졌다. 산림청 발표 기준 주불 진화 완료 시점은 3월 28일 14시 30분이다.

[인명 피해 및 이재민 발생 현황]

영덕군 인명 피해는 총 66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사망자는 10명이며, 평균 연령 84세, 최고령 101세로 고령층 피해가 두드러진다. 부상자는 56명으로 평균 연령은 64세였으며, 화상 11명, 연기흡입 20명, 기타 25명으로 분류된다.⁶¹

⁶¹ 영덕군 홈페이지, 영덕 초대형산불 피해 및 대처사항 : 2025. 4. 29.(화)
<https://www.yd.go.kr/?pageid=4&p=146709&uid=345711&mod=document&tab=>

이재민은 2025년 4월 25일 기준으로 1,421세대 2,491명으로 집계되며, 영덕읍 1,203명, 지품면 533명, 축산면 552명, 기타 지역 203명이 포함된다. 영덕군 전체 인구 3만 3천여명 중 상당 비율이 직접적 피난·주거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심각한 생활기반 붕괴를 가져왔다.⁶²

[재산 및 시설 피해 규모 분석]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한 영덕군 자료에 따르면, 영덕군 산불 피해면적은 16,207ha이며, 이 중 송이산 소실(송이산림 및 산림작물 포함) 면적은 4,137ha로 파악된다. 연합뉴스 보도는 영덕군이 집계한 잠정 피해액이 총 3,170억 원(공공시설 1,265억 원, 사유시설 1,905억 원)이라고 전하며, 이는 영덕군 2025년 본예산 6,171억 원의 절반을 상회하는 규모라고 분석한다.⁶³

산불 피해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2. 산불 피해 현황⁶⁴

| 피해항목 | 영덕군 피해 현황 | 영남 전역 피해 현황 |
|------|---------------------------|---|
| 주택 | 1,421세대 | 주택 3,848동 |
| 이재민 | 2,491명 (사망 10명 부상 56명) | 4,458가구/ 약 92,200명 (사망 27명, 부상 156명) |
| 농작물 | 121ha | 농·산림작물 3,419ha |
| 농기계 | 2,397대 | 농기계 17,158대 |
| 농축산 | 1,136동 / 89동 | 농어업시설 6,106건 |
| 수산업 | 어선 29척 | |
| 산림 | 4,137ha(송이산) | 104,000ha 산림소실 |
| 기타 | 태양광 시설 및 매립장 증설 공사구간 |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을 비롯해 총 769건의 피해 |

3. 영덕군의 복구 지원 예산 내용 및 자체 대응 규모

영덕군은 산불 피해 직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8,750억 원 규모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당초 본예산보다 41.8% 증가한 수준으로, 일반회계는 2,547억 원(43.21%) 증액된 8,442억 원, 특별회계는 32억 원(11.4%) 증액된 308억 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1회 추경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긴급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한 신속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산불 피해 복구 관련 예산으로 총 1,956억 원이 편성되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⁶⁵

- 주택 피해 주민 주거비 지원: 883억 원

⁶² 영덕군청 산림과, 산불피해현황, <https://www.yd.go.kr/?p=146762>

⁶³ 손대성, 영덕 산불피해 3천170억 집계...선박 29척·주택 1천624채 타, 연합뉴스, 2025-04-17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7072900053>

⁶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산불 피해 복구계획 확정 보도자료 (2025.05) https://mois.go.kr/fir/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Id=117540
영덕군청 산림과, 산불피해현황, <https://www.yd.go.kr/?p=146762>

⁶⁵ 양승미, 영덕군, 제1회 추경예산 8,750억 원 규모 편성, 데일리대구경북뉴스, 2025-06-09 <https://www.dailydgnews.com/mobile/article.html?no=219034>

- 임시 조립주택 설치비: 289억 원
- 건축 및 폐기물 처리비: 415억 원
- 산불 피해 주민 긴급생활지원금: 100억 원(추경 성립 전 집행 후 재반영)
- 임시 조립주택 기반시설 설치비: 109억 원
- 이재민 식비 및 주거비 지원: 76억 원
- 산불 피해 농가 농기계 지원: 39억 원

이러한 군 자체 예산 편성과 집행은 중앙·도 지원과 결합하여 이재민 임시주거 마련, 주택·시설 복구, 생계·생활비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재정적 기반이 되고 있다. 영덕군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에서 총 9,897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하였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보면 산림재해대책비(위험목 제거) 232억 3000만 원, 송이 대체작물 조성 109억4000만원, 도시재생사업(특별재생) 50억 원,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사업 45억 원 등을 편성해 산불 피해 극복과 재해·안전 인프라를 강화했다.⁶⁶ 이는 초기 응급복구와 생활안정 단계에서 중장기적인 지역 재건과 재난 예방 단계로 정책 초점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영덕군 민간의 구호금(성금) 내용 및 모금 규모 분석

영덕군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모금에서 전국적 관심과 연대를 이끌어냈다. 2025년 4월 16일 기준 영덕군 산불 피해 복구 성금은 50억 원을 넘었으며, 영덕복지재단을 통한 일반 기부만 1,257건에 35억 6천만 원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되었다.⁶⁷

영덕군이 밝힌 산불 피해 복구 성금은 2,783건, 총 72억 8498만 원에 달했다. 이 성금은 영덕복지재단을 통한 일반 기부와 함께, '고향사랑e음'과 위기브 등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정 기부 방식으로 접수되고 있다.⁶⁸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이 주로 시설 복구나 재해 예방 인프라 집중되는 구조 속에서, 민간 성금은 이재민 개개인의 생활 회복, 취약계층 긴급 지원, 비공식 피해 대응(정서적 피해 대응, 지역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등) 같은 곳에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5. 영덕군 피해 복구를 위한 다양한 특별 조치 및 제도적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범정부 대응]

행정안전부는 2025년 3월 27일 안동·청송·영양·영덕을 포함한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범부처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를 가동하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해당 지역에 폭넓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정부합동 피해조사단 파견, 국비 지원비율 상향, 세제감면, 공공요금 감면, 금융지원, 공공요금 유예 및 감면 등 그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특교세 긴급 교부와 재난대책비 추경편성을 통해 산불 진화, 응급복구, 이재민 지원, 재해 예방 사업을 종합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⁶⁹

⁶⁶ 김영호, 영덕군,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9897억 편성, 경북도민일보, 2025-12-15, <https://v.daum.net/v/20251215182033431>

⁶⁷ 손대성, 영덕 산불 성금 50억원 넘어...각계서 기부금품 1만6천 건 답지, 연합뉴스, 2025-04-16,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6062000053>

⁶⁸ 박윤식, 영덕 산불 피해 복구에 72억 성금... 전국서 온정 이어져, 경북매일, 2025-06-09, https://www.kbmaeil.com/article/20250608500199?utm_source=chatgpt.com

⁶⁹ 정채브리핑, 안동·청송·영양·영덕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속한 피해수습", 2025-03-28,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news/1307988_1114.html

[도·군 차원의 특별 조치]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가 발생한 5개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사업 예산 306억 원을 추가 배정하고, 이재민 주거지 확충 사업, 산불 복구 및 예방과 관련한 9개 사업(5,189억 원)의 국가재정 반영을 건의하는 등 도 차원의 특별 조치를 추진했다. 또한 1차 추경을 통해 긴급생활안정지원금과 긴급 복구비를 편성, 집행해 초기 생활안정과 인프라 복구를 지원했다.⁷⁰

영덕군은 대규모 추경을 통해 임시 조립주택 설치, 기반시설 조성, 이재민 식비와 주거비 지원, 농기계 지원, 건축·폐기물 처리비 등을 집중 편성함으로써, 주거·생계·농어업 기반 복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연말 제2회 추경에서는 송이 대체작물 조성, 산림재해대책(위험목 제거),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사업, 도시재생 특별재생사업 등 중장기 재건과 산불 예방을 결합한 사업을 확대하였다.⁷¹

II. 설문조사 및 인터뷰 연구의 결과

1. 설문조사 응답자 및 심층인터뷰 대상자 분포

이 보고서는 경북 산불 발생 약 7개월이 경과한 2025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영덕군 피해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데이터와 그 중 1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작성되었다. 이번 조사는 물리적 피해 규모를 산술적으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재난 이후 복구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과 이로 인한 주민들의 2차 피해, 그리고 공동체 내부의 갈등 양상을 설문결과와 더불어 이재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설문 응답자의 지역 분포]

표 1. 설문 응답자의 지역 분포.

| 지역(면) | 응답자 수 (명) | 비율 (%) | 주요 피해 특성 |
|-------|-----------|--------|--------------------------|
| 영덕읍 | 51 | 52% | 도심지역으로 주거지 및 생계 수단 복합 피해 |
| 지품면 | 47 | 47% | 주택 전소, 과수 농가 및 임업 피해 집중 |
| 축산면 | 1 | 1% | 주택, 과수 농가 피해 |
| 계 | 99 | 100% | |

설문응답자의 지역 분포를 보면 영덕읍(52%)과 지품면(47%)의 비중이 전체의 99%를 차지한다. 이는 인구 밀집 지역인 영덕읍(군소재지)과 지품면 전체(24개 마을) 지역이 산불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인구밀집지역과 주거지와 영농 현장이 혼재된 전형적인 농촌 공간으로 산불이 나면 대피와 자산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

⁷⁰ 박정노, 경북도, 7천802억 증액 추경 편성... '산불 피해 극복', 노컷뉴스, 2025-04-08, <https://news.nate.com/view/20250408n09751>

⁷¹ 천희정, 영덕군, 역대 최대 9897억 추경 편성... 산불 극복·경제 회복 총력, 더경북, 2025-12-15, http://m.thegb.kr/news_gisa/gisa_view.htm?gisa_category=04070000&gisa_idx=51403&date_y=2024&date_m=09

[심층인터뷰 대상자 분포]

심층인터뷰는 10명의 인터뷰 참여자로 구성하여 진행했다. 참여자는 주로 산불 피해가 집중된 영덕읍과 지품면에서 선정했고 주요 피해 분류(주택, 생계수단, 영업장 등)를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심층인터뷰는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후, 그린피스 캠페이너로 구성된 인터뷰어와 피해주민 간의 1대 1 면담 방식으로 수행했다. 조사는 자택이나 사무실 등에서 1~2시간 내외로 심도 있게 이루어졌으며, 모든 인터뷰 내용은 녹음 후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했다.

표 2. 심층인터뷰 대상자 개요

| No | 대상자 | 특징 | 지역 |
|----|------|--|-----|
| 1 | 영덕-A | 펜션 전소 피해자 | 영덕읍 |
| 2 | 영덕-B | 마을 총무(주택반파 및 농지 피해) 임업(송이)분야에 많은 피해를 입음 | 지품면 |
| 3 | 영덕-C | 이장(주택전소 및 농지 피해) | 지품면 |
| 4 | 영덕-D | 이장(주택전소 및 농지 피해) | 지품면 |
| 5 | 영덕-E | 마을 대책위원(주택전소 및 농지 피해) | 축산면 |
| 6 | 영덕-F | 주민(주택전소 및 농지 피해) | 지품면 |
| 7 | 영덕-G | 주민(주택전소 및 농지 피해) | 지품면 |
| 8 | 영덕-H | 주민(주택전소 및 농지 피해) | 지품면 |
| 9 | 영덕-I | 주민(주택전소 및 농지 피해) | 지품면 |
| 10 | 영덕-J | 이장(주택전소 및 농지 피해) | 축산면 |

[설문 응답자의 연령 분포]

응답자의 연령 분포는 농촌 지역의 초고령화 현상을 반영하며, 이는 재난 이후 자력 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층이 대다수임을 시사한다.

- 40세 미만: 1% (1명)
- 40세 이상 ~ 60세 미만: 7% (7명)
- 60세 이상 ~ 80세 미만 : 58% (58명)
- 80세 이상 : 34%(34명)

전체 응답자의 92%가 60세 이상이고 80세 이상 초고령층도 34%에 이른다. 고령층 집중 지역 특성상 재난 이후 일상 회복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영덕, 의성, 안동 세 지역의 연령분포를 보면 80세 이상 고령층이 영덕(34%), 의성(9%), 안동(10%)으로 영덕이 높고, 실제 거주기간도 60년 이상이 영덕(37%), 의성(22%), 안동(21%)으로 영덕이 높게 나타났다. 1인가구의 경우도 영덕(36%), 의성(11%), 안동(16%)으로 영덕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같은 연령구조는 재난 때 대피와 이후 복구에도 영향을 끼쳤다.

2. 물적 피해와 권리 침해

산불은 물리적 공간을 태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침해했다.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결과는 현행 피해 산정 방식이 피해의 실체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회복이 구조적으로 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불로 인한 물적 피해의 규모와 피해판정의 불합리성]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주택 및 생계 수단의 심각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정도를 묻는 척도형 질문(0~100%)에서, 주택 피해 응답자의 85%가 피해 정도를 '80%이상'으로 응답했다. 영업장 피해의 경우 약 42% 가재도구 피해의 경우 약 89%가 '80%이상' 피해를 보았다고 응답했다. 압도적인 다수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물리적 피해 규모를 '완전 소실'로 체감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표3. 피해정도에 대한 피해자의 평가 (재해이전의 상태를 0% 피해로 간주, 10%단위로 기입)

| 구분 | (사례수) | 20% 미만 | 2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
|--------------------|-----------------|---------------|------------------|------------------|------------------|---------------|
| 주택 | 100 (100.0%) | 7 (7.0%) | 2 (2.0%) | 6 (6.0%) | 0 (0.0%) | 85 (85.0%) |
| 영업장(농장, 공장, 상점 등) | 94 (100.0%) | 44 (46.8%) | 1 (1.1%) | 10 (10.6%) | 0 (0.0%) | 39 (41.5%) |
| 가재도구 (가전제품 가구 옷 등) | 98 (100.0%) | 10 (10.2%) | 0 (0.0%) | 1 (1.0%) | 0 (0.0%) | 87 (88.8%) |
| 추억이 깃든 물건 | 98 (100.0%) | 7 (7.1%) | 0 (0.0%) | 3 (3.1%) | 1 (1.0%) | 87 (88.8%) |

영덕-C "전쟁은 이렇게 폐가 안 되잖아... 이거는 완전히 전멸입니다."

영덕-D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거의 절반이 탔거든요. 주택이 전소됐다고... 창고는 거의 다 타고 판넬 창고는 거의 다 탔다고 봐야 돼."

그러나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규모와 행정기관의 평가 사이에는 심각한 괴리가 존재했다. 응답자의 약 62%는 행정기관의 주택 피해 평가가 자신의 평가와 비교했을 때 '과소평가했다'고 응답했다. 영업장 피해의 경우 이 비율은 68%로 높아진다. 이는 영업장 피해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산불 피해보상을 위해 정부는 피해 상황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하여 복구지원비를 책정하게 되는데 등록항목 자체가 없는 경우 조차 있어서 피해보상은커녕 피해규모 자체를 파악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표4. 행정기관의 '피해 정도' 평가에 대한 의견

| 구분 | (사례수) | 행정기관이 과소평가했다 | 비슷했다 | 행정기관이 과대평가했다 |
|----|-------|-----------------|------|-----------------|
|----|-------|-----------------|------|-----------------|

| | | | | |
|------------------------|----------------|---------------|---------------|-------------|
| 주택 | 96 (100.0%) | 59 (61.5%) | 37 (38.5%) | 0 (0.0%) |
| 영업장(농지, 공장, 상점, 농기구 등) | 57 (100.0%) | 39 (68.4%) | 18 (31.6%) | 0 (0.0%) |
| 가재도구 | 90 (100.0%) | 63 (70.0%) | 27 (30.0%) | 0 (0.0%) |

영덕-J "버섯 농자재에 버섯 종균파쇄기, 열처리기, 냉난방기, 표충기 이런 것은 조사 항목에도 없는데 시방서가 NDMS에 나와있지도 않아 처음에 (조사항목이)36가지였고 100개로 늘렸다고 해도 안나와있어"

영덕-A "주택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도 있고 한옥 판넬 구조도 있는데 단가가 다 다른데 똑같이 50년 된 집이나 1년 된 주택이나 똑같이 판정 해가지고 돈을 줬으니까 불합리하지... 10억짜리 집도 8천만 원 받았고 그냥 평수 항공 사진에 나오는 평수대로 해서 그냥 줘버렸어요."

영덕-E "우리 집은 지은지가 3년 빼 안 됐는데 싹 탔는데 보상금을 뭐 1억 얼마밖에 못 받았으니까 그거는 얼토당토 안 하고 또 조립식 판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혜택을 받았어요."

영덕-C "진짜로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지은 집들은 잘 지었는데 보상을 9600만 원 받아 가지고는 택도 없지... 5억짜리 집을 지었는데 보상 받는 한도가 9600이잖아 어떻게 살라고하는지 모르겠어요"

영덕-B "손해 사정이 한 사람 와가지고 분명히 나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이 집은 한 80%는 탄 것 같으니 하면서 이려고 갔는데 군에서 와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소파(소규모 파손)가 돼 있더라고... 수리하는데 한 5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소파로 판정을 받으니 보상을 210만 원 나왔단 말이야 이 돈으로 어떻게 수리를 하겠어요."

영덕-D "저온 저장고 보상도 뭐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나왔고 그 안에 사과 담으려고 노란 플라스틱 박스가 있었는데 한 2천 개 넘게 탔거든요. 그런 거는 보상이 전혀 없지."

영덕-H "소쿠리 그것도 다 타고 그 연장 같은 거 사과 은박지 까는 거 하나도 안 풀어놓고 비료, 우리 농사 지어놓은 쌀 쌀을 짚어 냈는데 한 15포 있었거든요. 찹쌀하고 한 20포 있어서 그런 것도 혜택도 하나도 못 봤어요.."

3. 재난직후 대피

응답자 중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재난문자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48%이고 52%는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대피방법 정보의 경우(복수응답) 마을방송(62건), 마을주민(27건), 재난문자(22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재해 당시 대피 방법에 대한 정보 수집 경로.(복수응답)

| 구분 | 재난 문자 | TV,라디오 | 마을 방송 | 마을 주민 | 경찰, 소방관 등 통해 공무원 직접 | 기타 | 듣지못했다 |
|----|-------|--------|-------|-------|---------------------------|----|-------|
| 영덕 | 22 | 5 | 62 | 27 | 1 | 2 | 12 |

[재난취약자 대피]

문자가 늦게 도착했거나 고령자들의 경우 대피정보를 접한 후에도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영덕-I “의성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까지 올 줄을 몰랐어요 (방송에서) 피해라카고 원전까지 불이 왔다고 설마 여기까지 오겠나 그랬어요..... 우리 아저씨는 내가 뭐 죽을일 있나 니만 아들하고 영덕 가있으라고 했어요”

영덕-H “문자를 받아도 나는 글을 몰라서 못 읽어요 친구가 전화해줘서 알았어요”

영덕-E “재난 문자 문자를 사실 문자가 아니고 이장이 방송을 하고 방송을 할 적에는 들었는데 좀 있으니까 정전이 돼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송도 안 되고”

영덕-J “재난 문자 이거 참 골치 아프네. 이게 내가 방송하고 내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문자를 늦게 받았어. 그게 몇 시간 차이 나지... 저녁 8시에 대피하라 방송해 놓고 나께네 저녁 10시 근처 돼가지고 문자를 받았단 말이야.”

이렇듯 고령자나 문자 해독이 어려운 주민 등 재난취약계층의 경우 대피를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동시에 재난시 정전사태를 대비해 문자나 방송이 아닌 이웃이나 주변사람들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대피수단으로서 가장 많이 활용한 것은 승용차(80%)로 이 중 본인의 차가 약 45%, 마을주민차 28%, 가족이나 친척의 차가 19%였다. 영덕에서 마을 주민의 차 이용이 안동(약 10%), 의성(약 13%)보다 많았던 이유는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위 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긴급한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큰 자원이 된다. 따라서 평상시 주민들의 관계 구축과 더불어 고령자,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영덕-I “대피를 하는데 영감은 내 혼자 데리고 나올 수 없어서 아들이 오고 옆집에서 와서 동원해가지고 태워가지고 갔어요”

영덕의 경우 타지역 산불현장으로 지원나간 헬기가 야간에 돌아오지 못해 영덕 산불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영덕-B는 “안동 저 시 쪽으로는 그날 또 헬기가 뜨고 뭐 이러는데 이쪽으로는 불 나기 전날도 그렇고 불 나고 난 뒤부터 헬기 구경을 못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이틀 후에 헬기 구경을 했다”

최근 연구와 기상데이터는 앞으로 기후재난이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닥쳐올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

[임시대피소]

응답자 중 과반이 넘는 81%가 임시대피소로 대피했고 그 중 60명이 공공체육관으로 대피했다고 응답했다(복수응답). 대피소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약 47%가 만족하지 않았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 협소한공간(104점), 세면이나 샤워 등의 어려움(76점), 낯선 사람들과의 공존(56점) 순으로 꼽았다.

| 지역 | 구분 | 협소한 공간 | 소음과 불빛 | 물품의 부족 | 식사의 어려움 | 낯선 사람들과의 공존 | 세면/샤워 등의 어려움 | 화장실의 어려움 | 정보 부족 | 편의시설 부족 | 없음 | 기타 |
|----|-----|--------|--------|--------|---------|-------------|--------------|----------|-------|---------|----|----|
| 영덕 | 가중치 | 104 | 53 | 22 | 20 | 56 | 76 | 23 | 28 | 32 | 19 | 13 |
| | 1순위 | 24 | 9 | 4 | 3 | 12 | 14 | 2 | 4 | 3 | 4 | 2 |
| | 2순위 | 13 | 11 | 4 | 4 | 6 | 13 | 5 | 3 | 8 | 2 | 2 |
| | 3순위 | 6 | 4 | 2 | 3 | 8 | 8 | 7 | 10 | 7 | 3 | 3 |

표 6. 임시대피소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1~3순위에 대한 가중치 환산표. (3개까지 복수응답)

**가중치는 다중순위형 응답에 대한 각 빈도값에 1순위: 3점, 2순위:2점, 3순위:1점을 가중한 값.

영덕-C "텐트는 첫날은 안 오고 한 3일 만에 들어왔는데... 그전까지는 그냥 바닥에... 밑에 깔판 깔고 그리고 나서 이불을 줘서 이불 깔고 지냈어요 그리고 대피소 내부 공기가 엄청 안 좋았어요. ... 그날 저녁에 불이 대피소 앞산에 붙고 강에도 불이 들어가... 연기가 대피소 안으로 막 들어오니깐... 호흡 곤란이 제일 힘들어서 눈이 맵고 눈도 제대로 못 떴지."

영덕-F "처음에는 텐트가 없었어요. ... 밑에 까는 것만 있었어요. ... 밤에는 시끄러워 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고 그렇게 사람들이 텐트 없이 그냥 지냈어요."

영덕-D "그날은 뭐 완전히 막 대피소 안에도 연기가 짹 차 가지고 사람이 수백 명 모였는데 정보도 전할 길도 없었고... 정보 주는 사람이 없었지 밖을 못 나가니까 밖에 상황도 잘 모르겠고 도데체가 어떻게 해야지를 몰랐어요."

산불 직후 운영된 임시대피소(공공체육관)와 마을회관 등에서의 생활은 열악한 환경, 정보 단절, 그리고 공동생활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이재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피소 초기에는 텐트조차 지급되지 않아 이재민들이 은박지나 깔판만 깐 채 맨바닥에서 생활해야 했다. 텐트는 대피 3일 후에야 보급되었으며, 그마저도 공간이 좁아 사생활 보호가 전혀 되지 않았다.

영덕-C "텐트가 오더라도 옆에 사생활 보호가 좀 안 되고... 밤새도록 기침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주위에 사람 못 자잖아. 밤새도록 잠 못 자. 공무원들도 이렇게 큰 산불이 처음이다보니 오합지졸이고 대피소가 난리였어요"

위생 및 세면 문제도 발생했다. 수백 명이 모인 체육관에 세면 시설은 단 두 곳뿐이어서 겨우 세수 정도만 가능했다. 대피소 내부 공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대피소 인근까지 산불이 번지면서 체육관 내부로 연기가 유입되었다. 이로 인해 이재민들은 호흡 곤란을 겪고 눈이 매워 제대로 뜨지 못하는 등 건강 위협을 받았다.

대피소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차고 강풍으로 인해 출입이 통제된 상황에서, 이재민들은 산불 상황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한 채 답답해했다. 대형 산불이 처음이다 보니 행정이 "오합지졸"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공무원들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4. 임시주택

[임시주택의 협소한 공간]

전체 응답자 100명 중 81%가 현재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응답자 중 약 44%가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 원인으로는(복수응답) 공간 협소(60건), 내부시설 불편(22건) 순으로 꼽았다.

표 7. 임시주택 생활에서 불편한 점(복수응답)

| 구분 | 이웃의 소음 | 환기/통풍 | 내부시설 (냉난방, 이물질, 전기온수기 등) | 좁다 | 마당없음 | 마을회관/경로당이 멀다 | 사생활보호가 안된다 | 기타 |
|----|--------|-------|-----------------------------|----|------|--------------|------------|----|
| 영덕 | 6 | 12 | 22 | 60 | 17 | 8 | 11 | 10 |

영덕 A는 "이게 규격화된 거라지만,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가혹해요. 작업복이나 농기구 들 곳조차 마땅치 않아서 마당에 그냥 쌓아두고 있습니다."

영덕 H는 "단열이 잘 안 되는 것도 문제인데, 일단 공간이 너무 협소하니까 사람이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답답함을 느껴요. 감옥 아닌 감옥 같아요."

영덕 J "지금 여기 너무 좁고... 싱크대하고 가스레인지도 한 칸, 마음에 드는 거는 없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공간도 좁고 공기 순환이 안 돼버리니... 환풍기도 짜매한 거 하나 있는데 음식 냄새가 온 집에서 빠지지도 않아요."

영덕 I "여기는 좁아 가지고 아들이 5남매인데 오면 잘 데가 없어요. ... 김치냉장고 하나 넣으려고 해도 공간이 짜매 아쉽더라니, 공간이 좁아서 못 넣고 있어요."

영덕 G "원래 집보다 불편하지. 방 한 칸이고, 아들이 와가지고 여기 자고 저기 자고 갈 때가 없어요."

영덕 F "불편한 점 많죠. 비 오니까 신발도 못 내놓고... 신발도 밖에 신고는 집안 여기 갖다 놔야 돼."

이재민들은 협소해진 공간으로 인해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없음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했다. 또한 임시주택이 주거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기존의 생활 집기나 농사 관련 물품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좁은 공간은 농촌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촌은 임시주택이 주거용과 더불어 농사에 필요한 물품을 적재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평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좁은 공간이 심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임시주택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추위,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 소음에 취약하다는 점 그리고 사생활 보호에도 큰 불만 요인이었다.

영덕 J "오늘 아침에 딱 느꼈는데 집안에서도 완전히 코가 베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축던지...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에어컨 안 틀고는 아예 있지도 못해요."

영덕 B "저녁으로 오면 진짜 완전히 불끄덩이(불구덩이)야. ... 전기는 항상 끄고 갔는데 저녁에 들어오면 완전히 불구덩이라 한 시간 동안 에어컨 틀어놓고 식기 전에는 들어오지도 못해요."

영덕-A "조금 쿵쿵거리고... 세탁기 방에 가면 쿵쿵쿵거리린다니까. 밑에 전기 판을 깔아놨더니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다 들리고 형편없죠."

영덕-H "여기는 춥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전기 보일러 틀어 놓으면 전기세가 감당이 안 돼요. ... 한 달에 전기세가 30만 원도 더 나올 것 같아요."

영덕-C "당연히 추운 거는 춥지. 여름에도 덥고 사생활도 참... 이렇게 마주 보고 있잖아. 여자들이 낮이라도 옷을 마음대로 못 입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영덕-E "첫째는 마당이 없고...임시 공동주택 부지가 좁다 보니 옆집이랑 간격이 너무 좁아요. 한 5m씩은 떼야 되는데 너무 좁혀 놓으니까 사생활 문제도 있어요."

공간협소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덕의 임시주택 만족도(만족이상 약 30%)가 의성(약 9%), 안동(약 11%)에 비해 높은 이유는, 타 지역에 비해 실제 거주 기간이 긴 것과 관련이 있다. 즉, 60년 이상 거주자가 37%(안동 21%, 의성 22%)로 거주 기간이 길어 주택이 노후되었다. 고령인구와 1인가구가 타 지역보다 많아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영덕군에서 임시주택 평수를 기존 8평에서 10평으로 확장한 것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⁷²

[2년의 짧은 주거 기간]

이재민들이 임시주택에 지낼 수 있는 기간은 2년이다. 2년 후에는 임시주택으로 지내고 있는 콘테이너를 구입하거나 반납을 해야한다. 임시주택 제공 기간에 대한 질문에 약 67%가 2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영덕 B는 "지금 2년이라고 하는데, 사실 집 짓고 인허가 받고 하면 2년이 금방 가요. 기간을 좀 더 넉넉하게 보장해줘야 마음 놓고 집을 짓죠."

영덕 C는 "마을 사람들이 다 고령인데, 2년 안에 집 지으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돈도 없고 몸도 불편한데... 기간 연장이 절실합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고령층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임시주택 임대 기간을 안정적으로 집을 짓을 수 있는 정도로 늘릴 필요가 있다.

5. 심리피해

[심리적 피해의 규모와 양상]

한국형 사건 충격 척도(IES-R-K)결과 피해 주민들 중 산불 이후 광범위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가 우려되는 위험군이 87명(87%)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표 8. 영덕 지역 IES-R-K 척도검사 결과 점수 분포도 (N=100)

| PTSD 등급 수준 | 총점 구간 | 인원 | 비율(%) |
|------------|-------|----|-------|
|------------|-------|----|-------|

⁷² 박승혁, 영덕군, 산불피해 이재민 위해 2평 더 넓은 임시 조립주택 공급...전국 최초 시도, 2025-05-19, 매일신문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51916135468906>

| | | | |
|----------------|--------|------|------|
| 정상 | 0~17점 | 7 | 7% |
| PTSD 위험 경향성 | 18~24점 | 6 | 6% |
| 부분 PTSD 위험 | 25~39점 | 15 | 15% |
| 심각한 PTSD 위험 | 40~59점 | 30 | 30% |
| 매우 심각한 PTSD 위험 | 60점 이상 | 42 | 42% |
| 합계 | | 100 | 100% |
| 평균 PTSD 점수 | | 52.5 | |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지속되면서 많은 이재민이 안정적인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시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약물에 의존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삶의 터전을 잃은 망연자실함과 가족의 죽음 등이 겹치며 심각한 우울 증상을 보이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영덕-J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가 아직도 많단 말이야. 뭐 하겠나 우울증이지 그냥 여기 우울증 증상 정도... 저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터지고 스트레스가 그렇지."

영덕-B "내 진짜 병원에 가 입원하려고 그랬거든... 보건소에 가가 사실 내가 저녁에 잠도 못 자고 마음도 불안하고... 포항을 나가가지고 정신병원으로 가세요 이러더라고. 우리 촌 사람들이 정신병원까지 갈 그게 되는겨.", "그리고 우리 아내는 잠 못 자고요. 안정제 먹어서 먹고 자고 이럽니다. 밤에 잠 깬다 하면...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생각이 나서무서워가지고 다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영덕-F "잠을 못 자는 거지. 한숨 못 자니까. ... 자꾸 산불이 생각난다."

영덕-G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산불이 생각난다... 꿈에도 이웃집 사람이라 또 없어진 사람이 또 눈에도 띄고 그래."

영덕-H "내가 죽겠지 요새는 사람도 싫고 귀찮아요. 죽고 싶고 그래 생활도 힘들고... 우울증도 좀 약간 와서 내가요. ... 집에도 들어오기 싫고 물만 보면 내가 여기가 물해가 죽어 볼까 안 그러면 산에 가 목내가 죽고... 그 생각만 자꾸 나요."

영덕-F "평생 살던 집이 없어지니까 마음 붙일 곳이 없어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하루 종일 멍하게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산불 이후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단기적인 심리 지원을 받았지만 효과성에 대해 문제제기도 있었다. 단발적으로 몇 차례 방문해서 질의응답하는 형태가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덧나게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영덕-J "아이고 불 타다가 어이노 이 소리 자꾸 들으면 놀리는 것 같아요. ... 처음에는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생각이 들지만 자꾸 오니까... 가식적으로 느껴져. ... 이걸 아 이거는 나를 놀리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다."

영덕-E "그 당시에 대화했던 것뿐이지 지나고 나니까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

영덕-D "심리 지원은 받으면 안 받으면 똑같아."

이재민들은 공통적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들의 경우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현실이 존재했다. 재난 후 여러기관에서 심리전문가 들이 와서 심리 지원을 한다지만 단발적이고 반복되는 질문에 의한 피로감이 심리적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심리 회복 지원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

심리 회복 지원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이 있음을 조사 결과 확인했다. 설문조사에서 '심리 지원 서비스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61%가 서비스를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39%는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재민들 다수가 재난 이후 불안 증세와 수면 장애를 경험하고 있고 약 41%가 심리 지원이 1년 이상 장기간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심리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서비스 연결 문제도 있었다.

영덕-C "심리 치료를 해준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노인들은 잘 몰라요. 직접 찾아와서 꾸준히 봐주면 좋겠는데..."

영덕-B "심리 치료를 (위해) 보건소로 오라 (해서) 보건소에 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대요. 약도 못 주고 그래서 영덕 병원에 가니까 안정제 주고는 꼭 필요하면은 포항에 가서 정신병원에 가라고 하더라구요 촌사람들이 정신없는 경황에 정신병원까지 갈 거기 되는데 내 뿐만 아니라 그런사람이 있을겁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재난 초기 심리검사를 통해 직접적인 서비스 연결이 필요하고,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심리개입이 필요하다.

6. 재난지원

[비공식적 정보 제공 경로 및 소통 체계]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 복구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 공식 시스템보다 민간 조직(이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주요 정보 획득 경로에서(복수응답) '이장을 통해 들었다'가 64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공무원 직접 전달(35건), 이웃(26건) 순이다. 반면, 문자 메시지나 우편 등 공식적인 비대면 채널은 후순위였다.

표 9.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재난피해회복과 관련한 정보 제공(피해평가, 복구지원비, 보상액, 구호금, 복구계획, 지자체담당자, 연락처 등)(복수응답)

| 구분 | 이웃으로부터 들었다 | 이장을 통해 들었다 | 문자 메시지, 우편, 개인전화 등을 통해 받았다 | 공고문, 책자 등을 통해 받았다 | 공무원을 통해 직접 들었다 | 기타 |
|----|------------|------------|----------------------------|-------------------|----------------|----|
| 영덕 | 26 | 64 | 15 | 1 | 35 | 11 |

영덕-G는 "이장님이 방송으로 '나오소' 하면 나가고, '뭐 가져가소' 하면 가고... 공무원? 공무원은 여기 잘 안 와요. 이장님이 다 하지."라고 했다. 이장을 통한 정보 전달의 효율성은 높을 수 있으나, 이장과의 관계나 마을 공동체 활동 여부에 따라 정보 소외 계층이 발생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영덕-A는 "군에서 뭐 문서로 오고 이런 건 잘 없어요. 주로 이장들 모아놓고 회의하면 이장님이 와서 전달해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군청 찾아가서 물어봐야 알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도 안 가르쳐줍니다."

이장을 통한 효율적인 정보 전달뿐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불합리한 피해평가와 보상]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의 정보 제공(피해평가, 복구지원금, 구호금, 향후복구계획, 지자체담당자 연락처 등)대부분의 항목에서 불만족스럽다는 부정적 응답이 과반이 넘는 수치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불만족 항목을 살펴보면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와 관련된 정보 제공이 63%였고, 특히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로 압도적이었다. 이는 이재민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소통할 창구가 없음을 의미한다. 향후 복구 계획 정보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대답(약 68%)은 복구의 청사진이 불투명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큼을 보여주고, 피해 평가 및 복구지원금 정보 제공에 대한 불만(각 65%, 64%)은 피해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보상 체계가 실제 재산 손실을 복구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반영되었다.

표 10. 정보제공에 대한 만족도

| 구분 | (사례수) | 매우 만족하지 않았다 | 대체로 만족하지 않았다 | 보통이다 | 대체로 만족했다 | 매우 만족했다 |
|----------------|-----------------|---------------|---------------|---------------|---------------|-------------|
| 피해평가 | 100 (100.0%) | 38 (38.0%) | 27 (27.0%) | 23 (23.0%) | 10 (10.0%) | 2 (2.0%) |
| 복구지원비 | 100 (100.0%) | 42 (42.0%) | 22 (22.0%) | 22 (22.0%) | 12 (12.0%) | 2 (2.0%) |
| 구호금 | 100 (100.0%) | 31 (31.0%) | 22 (22.0%) | 27 (27.0%) | 18 (18.0%) | 2 (2.0%) |
| 향후복구계획 | 96 (100.0%) | 41 (42.7%) | 24 (25.0%) | 22 (22.9%) | 8 (8.3%) | 1 (1.0%) |
| 지자체담당자 연락처 | 98 (100.0%) | 53 (54.1%) | 9 (9.2%) | 27 (27.6%) | 4 (4.1%) | 5 (5.1%) |
| 구호서비스와 물품제공 | 99 (100.0%) | 13 (13.0%) | 22 (22.0%) | 28 (28.0%) | 27 (27.0%) | 9 (9.0%) |

영덕-C "보상 문제로 군에 가서 물으면 '좀 기다려 보소'라는 말뿐이고, 담당자 아니면 몰라요.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은 언제 나오는지 연락도 없고 갑갑한 거지."

영덕-J "컨트를 타워가 없으니까 좌지우지돼요. 군청 직원이 자기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니깐 면이랑 이장이랑 말이 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계속 사람만 바뀌어. 군의 도시디자인과, 주택과, 가족지원과에서 따로 나오니까 했던 얘기 또 해야 하고 또 해야 하는 거야. 말하기가 싫어져요 이제."

영덕-D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지 이런 정보는 전혀 없었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딱 부러지게 얘기해 주는 게 없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지."

영덕-E "정부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영덕-C "마을 재생 사업이 빨리 안 되니까 노인들은 '내 집 지어 몇 년이나 살겠노' 하며 미치는 거야. 2년 전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업체 선정도 밀리고..."

이재민들이 지자체에 담당자 연락처를 알아 직접 문의해도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거나, 담당자가 바뀌어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또한 복구의 청사진이 불투명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높았다.

피해 평가를 위한 세부적 조사체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불합리한 피해 평가가 복구지원금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면서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을 낳게 했다. 또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이중적 경제난에 처한 경우도 발생했다.

영덕-J " 농사를 짓기위해 트랙터를 당장 사야하는데 용자를 준답니다. 1억짜리라 했을 때 5천만원 보조해준다 쳐도 5천만원은 용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면 빚이 새로 생기는건데, 그런데 보상은 중고가격으로 해줬잖아 그래서 중고를 사려고 했던니 중고는 용자가 안되는데 보상은 중고로 해주고 기계는 새 기계를 사야지 용자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안맞잖아 "

영덕-A "주택이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도 있고 한옥 판넬 구조도 있고 이것이 단가가 다 다른데 똑같이 50년 된 집이나 된 주택이나 1년 된 주택이나 똑같이 다 해가지고 돈을 줬으니까 불합리하지..... 주택 50년 되는 거 60년 되는 것도 상관없고 그냥 평수 항공 사진에 나오는 평수대로 해서 그냥 줘버렸어요."

영덕-E "농가주택자금을 받아서 집을 지었는데 화재가 나니깐 농협에서 상환을 시켜라고 했고, 담보물을 제공하라고 했는데 담보물이 다 타버렸는데 이렇게 되니 주택자금도 못갚고 담보잡힐 것도 없고 정부에서 탕감안해주면 집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상황에 놓였어요."

[성금 배분의 불투명성과 주민 배제]

민간으로부터 모아진 성금 규모(모금액)와 배분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78%가 전혀 혹은 대체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성금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복수응답)는 다음과 같다.

표 11. 성금규모(모금액) 및 배분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경로.(복수응답)

| 구분 | 가족으로부터 들었다 | 이웃으로부터 들었다 | 이장을 통해 들었다 | 문자메시지, 우편, 개인 전화 등을 통해 받았다 | 언론 및 방송매체 | 공무원을 통해 직접 들었다 | 기타 |
|----|------------|------------|------------|----------------------------|-----------|----------------|----|
| 영덕 | 5 | 13 | 14 | 3 | 5 | 9 | 3 |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적이고 공식적으로 정보를 전달받는 경(9건)보다는 이장(14건)이나 이웃(13건)을 통한 비공식 경로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행정기관의 정보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난 복구 과정에서 성금은 사회적 연대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 접근성 및 투명성 부재는 주민들의 행정 불신을 더욱 구조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피해 산정의 불합리성, 낮은 정보 만족도, 성금 배분 과정의 불투명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재난 회복 과정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다.

7. 복구와 회복

[복구지원비 산정 기준에 대한 제한된 정보 접근성]

복구지원비 내역과 산정 근거에 대해 매우 혹은 대체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주민은 19%에 불과했으며,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약 67%에 달했다. 피해 주민들은 정보를 알지 못해 복구지원비의 합리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표 12. 복구지원비의 내역과 산정 근거.

| 구분 | (사례수) | 전혀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 대체로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 보통이다 | 대체로 합리적으로 이뤄졌다 | 매우 합리적으로 이뤄졌다 |
|----|----------------|-------------------|--------------------|---------------|----------------|---------------|
| 영덕 | 93 (100.0%) | 38 (40.9%) | 24 (25.8%) | 13 (14.0%) | 16 (17.2%) | 2 (2.2%) |

영덕-B "(보상금에 대해)그냥 듣고 다른 사람 말하는 거 듣고 이렇구나 이런 데 대한 이야기지 이 돈을 명확하게 문서화해가지고 이 돈은 어떻게 어떻게 나왔다 하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영덕-C "(상세내역을 물으러) 몇번 찾아갔지 근데 담당자 아니면 몰라 따로 물어봐야 되고 아직 못 받은 분이있어서 물어보면 좀 기다리래"

영덕-A "무슨 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니 지금도 모릅니다. 군 직원들도 모른대요. 농업 비료 지원비라고 다섯 글자만 찍혀서 나오는데, 리스트를 줘야 내가 뭘 받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영덕-J "서류를 뽑아 우편이나 모바일로 보내주면 좋을 텐데, 그냥 '재해 복구 비용'으로만 나오니까 이게 주택 복구비인지 버섯 재배사 복구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영덕-E "세부 항목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면 되는데... 받은 사람들도 사실 이게 뭐서 들어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주민들은 수시로 들어오는 금액의 출처를 모른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불투명한 행정체계가 자칫 주민들간의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부실한 피해산정 조사와 의견 개진 통로의 부재]

피해산정 과정에 대한 불합리성과 정보 불투명성은 행정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을 야기했다. 피해사실 조사가 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약 58%가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표 13. 피해 사실 조사 합리성.

| 구분 | (사례수) | 전혀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 대체로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 보통이다 | 대체로 합리적으로 이뤄졌다 | 매우 합리적으로 이뤄졌다 |
|----|----------------|-------------------|--------------------|---------------|----------------|---------------|
| 영덕 | 92 (100.0%) | 33 (35.9%) | 20 (21.7%) | 24 (26.1%) | 13 (14.1%) | 2 (2.2%) |

영덕-A "손해 사정사가 완파, 반파, 소파 그것만 확인 [하고 갔다]. ... 이게 뭘로 지어졌는지 몇 년 됐는지 그런 건 전혀 안 봤죠. 볼 여가도 없고."

영덕-D "보상 문제도 뭐 보니까 뭐 진짜 억울한 사람들 못 받는 사람들 많고 또 뭐 택도 하지 않다는 사람들도 보상도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이게 확실한 조사가 안 됐다는 얘기지. 저장고 보상도 뭐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나왔고, 플라스틱 그릇 나 한 2천 개 넘게 탔거든요. 그런 거는 보상이 전혀 없지." (중략) "창고가 무너져 버려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 컨테이너 박스 이런 거는 플라스틱이니까 흔적도 없이 다 타버렸잖아. 사진으로도 남길 수도 없고 다 타보고 없는데 증명할 수가 없죠."

영덕-B "조금 뭐 문한 틀 타고 조금 요래 탄 거 소파 그리고 벽이 한쪽이 넘어가야 반파 준다 이러더라고 한쪽 벽 넘어가면 집이 남아 있어 그건 완파지 집이 안 남아 있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고 (군예)수차례 항의도 하고 가 가지고 그 사람들 설득도 하고 해봐도 안 돼."

영덕-J "7월 1일 날 또 공무원들 인사 이동이 있었어요. ... 업무가 잠도 못 자고 계속 까로워지니까 나도 이해는 돼. 자기도 처음 해보는 건데 자꾸 해라 그러고... (인사 이동으로) 흐름이 딱 끊기고 다시 또 새롭게 되는."

확막한 행정과의 소통체계 문제와 조사 시기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설문조사 결과 피해사실조사에서 누락되거나 피해보상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지자체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약 83%가 합당하게 처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재난 이후 심리적 불안함이 있고 마을에서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분들은(이장, 총무, 부녀회장 등) 정작 본인 피해를 조사할 여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해조사 기간을 현실에 맞게 늘리는 방안도 강구해야한다.

영덕-C "내 꺼는 조사할 때 나는 뭘 말을 했는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나.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내 꺼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 느껴 보니까 내 꺼는 뭐 꼭 몇 개 안 적혀 있어 봐봐. 주민들 꺼는 안 빠뜨리려고 내가 그 집중하다 보니까 내 꺼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내 거 할 때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

영덕-B "내가 그 당시에 딱 데 신경을 쓰지 말고 여기에 신경을 조금 썼더라면 나는 이 소파(소규모 파손) 되는 거를 보상 단계에 알았어요. ...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내가 뭐 행정이나 모든 동네나 도와줄 만큼 도와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저녁 잠을 못 자요."

이렇게 부실한 방식으로 단기간에 진행되는 조사는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인 보상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었으며, 주민들이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입증하고 항변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결과를 낳았다.

[주거 기반의 미회복]

주거 기반 회복의 경우, 응답자의 75%가 주택 복구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복구 방식에 대해서는 새로 건축이 74%, 일부 수리가 약 17%로 응답했다. 주거 복구 계획이 있다고 밝힌 65명에게 주택 복구를 고민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나 물었을 때 95%가 '비용 부족'을 꼽았다.

표 14. 주택 복구시 가장 걱정되는 것.

| 구분 | (사례수) | 비용 | 안전 (산사태, 폭우, 산불 재발 등) | 이웃과의 갈등 |
|----|----------------|---------------|-----------------------|-------------|
| 영덕 | 65 (100.0%) | 62 (95.4%) | 1 (1.5%) | 2 (3.1%) |

주택 복구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21명 중 약 24%는 그 이유로 '비용이 부족해서'를 꼽았는데, 이는 주거 복구 의지와 실제 능력 간의 괴리를 보여준다. 복구지원비가 피해를 복구하는 데 충분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약 84%의 주민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고, 어떤 점에 부족하냐는 질문에는 주택이 229점으로 가장 높았다.

| 지역 | 구분 | 주택 | 가재도구, 살림물품 | 과수 및 과수농지 | 영업장 회복 | 농기계 | 농지 | 영농도구 | 주택, 가재도구, 살림물품 |
|----|-----|-----|------------|-----------|--------|-----|----|------|----------------|
| 영덕 | 가중치 | 229 | 119 | 38 | 28 | 22 | 27 | 15 | 1 |
| | 1순위 | 73 | 2 | 4 | 5 | 0 | 7 | 0 | 0 |
| | 2순위 | 5 | 51 | 9 | 4 | 6 | 1 | 2 | 0 |
| | 3순위 | 0 | 11 | 8 | 5 | 10 | 4 | 11 | 1 |

표 15. 복구지원비가 부족한 이유 1~3순위에 대한 가중치 환산표.

**가중치는 다중순위형 응답에 대한 각 빈도값에 1순위: 3점, 2순위:2점, 3순위:1점을 가중한 값.

영덕-E “우리 집 같은 데를 지었는지 가 3년 빼 안 됐는데 싹 탔는데 보상금이라는 부분은 뭐 1억 얼마밖에 못 받았으니까 그거는 얼토당토 안 하고 (중략) (불 나기전에 살던 집을)시가로 하면 집하고 가재도구 다 합해서 한 4억 5천만 원인데...(지금 받은 보상은) 1억도 못 받았으니까 엄청나게 불합리하죠 이것으로 집 못지어요.”

영덕-C “지금은 사실 뭐 1억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없잖아. 그러면은 2억 이상은 지고 있어야 조립도 집을 지을 것 같아 좀 관찮게 지으려면” 라고 하면서 지원비 부족을 이야기 했다.

영덕-J "주택도 지금(사려고 하면) 평당 800만 원씩 달래요. ... 새로 지으려고 하면 한 2~3억 원은 더 가야 되지. 보상은 쥐꼬리만큼 줘놓고... 어떻게 짓냐 이거라."

결국 복구지원비의 부족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주거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임시 주택에서의 장기 거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시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이유로 69%가 "임시주택 생활이 불편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주민들이 원해서 임시주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주거 불안정을 감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택 복구 계획과 관련해 영덕의 응답자들이 복구계획이 없다고 답한 비율(25%)이 타 지역(안동8%, 의성13%)보다 높은 이유는 고령인구가 많은 것이 한 원인이다. 주택 복구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고, 집을 지어도 주거할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을 상황에서 어렵게 집을 건축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 있다. 따라서 집 짓는 것을 포기하고 임시주택에 남게 된다.

[생업 기반의 미회복]

산불 이후 생계 기반 회복은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산불 이전을 기준으로 회복된 수준을 스스로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6.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회복정도.(재해 이전이 100%)

| 구분 | (사례수) | 10% 미만 | 10~30% | 30~50% | 50~80% | 80~100% |
|----|----------------|---------------|--------------|---------------|--------------|-------------|
| 영덕 | 59 (100.0%) | 30 (50.8%) | 6 (10.2%) | 10 (16.9%) | 9 (15.3%) | 4 (6.8%) |

소득 회복 수준이 50% 미만이라고 응답한 주민이 전체의 약 78%에 달했다. 특히 10%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약 51%로 가장 많았다.

주민들이 경제활동 회복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사항은 '복구지원비 확대'(59%)와 '회복이 될 때까지의 소득지원'(약 29%)이 압도적이었다. 이는 단기적인 현금 보상 확대와 더불어 장기적인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특히 영덕 지역에서 비중이 높은 임업 피해의 경우, 현행 피해 산정 기준 자체가 부재하여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임업 피해의 특수성과 행정 대응의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이재민들은 평생 일궈온 생계 터전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당장의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힘든 상황과 더불어 수입은 끊겼는데 기존에 농사나 집을 짓기 위해 빌린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 상환 독촉이 이어지면서 경제적 몰락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재민들은 현재의 보상 체계가 실질적인 복구보다는 "입막음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생업 복귀 시까지의 안정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과수나 송이의 경우 다시 수확하기까지 최소 5년에서 수십 년이 걸린다는 점이 이재민들을 더욱 절망하게 만든다.

영덕-J "우리는 생활비 자체가 끊겨버렸어. 지금 우리는 농사 지어서 먹는 거잖아. ... 농사가 일단은 중단이 돼 버렸으니까(중략)값아야 될 이자나 원금은 계속 돌아오고... 보상은 쥐꼬리만큼 쥐놓고 그것도 대출금 갚으라 카는데 다 합당하지 않아요."(중략)"내 이대로 그냥 난 더 좋은 집도 필요 없고 더 좋은 트랙터도 필요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만 그냥 공장(버섯 재배사) 복구만 하면 되는데... 보상금은 저거 마음대로 정해주는 거."

영덕-A (소득 회복 수준 질문에) "10% 미만이지. ... 집(펜션)을 지으려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못 지으면 아무것도 먹고 살 게 없잖아요. ... 당장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중략) 최고 먹고 사는 생계가 무너졌는 거 하고 이 주택 쪽으로 똑바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돈을 줘야 된다. ... 생활비도 좀 줘야 될 거예요. 이거 지금 뭐 100만 원씩 두 달 줬는데...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중략) 과수나무가 타버렸는데 5년이 있어야 그게 열매가 열려요. 그럼 그동안에 뭐가 먹고 삽니까? ... 나무 심은 5년 뒤에 뭘 희망을 보겠어요 (중략) 태양광 발전소를 뭐 빨리 지으면 돈이 된다든지 뭐 빨리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뭐 우리가 그런 게 안 되니까 (중략) 당장 먹고 살게 없잖아요."

영덕-H "농사 짓는 거는 돈이 안 돼요. ... 물가도 비싸고 ... 영세민 그거 70만 원 그가 생활하면 힘들어요. 돈이 모자라."

영덕-C "수입이 당장 많이 줄었다. ... 이제 어차피 빚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 2억 이상은 지고 있어야 조립식 집이라도 지을 것 같아."

영덕-B "산에 대한 보상이 실질적인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대체 작물을 하라 그러면 도라지 더덕 산양삼 이런 걸 하라 카는데 과연 이게 아무 기술도 없는 사람이 이걸 해가지고 성공할 수가 있겠는가 못한다고 봐요... 산에 대한 보상이 너무 미비하다. (중략) 송이산이 내 생계 수단이었거든요. ... 1년에 그래도 한 4~5천(만 원) 나오니까 이거 보고 (귀촌해) 들어온 사람들인데 지금은 그게 없단 말입니다. ... 수확 자리가 없어졌을 때 이걸 대체할 방도가 없어요 (중략) 송이는 이제 한 50년 돼야 돼요. ... 솔나무가 없잖아요 다 타버려가 (중략) 실질적인 보상이 최고 첫째예요. ... 이재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이는 행정의 임업의 장기 투자 특성과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대체작목 제안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십 년간 가꿔온 산림 자산에 대한 평가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인정받지도, 실질적인 생계 복구 방안을 제시받지도 못하고 있다.

[안전한 에너지 자립 마을에 대한 기대]

재난 이후 새롭게 마을을 조성한다면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1순위로 폭우, 산불등으로부터 안전한 마을(185점)을 선택했고, 공동편의시설(97점)을 2순위로 선택했다. 앞으로 대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재난에 대비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역 | 구분 | 폭우, 산불 등으로부터 안전한 마을 | 도로, 상수도, 폐기물처리장 등 부족한 인프라 보완 | 공동편의시설 (운동기구, 정자, 마을회관 등) | 아름다운 경관 회복 | 대중교통 연결 |
|----|-----|---------------------|------------------------------|---------------------------|------------|---------|
| 영덕 | 가중치 | 185 | 60 | 97 | 60 | 23 |
| | 1순위 | 54 | 7 | 11 | 3 | 2 |
| | 2순위 | 9 | 17 | 25 | 12 | 4 |
| | 3순위 | 5 | 5 | 14 | 27 | 9 |

표 17. 마을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보완점 1~3순위에 대한 가중치 환산표.

**가중치는 다중순위형 응답에 대한 각 빈도값에 1순위: 3점, 2순위:2점, 3순위:1점을 가중한 값.

영덕-C "복구하는 데... 우리는 주변이 다 산이니까 웅벽이 가장 중요하지. ... 하천 정리도 중요하고 요즘은 비가 옛날에는 뭐 이렇게 안 왔거든요. 폭우가 이렇게 안 왔던 과거에는 지금처럼 하면 되는데 이제는 개입을 해야 돼. 계곡도 이제 좀 넓혀야 되고"

영덕-E "여기는 마을을 조성이 아니라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소방차가 왔다 갔다 해야 하거든요. 그게 안 되거든 그래 그거는 일단은 해야 돼."

영덕-F "산에 조림할 때 소나무 심지 말고 낙엽수로 낙엽수 심으면 불에 잘 [안] 타고 ... 소나무가 이번에 많았어 가지고 너무 많이 탔어."

영덕-H "여기도 좀 안전하게 해주면 좋겠어. 불 안 나게 ... 불이 제일 무섭잖아요."

또한 마을이 새롭게 조성된다면 어떤 마을이 되길 기대하냐는 질문에 전기세, 난방비 걱정없는 에너지자립 마을(130점)을 1순위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109점)을 2순위로 선택했다. 이는 당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실용적인 혜택을 선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역 | 구분 |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 전기료, 난방비 걱정없는 에너지자립 마을 | 소득이 높은 마을 | 마을 공동체가 활발한 마을 | 난방, 수도 등 마을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마을 |
|----|-----|--------------|------------------------|-----------|----------------|---------------------------|
| 영덕 | 가중치 | 109 | 130 | 69 | 66 | 53 |
| | 1순위 | 29 | 31 | 4 | 8 | 5 |
| | 2순위 | 7 | 14 | 17 | 16 | 14 |
| | 3순위 | 8 | 9 | 23 | 10 | 10 |

표 18. 새로운 마을에 대한 기대사항 1~3순위에 대한 가중치 환산표.

**가중치는 다중순위형 응답에 대한 각 빈도값에 1순위: 3점, 2순위:2점, 3순위:1점을 가중한 값.

농사나 송이 채취 등 기존 소득원이 사라진 상황에서, '햇빛 연금'과 같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다.

영덕-A "시골에서는 햇빛 연금이 최고입니다. 전부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과수나무가 타버렸는데 5년이 있어야 그게 열매가 열려요. 그럼 그동안에 뭐가 먹고 삽니까? ... 200kw 하면 300만 원 되면은 먹고 살 만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지 불타고 불 탄 땅에다 좀 하겠다 이 말입니다."

영덕-B "최고 중요한 거는 뭔가 소득 사업을 해야 되는데 ... 여기다가 풍력 단지가 들어오든가 안 그러면 뭐 태양광 태양광을 하든가 뭐 이런 게 좀 돼 가지고 뭔가 소득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영덕-H "겨울에 전기 소비가 한 달에 ... 12만 8천 원 나오더라고. ... 여기는 전기세가 한 30만 원 더 나올 것 같아. ... 전기세도 좀 혜택 받으면 좋겠어. ... 그거도 태양광으로 좀 해 갖고"

영덕-G (어떤 마을이 되면 좋을지 예시 중) "전기세 난방비 걱정 없는 마을 ... 발전이 되면 좋아"

새롭게 마을을 조성함에 있어 68%의 주민들이 마을 주민의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향후 마을을 재건하고 회복할 때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 볼 수 있다.

영덕-C "청사진을 보고 우리가 이제 그건 아니다. 주민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그 이야기하고 ... 집을 지으려면 이제 길을 너무 (길)위주로 너무 넓히다 보면 슈트(대지)가 좁아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 설명회가 중요한 게 그런 거라"

영덕-E "마을에 조성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는 도시 전문가들이 와야 돼요. 이걸 왜냐하면 이장들이 마음대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장들이 뭐 하라고 하면 이리 하기 때문에 일단 도시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어떤 구상을 하면 참 좋아요."

삭막해진 마을을 다시 아름답게 가꾸고, 공동으로 작업하며 화합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기대도 컸다.

영덕-C "우리 마을 앞에는 이 울타리가 ... 장미꽃을 사람이 꽃을 보면 좀 마음이 안정이 많이 들고 장미를 차리 좀 심어보자. ... 그래 우리 장미 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영덕-J "우리 마을 숲도 봤죠. 마을회관도 있고 그냥 아이고 이 동네는 그래도 회복이 되고 이 동네는 좋다야 ... 공동체의 활발한 마을이라는 얘기는 뭔가를 하나 던져주면 ... 니도 쓰고 나도 쓰고 이래가 돈 수익이 되고 하면 서로가 좋아지니까 모일 거 아니야"

영덕-B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일할 수가 있는 ...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일할 장소만 되면은 저절로 화합은 돼요."

[공동체 갈등]

재난을 함께 극복해야 할 마을 공동체 내부에서도 복구 과정 중 심각한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산불 복구과정에 이웃과의 갈등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에 달했다.

한편, '이웃 간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긍정적 응답은 43%, '마을공동체가 더 돈독해졌다'는 응답은 45%에 그쳤다.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복구지원비 배분에서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기준으로 발생한 불편한 감정'이 약 6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불충분한 피해 지원 수준'(15%), '피해복구 과정에 대한 정보부족'(9%)이 뒤를 이었다.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지급된 보상금이나,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과의 보상 격차로 인해 감정적인 골이 깊어진 사례가 많았다.

영덕-A "옆집에서 돈 받았다 하니까 뭐 불만이 있고 뭐 저 집은 안 탔는데 돈 받았니? 뭐 조금 탔는데 다 받았니 뭐 이런 갈등이 지금 심해요. 지금 그리고 2천만 원짜리 집인데 저 사람은 1억 받아가지고 또 받았단다... 안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2천만 원짜리도 안 되는 집을 1억 받았으니 배 아플 거 아닙니까?"

영덕-E "공동체가 돈독한 건 아니고... 안 타는 사람들은 시기를 하는 거지. 뭐가 나왔다 돈 나왔다 하니 뭐 돈을 많이 받아가노 이런 식이... 안 보이는 데서도 좀 편견이 있는 거지."

영덕-J "남의 동네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디 되냐 그러면 맞아. 서로 서로 많이 탔다고 아니면 서로 니는 이거밖에 안 탔잖아 니는 말도 마라. 나는 여기 닭 한 마리 탔잖아. 나는 소 탔다. 그러면 야 소는 돈이고 그러면 닭은 그러면 피가 아니야? 이거 갖고도 싸우는 거야. 크기 갖고도."

구호 물품 배분 과정에서 물품의 수량 부족이나 질적 차이, 그리고 비이재민의 물품 수령 등이 갈등의 도화선이 되었다.

영덕-J "이불을 똑같이 갖다 줬어. 색깔이 요는 이 알록달록 예쁜 건데 나는 이장 나는 왜 똥 색깔 주고 저는 왜 고은 거 주노... 라면을 줬단 말이야. 똑같이 주는데 저 집에는 셋인데 왜 3개 주고 우리 집에도 셋인데 왜 우리는 두 개 주노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 싸운다니까요."

영덕-I "불 안 난 사람도 있는데 불 난 사람이 우선인데 밭에라도 뭐 하려고 잠깐 나갔다 오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려요. ... 내가 잘 아는 사람은 친한 사람 만나와도 불려 갖고 막 차로 해가지고 가는데 그리고 뒤로 챙겨서 저녁으로 갖다 주고 이러는 것을 봤는데 내가 한 동네에서 그런 사람은 안 되지 않나."

영덕-B "절에서 비누를... 18장인가 한 이래 가져왔어. ... 이거 놔놓고 우리 이재민들 공동으로 쓰는 겁니다 놔놔는데, 부녀회장님이 그걸 내가 그래 보소 보소 그거 당장 거두소. 당신은 나눠주면 인기를 얻겠지만은 안 나눠주는 사람은 뭐가 되느냐... 성질이 나가 내가 서류 멍치를 들고 있다가 팽개쳐버렸어. 거기 감정이 생긴 것 같아요."

마을 전체의 회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거나, 행정과 연결된 '줄'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는 인식이 갈등을 키웠다.

영덕-D "마을이 그렇게 좀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크게 없네요. ... 전부 다 개개인... 줄 좋은 사람들은 뭐 알아서 잘 하는 기고 줄 없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게 그렇지 뭐."

영덕-B "이웃에서 집수리 싹 해놓고 청소 싹 해 놓는 장면에 와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이런 집도 임시주택을 줘니까' 하고 카톡에 올려놨더라고... 마을 주민이(부녀회장)... 내가 지금도 아직도 지금 마음이 안 풀리는 게 과연 이 사람을 무단 주거 침입죄로 고발을 하느냐 마느냐... 한 동네 사는 처지에."

불이 난 후 새롭게 측량을 하거나 집을 지으면서 과거의 관행적 토지 이용이 분쟁으로 번지기도 한다.

영덕-E "길이 있는데 이제 옛날 길은 사람들이 부모들끼리 뭐 그래 그래 해라 이 내리고 있는데 지금 나가 보니까 불 나 보니까 지역 측량을 새로 하잖아요. 아들들이 '내 땅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못 다니지 길이 없어지는 거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러한 현상은 재난 당국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피해 산정 및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행정 실패의 결과이다. 행정의 불공정성이 피해자들 간에 불필요한 비교와 불만을 초래하여, 재난 극복에 필수적인 사회적 자본인 공동체 연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2차 피해를 야기한 것이다.

[특별법 제정 과정의 피해자 참여 배제]

2025년 10월 공포된 '산불특별법'은 산불 피해 이재민의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었으나, 정작 법안 제정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되었다. 설문조사에서 산불특별법의 내용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 응답이 46%에 달했다. 특히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만도 23%를 차지했다.

| 구분 | (사례수) |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 대체로 반영되지 않았다 | 보통이다 | 대체로 잘 반영되었다 | 매우 잘 반영되었다 |
|----|----------------|--------------|--------------|---------------|--------------|-------------|
| 영덕 | 26 (100.0%) | 6 (23.1%) | 6 (23.1%) | 10 (38.5%) | 3 (11.5%) | 1 (3.8%) |

표 19. 산불특별법에 피해주민들의 의견 반영 정도.

특별법은 재난 복구의 핵심이 되는 제도적 기틀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주민이 그 제정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꼈다.

영덕-A (특별법에 주민 의견이 잘 반영되었는지 묻자) "전혀 안 됐죠. 우리가 저기 걸어놓은 특별법 보면 아직까지 뭐 거의 없잖아요. ... 위원회는 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필요안하다 생각하면 의견도 청취 안할 것이고, 돈을 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거는 쓰여 있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될런지는 모는 것죠"

이재민들은 특별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필요한 '직접적인 복구 비용 지원'은 빠진 채 행정적 편의만 제공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영덕-J "특별법이 통과를 했잖아. 그러면 보상을 해 준다는 소리가 아니라 10년 동안 이 세금 면제해 줄게 집 짓는 거 공짜로 해줄게. 아니 그거 왜 설계비라든가 뭐 이런 거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만 해갖고 특별법을 통과해 갖고 주는 거지 현금 현물 보상은 안 해줄까 싶어서 나가 하는 말이라고. (중략) 35%는 충분히 보상했다 적어도 얘기할 거고 내 말은 ... 측량비 면제 집 지으려고 그러면 설계비 면제 이런 기반시설에만 특별법으로 열어주는 거 지시가 그래 돈으로 보상 안 줄까 봐."

영덕-D "아직 이거다 하는 것도 안 내놓고 우리가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지원 어디까지 해줄지도 모르잖아요. 좀 더 봐야지 지켜봐야지."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혜택이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갈지에 대해 행정기관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영덕-J "특별법이 그제 통과가 됐다며 가만히 앉아서도 10%가 20% 나와야 되는 거 맞잖아. ... 근데 사인 안 하고 나는 이거 공동 그거 손해 사정 써갖고 변호사 안 산다 했던 사람들은 보상에서 다 빠졌어.",

영덕·C "정부에서 뭐가 좀 이래 적극적으로 해줘야하는데 우리 이재민들은 답이 없다. 근데 한두 명 국회의원이 힘을 쓴다고 해봐야 큰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는 정책이 문제야 정책."

이러한 정책적 배제는 법적, 제도적 지원이 현장의 실질적인 복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정책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주민들이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입증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구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기에, 법은 제정되었으나 현장의 실질적 문제 해결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III. 요약과 제언

1.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적 상황 요약

[물리적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 산정의 괴리]

응답자의 다수가 주택·가재도구·영업장을 '80% 이상 피해'로 인식할 정도로 피해 규모는 사실상 '전소' 수준이다. 그럼에도 주택 피해 평가가 과소평가되었다고 느낀 이가 약 62%, 영업장 피해는 68%에 달해, 주민 체감 피해와 행정 피해 판정 사이의 괴리가 매우 크다. NDMS 상에 실제 농업·임업 장비와 설비 항목이 없어 애초에 등록이나 평가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과수·임야는 나무의 수령이나 생산력과 무관하게 평수만으로 산정되는 등 피해 실체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가 확인되었다.

[재난경보·대피 체계의 취약성]

재난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52%에 이르고, 문자 내용을 읽지 못하는 고령자도 적지 않았다. 실제 대피 정보는 마을 방송(62건), 마을 주민(27건) 등에 의존했고, 고령자는 "설마 여기까지 오겠나"라는 인식과 이동의 어려움으로 대피가 늦어졌다. 대피 수단도 승용차(80%) 중심이었으며, 이 중 마을 주민 차량 이용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 따라서 대피시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과 마을 공동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볼 수 있다.

[임시대피소·임시주택의 불편과 주거 불안정 장기화]

대피소를 이용한 응답자 81% 중 47%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협소한 공간, 세면·샤워 시설 부족, 낯선 사람과의 공존 등이 주요 불편으로 지적됐다. 산불 7개월 뒤에도 응답자 81%가 임시주택에 거주 중이며, 약 44%가 불만족을 표시했다. 불만족 이유는 좁은 평수(60건), 내부시설 불편(22명)으로, 농촌에 술적인 농기구나 작업복을 둘 공간이 없는 현실과 단열 부족으로 인한 '감옥 같은 답답함'이 반복 증언되었다. 임시주택 거주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약 67%가 "2년 이상 거주 필요"를 언급했고, 고령·저소득 주민은 주택 복구를 포기한 채 '다른 대안이 없어' 임시주택에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심리적 외상 장기화와 심리지원 단절]

한국형 사건 충격 척도(IES-R-K)결과 산불 이후 주민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관련 증상을 집중적으로 호소했다. "잠을 못 자 안정제를 먹는다", "평생 살던 집이 없어져 하루 종일 멍하다"는 증언처럼, 주거·생계 불안정과 심리적 외상이 서로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다.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았다는 응답이 61%였으나, 나머지 39%는 지원을 받지 않았고, 이들 중 일부는 "어디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보건소와 병원 사이에서 책임만 떠넘기다가 포기했다”고 답해,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심리개입과 서비스 연계 체계가 매우 취약함이 드러났다.

[정보 전달·재난지원 체계의 비공식 의존과 불투명성]

피해평가, 복구지원금, 향후 복구계획, 담당자 연락처 등 핵심 정보를 얻는 경로는 ‘이장을 통해 들었다’(64명), 공무원 직접 전달(35명), 이웃(26명) 순이었고, 문자나 우편 등 공식 비대면 채널은 15명 안팎에 불과했다. 행정의 정보 제공 전반에 대한 불만족이 높으며, 특히 담당자 연락처 정보에 ‘매우 불만족’ 비율이 54%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의하고 협의할 창구가 실질적으로 부재함을 보여준다. 민간 성금의 모금액이나 배분 기준, 내역을 알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이 78%로, 성금 역시 이웃이나 이장 같은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만 소문이 돌 뿐, 공식적인 정보 공개와 설명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성금과 지원금 배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과 행정 불신이 구조화되고 있다.

[주거·생계 기반 회복의 심각한 지연]

주거 복구 계획이 있다고 밝힌 65명에게 주택 복구를 고민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95%가 ‘비용 부족’을 꼽았고, 복구지원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84%였다. 실제로 ‘집 짓는 비용에 비해 복구지원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증언이 반복되며, 지원 부족으로 인해 주택 복구를 포기하고 임시주택에 남는 비율이 높다. 소득 회복 수준은 절반 미만이라는 응답이 약 78%였고, 10% 미만 회복으로 평가한 사람도 약 51%에 달했다. 주민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복구지원비 확대(59%), 회복 시까지의 소득지원(약 29%)을 꼽아, 단기 현금 보상만으로는 생계 복구가 불가능한 현실을 드러냈다. 특히 임업 피해는 별도 평가 기준이 없어 “수십 년 가꾼 산에 대한 보상이 거의 없다”는 구조적 사각지대가 확인되었다.

[행정에 대한 불신, 공동체 갈등, 특별법에서의 배제]

피해사실 조사가 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보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했고, 약 58%는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으며, 피해 누락이나 보상 불합리를 이유로 지자체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약 83%가 ‘합당하게 처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보상금 산정 근거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9%,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약 67%로, 주민 다수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가 나왔는지 모른 채 돈이 들어오면 받는” 상황이었다. 이런 불투명성과 불공정성 속에서 이웃 간 지원금과 성금 배분을 둘러싼 갈등을 목격했거나 경험했다는 응답이 33%에 달했고, 재난이 공동체 연대를 강화했다기보다 분열을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특별법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묻는 질문도 46%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해, 재난 관련 핵심 법제도 설계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 재난대응을 위한 정책·제도 제언

위 실태조사는 영덕 산불이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초고령 산촌지역의 구조적 취약성과 행정적, 제도적 한계가 중첩된 ‘재난불평등’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령 농촌 지역 맞춤형 재난경보·대피 시스템 구축]

재난문자와 방송 중심의 일방향 경보만으로는 고령, 문해 취약, 1인가구 중심 지역에서 적절한 대피 행동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평상시 읍, 면, 리 단위에서 고령자, 장애인, 1인가구를 ‘재난취약자’로 등록하고, 재난 발생 시 이들을 담당할 ‘대피지원 공무원’이나 ‘마을 안전지킴이’를 지정하여, 전화

확인, 직접 방문, 동행 대피를 수행하는 체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적 대피수송 방안(마을별 차량, 이동 경로 사전 지정) 마련과 더불어 이웃과 가족이 함께하는 커뮤니티 방재도 중요하다.

[피해산정·보상 체계의 현실 반영과 투명성 강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피해 항목을 농업, 임업, 영세 자영업 실태에 맞게 전면 개편하여, 농기계, 저온저장고, 버섯 시설, 산림 설비 등 실제 생계 기반 자산이 누락 없이 등록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택·과수·임야 피해는 면적만이 아니라 건축 연식, 구조, 나무 수령, 생산력, 투자기간을 반영하는 다층적 평가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모든 피해산정과 복구지원비 산정 근거는 문서로 개인에게 통지하고, 산정 기준, 계산식, 이의신청 절차, 담당자 연락처를 명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합리한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임시대피소·임시주택의 기준 재설계와 장기 주거 안정]

임시대피소는 단순 수용 중심 설계에서 벗어나, 고령자·장애인·아동 등을 고려한 충분한 공간 확보, 세면·샤워와 개인사생활 보호, 심리안정 등을 위한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임시주택은 농림업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농기구나 작업복과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을 포함한 평수 기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는 임시주택 제공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시간이 부족해 주택 복구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마을 단위 재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재난 이후 주거권 보장’을 위한 별도 정책축을 설정해야 한다.

[장기·정기 재난심리 지원과 서비스 연계 시스템 구축]

심리적 고위험군이 광범위하게 존재함에도 심리지원 접근과 연계가 취약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재난 발생 시점부터 최소 1~3년을 내다보는 장기 심리사회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초기에는 전수 심리스크리닝과 고위험군 선별을 실시하고, 이후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 병원·전문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정기 상담, 집단 회복 프로그램, 방문상담을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고령 주민이 “어디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아도, 행정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의 심리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생계·소득 지원을 축으로 한 경제 회복 로드맵]

소득 회복이 10% 미만인 주민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대출 중심 지원은 부채만 키울 뿐 실질적인 회복책이 되지 못한다. 산불 피해 지역에는 회복지원금 상향과 함께, 일정 기간(예컨대 2~3년) 기본소득형 재난소득지원 제도를 도입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임업 피해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형성된 산림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별도 기준을 만들고, 대체 작목 권유에 그치지 않고 전문 기술 교육과 장기 저리 융자를 결합한 실질적 회복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재난 정보·성금·지원금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 소통 강화]

재난 관련 정보나 성금, 지원금 배분 과정은 기준, 절차, 규모, 결과를 주민에게 상시 공개하는 투명성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청이나 복지재단 홈페이지, 마을 게시판, 문자나 우편 안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질문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성금의 경우 모금액, 배분 기준,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성금 공개

시스템'을 마련해,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연대의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

[피해자 참여형 재난 거버넌스와 공동체 회복 지원]

산불특별법과 같은 핵심 제도 설계 과정에서 피해 주민의 의견이 배제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피해지역 주민, 이장, 현장 단체가 참여하는 '재난복구재건협의체'를 상설화해야 한다. 이 협의체는 피해산정 기준, 보상·지원 정책, 마을 재건 방향, 산림 복원과 재해예방 사업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하는 공식 통로가 되어야 한다. 또한 재난 이후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 연대를 회복하기 위해, 마을 단위 갈등 조정 및 중재 프로그램, 공동 복구 프로젝트, 추모·기억 사업 등을 지원하는 '공동체 회복 정책'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성 지역 보고서 : 2025 영남 초대형 산불 피해 실태조사로 본 피해자 권리의 과제]

I. 산불피해 현황

1. 의성군 지역 일반 현황 (2025년 기준)

[지리적 특성]

의성군은 경상북도에서 다섯 번째로 넓은 면적(1,174.68km²)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의 약 70%가 임야로 구성된 산간 지역이다. 행정구역은 1읍 17면 체제이다.

[인구학적 특성]

2025년 기준 인구는 약 7만 명으로, 경북 평균(약 27%)의 두 배에 가까운 초고령화 지역(65세 이상 44.2%)⁷³이다. 노년 인구 부양률은 89.6%로 전국 평균(40.0%)과 경북 평균(49.4%)을 압도하며, 인구 감소율이 높아 지역 소멸 위험이 매우 크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의성군은 귀농·귀촌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대구(53.4%)와 경북(18.5%) 등 인근 대도시 및 동일권역으로부터 유입이 전체의 71.9%를 차지할 만큼 귀농·귀촌 선호도가 높다.⁷⁴

[산업 경제적 특성]

1차 산업인 농업 비중이 지역내총생산의 1/3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농업 지역이다. 미곡과 마늘, 사과(과실류의 61.6%), 자두 등이 주산물이나, 농가 인구는 매년 약 2.5%씩 감소하는 추세다. 제조업 기반은 농공단지 4개소 정도로 미미하다.⁷⁵

[재난 이력]

과거에는 주로 풍수해(태풍, 침수) 위주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16개 지구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침수위험지구 12개, 유실위험지구 3개, 취약방재지구 1개)로 지정된 상태이다.⁷⁶

표 1. 의성군 지역 일반 현황

| 항목 | 세부 내용 | 비고 |
|-------|---|---------------------|
| 토지 이용 | 면적 1,174.63km ² (산림 면적 824.6km ² , 약 70.2%) | 침엽수림 위주의 높은 연소 위험성 |
| 행정 구역 | 1읍 17면 (피해 집중지: 안평면, 안계면, 비안면 등) | 광범위한 행정 구역 대비 인력 부족 |
| 인구 구조 | 인구 약 49,800명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44.2%) | 전국 최고 수준의 소멸위험지역 |
| 산업 구조 | 농가 비중 62%, 마늘·사과·축산 중심 | 산림 인접 농가 및 축사 밀집 |

출처: 2025 의성군 통계연보 / 행정안전부 지역소멸 대응 마스터플랜

⁷³ 행정안전부,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⁷⁴ 의성군, 「의성군종합발전계획」 1, 2025.

⁷⁵ 의성군, 「의성통계연보」, 2024.

⁷⁶ 의성군, 「의성군종합발전계획」 1, 2025.

2. 의성군 산불피해 현황

이번 산불은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와 안계면 용기리에서 시작되었다. 불길은 의성읍을 비롯해 단촌, 점곡, 옥산, 사곡, 가음, 금성, 봉양, 비안, 안계, 신평, 안평, 안사면 등 총 13개 읍·면에 걸쳐 번졌으며, 이는 의성군 전체 행정구역의 약 70%에 달하는 광범위한 범위이다.

특히 의성군 전체 면적의 70%가 임야라는 점은 산불 발생 시 연소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가연물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발화지인 안계면과 안평면은 울창한 산림이 밀집해 있어 초기 피해가 매우 컸다. 더욱이 산불 당시 강한 서풍이 부는 기상 조건 속에서 불길이 동쪽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산세가 험하고 숲이 우거진 단촌면과 점곡면으로 불길이 옮겨붙으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아래 표는 2025년 8월 산불 발생이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개최된 의성산불피해주민과 의성군수와의 간담회에서 의성군이 제출한 자료를 2025년 초대형 재난과 견주어 볼 수 있게 정리한 것이다.

표 2. 산불 피해 현황

| 피해항목 | 의성군 피해 현황 | 영남 전역 피해 현황 |
|------|---------------------------------|--|
| 주택 | 430호 | 전파 1,240채, 반파 850채, 소파 2,368채 |
| 이재민 | 434가구/ 753명 | 사망 31명, 부상 32명 이재민 4,458가구/ 약 92,200명 |
| 농작물 | 520ha | |
| 농기계 | 4,555대 | 저온저장고 및 농기계 약 3,500 대 전소 |
| 농축산 | 64동/4,515두군 | 축사 42동 소실, 가축 1만 2000두 폐사 |
| 문화재 | 41동 | 보물급 국가유산 3건 포함한 총 31건 |
| 산림 | 27,961ha | 99,490ha 여의도 면적의 약 343배 |
| 기타 | 점곡면 태양광 발전 시설 및 의성읍 농산물 유통업체 소실 | |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산불 피해 복구계획 확정 보도자료 (2025.05), 의성군. 산불피해주민 간담회 자료: 의성 대형산불 관련 추진현황. (2025.08)

3. 정부 및 지자체 복구 지원 예산 규모⁷⁷

2025년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 1조 8,809억 원 규모의 복구비 지원을 확정하였다. 복구비는 국비 1조 2,136억 원과 지방비 6,673억 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의성군에는 국비 2,472억 원과 지방비 1,588억 원 등 총 4,061억 원의 복구비가 책정되었다. 해당 복구비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의성군 내 주택, 농업시설, 산림 및 공공시설 등의 복구에 사용된다.

⁷⁷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산불 피해 복구계획 확정 관련 보도자료」, 2025.5.2.

4. 민간 성금 규모⁷⁸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국민 성금이 시작되어, 2025년 4월 29일 17시 기준 총 1,683.6억 원이 모금되었다.

모금 기관별로는 전국재해구호협회 456.1억 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724.9억 원, 대한적십자사 438.9억 원, 그 외 기관 63.7억 원이다.

이 성금을 활용하여 산불 피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세대당 300만 원의 긴급생계비가 지급되었으며, 2,600여 세대가 지원 대상이 되었다.

5. 기타 특별 조치 및 제도적 대응⁷⁹

정부가 경상북도 의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간접지원 및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 공공요금 감면 등 세제·요금 부담 완화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피해 주민의 주거와 생계 회복을 위해 주택 복구 및 구입 자금 용자,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등의 금융 지원도 제공되었다.³

또한 공공임대주거 지원, 위기가족 긴급지원, 무료 법률지원, 농기계 수리 지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등 생활 회복을 위한 지원이 병행되었으며,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과태료 징수 유예,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등 행정절차 완화 조치도 함께 시행되었다.³

이와 함께 피해 주민의 상담 및 지원을 위해 산불 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어 피해 민원 접수, 세금·국민연금 유예 상담, 복구자금 용자 및 보험 상담 등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었다.³

II. 실태조사 결과

1.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참여자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개요]

기존의 재난 대응 연구는 주로 화재 발생 원인, 면적, 피해액 등 ‘사건 중심 지표’를 다루어왔다. 그러나 피해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산불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재난 발생 이후 수개월에 걸쳐 생활 조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다. 초기 대피의 혼란, 임시대피소 이동과 사생활 침해, 임시주택 장기화, 보상체계의 불투명성, 생업 재건의 불가능성, 공동체 해체 및 갈등, 지속되는 심리적 후유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형 화재는 단일 시점의 피해가 아니라, 시간을 따라 누적되는 장기적 피해로 이해해야 한다. 본 조사는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경북 의성군 산불 피해 주민들의 과거와 현재 실태를 객관적인 수치와 심층적인 목소리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난 대응 및 복구 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피해자들의 주관적 체감, 생활 변화, 제도 접근 경험, 그리고 공동체적 영향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삶의 차원을

⁷⁸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경북·경남·울산 산불 이재민 긴급생계비 3백만 원 지원 시작」 보도자료, 2025.4.30.

⁷⁹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2025년 산불 피해 지원대책 종합안내서」, 2025.4.1

다각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양적 설문조사와 질적 심층면접을 결합한 혼합 연구방식을 채택하였다.

의성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재난피해자권리센터와 ‘의성산불피해주민 대책위원회’(의성주민대책위), 산불회복주민연대 의성무지개가 공동 기획하였으며, 2025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센터 활동가, 연구자, 대책위가 함께 수행하였다. 조사 대상은 연령, 성별, 지역, 피해 유형 등을 고려하여 모집하였고, 설문 과정에는 대책위 관계자가 직접 참여하여 조사의 밀도를 높였다.

조사에는 산불 당시 마을에 거주하던 피해 주민 100명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응답자의 80%가 10년 이상 거주한 장기 거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에 정주한 주민들의 피해 경험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표본을 확보하였다. 다만, 조사 수행 인력의 특성과 접근 경로가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 해석 시 이러한 조사 경로 및 조건의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3. 설문조사 응답자의 연령 분포

| 연령대 | 응답 수(명) | 비율(%) |
|-----------------|---------|--------|
| 40세 미만 | 1 | 1.0% |
| 40세 이상 ~ 60세 미만 | 15 | 15.6% |
| 60세 이상 ~ 80세 미만 | 71 | 74.0% |
| 80세 이상 | 9 | 9.4% |
| 합계 | 96 | 100.0% |

표 4. 설문조사 응답자의 거주 기간 분포

| 거주 기간 | 응답 수(명) | 비율(%) |
|-----------------|---------|--------|
| 20년 미만 | 34 | 36.2% |
| 20년 이상 ~ 40년 미만 | 11 | 11.7% |
| 40년 이상 ~ 60년 미만 | 28 | 29.8% |
| 60년 이상 ~ 80년 미만 | 20 | 21.3% |
| 80년 이상 | 1 | 1.0% |
| 합계 | 94 | 100.0% |

[심층인터뷰와 참여자 특성]

심층인터뷰는 총 12명의 인터뷰 참여자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참여자 선정 시에는 산불 피해가 집중된 의성군 내 1읍 12개 면 지역과 주요 피해 분류(주택, 생계수단, 영업장, 신체 등)를 주요 기준으로 삼았으며, 의성주민대책위의 추천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심층인터뷰는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후,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연구진으로만 구성된 인터뷰어와 피해주민 간의 1대 1 면담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조사는 자택이나 사무실 등에서 1~2시간 내외로 심도 있게 이루어졌으며, 모든 인터뷰 내용은 녹음 후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5. 심층인터뷰 대상자 개요

| ID | 주요 특징 및 피해 현황 | 지역 |
|------|--------------------------------|---------|
| 의성-A | 세입자. 주택 전소 및 가재도구 전실. 보상 사각지대. | 단촌면 구계리 |

| | | |
|------|----------------------------|---------|
| 의성-B | 투병 거주자. 타지 치료 사유로 실거주 불인정. | 단촌면 |
| 의성-C | 과수원 피해. 농창고, 농기계, 과수원 전소. | 점곡면 |
| 의성-D | 의용소방대원. 진화 중 무릎 부상. | 의성읍/단촌면 |
| 의성-E | 사과 명장. 54년 농사 기반 상실. | 안평면 |
| 의성-F | 무허가 주택. 서류 미비로 주거 지원 배제. | 옥산면 |
| 의성-G | 대책위원장. 마을 90% 전소 피해. | 점곡면 사촌리 |
| 의성-H | 무허가 주택. 지자체 사후 지원 불가 통보. | 안평면 |
| 의성-I | 임야 경작. 불법 식재 간주로 피해 조사 거부. | 안평면 |
| 의성-J | 하우스 거주. 면적 미달 사유로 지원 배제. | 안평면 |
| 의성-K | 대책위 사무국장. 재난관리시스템 한계 지적. | 점곡면 |
| 의성-L | 청년 농업. 과수원 전소로 장기 소득 공백. | 점곡면 |

2. 피해규모 및 행정의 피해 정도 평가

[재난의 물적 피해]

의성 산불은 단순한 화재를 넘어 주민들의 주거, 생계, 그리고 평생의 기억을 통째로 앗아간 재난이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7%가 주택 피해를 80% 이상의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삶의 터전 자체가 소멸했음을 의미한다.

생계 기반의 훼손 또한 치명적인 수준이다. 응답자의 45%가 영업장(농지 및 시설)에 80% 이상의 큰 피해를 보았다고 답했다. 특히 농민들에게 과수원 등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일터로, 오랫동안 이룩해 온 생계 기반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의미한다.

일상 유지를 위한 가재도구 피해(51%가 80% 이상 피해) 역시 심각하여, 주민들은 당장 입을 옷과 신을 신발조차 없어 이웃의 도움에 의지해야 했다. 이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 기반이 크게 손상되었음을 보여준다.

물리적 피해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점은 응답자의 47%가 80%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고 평가한 '대체 불가능한 추억의 물건'들이다. 사진첩, 일기장, 고인의 영정이나 유품 등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개인의 역사와 정서적 가치가 응집된 무형 자산이다. 특히 산불 피해자 대다수가 고령층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디지털 기록으로 일부 복원이 가능한 젊은 세대와 달리, 고령층에게 이러한 물건의 소실은 곧 개인 역사와 추억의 영구적 소멸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현재의 논의는 주거 및 생계 등 가시적 피해 복구에만 치중되어 있어, 이들이 겪는 정서적 내상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의성-B: "저희 우리 동네에 10집이 있는데 10집 중에 한 집 빼고 9집이 다 탔어요. 동네 자체가 이제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모든 것이 전소가 됐어요. 집도 전소되고 살림살이도 전부 다."

의성-L: "전소된 밭들이 조금 많고 블루베리 밭도... 전소하고 사과밭도 한 하나 둘 세 군데는 전소했고... 사과밭 피해가 저희는 조금 많이 큰 편이에요."

의성-F: "추억이죠. 추억이라는 게... 우리는 앨범이 이제 우리 어른들이 아버님 어머님 다 이복 분이셔요...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거죠."(의성-F)

의성-G: "내가 19살에 시집와서... 우리 시동생이... 월남전에 갔다... 그 유품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었다... 그 유산을 전부 다 내가 다 태웠다."

피해 유형(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 안동은 생계수단, 영덕은 주택 피해가 가장 많았던 것과 달리, 의성은 영업장 피해(61건) 응답이 가장 높았다. 마찬가지로 의성은 극심한 주택 피해 체감(47%)은 타 지역(영덕 85%, 안동 62%)에 비해 낮았으나, 영업장의 극심한 피해 체감도(45%)가 세 개 지역 중 가장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의성 지역의 산업 구조적 특수성에서 찾아볼 수 있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첫째, 농업의 '사업장화'와 '자영업적 인식'의 결합이다. 의성은 경북에서도 전형적인 농업 지역으로, 1차 산업 외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실제로 의성의 농가인구 비중은 38.7%에 달해 경북 평균(13.8%)의 약 3배에 이른다. 지역내 총생산의 1/3분을 농업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지역 경제에 치명적이다. 특히 과수원과 저온 저장고 등은 단순한 농지를 넘어 수익 창출을 위한 핵심 영업장으로 인식된다. 수천만 원 상당의 방제기(SS기)나 트랙터 같은 현대식 농기계의 소실은 단순한 물건 피해가 아닌 '경영 장비의 손실'로 체감되며, 이는 스스로를 경영 주체로 여기는 농민들의 자영업적 경향을 반영한다.

둘째, 다년생 작물의 특성에 따른 장기적 소득 단절이다. 단년생 작물과 달리 사과, 자두 등 과수는 묘목 식재 후 정상 수확까지 5~7년의 소득 공백기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주민들은 당장의 시설 소실뿐만 아니라 향후 수년간 이어질 '매출 제로'와 영업 중단 상태를 모두 영업장 피해로 체감하고 있다. 즉, 의성 주민들에게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생계 기반의 원천적 붕괴로 인식되는 양상을 보인다.

[신체적 피해]

응답자 중 15%는 본인이 신체 부상을 입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산불 상황에서 주민들이 재산 피해뿐 아니라 신체적 위험에도 직접적으로 노출되었음을 보여준다. 가족이나 친척의 경우에는 대피 과정에서 낙상을 당하거나 연기를 흡입해 호흡기 질환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긴급히 대피하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신체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심층인터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의성 지역의 의용소방대원으로 일하는 의성-D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무릎 부상을 입었지만 적절한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해 자부담으로 수술을 받았다. 이는 재난 대응 과정에 참여한 주민이나 자원 활동가들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의성-K: "산불로 직접적인 부상을 입으신 분들도 주변에 많으세요. 산불을 끄러 가셨다가 굴러 떨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지셨거나... 피난 가시다가 넘어지셔서 발목이 부러지신 분도 있으시고."

의성-A: "그때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 계속 타고 있었고 막 물이 없어 가지고 냇가 가서 물 길러와서 막 붓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계속 유독가스를 마셨어요. 그래서인지 요즘에 마을에 폐기능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시는 분도 더 생기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이 뭔가 건강이 왠지 모르게 좀 어디 안 좋은 것 같아요."

의성-D: "계곡에 낙엽이 거의 가슴까지 쌓여 있었는데... 낙엽 속에 바위나 돌 틈 사이에 발이 끼어 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발이 낀 상태에서 넘어지다 보니까 무릎팍이 돌아간 거지. (..) "수술비가 지금 벌써 350에서 400만 원 가까이 들었는데... 소방서에서도 이거를 신청 자료를 내라 그러면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한도가 300만 원이래요... 나는 300만 원 차라리 안 받고 말겠다고. 자기네들은 면피를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생명 위협 경험]

응답자의 87%가 산불 당시 실질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는 재난 상황이 주민들에게 극도의 공포와 긴박함을 동반한,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당시 산불 현장에서 주민들을 가장 먼저 덮친 것은 뜨거운 열기보다 앞서 밀려온 유독가스와 연기였다. 실제로 많은 주민이 대피 과정에서 유독가스를 흡입하며 질식에 대한 공포를 겪어야 했다. 또한,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진 불길에 고립되는 상황은 죽음이 코앞에 닥쳤음을 실감하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의성-D: 가장 힘든 게 사람이 이래서 죽구나라는 거를 불에 타 죽는 게 아니고 질식해서 쓰러지면 여기서 죽는구나 그거를 아무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의성-G: "그분(마을주민)을 구해서 나올 때는 불이 양쪽 도로를 감싸고 있었고요. 거기를 탈피해 올 때 음..정말 저희들은 아 진짜..뭐 죽음을 무릅썼죠. 그냥 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의성-H: "불덩이 이런 게 막 그냥 그때 바람이 막 그냥 뭐 몇십 미터씩 날아가는 거야. 진짜 이거 진짜 어휴 장난이 아니더라니까"

[행정기관의 피해 정도 평가]

주민들은 행정기관의 피해 평가가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낮게 이루어졌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영업장 피해의 경우, 응답자의 74%가 피해가 과소평가되었다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주택 피해(63%)와 가재도구 피해(약 85%) 역시 행정 평가가 실제보다 낮다는 응답이 이어졌다. 이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피해와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평가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의성-K: "제가 정리한 피해 리스트는 300가지가 넘는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접수된 건 열 손가락이 안 돼요. 가전제품이나 귀중품은 입력 항목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의성-F: "정신없는 와중에 조사를 하니까 경운기랑 농기계 몇 개를 빠뜨렸어요. 나중에 말하니까 이미 (NDMS 입력이) 끝나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의성-A: "공무원들이 와서 그냥 보고 가는 정도였지, 제대로 된 조사나 주민 의견을 듣는 과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의성-E: "피해액이 대충 계산해도 5억에서 6억 정도인데, 재해 보상은 쥐꼬리만큼 나왔어요. 태양광 시설에 2억 넘게 투자했는데 한 번에 다 녹아내려도 보험 안 들었다고 보상 하나도 안 해줍니다. 갈잡치가 많잖아."

주민들의 체감과 행정의 평가 사이의 이러한 간극은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볼수 있다.

첫째, 정부 복구비 지원의 기준인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이 피해 규모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재난 발생 시 지자체는 주민 신고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NDMS에 피해 내역을 입력한다. 그러나 농작물과 농업 시설, 필수 농자재를 비롯해 축산·임산물, 소상공인 피해, 산불로 인한 2차 피해 및 생활용품 등 다양한 피해 유형을 포괄할 입력 항목 자체가 시스템상에 미비하다 보니, 공식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또한, 대규모 재난 상황임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입력을 마쳐야 하는 촉박한 일정 때문에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번 산불 내내 제기됐다. 이에 의성주민대책위는 2025년 9월,

NDMS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정당한 재산권 보상이 가로막혀 있음을 지적하며, 행정의 불친절함과 미흡한 보상 체계에 항의하는 1인 시위와 대규모 이의신청 절차에 돌입하기도 했다.⁸⁰

둘째, 농촌 현장의 특수성이 보상 체계에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촌에 산재한 무허가 농업 시설이나 창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판매용 농산물과 수확물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가축이나 피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 역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셋째,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단가가 현실과 달리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이번 산불로 주택 피해를 입은 경우 전소 최대 9,600만 원, 반소 최대 4,800만 원, 세입자 최대 1,100만 원의 주택지원비가 지급됐다. 기존 사회재난의 경우 전소 때 최대 3,600만 원을 지원하던데 비하면 크게 높아진 단가이긴 하지만, 주택을 새로 짓기에는 여전히 많이 모자란 금액이기에, 실제 피해와 지원 금액 사이에 큰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소결]

의성 산불은 주민들의 물리적 터전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와 생계 기반을 포괄적으로 훼손하였으며, 피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위기 수준은 행정적 지표를 상회하고 있다. 세가지 측면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물리적 자산 손실을 넘어선 정서적 자산과 개인 역사의 단절이다. 주택과 가재도구의 전소는 단순한 재산상 손실에 그치지 않고, 고령층 주민들이 평생 보존해 온 영정 사진, 유품, 일기장 등 '대체 불가능한 추억의 물건'들을 함께 소멸시켰다. 젊은 세대와 달리 디지털 복원이 어려운 고령층에게 이러한 정서적 자산의 상실은 개인 역사의 영구적 삭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의 복구 논의는 주거 및 생계와 같은 가시적 피해에 집중되어 있어, 주민들이 겪는 무형의 상실감은 공적 보상 체계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생존을 위협하는 긴박한 현장 경험과 신체적 피해의 상존이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화마와 유독가스 속에서 실질적인 생명의 위협을 경험했으며, 이는 재난 당시의 공포가 단순한 주관적 느낌이 아닌 실제 생존의 위기에서 나온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피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부상이나 연기 흡입으로 인한 건강 악화, 그리고 진화에 참여한 의용소방대원 등의 부상 사례는 재난 대응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인적 피해로 이어졌음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가 미비하여 여전히 개인 부담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재난정보 시스템(NDMS)의 한계와 농촌 특수성의 배제이다. 행정기관의 피해 평가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 피해액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입력 항목이 생활가전, 귀중품, 농업 필수 자재 및 소형 농업 장비 등 현장의 다양한 피해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또한 무허가 농업 시설이나 미등록 수확물 등이 보상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고,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 단가가 적용됨에 따라 공적 보상액이 일상 회복을 위한 최소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3. 재해 직후 대피 및 임시거주 경험

[재난 직후 대피 경험]

⁸⁰ 경북종합뉴스, “의성군 산불 피해 주민들, NDMS 한계와 불친절한 행정 규탄!”, 2025.09.03

재난 문자 수신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약 31%는 재난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실제 인터뷰에서도 재난 정보 전달의 한계가 확인되었다. 의성-L의 경우 산불로 인해 휴대전화 기지국이 소실되면서 연락이 끊기는 상황을 겪었으며, 어떤 피해주민은 남편과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는 등 고립 상태에 놓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미 불이 마을을 집어삼킨 뒤에야 대피 문자가 도착한 경우도 있었다.

재난 관련 정보의 습득 방식에서는 이장이나 이웃을 통한 구두 전달에 의존했다는 응답이 77%로 나타났다. 실제 인터뷰에서도 주민들이 서로 통화를 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전달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며 대피했다는 증언이 확인되었다.

대피 과정에서 이용한 이동 수단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약 88%가 승용차를 이용해 대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본인 승용차나 농사용 포터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농촌 지역의 특성상 개인 차량이 실제 대피 과정에서 중요한 이동 수단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의성-K: "우리 마을 '사천1리 주민은 산불 확산됐으니까 인근 체육관으로 피신하세요 대피하세요'라는 문자는 오후 5시에 산불이 우리 마을에 휩싸인 다음에 받았는데 그 전까지는 (...) 산불이 어디 정도까지 오고 있다는 감각은 있었던 거죠. (마을이 탄 건 3시쯤인데 문자는 5시에 옴)"

의성-G: "재난 문자 하나도 발송하지 않았고요. 제 핸드폰에 찍히지 않았고요. 누구 하나 대피 명령도 하지 않았고요. 정말 산불이 났을 때 제가 우리 면장님을 불렀는데 우리 면장님께서선 올라오시다가 도망을 가버렸고요."

의성-I: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서로 아는 사람끼리 통화를 해가면서 어느 쪽으로 못 가니 까 어느 쪽으로 빠지자 어느 쪽으로 빠지자 이렇게 마을 주민 자체 내로 통화하면 서 다 피해 나갔어요. 그 다음에 차가 없어서 고립된 분들은 누가 아직 못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 차로 가서 불구덩이 속에서 예 그래서 나가다가 잘못해서 죽을 뻔한 사람도 있었고요."

의성 산불 당시 재난 문자 수신율은 69%로 안동(70%)과 유사한 수치를 기록했으나, 실제 문자를 통해 대피 정보를 확인한 사례는 39건에 그쳤다. 반면 마을 방송이나 주민 간 전파를 통한 정보 획득은 69건으로 집계되어 안동보다 전통적 전달 방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난 문자의 외형적인 수신율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피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낮았음을 의미하며, 행정 시스템의 시간적 지연과 산불로 인한 기지국 전소 등 물리적 통신망 인프라의 붕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재난 관리 체계가 지닌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기지국 소실과 같은 물리적 단절 상황에서 디지털 기반의 재난 문자 체계는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또 고령층이 밀집한 농촌의 인구학적 특성과 정보 소외 현상을 정교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재난문자가 구체적인 대피 지침을 신속하게 담아내지 못함에 따라, 주민들은 공적 시스템 대신 이웃 간의 연락이나 개인 차량 등 사적 자원에 의존해 불안정한 대피를 이어가야 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례는 주민들의 수용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주민의 자력 대피를 전제로 한 공급자 중심의 행정 패러다임이 재난 현장의 실제 상황과 충돌하며 나타난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는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는 현행 방재 체계가 지역적 특수성과 물리적 변수 앞에서 기능적 공백을 드러낼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임시대피소 경험]

임시대피소 거주 및 이동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24%는 마을회관을, 29%는 공공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피소를 3회 이상 이동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7%에 달해 재난 직후 대피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대피소 생활과 관련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사생활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응답과 위생 시설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의성군이 마련한 임시대피소가 재난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능은 수행했으나, 대피 생활 속에서 이재민들이 겪는 정서적 고통과 신체적 불편을 해소하려는 수요자 중심의 배려는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의성-E: "대피소에서는 잠도 오지도 않고, 잠도 올 수도 없고. 시끄럽고 뭐 복잡하고 춥고. 이 저 환풍기 소리에 마, 잠도 잘 수도 없고 고달파, 있지도 못 해."

의성-K: "체육관에 바로 샤워 시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샤워 시설을 뭐 씻으려면 또 저 위에까지 또 올라 가야되고 그래서 이제 좀 일상생활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긴급 물품 및 정보 제공]

임시대피소에 머무르는 동안 재해 현황, 복구 현황, 보상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정보 제공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약 54%가 '매우 적절하지 않았다', 20%가 '대체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약 17%는 '보통이다', 7%는 '대체로 적절했다', 약 2%는 '매우 적절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임시대피소 생활 과정에서 재난 상황과 복구 및 보상 관련 정보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식한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의성-C: "물과 김밥을 나눠주고 하는 건 있었지만 그 이후에 그냥 그냥 대피소인 거죠. 그냥 대피소 산불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그런 거와는 상관없어."

의성-K: "일단 행정당국에서 정보 제공을 직접 구두로 한 거는 없었고요. 한 두꺼운 책자 재난 안전 책자 두꺼운 책자를 비치해 놨어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글자 포인트도 10포인트고 그 어르신들이 접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 소위 말하면 그냥 컨트롤 타워가 없었고."

의성-H: "누구 하나가 관계자 공무원들이 와서 그거 설명해 준 것도 없고 전혀 못 들었지. (...) 산불 소식은 이발소에서 얘기가 다 나와요. 거기는 사랑방이여. 어디 면에는 뭐가 다 탔더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우리 동네 분들도 이런 방법도 없었고 이장님도 그것까지는 모르지"

임시대피소 체류 중 행정기관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 의성 지역 응답자의 74%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은 안동(53%)이나 영덕(51%)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로, 의성 피해 주민들이 겪은 정보 소외 현상이 타 지역보다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의성 지역 피해 주민들의 낮은 정보 만족도는 재난 관리 시스템이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시사하며,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현장 책임자의 부재로 인한 정보 전달 체계의 단절이다. 재난 발생 시 임시대피소는 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당시 현장에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안내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였다. 행정 인력이 물품 전달 등 단기적인 구호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머물렀을 뿐, 재난의 진행 상황이나 복구 계획을 상시 공유할 전문 인력이 배치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은 심리적 고립감과 정보의 공백을 경험하였다.

둘째, 고령층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전달 방식이다. 초고령 지역이라는 인구학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보 제공 방식은 공급자 편의 위주의 일방향적 형태에 머물렀다.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직접적인 대면 설명 대신, 가독성이 낮은 작은 글씨로 인쇄된 두꺼운 매뉴얼을 비치하는 등 경직된 방식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정보 제공은 행정적 문해력이 낮은 고령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침으로 기능하기 어려웠으며,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보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임시주택]

임시주택 거주 여부를 살펴보면, 3개 지역 전체 응답자의 약 63%가 현재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의성 지역은 50%로 전체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앞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의성은 극심한 주택 피해 체감(47%)이 타 지역(영덕 85%, 안동 62%)에 비해 낮아 산불 이후 임시주택으로 이동한 주민이 전체 평균에 비해 적었기 때문이다.

임시주택의 위치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73%가 마을 인근에 설치된 임시주택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성 지역 역시 72%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산불 이전에 살던 집터와 인접한 지역에 설치된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의성 지역이 약 26%로 전체 평균(2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업인구가 많다보니 기존 생활권과 가까운 공간에서 거주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임시주택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의성 지역의 만족도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경우 '매우 만족스럽지 않다'와 '대체로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각각 27%로 나타난 반면, 의성 지역에서는 각각 약 36%와 33%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임시주택 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의성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시주택 생활에서의 불편 사항을 복수응답으로 살펴보면 '좁다'는 응답이 전체와 의성 지역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밖에도 환기 부족, 내부시설 불편, 마당 없음 등이 주요 불편 사항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임시주택의 공간 규모와 주거환경이 장기 생활을 고려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임시주택 제공 기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2년 이상'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전체 67%, 의성 지역 71%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주거 복구와 생활 회복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임시주택이 아닌 다른 거주지에 머물고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큰 불편 사항을 살펴본 결과, 의성 지역에서는 '고립감 등 심리적인 고통'이 약 29%로 전체 평균(약 1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난 이후 주거 환경의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 어려움 또한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의성 지역은 임시주택 거주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편이지만 임시주택 거주자의 생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주거 환경과 심리적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함께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상당수 응답자가 임시주택 제공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재난 이후 주거 회복 과정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6. 임시주택에서의 생활은 만족스럽습니까?

| 구분 | (사례수) | 매우 만족스럽지 않다 | 대체로 만족스럽지 않다 | 보통이다 | 대체로 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 |
|----|-------|-------------------|--------------------|------|-------------|------------|
|----|-------|-------------------|--------------------|------|-------------|------------|

| | | | | | | |
|----|-------------------------------|---------------|---------------|---------------|---------------|-------------|
| 전체 | 179 ⁸¹ (100.0%) | 49 (27.4%) | 48 (26.8%) | 48 (26.8%) | 31 (17.3%) | 3 (1.7%) |
| 의성 | 42 (100.0%) | 15 (35.7%) | 14 (33.3%) | 9 (21.4%) | 3 (7.1%) | 1 (2.4%) |

표7. 임시주택 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구분 | 이웃의 소음 | 환기/통풍 | 내부시설 (난방, 이염서, 전기온수기 등) | 좁다 | 마당없음 | 마을회관/경로당이 멀다 | 사생활보호가 안된다 | 기타 |
|----|--------|-------|----------------------------|-----|------|--------------|------------|----|
| 전체 | 33 | 55 | 53 | 136 | 48 | 27 | 44 | 16 |
| 의성 | 7 | 17 | 11 | 28 | 9 | 7 | 8 | 4 |

표8. 임시주택이 아닌 거주지에 머물면서 가장 불편함을 느끼신 점은 무엇입니까?

| 구분 | (사례수) | 불편이 없다 | 물품 제공에서의 소외 | 고립감 등 심리적인 고통 | 기본시설이용 불편함(수도, 전기 등) | 기타 |
|----|------------------------------|---------------|----------------|------------------|-------------------------|---------------|
| 전체 | 83 ⁸² (100.0%) | 39 (47.0%) | 16 (19.3%) | 12 (14.5%) | 4 (4.8%) | 12 (14.5%) |
| 의성 | 21 (100.0%) | 9 (42.9%) | 4 (19.0%) | 6 (28.6%) | 0 (0.0%) | 2 (9.5%) |

의성-H: "거긴 좁은데 그런대로 버틸 만하고... 좀 좁으니까는 뭐라고 그럴까 저 애들이 오면은, 식구가 만약에 오면 잠자리가 없잖아요. 손주 애들이 굉장히 보고 싶은데 잘 데가 없으니까 (집으로) 가기가 바빠요."

의성-J: "딱 들어갔는데 전기 온수기에 물 받으니까 그게 똑 떨어져 갖고서는 다칠 뻔했어요. 이 스위치 끄는 저게 덜러덜러 덜러덜러 다 날림이야 날림. 그 조그만 7평짜리 집에 초인종이 왜 필요합니까? 그 돈 모아갖고 비가림이나 좀 해주지."

의성 -I: "저희가 지금 난방 시설이 전기예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기세가) 거의 20만 원 전후로 나온대요. 농지랑 과수원이 다 타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겨울에 그거를 헤쳐 나가는 게 생활고가 힘들 거 같아요.(...) 또 창고를 다시 동네 가서 보시면 새로 집 지은 집들이 몇 집 있어요. 그분들도 그거 그냥 자기 돈으로 그냥 할 수 없이 지은 거예요. 물건을 당장 넣어야 되니까 농기계에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나중에 보면 그것도 다 불법인 거예요."

의성-K: "대략 한 3m 정도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에서 얘기 좀 크게 하거나 TV 틀어 놓으면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방음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고 지내는 데 굉장히 조심스럽죠."

의성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임시주택 거주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주택 거주자의 부정 응답률이 69%에 달해 안동(약 59%)이나 영덕(43%)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임시주택 외 거처에 머무는 주민들의 심리적 고통 비중(약 29%) 역시 안동(11%) 및 영덕(약 6%)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임시주택의 보편적인 구조적 한계와 의성 지역만의 특수한 상황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약 7.5평 규모의 임시주택은 긴급 거처로서의 기능에 치중한 나머지, 장기 거주 시 요구되는 주거 품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협소한 공간과 수납 시설의 부족은

⁸¹ 임시주택 거주자 180명 중 1명 결측 발생함.
⁸² 임시주택 거주자 106명 중 23명 결측 발생함.

주거 쾌적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위축시키며, 부실한 마감과 취약한 단열은 안전사고 위험 및 난방비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고통을 야기한다. 여기에 미흡한 방음 시설로 인한 사생활 침해까지 더해지면서 주민들은 이전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정서적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보편적 문제와 더불어, 의성 지역에서 유독 높은 불만족과 고립감이 나타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으로 분석해볼 수 있다.

첫째, 정보 및 공간적 단절로 인한 공동체 결속력의 약화이다. 행정의 공식 안내보다 비공식 경로에 의존하는 정보 체계의 특성상, 임시주택 단지 외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복구 정보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주민 소통의 거점이었던 마을회관의 전소는 물리적 응집력을 무너뜨렸으며, 거주지 분산에 따른 유대 관계의 약화는 단지 외 거주자들에게 깊은 심리적 고립감을 안겨주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둘째, 영농 거점 기능을 상실한 협소한 주거 환경과 보관 공간의 부재이다. 과수 농가가 많은 의성에서 집은 단순한 거처를 넘어 농기계와 자재를 보관하는 핵심 영농 거점이었으나, 전소 후 제공된 7.5평 임시주택은 기본적인 가재도구조차 수용하기 힘들 만큼 협소하다. 농촌 창고의 대다수가 무허가라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별도의 보관 공간이 없어 새로 구입한 고가의 농기계는 노지에 방치되어 망가지고 있으며, 좁은 방 안에는 구호 물품이 쌓여 잠만 겨우 자는 열악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셋째, 장기적 생계 위협과 행정 불통이 초래한 심리적 무력감이다. 과수 농가 중심의 지역 특성상 주거 상실은 곧 향후 5~7년간의 소득 기반 붕괴를 의미하며, 이러한 미래 불확실성이 높은 PTSD 위험군(90.3%) 형성의 배경이 되었다. 여기에 주민 대책위원회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행정 당국의 일방향적 대응이 더해지면서, 주민들이 복구의 주체가 아닌 수동적 객체로 전락했다는 절망감이 주거 환경에 대한 극심한 불만족으로 투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조사 표본의 특수성에 따른 데이터 해석의 유의점이다. 본 조사는 의성주민대책위가 기획과 수행에 참여함에 따라 행정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실제보다 비중 있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의성주민대책위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주민들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과소 표집되었을 우려가 있어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응답자의 80%가 장기 거주민이라는 점에서 지역 사회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포착했다는 실질적 가치를 지닌다.

[소결]

의성 산불 대응 과정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공공 대응 시스템이 재난의 긴박한 현장성과 피해 주민의 인구학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작동했음이 드러난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첫째, 정보 접근성 격차와 상황 전파 시스템의 실효성 부족이다. 공공의 상황 전파 체계는 산불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한계를 보였다. 기지국 소실 등 물리적 제약과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재난 문자 위주의 대응은 정보 전달의 사각지대를 발생시켰다. 특히 불길이 이미 마을에 도달한 뒤에야 전달된 대피 안내는 행정의 상황 인지 속도가 현장의 긴박함을 따라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주민 상당수가 이웃 간의 구두 전달 등 비공식적 경로에 의존해 대피해야 했던 현실은 국가 상황 전파 시스템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둘째, 수용 중심의 대피소 운영과 일상적 편의 보장의 미흡이다. 임시 대피소 운영은 피해 주민의 심리적 안정이나 생활의 연속성을 보장하기보다 물리적 수용 자체에 치중된 경향을 보였다. 짧은

기간 내 잦은 장소 이동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었으며, 사생활 보호가 취약한 구조와 위생 시설 부족은 피해 주민들의 피로도를 가중시켰다. 특히 환풍기 소음이나 샤워 시설 미비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가 확보되지 않은 환경은 재난 구호가 단순한 생존 지원을 넘어 피해자의 존엄과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셋째, 공급자 중심의 일방향적 소통과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재난 복구 및 보상과 관련된 정보 제공 과정에서 행정 당국과 주민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 대다수가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해 부적절함을 느꼈다고 응답한 결과는 공급자 위주의 행정 처리가 주민과의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고령의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매뉴얼 중심의 안내나 구체적인 복구 계획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물품 위주의 구호는 피해 주민들을 복구 과정의 능동적인 주체가 아닌 수동적인 객체로 머물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4. 국가 대응 및 제도적 지원 평가

[정보 제공 및 만족도]

재난 발생 이후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재난 피해 복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은 방식으로는 이장을 통해 들었다는 응답이 44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웃을 통해 들었다는 응답이 27건로 뒤를 이었다. 문자 메시지·우편·개인 전화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응답은 20건, 공무원을 통해 직접 들었다는 응답은 12건으로 나타났으며, 공고문이나 책자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응답은 1건에 그쳤다. 이는 재난 관련 정보 전달이 공식적인 안내 체계보다 이장이나 이웃 등 지역 공동체를 통한 비공식적 경로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재난 이후 정부 및 지자체의 정보 제공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불만족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9. 재난 피해 관련 정보 제공 만족도

| 구분 | 사례수 | 매우 만족하지 않았다 | 대체로 만족하지 않았다 | 보통이다 | 대체로 만족했다 | 매우 만족했다 |
|-------------|----------------|---------------|---------------|---------------|-------------|-------------|
| 피해평가 | 95 (100.0%) | 64 (67.4%) | 17 (17.9%) | 8 (8.4%) | 4 (4.2%) | 2 (2.1%) |
| 복구비 | 95 (100.0%) | 63 (66.3%) | 15 (15.8%) | 11 (11.6%) | 5 (5.3%) | 1 (1.1%) |
| 구호금 | 92 (100.0%) | 51 (55.4%) | 16 (17.4%) | 15 (16.3%) | 7 (7.6%) | 3 (3.3%) |
| 향후 복구계획 | 90 (100.0%) | 62 (68.9%) | 10 (11.1%) | 13 (14.4%) | 4 (4.4%) | 1 (1.1%) |
|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 88 (100.0%) | 57 (64.8%) | 13 (14.8%) | 12 (13.6%) | 4 (4.5%) | 2 (2.3%) |

의성-K: 처음에는 대책위 활동을 못하게 좀 훼방을 많이 냈어요. 그 행정에서 그래서 이제 대책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줄 건데 알아서 챙겨주고 알아서 지원을 해 줄 건데 뭐 하러 대책위 같은 거 하나 시끄럽게 뭐 이런 얘기들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 제 좀 전달을 하거나 그랬죠."

의성-J: "면장 자체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책위원회 이 모임 이런 것도 이 면장 자체에서 못하게 해. (...) 안평면에서 이런 걸 하면 군수가 불러들인데 면장. 왜 이런 거 막지 못하고

하냐고."

의성-C: "설명이 없었죠. (...) 지자체에서 그 정보를 교육을 해 주고... 당신이 그 제출한 피해 내용은 이거다. 그래서 그거와 이거를 비교 산출을 해봐라...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 사람들이 돈을 받고 좋아한 게 아니고 당황을 했 잦아요. 돈이 뭘 돈이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의성-K: "설명을 받지 못했고 제가 인터넷 뒤졌어요. (...) 행정에서 이런 설명이나 간담회나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과정들은 없었어요. (...) 돈이 한 달 있다가 5월 말부터 이 돈이 좀 들어왔는데 이게 뭐 주택 파손비 해서 얼마 농기계 파손비 해서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주거비 산불 농업복구 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들어왔어요."

의성-J: "통장으로 얼마가 들어갔으니까 이걸 어디서 준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런 것도 그냥... 어디에서 가 어떻게 해야 돼 이 돈이 뭘지 이 돈이면 전혀 모르는 거야."

피해 평가(85%), 복구지원비(82%), 향후 복구계획(80%) 등 모든 정보 제공 항목에서 의성의 불만족 응답이 80%를 상회하며 3개 지역 중 가장 높았다. 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주민 대표성 인식의 차이로 인한 폐쇄적 소통 구조이다. 산불 발생 직후 행정 당국의 대응과 정보 제공이 지체되자 피해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의성군청은 타 지역에 비해 유독 대책위에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로 인정하기보다 기존의 관내 인적 네트워크만을 소통 수단으로 고수하였다. 이러한 폐쇄적 구조는 실질적인 피해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핵심 정보가 적시에 전달되지 못하는 정보 소외 현상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 지원금 산출 근거의 불투명성과 설명 책임의 미흡이다. 주민들의 불만을 심화시킨 결정적 요인은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행정 처리가 불투명했다는 것이다. 주택 복구비나 농업 복구비 등은 세부 항목에 대한 상세한 안내 없이 총액 위주로 지급되었고, 그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사과와 자두처럼 자산 가치가 높고 농기계, 저온 저장고 등 피해 항목이 복잡한 과수 산업 중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주민들이 지원금의 성격을 스스로 추정해야 했던 상황은 행정의 설명 책임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셋째, 재난 복구와 의성주민대책위 활동의 병행에 따른 피해 주민의 이중적 고통이다. 행정이 의성주민대책위를 협력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소통을 거부함에 따라, 주민들은 생업 복구와 피해 수습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행정을 상대로 정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직접 뛰어들어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 특히 과수농민들이 5~7년의 소득 공백이라는 절박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을 단순히 정보를 기다리는 수혜자로만 간주하는 시혜적 접근은 주민들의 피로도를 극대화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핵심적 요인이 되었다.

[구호서비스 및 물품 지원]

임시대피기간 이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한 구호서비스와 물품 제공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만족과 불만족이 혼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호서비스 및 물품 제공에 대해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약 29%,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5%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보통이라는 24%, 대체로 만족한다는 약 20%, 매우 만족한다는 2%로 나타났다.

또한 구호지원(물품, 서비스 등)의 배분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매우 공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약 24%, 대체로 공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약 22%로 나타났다. 반면 보통이다는 30%, 대체로 공정했다는 18%, 매우 공정했다는 약 7%로 나타났다. 이는 구호지원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일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10. 구호서비스 및 물품 제공 만족도

| 구분 | 사례수 |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대체로 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 |
|-------------------|----------------|---------------|---------------|---------------|---------------|-------------|
| 구호서비스 및 물품 제공 만족도 | 91 (100.0%) | 26 (28.6%) | 23 (25.3%) | 22 (24.2%) | 18 (19.8%) | 2 (2.2%) |

표11. 구호지원 배분 공정성

| 구분 | 사례수 | 매우 공정하지 않았다 | 대체로 공정하지 않았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공정했다 | 매우 공정했다 |
|-------------|----------------|---------------|---------------|---------------|---------------|-------------|
| 구호지원 배분 공정성 | 93 (100.0%) | 22 (23.7%) | 20 (21.5%) | 28 (30.1%) | 17 (18.3%) | 6 (6.5%) |

의성-G: 물품을 나눠 줄 때 어느 동네는 냉장고가 507리터, 520리터까지 가는 걸 봤는데, 어느 동네는 317리터가 갔어요. 크기가 상당히 차이 나서 바꿔 달라고 하니깐 절대 안 된대요.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제가 되게 따지니까 (관에서) '이장님 거 한 개 하고 국장님 거 한 개는 큰 거 줄게'라고 해요. 제가 '노(No)'라고 했어요. 당신들 주민들하고 싸움 시킬 일 있느냐고요."

의성-G: "산불 피해 주민 중에 전소자들에게는 창고를 3, 3 곱하기 3 그러니까, 그런 창고를 컨테이너 창고를 주기로 도지사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 어느 날 영양에 가보니까 그 지역에는 창고가 70%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의성군청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했죠. 우리 창고가 왜 안 나올까? (공무원 답변이) 아니 우리 군에는 안 주게 돼 있습니다. 그냥 안 주게 했습니다.(...) "이게 의성군 재정으로 주는 게 아니고 도비로 지원하는 건데, 왜 의성군에서 준다 안 준다는 판단을 하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나? 아니에요. ... 제가 백방으로 수소문해 보니까 의성군에서 그냥 반력을 해버렸어요. 창고를 도로. 도 예산이 있느냐고 가서 따져보니까, 그 예산은 아예 없어서 버렸어요."

의성-F: "한 형님은 평상시에 여기 안 살고 외부에 있다가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집(등기된 집)이 탔어요. 그 집은 보상이 다 됐고, 실제 사는 우리는 하나도 안 됐어요. 형평성이 안 맞죠."

의성-B: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었던 건데 자꾸 안 되는 쪽으로 꼬투리를 잡아요. 담당 공무원들은 막 물어요. 그러면 어디서 식사했죠? 병원에서 하고 몸을 보호하느라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잠을 잤다. 하면 공무원은 '그게 바로 실거주입니다. 거기서 실거주하셨잖아요.' 그렇게 황당한 사례에 맞지 않는 말을 갖다 대면서 안 된다."

의성-J: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니 본인이 직접 와서 내야 된대요.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 보고 오라 가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담당자한테 와서 가져가 달라 해도 도저히 안 된대요."

의성 산불 이후 제공된 구호 서비스와 물품 배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으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배분의 공정성 측면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행정의 자의적인 판단과 경직된 기준이 주민 간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해볼 수 있다.

첫째, 행정의 자의적 판단과 독단적 운영에 따른 지원 공백이다. 의성 산불 구호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의성군의 객관적 원칙 없는 자의적 행정 운영이다. 마을별로 구호 물품 규격을 다르게 배정하여 주민 간 갈등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항의하는 대표자에게만 선별적 혜택을 제안하며 입막음을 시도하는 등 공적 구호 체계를 행정 편의를 위한 협상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이러한 독단성은 상급기관이 지원한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도비 지원이 확정된 '컨테이너 창고' 사업을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반려하거나 예산을 불용 처리한 것은 재난 회복에 대한 의성군의 소극적 의지를 보여준다. 결국 가용한 자원이 있음에도 행정기관이 자의적 판단으로 주민의 수혜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지자체가 구호의 조력자가 아닌 행정적 장벽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 농촌의 실거주 현실과 법적 형식 논리 사이의 괴리이다. 수십 년간 세금을 납부하며 실제 거주해 온 주민들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형식적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실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이 서류상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는 행정 시스템이 농촌 현장의 특수성과 실질적인 점유 관계를 포착하지 못하고 서류상의 등기 여부에만 매몰되어 발생한 결과이다. 이러한 형식주의적 보상 기준은 평생 터전을 일궈온 원주민들에게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다.

첫째, 재난 지침의 경직된 해석과 피해자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임시주택 지원 등 생존과 직결된 사안에서 행정 지침이 주민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경직되게 적용되었다. 병원 치료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부재를 실거주지 이탈로 간주하여 지원을 거부하는 사례 등은 재난 피해자의 특수한 처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처럼 지침을 자의적이고 협소하게 해석한 결과,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는 추락했고 주민들의 불공정 인식 체감은 심화되었다.

[복구지원비 수령 및 적정성]

복구지원비가 피해 복구에 충분한지에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3%가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18%는 대체로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은 약 8%, 대체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1%로 나타났으며 매우 충분하다는 응답은 없었다. 이는 복구지원비가 실제 피해 복구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주민이 대부분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보상금액이 부족한 경우 어떤 항목에서 부족한지를 묻는 질문(1순위 응답)에서는 주택이 34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수 및 과수농지 피해가 20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농지 10건, 농기계 5건, 영농도구 4건, 영업장 회복 3건, 가재도구 및 살림물품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상금 부족 문제가 특히 주거 복구나 농업 기반 회복과 관련된 영역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12. 복구지원비 충분성 인식

| 구분 | 사례수 | 전혀 충분하지 않다 | 대체로 충분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대체로 충분하다 | 매우 충분하다 |
|-------|----------------|---------------|---------------|-------------|-------------|-------------|
| 복구지원비 | 79 (100.0%) | 58 (73.4%) | 14 (17.7%) | 6 (7.6%) | 1 (1.3%) | 0 (0.0%) |

| 지역 | 구분 | 주택 | 가재도구, 살림물품 | 과수 및 과수농지 | 영업장 회복 | 농기계 | 농지 | 영농도구 | 주택, 가재도구, 살림물품 |
|----|-----|-----|------------|-----------|--------|-----|----|------|----------------|
| 의성 | 가중치 | 123 | 34 | 61 | 14 | 18 | 26 | 23 | 0 |
| | 1순위 | 34 | 1 | 20 | 3 | 10 | 10 | 4 | 0 |
| | 2순위 | 2 | 21 | 4 | 12 | 12 | 10 | 8 | 0 |
| | 3순위 | 0 | 5 | 4 | 7 | 18 | 4 | 21 | 0 |

표13. 복구지원비가 부족한 이유 1~3순위에 대한 가중치 환산표**가중치는 다중순위형 응답에 대한 각 빈도값에 1순위: 3점, 2순위:2점, 3순위:1점을 가중한 값.

의성-C: "사과나무는 다년생이니까... 한창 수확을 보던 나무에 불이 나서 수확을 보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 몇 년 동안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건지..."

의성-L: "이 나무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거의 4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 이 몇 년 간의 소득이 없어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보상이 없고."

의성-F: "과수원 2천 평 탄 것에 대해... 한 2천여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 그 외에는 소소하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들어온 거 다 합해서 한 하여튼 2천만 원 조금 넘고... 집에 대한 거는 이제 한 푼도 이제 안 됐죠."

의성-I: "1년 부부 소득이 3700(만원) 이상 되면은 맞아 보상에서 제외돼요. ... 그래서 난 보상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의성 지역의 복구지원비 수령률이 타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약 72%) 현황은 행정의 불투명한 정보 제공과 농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의 경직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석해볼 수 있다.

첫째, 행정의 설명 책임 방기와 폐쇄적 소통으로 인한 복구 절차의 병목 현상이다. 의성 지역의 복구지원비 수령률이 타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이유는 지원금 산출 근거에 대한 정보가 철저히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산정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고(63%) 확인 방법조차 인지하지 못한(약 54%) 상황은 주민들이 정당한 수령 절차를 밟는 데 큰 장애가 되었다. 특히 행정 당국이 피해주민들로 구성된 의성주민대책위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이장 네트워크만을 소통 창구로 고집하면서, 실질적인 피해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핵심 정보가 적시에 전달되지 못하는 소외 현상이 고착되었다.

둘째, 법적 형식주의에 가로막힌 보상 체계와 '복구의 역설'이 초래한 사각지대이다. 무허가 건축물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약 18%), 행정이 실거주보다 등기 및 허가라는 법형식적 논리를 우선하면서 수십 년간 거주해온 원주민들이 보상에서 대거 누락되었다. 여기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경직된 평가 기준이 더해져 가전, 가구, 농기계 등 생활과 생산에 직결된 자산이 대거 배제되었다. 특히 무허가 주택의 경우 '기초 공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이라는 지침이 적용되면서, 초기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영세 농민들이 복구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차단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셋째, 지역 중추 산업인 고부가가치 과수 농업의 특수성을 간과한 지원의 한계이다. 의성군 지역내총생산의 1/3을 차지하는 농업, 특히 사과·자두·마늘 등 핵심 작물 재배지가 이번 산불로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과수 농가의 경우 식재 비용보다 수확까지 소요되는 5~7년의 '소득 공백기'가

더 치명적인 손실임에도, 현행 보상은 당장의 물적 소실에만 집중되어 있다. 산불 재난이 단순한 자산 소실을 넘어 지역 경제의 장기적 침체와 농가 생존권 위협으로 직결되지만, 현행 체계는 이러한 산업적 특수성을 반영한 생계 소득 보전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재난 관리 시스템 전반의 보편적인 한계 역시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보상 단가는 국가 지원이 '원상복구'가 아닌 '최소 생계 유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며, NDMS의 경직된 평가로 인해 세입자와 영세 농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보상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또한 까다로운 의료 지원 조건과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 설계비, 감리비 등 과도한 행정 부대비용은 피해 주민들이 재난 극복을 위해 오히려 새로운 채무를 져야 하는 이중고를 초래하고 있다.

[민간 성금]

민간으로부터 모아진 성금의 규모와 배분에 대한 정보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전혀 알지 못한다 약 73%, 대체로 알지 못한다 약 16%로 나타나, 주민 대부분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대체로 알고 있다는 10%, 매우 잘 알고 있다는 1%에 그쳤다.

성금 규모 및 배분 정보를 알게 된 경로는 이웃 7건, 기타 7건, 이장 6건, 언론 및 방송 매체 6건 문자메시지·우편·전화 2건, 공무원 2건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을 통해 들었다는 응답은 없었다.

성금 배분 결정 과정에서 피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약68%, 대체로 반영되지 않았다 약 17%로 나타나, 다수 주민이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보통이다 10%, 대체로 반영되었다 5%로 나타났으며 매우 잘 반영되었다는 응답은 없었다.

표14. 성금 규모 및 배분 정보 인지 정도

| 구분 | 사례수 | 전혀 알지 못한다 | 대체로 알지 못한다 | 대체로 알고 있다 | 매우 잘 알고 있다 |
|----|----------------|---------------|---------------|---------------|-------------|
| 의성 | 96 (100.0%) | 70 (72.9%) | 15 (15.6%) | 10 (10.4%) | 1 (1.0%) |

표15. 성금 정보 인지 경로 (복수응답)

| 구분 | 사례수 | 가족으로부터 들었다 | 이웃으로부터 들었다 | 이장을 통해 들었다 | 문자·우편·전화 등을 통해 받았다 | 언론 및 방송매체 | 공무원을 통해 직접 들었다 | 기타 |
|----|-----|------------|------------|------------|--------------------|-----------|----------------|----|
| 의성 | 30 | 0 | 7 | 6) | 2 | 6) | 2 | 7) |

표16. 성금 배분 과정에서 피해 주민 의견 반영 여부

| 구분 | 사례수 |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 대체로 반영되지 않았다 | 보통이다 | 대체로 반영되었다 | 매우 잘 반영되었다 |
|----|----------------|---------------|---------------|---------------|-------------|-------------|
| 의성 | 96 (100.0%) | 65 (67.7%) | 16 (16.7%) | 10 (10.4%) | 5 (5.2%) | 0 (0.0%) |

의성-K: "성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하는 그 구조 논의 구조의 대책위에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 오히려 그냥 저기 녹색 어머니회 이정협의회 노인회 뭐 이런 데서... 외 부적인 외부 사람들인 거죠."

의성-H: "군수님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대책위 그 위원회에 우리 대책위 사람들 5명을 넣어 달라, (그럼) 안 된다(고 답변을 받는다). (...) 다른 지역에 가 보니까 다 들어갔어요. 성금위원회에 청송, 영덕, 영양 다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의성군만큼은 절대로 거기(성금위원회)에 넣어줄 수가 없다. 왜 그럴까? 저는 생각이 그렇죠. (의성군청이) 감추기 위해서."

성금 배분 결정 과정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의성에서 84%로, 영덕(65%)과 안동(74%)보다 높아, 행정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불만이 컸음을 의미한다. 성금 배분에 대해 타지역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던 것은 소통의 부재와 행정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으로 분석해볼 수 있다.

첫째, 성금 운용 정보의 불투명성과 정보 불균형이다. 피해 주민 상당수는 전국에서 모인 성금의 전체 규모나 구체적인 배분 기준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성금 운용 현황을 상시적으로 공유하는 공적 소통 체계를 충분히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은 주로 의성주민대책위의 활동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발소와 같은 일상의 사랑방에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비공식적인 대화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는 재난 구호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할 주민들의 알 권리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의사결정 구조 내 피해 당사자 참여의 배제이다. 성금 배분 원칙을 논의하는 위원회 구성에서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피해 주민 대표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주민들은 당사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회 참여와 참관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행정 당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 관변 단체장이나 공무원 위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폐쇄적 구조는 "누가 가장 절실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린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현장의 구체적인 필요를 배분 계획에 세밀하고 실효성 있게 반영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타 지자체 대비 경직된 소통 구조와 행정의 불통이다. 인근 지역이나 유사한 재난을 겪은 타 지자체의 경우, 성금위원회에 피해주민대책위의 참여를 보장하며 민관 협치 모델을 구축한 선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의성군은 주민대책위의 공식적인 대화 요구와 면담 신청을 수차례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상대적으로 경직된 소통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불통'의 행정은 주민들로 하여금 행정 당국이 피해 사실을 감추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며, 주민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넷째, 배분 결정의 투명성 미비에 따른 신뢰 저하이다. 성금 배분 과정에서 피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에 그치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지원금이 구체적인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 없이 일괄적으로 입금되는 방식은 주민들에게 당혹감을 안겨주며, 자신의 피해가 정당하게 평가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만든다.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당사자의 참여가 가로막힌 상황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의 문제를 넘어, 재난 이후 지역 공동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분석된다.

[산불 특별법 인식]

2025년 9월 제정된 산불특별법의 내용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들어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가 약 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28%로 나타났다. 반면, 어느 정도

내용 알고 있다 14%, 매우 잘 알고 있다 3%로 나타나 산불특별법 내용에 대한 주민 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산불특별법에 피해 주민 의견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5%, 대체로 반영되지 않았다 50%로 나타났다. 반면 보통이다 약 13%, 대체로 잘 반영되었다 6%, 매우 잘 반영되었다 6%로 나타났다.

피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실질적 피해 평가 계획 부족이 1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계 회복 내용 부족 7건, 산림과 생태계 회복 내용 부족 5건, 마을 재건 관련 내용 부족 5건, 기타 4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17. 산불특별법 인식 정도

| 구분 | 사례수 | 전혀 들어본 적 없다 | 들어봤으나 내용 모른다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매우 잘 알고 있다 |
|----|----------------|---------------|---------------|---------------|-------------|
| 의성 | 93 (100.0%) | 26 (28.0%) | 51 (54.8%) | 13 (14.0%) | 3 (3.2%) |

표18. 산불특별법에 피해 주민 의견 반영 여부

| 구분 | 사례수 |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 대체로 반영되지 않았다 | 보통이다 | 대체로 반영되었다 | 매우 잘 반영되었다 |
|----|----------------|--------------|--------------|--------------|-------------|-------------|
| 의성 | 16 (100.0%) | 4 (25.0%) | 8 (50.0%) | 2 (12.5%) | 1 (6.3%) | 1 (6.3%) |

표19. 피해 주민 의견이 미반영되었다고 판단하는 이유 (복수응답)

| 구분 | 사례 수 | 실질적 피해 평가 계획 부족 | 생계 회복 내용 부족 | 산림·생태 회복 내용 부족 | 마을 재건 내용 부족 | 기타 |
|----|------|-----------------|-------------|----------------|-------------|----|
| 의성 | 33 | 12 | 7 | 5 | 5 | 4 |

의성-I: "특별법 통과됐다는 것만 알지 거기에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물어보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잘 몰라요. 시행령은 어떻게 이루어질 거다 이런 공문을 좀 만들어 배포해 주면 주민들이 알 수 있을 텐데..."

의성-K: "'사과를 다시 심어서 정상적으로 수확되는 기간까지라도 채무를 유예시켜 주거나 이런 금융 지원이 절무한데, 특별법 안에는 이런 농업 기반에 대한 지원 지침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의성-F: 특별법은 25일 날 통과가 되는데 한숨은 크게 푹 쉬더라고. (...) 이쪽을 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쪽이니 저놈들이니 옳은 방향으로 만들어졌겠나 라는 생각인데... 이 쪽에 의성 쪽이나 남동 쪽에 청동 쪽에는 지역구 의원들이 옳은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네들 항상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별로 기대는 없습니다."

의성-C: "특별법이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은 방향이 많이 빗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난개발 같은 게 우려가 많이 되고, 정경유착이 돼서 업자들이 돈을 빼먹는 식으로 진행될까 봐 걱정입니다."

2025년 9월 제정된 산불특별법은 초대형 산불 이후 일상 회복을 갈망하는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실제 법 체계와 세부 내용은 재난 당사자를 소외시킨 채 현장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공청회나 설명회 등 공적 소통이 미흡하여 주민들은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수혜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지원 결정권이 재건위원회에 일임되면서 주민 참여의 통로는 더욱 축소되었다. 특히 '재난 회복'을 명분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대목은 산림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정작 피해 주민에게 절실한 실질적 소실 보전이나 주거 복구비 지원은 부족한 반면, 대규모 리조트나 관광단지 조성 등 민간 투자 사업에 예산이 편중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민 없는 개발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특별법의 문제가 지역에 상관없이 보편적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의성 주민들이 상황을 타 지역보다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은, 현재 특별법에 담긴 내용이 농민의 생존 방식과 농촌의 공간적 특수성을 배제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과수 농가의 산업적 특성을 간과한 장기 소득 공백 대책의 부재이다. 의성의 주요 작물인 사과와 자두는 유목을 심은 후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5년에서 7년이 소요되는 다년생 작물이다. 그러나 현행 보상 지침은 당장의 물적 시설 지원에 치중되어 있으며, 정상 수확기까지 이어지는 소득 공백기 동안의 채무 유예나 금융 지원 같은 실질적인 생계 보전 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둘째, 농촌의 실거주 현실과 법적 형식 논리 사이의 심각한 괴리이다. 의성 지역에는 수십 년간 세금을 납부하며 실제 거주해 온 무허가 건축물과 농막형 주거지가 다수 존재하지만, 행정은 형식적 요건인 허가 여부를 잣대로 하여 이들을 보상에서 전면 제외하고 있다. 이더구나 서류상 요건을 갖춘 일부 외지인이 혜택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원주민들은 깊은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또 지하수 대공 시설이나 소규모 작업장 등 농업에 필수적인 시설들조차 면적 미달 같은 등을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복구보다 지역 개발을 우선시하는 행정 기조와 의사결정의 폐쇄성이다. 주민들이 협소하고 부실한 임시주택에서 생활고를 겪는 상황에서 발표된 대규모 관광 개발 계획은, 재난 복구의 우선순위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보다 지역 개발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또한 민간 성금 배분 과정에서 피해주민들로 구성된 의성주민대책위의 참여를 제한하고 관변 단체 위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폐쇄적인 행정 태도는 주민들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는 의성주민대책위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수행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행정 대응에 더 비판적이고 피해 정도가 더 심각하며 회복에 대한 욕구가 강한 주민들이 실태조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수치상으로 나타난 인식의 강도를 이해할 때 이러한 참여층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결]

의성 산불 발생 이후 전개된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 체계에 대해 주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불만족을 갖고 있음을 설문조사와 면담 결과 모두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자원 부족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재난 관리 시스템 전반에 깔린 '공급자 중심의 일방향성'과 '현장 실무와 제도의 괴리'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소통의 병목 현상과 의성군의 배타적인 태도다. 공식적인 안내 체계보다 이장이나 이웃 등 비공식적 경로에 의존하는 정보 전달 방식은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이 되었다. 특히 주민의 자발적 결사체인 의성주민대책위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기존 행정 네트워크만을 고집하는 의성군의 경직되고 배타적인 태도는 정보의 왜곡과 병목 현상을 초래했다. 지원금 산출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행정'과 성금 배분 과정에서의 당사자 배제는 주민들을 재난 복구의 주체가 아닌 수동적인 수혜자로 전락시켰으며, 이는 행정에 대한 깊은 불신과 소외감을 고착화시켰다.

둘째, 농촌 현실을 외면한 보상 기준의 경직성과 불공정성이다. 현행 복구 지원 체계는 '원상복구'가 아닌 '최소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설계되어, 실제 피해와 보상액 사이에 극심한 괴리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처리나 실거주 판정에서 법적 형식논리만을 앞세운 결과, 수십 년간 지역에 정주하며 납세 의무를 다해온 원주민들이 보상에서 배제되는 '행정적 소외' 사례가 속출했다. 또한 구호 물품 배분 과정에서 나타난 자의적인 차등 지급 의혹은 재난 구호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 지역 산업 특수성을 간과한 입법 및 시행령의 한계이다. 재난 회복의 법적 토대인 '산불특별법'조차 주민들의 불신 대상이 되고 있고 인지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수 농가의 소득 공백 문제나 미등록 농업 시설물 등 의성 농업 현장의 특수성이 시행령에 담기지 못하면서, 특별법은 현장의 목소리가 소외된 형식적 절차로 인식되고 있다. 법 통과 이후 주민의 삶보다는 위락시설 중심의 개발 계획이 우선시되는 경향은 피해 주민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안겨주며, 국가 지원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5. 주거 및 생계 회복

[주거 지위에 따른 경험]

재난 이전 주택의 소유 및 거주 형태를 살펴보면 자가주택(토지 소유)이 약 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토지 임대의 자가는 약 3%, 반전세·월세는 4%, 전세는 약 3%로 나타났으며, 기타는 12%로 확인되었다. 이는 피해 주민의 상당수가 자가주택을 기반으로 생활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피해 복구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의 양상은 주거 지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전세나 월세 같은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주 주택이 재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집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복구 지원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임대주택 거주 응답자의 80%가 이러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세입자에게 돌아가야 할 주거 보상이 집주인에게 지급되거나, 집수리나 리모델링 등에 투입한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는 재난 피해 보상 체계가 실제 거주자의 피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무허가 주택의 경우에도 제도적 한계가 확인되었다. 주택이 피해를 입었지만 무허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보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100%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의 법적 지위가 재난 피해 보상과 지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재난 이후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피해조사는 이루어졌으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행정절차를 알지 못해 피해 조사에서 누락되었다는 응답이 20%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 피해 복구 과정에서 주거 지위와 행정절차에 대한 접근성이 피해 회복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20. 임대주택 거주자의 피해복구 지원 차별 경험

| 구분 | 사례수 | 차별을 겪었다 | 아니다 |
|----|------------|-----------|-----------|
| 의성 | 5 (100.0%) | 4 (80.0%) | 1 (20.0%) |

표21. 무허가 주택 피해 보상 어려움 경험

| 구분 | 사례수 | 어려움을 겪었다 |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
|----|-------------|-------------|-------------|
| 의성 | 10 (100.0%) | 10 (100.0%) | 0 (0.0%) |

의성-A: “저는 세입자라 세입자 500만원 지원 그것만 주시고 제 살림이나 추억이나 뭐 가재도구 전자제품 이런 거 다 탔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못받고, 그냥 세입자니까 500만원.”

의성-D: “처음에는 산불 나기 전 1년 전부터 여기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안 된다.(...)나는 거주하지 않았던 게 맞는데 고의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는 거주하고 싶어도 못 했다. 병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느라. 요 차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의성-F: “집이 이제 불법 건축물이에요... 40평 되는 게 두 동이었는데 이제 그게 다 탄 거죠.”

의성-H: “나는 이제 그게 가장 실망이 큰 거죠. 솔직히 해서 우리 같은 사람 뭐 몇천만 원도 큰돈인데 아니 이게 이게 전혀 지원이 안 된다니까”

의성-J: “무허가라고 전혀 뭐 전혀 뭐 10원 한 장 뭐 받아본 게 없으니까 대신 이제 구호 물품은 쌀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거는 좀 받았지.”

의성-I: “참고 보상도 허가된 참고만 보상을 해줬거든요. 근데 시골에 제가 알기로 우리 동네 100이라면은 98가 무허가 참고예요.”

현행 주거 보상 체계가 재난의 실제적 피해보다 법적·행정적 형식 요건에 치중함으로써 다수의 보상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세입자의 실질적 재산권이 부인되어 보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세입자들은 화마로 인해 가재도구와 전자제품 등 평생 일궈온 생활 집기를 모두 잃었음에도, '세입자 500만 원 일괄 지원'과 같은 소액의 지원 외에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행정 체계가 자가 주택 소유주 중심으로 설계된 탓에, 세입자가 생활 유지를 위해 투입한 비용이나 구체적인 물적 피해는 보상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거주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둘째, 농촌의 주거 현실을 외면한 무허가 건축물의 보상 원천 배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상당수의 주택과 창고가 무허가 상태로 존재함에도, 행정은 오직 '허가 여부'를 잣대로 하여 지원을 차단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해 주택세와 토지세 등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거주해 왔으나, 재난 보상 시에는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촌 마을의 창고 대부분이 무허가인 현실에서 이러한 기준은 농민들의 생산 기반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실거주 판단 기준의 경직성과 행정절차의 높은 문턱이다.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비웠던 경우에도, 행정은 생활의 근거지라는 실제적 진실보다 ‘사고 당시 점유 여부’라는 단편적인 기준만을 적용하여 임시주택 지원 등을 거부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 주민들에게는 쉽지 않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방식이나 까다로운 증빙 요구는 피해 조사 단계에서부터 누락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보상 누락에 따른 심각한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활동 회복]

재난으로 인한 경제활동 피해 여부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0%가 경제활동에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20%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재난이 주민들의 생계 기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재난 이후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회복 수준을 살펴보면 재해 이전 대비 10% 미만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응답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50~80% 수준 약 21%, 30~50% 수준 약 18%, 10~30% 수준 약 14%, 80~100% 수준 약 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 주민들의 소득이 여전히 재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향후 소득 회복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대체로 그렇지 않다 약 36%, 매우 그렇지 않다 약 25%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60%가 향후에도 소득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보통이다 23%, 대체로 그렇다 16%로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없었다.

경제활동 회복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으로는 회복지원금 확대가 약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회복될 때까지 소득지원(기본소득) 26%,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약 3%, 무이자나 저이자 등 금융지원 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 이후 장기간 지속되는 생계 미회복 문제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소득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높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성-B: “그 문항에도 보니까 그 소득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던데 ... 사과 농사는 올해 농사 지어서 올해 소득을 보는 그 품목이 아니잖아요. 특수성이 있으니까. ... 그에 대한 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돼야지 뭐 이렇게 농촌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의성-B)

의성-C: “마늘이 굵어야 되는데 굵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게 보니까 면에서나 행정에서는 당장 (마늘이)죽어야 보상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 보상은 보상대로 못 받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의료비 지원이 아니에요. ... 하루에 일당을 나가는 게 지금 27일째 나가는데 그 돈만 해도 의료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성-I: “농지랑 과수원이 다 타 갖고 수입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겨울에 그거를 헤쳐 나가는 게 생활고가 지금 전부 다들 힘들 거 같아요.(...)“가장 시급한 게 뭐가? 의료 지원.... 앞으로의 생활 보장이 안 되는 거죠. ... 생계 지원이 가장 큰 문제죠.”

의성-L: “사과밭이 이제 밭을 이제 새로 이렇게 뭐지 조성을 하면서 올해가 4년 차예요. ... 이 나무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거의 4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보상이 없고.”

이번 재난은 주민들의 단순한 재산 손실을 넘어 생계 기반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농업 의존도가 높은 의성지역 특성상, 소득 회복의 불확실성은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생활고와 더불어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세가지 측면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첫째, 다년생 작물의 특수성을 간과한 일시적 보상의 한계이다. 사과나 자두와 같은 과수 농가는 나무를 심고 수확하기까지 보통 5~7년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산업적 특성을 지닌다. 산불로 소실된 과수원을 새로 조성할 경우 향후 수년간 소득이 전무한 '공백기'가 발생함에도, 현재의 보상 체계는 나무 식재 비용 등 당장의 물적 피해 산정에만 집중되어 있다. 주민들은 재난 이전의 소득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며, 따라서 일회성 지원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장기적인 생계 대책의 부재를 우려하고 있다.

둘째, 농산물 생산 주기와 2차 피해를 도외시한 행정 기준이다. 산불의 강력한 열기로 인해 마늘 등 작물의 성장점이 손상되어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음에도, 행정 당국은 '당장 고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장과 괴리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종자(씨마늘)와 영농 자재의 소실은 다음해의 농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농민들을 빈곤의 악순환으로 내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의 경직성은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영농 재개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의료비보다 시급한 '생활 실질 소득' 지원의 부재이다. 재난 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비 지원은 한도가 낮거나 조건이 까다로워 단기적인 처치에 그치고 있다. 주민들이 직면한 가장 큰 실제적인 위협은 농업 수입 단절, 그리고 당장의 일상 운영비 및 인건비 부족이다. 특히 부상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발생하는 일당 수입의 부재는 가혹한 생활고로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의 구호 체계는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인 '실질적 소득 보전'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결]

의성 산불 이후 전개된 주거 및 생계 복구 과정은 현행 행정 기준이 농촌 지역의 특수한 주거 형태와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법적 증빙 중심의 보상 체계와 실거주자의 소외다. 보상 기준이 소유권과 인허가 여부라는 형식적 요건에 집중됨에 따라, 세입자와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들은 재난 구호의 과정에서 상대적인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수십 년간 지역에 정주하며 납세 등 공동체의 의무를 다해온 주민들이라 하더라도, 서류상 지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가재도구 피해나 생활 시설 손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이는 재난 보상이 실제 거주자의 삶을 보호하는 기능보다 행정적 요건 충족에 치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농업 생산 주기와 연동되지 못한 단기적 생계 지원의 문제다. 과수 농가와 같이 소득 회복에 수년이 소요되는 산업적 특성과 성장점 손상 같은 2차 피해는 현재의 일시적 물적 보상 체계 내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압박은 당장의 시설 복구비보다 장기적으로 단절된 소득 흐름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따라서 현재의 구호 방식은 농민들이 재난 이전의 영농 수준으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장기적 회복 동력을 제공하기에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정보 접근성 격차에 따른 행정 서비스의 수혜 불균형도 중요한 문제다.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디지털 기반의 피해 입력 방식이나 복잡한 증빙 절차는 주민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생략된 채 총액 위주로 지급되는 방식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행정절차에 대한 당혹감을 키우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행정이 제공하는

지원의 취지를 반감시키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복구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6. 심리적 영향

[심리적 피해와 지원]

의성 지역 피해자를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IES-R-K) 척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난 이후 심리적 피해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93명 중 정상 범주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6명(약 7%)에 불과했으며, 심각한 PTSD 위험군(40~59점)은 30명(32%), 매우 심각한 PTSD 위험군(60점 이상)은 39명(약 42%)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응답자의 74%가 심각한 수준 이상의 PTSD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의성 지역의 평균 PTSD 점수 역시 53점으로 세 지역 전체 평균 점수인 51점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22. 의성 지역 IES-R-K 척도검사 결과 점수 분포도 (N=93)

| PTSD 등급 수준 | 총점 구간 | 인원 | 비율(%) |
|----------------|--------|------|-------|
| 정상 | 0~17점 | 6 | 6.5% |
| PTSD 위험 경향성 | 18~24점 | 3 | 3.2% |
| 부분 PTSD 위험 | 25~39점 | 15 | 16.1% |
| 심각한 PTSD 위험 | 40~59점 | 30 | 32.3% |
| 매우 심각한 PTSD 위험 | 60점 이상 | 39 | 41.9% |
| 합계 | | 93 | 100% |
| 평균 PTSD 점수 | | 53.2 | |

세부 문항 분석에서도 재난 이후 외상 반응이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자극으로 감정이 다시 떠오른다는 응답은 약 62%,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사건이 떠오른다는 응답은 67%로 나와, 침습적 기억 증상이 상당수 응답자에게 나타났다. 또한 수면 지속의 어려움(약 56%), 사건 이후 예민함이나 분노 경험(약 57%), 쉽게 놀라는 반응(약 59%), 집중의 어려움(약 52%) 등 재난 이후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이 확인되었다.

한편 재난 이후 심리지원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99명 중 32명(32%)만이 심리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상담사와의 1대1 상담 형태였다. 심리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 '서비스에 대해 몰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전달과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표23. 재난 사건 관련 침습 반응(Intrusion)

| 문항 | 사례수 | 전혀 아니다 | 약간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꽤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 94 | 7 (7.4%) | 16 (17.0%) | 13 (13.8%) | 25 (26.6%) | 33 (35.1%) |
| 다른 일들로 인해 사건을 생각하게 된다 | 97 | 5 (5.2%) | 13 (13.4%) | 13 (13.4%) | 30 (30.9%) | 36 (37.1%) |

| | | | | | | |
|-----------------------|----|------------|------------|------------|------------|------------|
|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사건이 떠오른다 | 97 | 4 (4.1%) | 9 (9.3%) | 19 (19.6%) | 24 (24.7%) | 41 (42.3%) |
| 사건의 영상이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른다 | 96 | 2 (2.1%) | 14 (14.6%) | 19 (19.8%) | 19 (19.8%) | 42 (43.8%) |
| 사건에 대한 강한 감정이 밀려왔다 | 95 | 7 (7.4%) | 13 (13.7%) | 19 (20.0%) | 24 (25.3%) | 32 (33.7%) |
| 사건 관련 꿈을 꾸었다 | 93 | 26 (28.0%) | 8 (8.6%) | 21 (22.6%) | 17 (18.3%) | 21 (22.6%) |

표.24. 재난 사건 관련 회피 반응(Avoidance)

| 문항 | 사례수 | 전혀 아니다 | 약간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꽤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사건에 대해 생각하거나 떠올리면 혼란스러워 피하려 했다 | 94 | 5 (5.3%) | 15 (16.0%) | 22 (23.4%) | 19 (20.2%) | 33 (35.1%) |
|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들을 멀리했다 | 95 | 8 (8.4%) | 14 (14.7%) | 24 (25.3%) | 22 (23.2%) | 27 (28.4%) |
| 사건에 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 95 | 7 (7.4%) | 10 (10.5%) | 24 (25.3%) | 21 (22.1%) | 33 (34.7%) |
| 사건을 지워버리려고 노력했다 | 96 | 6 (6.3%) | 16 (16.7%) | 28 (29.2%) | 17 (17.7%) | 29 (30.2%) |
|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 95 | 8 (8.4%) | 18 (18.9%) | 29 (30.5%) | 11 (11.6%) | 29 (30.5%) |
| 사건에 대한 감정이 무감각한 느낌이 있었다 | 96 | 33 (34.4%) | 14 (14.6%) | 18 (18.8%) | 20 (20.8%) | 11 (11.5%) |

표.25. 재난 사건 관련 과각성 반응(Hyperarousal)

| 문항 | 사례수 | 전혀 아니다 | 약간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꽤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수면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97 | 13 (13.4%) | 11 (11.3%) | 19 (19.6%) | 24 (24.7%) | 30 (30.9%) |
| 사건 이후 예민하거나 화가 났다 | 95 | 10 (10.5%) | 13 (13.7%) | 18 (18.9%) | 19 (20.0%) | 35 (36.8%) |
| 신경이 예민해지고 쉽게 놀랐다 | 94 | 6 (6.4%) | 14 (14.9%) | 19 (20.2%) | 22 (23.4%) | 33 (35.1%) |
|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95 | 12 (12.6%) | 13 (13.7%) | 21 (22.1%) | 19 (20.0%) | 30 (31.6%) |
| 사건을 떠올리면 신체 반응이 나타났다 | 93 | 17 (18.3%) | 17 (18.3%) | 22 (23.7%) | 13 (14.0%) | 24 (25.8%) |
| 주변을 경계하며 살고 있다고 느꼈다 | 92 | 14 (15.2%) | 21 (22.8%) | 21 (22.8%) | 15 (16.3%) | 21 (22.8%) |

의성-L: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좀 우울감이나 이런 거 많이 되게 겪으면서 의욕을 내지 못하는 상태였죠.”

의성-D: "잠을 못 자요. 지금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1시간 반 2시간을 못 자요. 계속 이렇게 중간에

깨니까 이게 좀 심각하더라고요. (...) 정 안 되면 휘발유 한 통 들고 올라가 서 뭐 저 청와대나 뭐 앞에서 뿌리 뿌고 불질러 버FL지 이런 생각도 하니까..."

의성-H: 자살의 충동까지도 사실은 느꼈고 했었는데... 매일 팬티를 적서 가지고 살았으니 (소변 조절 불가). (...) 고혈압이라는 병을 얻었다는 거죠. 고혈압이라는 이 병을 얻 고 나니까 시력이 가버리더라는 거죠."

의성-K: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거의 아직도 이제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 막내 딸이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괴물 그림을 계속 그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여기가 좀 그 런 충격을 받았구나..."

의성-A: "심리 상담 지원을 받을 때... 계속 받을 수 없는 것도 조금 아쉬웠지만, 여건상 오래 1:1 상담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니까."

의성-L: "지원이 있다고 해서 보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았지만 별 게 없었다, 약을 먹었다, 그랬다고 얘기했고... 마을 회관에도 심리치료 차 들어오는 걸 보기는 봤는데 그것 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모르지만 전문성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였다)."

의성 지역 응답자의 평균 PTSD 점수는 53점으로 안동(약 47점)과 영덕(약 53점)보다 높았으며, 전체의 90%가 PTSD 위험군에 속해 3개 지역 중 심리적 타격이 가장 컸다. 또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은 이유로 '서비스에 대해 몰라서'라는 응답이 의성에서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해볼 수 있다.

첫째, 복합적 요인에 의한 임계치 이상의 PTSD 위험군 형성이다. 의성 주민들이 겪는 심각한 심리적 타격은 산불 당시 경험한 생존 위협과 더불어 대체 불가능한 정서적 자산의 상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평생 보존해 온 유품이나 기록물 등 개인 역사의 소멸은 고령층에게 치명적인 내상을 남겼으며, 과수 농가 특유의 5~7년에 걸친 소득 공백과 부채 부담은 주민들을 깊은 절망감으로 내몰고 있다. 여기에 보상 기준을 둘러싼 혼선과 행정과의 소통 어려움이 더해지며 주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무력감이 PTSD를 장기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둘째, 공급자 중심 행정이 초래한 심리지원의 사각지대이다. 심리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응답자의 30%가 관련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일방향적인 정보 전달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고령층의 정보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매뉴얼 비치 중심의 방식과 의성주민대책위를 소통 창구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구조는 필요한 정보가 당사자들에게 적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상담 서비스에 대해 신뢰가 낮았으며 당장의 생계 복구가 급박한 현실은 주민들이 자신의 심리적 고통을 돌볼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조사 참여층의 특성에 따른 데이터 해석의 유의점이다. 본 조사는 의성주민대책위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수행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피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회복에 대한 욕구가 강한 주민들이 실태조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조사 결과에 나타난 수치를 이해할 때 이러한 참여층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피해 주민 전체의 일반적인 인식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응답자의 80%가 장기 거주민이라는 점에서 지역 사회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포착했다는 실질적 가치를 지닌다.

[소결]

의성 산불 피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은 개인의 통제 범위를 넘어선 사회적 외상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는 주거와 생계의 불안정과 맞물려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첫째, 만성화된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과 일상 기능의 저하이다. 상당수의 주민이 사건 이후 패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와 상관없이 불현듯 떠오르는 재난의 기억(침습 증상)과 그로 인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불면을 넘어 고혈압, 시력 저하, 소변 조절 능력 상실 등 구체적인 신체 증상으로 전이되고 있으며,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떠올릴 만큼의 깊은 절망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재난의 충격이 단기적인 심리 위축을 지나 삶의 기반을 흔드는 만성적 질환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둘째, 가족 공동체로 확산되는 외상의 전이와 정서적 고립이다. 재난의 상흔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투영되고 있다. 배우자의 무기력증과 우울감,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그림 등을 통해 표출하는 불안 징후는 재난이 가정이라는 최소 단위의 보호막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이 서로를 지탱하기보다 함께 고통을 겪으며 정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은 재난 이후 공동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심리지원 서비스의 낮은 인지도와 전문성에 대한 아쉬움이다. 심리적 위기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적절한 심리지원을 실제로 경험한 주민의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정보 접근성의 한계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또한 지원을 경험한 경우에도 단기적이고 형식적인 상담에 그치거나 현장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적인 트라우마 케어가 부족했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서비스 체계의 미비는 주민들이 각자의 고통을 오롯이 스스로 감내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7. 공동체 회복

[마을 회복]

재난으로 인해 마을 공간의 피해가 커서 새롭게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체로 그렇다 16%, 매우 그렇다 약 32%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48%가 마을 공간의 재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약 22%, 대체로 그렇지 않다 약 19%, 보통이다 12%로 나타났다.

재난 이후 마을을 새롭게 조성할 경우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1순위 응답)에서는 폭우·산불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마을 조성이 3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공동편의시설(운동기구, 정자, 마을회관 등) 확충과 도로·상수도·폐기물 처리 등 인프라 보완이 각각 7건으로 나타났으며, 아름다운 경관 회복 4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재난 이후 새롭게 조성되기를 기대하는 마을의 모습으로는(1순위 응답)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이 2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을 공동체가 활발한 마을 15건, 소득이 높은 마을 6건, 전기세·난방비 걱정 없는 에너지 자립 마을 5건, 난방·수도 등 마을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마을 3건 순으로 나타났다.

마을을 새롭게 조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는 마을 주민의 의견 수렴이 39건(약 7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도움 5건(약 10%), 지자체의 결정 4건(약 8%), 마을 리더들의 결정 2건(약 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 이후 마을 재조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의견 반영의 중요성이 높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26. 새로운 마을에 대한 기대사항 1~3순위에 대한 가중치 환산표

| 지역 | 구분 |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 전기료, 난방비 걱정없는 에너지자립 마을 | 소득이 높은 마을 | 마을공동체가 활발한 마을 | 난방, 수도 등 시설이 잘 갖춰진 마을 |
|----|-----|--------------|------------------------|-----------|---------------|-----------------------|
| 의성 | 가중치 | 9096 | 5453 | 3442 | 6955 | 28 |
| | 1순위 | 23 | 5 | 6 | 15 | 3 |
| | 2순위 | 9 | 16 | 4 | 7 | 5 |
| | 3순위 | 3 | 7 | 8 | 10 | 9 |

**가중치는 다중순위형 응답에 대한 각 빈도값에 1순위: 3점, 2순위:2점, 3순위:1점을 가중한 값.

의성-A: "불은 어차피 났고 이제 복구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도 좀 어루만지면서 저희들이, 여기 의성에 사는 사람들이 '좀 그래도 행복하다'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복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성-B: "마을 회관에 운동기구나 혈압 재는 기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공용 물건을 쓰는 공간이 주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의성-F: "마을 단위의 조금 더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서 마을 단위의 사업들을 조금 예산들을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좀 있어. ... 꽃길 조성 같은, 그거라도 보면서 '아이고 예쁘다'라는 말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만 하고 싶어요."

의성-K: 마을회관이 타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니 소통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 회복이 절실합니다."

의성-H: "우리 주민들한테 '나도 안 나간다. 우리 주민들 한 분도 나가지 맙시다. 여기서 같이 사십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주민들은 지금 같이 살 계획을 하고 한 분 한 분 지금 주택을 짓고 계시고... 저는 그게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성-F: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끼리 이런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고민들은 하고 있는 거지. 그 속에서 법인체나 협동조합 형태라든지... 우리끼리의 공동체 팀을 만들자라고 해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려고 그래요."

의성 산불 피해 주민들의 마을 재조성 및 공동체 회복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재난 이전의 물리적 상태를 복구하는 차원을 넘어,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지는 2025년 의성군이 발주해 펴낸 <의성군 종합발전계획 1>의 내용과 함께 고찰할 때 더욱 명확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의성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의성군민의 88.2%가 10년 후에도 지역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주된 이유로 생업(49.7%)과 고향에 대한 애착(33.6%)을 꼽았다. 지역에 대한 높은 정주 의식과 심리적 유대감이 재난 극복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거주 의향이 없는 이유로 발전 가능성의 한계(36.5%)와 인프라 부족(17.6%)이 지목되었던 점을 상기할 때, 이번 산불은 주민들이 거주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마을 재조성 및 공동체 회복 과정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정주 동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분야별 만족도 조사에서 재해·재난 안전 서비스(3.34점)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지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환경으로 주거 여건(31.6%)과 노인 복지(26.0%) 등이 강조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노력으로 친환경 차를 대중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29.0%에 달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산불 피해 지역의 재건이 단순한 가옥 신축을 넘어, 주민들의 심리적 치유와 공동체성 회복, 그리고 자연친화적 주거 환경을 통합적으로 담아내는 포괄적인 과정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출된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안전성과 정서적 안정이 결합된 마을 환경에 대한 욕구이다. 주민들은 마을 재조성 시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마을 조성'을 꼽으며, 마을 단위의 소방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설치와 같은 구체적인 안전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에 대한 높은 선호도는 산불로 폐허가 된 경관을 회복함으로써 참혹한 경험으로 상처받은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자 하는 정서적 회복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이다. 이는 단순한 가옥 복구를 넘어 주민의 존엄과 행복을 고려한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고향에 대한 애착을 기반으로 한 자립적 공동체 체계의 재구축이다. 대다수 주민은 "고향이니까 살아야 한다"며 마을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재건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마을회관 등 공용 공간의 소실이 소통 단절과 우울감의 원인이 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이러한 거점 공간의 회복을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단순 거주지 복구에 그치지 않고, 협동조합이나 법인체 형태의 공동체 팀 구성을 논의하며 자립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등 기존 농촌 인프라의 한계를 공동체의 힘으로 극복하려는 능동적인 회복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친환경 에너지 자립과 주민 참여 중심의 상향식 재건 프로세스이다. 주민들은 에너지 자립 마을 모델에 관심을 보이며 마을의 새로운 소득원이나 자생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은 전문가의 조언이나 지자체의 결정보다 '주민 의견 수렴'을 가장 중요한 절차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재난 문자 발송 지연이나 피해 조사 과정에서 경험한 행정의 일방적 소통과 배제에 대한 반작용이자, 마을의 주인으로서 재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특별법 시행령 제정 마련 등 정책 결정 과정에 피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회복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다.

2) 공동체 내 갈등

재난 이후 이웃과의 관계 및 마을 공동체 결속 변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재난 회복 과정에서 서로 도왔다는 응답이 대체로 그렇다 41%, 매우 그렇다 약 19%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60%가 공동체적 상호 지원이 있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전혀 아니다 약 9%, 대체로 아니다 5%, 보통이다 26%로 나타났다.

재난 이후 이웃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체로 그렇다 약 27%, 매우 그렇다 10%로 나타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약 37%로 확인되었다. 반면 전혀 아니다 13%, 대체로 아니다 14%, 보통이다 약 36%로 나타나 관계 변화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재난 이후 마을 공동체가 재난 이전보다 더 돈독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체로 그렇다 26%, 매우 그렇다 약 9%로 나타나 긍정적 변화 응답이 35%로 확인되었다. 반면 전혀 아니다 약 18%, 대체로 아니다 11%, 보통이다 36%로 나타났다.

한편 재난 복구 과정에서 이웃 간 갈등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갈등을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이 약 28%, 들었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이 31%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59%가 갈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보상금 배분에서 발생한 불공정성에 대한 감정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복구지원 수준에 대한 불만 24%, 피해 회복 과정에서의 행정절차 및 정보 부족 18%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갈등의 상태를 살펴보면 갈등이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응답이 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는 응답은 18%, 해결을 포기했다는 응답은 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 이후 공동체 내부에서 협력과 갈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갈등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27. 재난 이후 공동체 결속 변화

| 구분 | 사례수 | 전혀 아니다 | 대체로 아니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의성 | 91 | 16 (17.6%) | 10 (11.0%) | 33 (36.3%) | 24 (26.4%) | 8 (8.8%) |

표28. 재난 이후 이웃 간 갈등 경험

| 구분 | 사례수 | 없다 | 들었거나 목격했다 | 직접 경험했다 |
|----|-----|------------|------------|------------|
| 의성 | 90 | 37 (41.1%) | 28 (31.1%) | 25 (27.8%) |

표29. 갈등 발생 원인

| 구분 | 사례수 | 지원금 배분에서 불합리한 기준으로 불편한 감정 | 불충분한 피해 지원 수준 | 피해지원복구 과정에 대한 정보 부족 | 임시주택단지의 불합리로 인한 이웃과의 갈등 | 기타 |
|----|-----|---------------------------|---------------|---------------------|-------------------------|----------|
| 의성 | 50 | 25 (50.0%) | 12 (24.0%) | 9 (18.0%) | 0 (0.0%) | 4 (8.0%) |

의성-F: 거기서는 나름 그래도 그렇게 극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다 어려운 모습들을 보고 하다 보니까 서로서로 이제 '우리 용기 내자'고 이제 그런 말도 하고... 함께하는 분들이 되게 소중하더라."

의성-J: "동네 사람들이 착하고 좋으니까 그래도 뭐 쌀 갖다 주는 분, 또 뭐 고춧가루, 하다못해 참기름... 당신들이 입던 거라도 다 챙겨 주는 거지. 그게 고마운 거지."

의성-H: "냉장고를 나눠주는데 어떤 행태를 했느냐, 어느 동네에서 냉장고가 다 507리터, 520리터까지 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네에 10개가 냉장고가 317리터가 갔어요. (...) 그 사람들이 노. 군수 말 잘 듣는 사람이었겠죠? (...) 우리 동네에 와서는 바꿔 달라고 하니까 절대 안 된대요. (...)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충성 경쟁을 시킨 거죠."

의성-F: "주변에서 '돈 1억 얼마씩 받고 살림살이 찢지'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굉장히 뼈아픈 말들이예요. 아픈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할망정 속 없는 말들을 뱉을 때는 충격이 큼니다."

의성-K: "우리 마을 10집 중 한 집만 안 탔는데, 라면 10박스가 오면 9박스만 오는 거예요. 집 탄 집만 주는 거죠. 그럼 안 탄 집은 라면을 못 받으니 마음에 서운함이 남죠."

의성-B: "마을 회관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자기들은 피해를 본다고 막 불편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이고 원성 듣는 게 힘들었죠."

의성 산불 재난 이후 이웃 관계 및 마을 공동체의 결속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재난 초기에는 강력한 상호 부조가 나타났으나 복구 과정에서 행정의 불투명한 보상과 배분 방식이 공동체 내부에 깊은 갈등과 소외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세가지 측면으로 구체화된다.

첫째, 재난 초기 공동체적 결속력 발휘와 상호 지원의 경험이다. 산불 발생 직후 주민들은 행정의 대피 안내가 지연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 전화를 걸어 탈출 경로를 안내하고, 차량이 없는 고령자를 직접 구조하는 등 헌신적인 유대감을 발휘하였다. 대피소와 임시 거처 생활 중에도 주민들은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수발을 들며 고난을 견뎌내는 '이웃사촌'의 면모를 보여주었으며, 마을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생필품과 반찬을 나누는 활동을 통해 심리적 위안을 얻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재난이 공동체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보상 기준 및 구호 물품 배분의 불공정 인식이 초래한 주민 간 갈등이다. 복구 단계로 넘어가며 행정 당국이 물품 규격을 마을별로 다르게 지급하거나, 의성주민대책위 활동 여부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둔다는 의혹은 주민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특히 구호 물품이 주택 전소자에게만 집중되면서 피해를 면한 이웃들이 서운함을 느끼거나, 반대로 피해 주민들이 마을 회관 등 공용 공간을 이용할 때 다른 주민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 편의주의적 배분 방식은 결과적으로 주민 간에 '충성 경쟁'이나 불필요한 대립을 조장하여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회복력을 저해하고 있다.

셋째, 정보 불균형과 소통 부재에 따른 심리적 소외와 신뢰 훼손이다. 실질적인 보상 수준이 실제 피해액에 비해 턱없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이웃들 사이에서 '보상을 많이 받아 형편이 좋아졌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피해 주민들이 극심한 정서적 상처를 입고 있다. 또한, 주민을 대변해야 할 마을 이장이 행정의 입장을 우선시하거나 의성주민대책위 활동을 기피하는 모습은 리더십에 대한 불신과 주민 간의 반목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보상 근거와 성금 운용에 대한 투명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공동체 내부를 '피해자와 비피해자'로 파편화하며, 재난 이후의 통합을 가로막는 결정적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소결]

의성 산불 이후의 공동체는 재난을 함께 극복하려는 '협력적 의지'와 보상 체계에 대한 구조적 문제로 인한 '구조적 갈등'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첫째, 재난 초기 유대감 발휘와 상호 지원의 경험 및 마을 재조성에 대한 미래지향적 욕구이다. 산불 발생 직후 주민들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구조하고 생필품을 나누는 등 강력한 공동체적

결속력을 발휘하였다. 이러한 연대감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복구가 아니라, 고향에 대한 애착을 기반으로 '안전'과 '아름다움'이 결합된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욕구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자립 마을이나 협동조합 형태의 자립 모델을 고민하는 등, 재난을 계기로 더욱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능동적인 회복 의지가 확인된다.

둘째, 보상 기준 및 구호 물품 배분의 불공정 인식이 초래한 주민 간 갈등의 고착화이다. 재난 초기의 연대감은 복구 단계에서 행정의 불합리한 지원 기준과 만나며 급격히 위축되는 양상을 보인다. 마을별 물품 규격의 차등 지급이나 특정 활동 여부에 따른 차별 의혹은 주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행정에 대한 '충성 경쟁'을 유도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았다. 특히 피해를 입은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 사이의 선별적 지원 방식은 심리적 거리감을 형성하였으며, 이는 피해 주민들이 마을 회관 등 공용 공간을 이용할 때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되는 등 일상적인 갈등으로 고착화하고 있다.

셋째, 정보 불균형과 소통 부재에 따른 심리적 소외와 공동체 신뢰의 훼손이다. 행정의 투명한 설명 부재는 보상 규모에 대한 부정확한 소문을 양산하며 주민 간의 심리적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다. 실제 보상 수준이 피해 규모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웃들 사이에서 '보상을 많이 받아 형편이 좋아졌다'는 식의 오해가 퍼지면서 피해 주민들이 깊은 정서적 내상을 입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은 마을 리더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공동체를 피해자와 비피해자로 양분화하고, 재난 이후의 유기적인 통합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III. 실태조사 결과의 요약 및 제언

1. 의성에서도 확인되는 산불피해주민들의 보편적인 경험

[물적 피해 평가 방식과 주민의 실제 체감 손실 사이의 구조적 괴리]

현재 행정기관의 피해 산정은 주택, 영업장, 가재도구 등 전 항목에서 주민들의 실질적 손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정부 복구 지원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은 입력 항목이 표준화·최소화되어 있어, 농촌 현장의 특수성인 무허가 창고, 소규모 농기계, 가전제품 및 개인적 가치가 큰 귀중품 등이 조사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결함을 안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수십 년간 일궈온 삶의 자산이 단 몇 분간의 서류 조사로 '잔존 가치 없음'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깊은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재난 피해에 대해 '원상복구'가 아닌 '최소 구호'에 그치는 행정적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며,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자력으로 회복할 수 없는 구조적 빈곤 상태에 놓이게 한다.

[공식 재난 정보 전달 체계의 실효성 상실과 비공식 경로에 대한 높은 의존도]

디지털 기반의 재난문자 송출 시스템은 산불로 인한 기지국 소실 등 물리적 단절 상황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대피 정보를 확인한 주민의 77%가 마을 방송이나 이웃 간의 구두 전달에 의존했다는 점은, 고령층이 밀집한 농촌 현장에서 스마트 기기 중심의 공식 채널이 실질적인 '생존 정보'경로로 기능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심지어 불길이 눈앞에 닥칠 때까지 공식적인 대피 지시를 받지 못한 채 이웃의 소리를 듣고 맨몸으로 탈출해야 했던 경험은, 국가의 보호망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작동하지 않았다는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는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상황 전파 시스템의 부재를 의미한다.

[증장기 거주 공간으로서의 임시주택 및 대피소의 물리적·심리적 부실]

임시대피소와 임시주택 모두 공간의 협소함, 사생활 보호 체계 미비, 위생 시설 부족 등과 관련한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임시주택은 단순한 단기 대피를 넘어선 중장기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단열 부실과 좁은 면적으로 인해 주민들이 '수용 시설에 갇힌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일상의 존엄성을 회복하기에 역부족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조사 결과 주민들은 컨테이너의 좁은 공간에서 가재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생활하며 "내 집에서 누리던 인간다운 삶이 정지되었다"는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주거 불만족과 심리적 위축으로 고착화하고 있다.

[광범위하게 확산된 PTSD 위험과 형식적 수준에 머문 심리지원 체계]

전체 응답자의 약 87%가 PTSD 위험군으로 분류될 만큼 심리적 내상이 깊지만, 공공의 심리지원 서비스는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실질적인 회복을 돕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보건소 등의 상담이 단순한 '수면제 처방'이나 '형식적 문답'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이는 재난 이후의 정서적 보살핌이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평생 간직해온 영정 사진, 유품 등 '대체 불가능한 정서적 자산'을 잃은 고령층에게 단순한 문진 중심의 상담은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공동체 내부의 정서적 지지체계마저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회복 과정에서의 철저한 당사자 소외와 이로 인한 행정 불신의 고착화]

피해 주민의 80%가 산불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금 배분과 같은 중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권이 실종된 상태이다. 주민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와 직결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조차 그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알게 되 철저한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당사자 없는 복구'는 주민들에게 "국가가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깊은 소외감과 무력감을 안겨주었으며, 이는 행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고착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2. 의성 지역의 차별화되는 특성

[영업장 피해 중심의 구조적 타격과 '매출 제로' 장기화에 따른 생존권 위협]

의성은 주택 피해가 주를 이루는 타 지역과 달리, 과수원과 부속 시설을 포함한 '영업장 피해(61건)'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사과와 자두 등 고부가가치 과수 산업이 지역 경제의 중추(GRDP의 1/3)를 담당하는 산업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농민들에게 과수원은 단순한 농지가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영업장이며, 고가의 방제기나 트랙터는 단순 물건이 아닌 필수 경영 장비로 인식된다. 특히 묘목 식재 후 상품성을 갖추기까지 5~7년이 소요되는 다년생 작물의 특성상, 주민들은 당장의 물적 소실보다 향후 수년간 이어질 '매출 제로' 상태를 실질적인 파산이자 근본적인 생계 붕괴로 체감하며 극심한 미래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구호 행정의 자의적 원칙과 독단적 운영에 따른 공적 신뢰의 총체적 붕괴]

의성군은 구호 물품 배분에서부터 지원 사업 집행에 이르기까지 객관적 기준이 결여된 자의적 행정 운영으로 일관하였다. 마을별로 구호 가전의 규격이 상위 모델과 하위 모델로 나뉘어 배정되는 등 일관성 없는 배분은 주민 간 불필요한 비교와 갈등을 야기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더욱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 대표에게만 선별적 혜택을 제안하며 사태를 무마하려 한 임기응변식 대응은 공적 구호 체계를 행정의 '협상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이러한 독단성은 도비 지원이 약속된 '컨테이너 창고' 사업을 주민 동의 없이 반려한 사례에서 극명히 드러나며, 지자체가 재난 회복의 조력자가 아닌

주민의 수혜 권리를 가로막는 행정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 형식주의와 정보 소외가 결합된 원주민 보상 사각지대의 고착화]

의성은 3개 지역 중 무허가 건물 비중(약 18%)이 가장 높았으며, 이에 따른 보상 갈등 또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다. 수십 년간 세금을 납부하며 실제로 거주해온 원주민들이 등기라는 '법적 지위'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반면, 실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이 서류 요건을 갖춰 혜택을 받는 역설적인 상황은 공정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형식주의적 태도는 복구지원비 산정 근거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약 83%)에서 드러나듯 정보의 폐쇄적 구조와 맞물려 있다. 의성군이 주민 자발적 조직인 '대책위'를 공식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소통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한 정보의 병목 현상은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심화시켰다.

[공동체 와해와 '정서적 역사' 소멸이 결합된 최고 수준의 심리적 재난 상태]

의성 지역의 PTSD 위험군 비중은 90%로 타 지역을 압도한다. 이는 특정 표이 과대표집된 조사의 한계에 따른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또 한편, 고령 주민들이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과 영정 사진, 유품, 기록물 등 '대체 불가능한 추억'이 깃든 물건들이 한꺼번에 소실되면서 개인의 역사가 영구 삭제된 데서 비롯된 상실감에서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여기에 임시주택 생활의 높은 불만족도(69%)와 소통 거점이었던 마을회관의 소실, 주민들의 산발적 거주 형태가 결합되면서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의 상호 부조 체계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결국 물리적 피해보다 더 깊은 심리적·사회적 내상이 지역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리며 장기적인 심리적 재난 상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일상 회복을 소외시킨 '개발 우선 정책'과 국가 책임 부재에 대한 배신감]

산불 복구 정책이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삶을 재건하기보다 대규모 위락시설 개발이나 관광 단지 조성 등 정치적 성과 달성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 주민들은 좁고 부실한 임시주택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자신들의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골프장, 콘도 개발 계획 발표를 접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주민의 고통을 개발의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배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재난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행정의 무능과 결합되어, 공적 기관이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하기보다 자본과 개발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불신으로 귀결되고 있다.

3.재난 이후의 의성을 위한 제언: 권리에 기반한 회복의 관점에서

[피해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체적 회복 거버넌스의 구축]

의성은 행정 당국이 주민들의 자발적 결사체인 '의성주민대책위'의 대표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통을 거부하면서, 타 지역에 비해 정보의 병목 현상과 행정 불신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배제는 주민들을 복구 과정의 능동적 주체가 아닌 수동적 수혜자로 전락시켰으며, 결과적으로 행정이 주민과의 접점을 찾는 데 실패하는 결과를 낳았다. 인권적 관점에서 회복은 피해자를 시혜의 대상이 아닌 자기 삶을 재건하는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은 의성주민대책위를 공식적인 거버넌스 파트너로 명확히 명문화하고, 피해 조사부터 복구 계획 수립, 성금 배분 원칙 논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대등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보 소외를 해소하고 공동체 신뢰를 회복하는 실질적 '알 권리'의 실현]

조사 결과 의성 주민의 83% 이상이 피해 평가나 복구지원비 산정 근거를 알지 못했으며, 행정의 정보 제공에 대한 불만족도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정보의 불투명성과 불균형은 주민들 사이에 보상금을 둘러싼 오해와 시기를 양산하여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은 단순히 총액을 통보하는 시혜적 방식에서 벗어나, 세부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 등 회복 전 과정의 정보를 주민들이 평등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고령층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메시지 중심의 공지를 지양하고, '마을 단위 대면 설명회'를 상설화하여 정보 접근성이 권리로서 보장되는 소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생존권' 보호와 경제적 정의의 실현]

의성은 사과와 자두 등 고부가가치 과수 산업이 지역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과수원은 단순한 농지가 아닌 삶을 영위하는 핵심적인 '영업장'이다. 그러나 현재의 보상 체계는 당장의 물적 피해에만 집중되어 있어, 묘목 식재 후 수확까지 5~7년이 소요되는 다년생 작물의 특성상 발생하는 장기 소득 공백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며 이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 구호의 범위를 '최소 구호로 한정하지 말고, 생산 주기를 고려한 실질적인 생계 소득 보전 대책으로 확대하여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권리인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산불의 열기로 인한 작물의 상품 가치 하락 등 눈에 보이지 않는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농민들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두터운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법적 형식을 넘어선 '실체적 거주권' 보장과 포괄적 '건강권' 체계의 운영]

의성은 타 지역에 비해 무허가 건축물 거주 비중이 높으며, 이런 상황에서 행정이 등기나 허가 여부라는 법적 형식 논리에 매몰되어 수십 년간 거주해온 원주민들을 보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실질적인 거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주거의 법적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자의 존엄한 삶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상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또 주민들이 겪는 PTSD 위험 수준은 생존 위협과 더불어 영정 사진 등 '대체 불가능한 정서적 자산' 소실에 따른 역사적 단절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심리적 외상과 산불 연기 흡입으로 인한 잠재적 건강 침해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일회성 상담을 넘어 장기적인 코호트 조사를 실시하고 마을 단위 소통 거점을 활용한 통합 의료 및 트라우마 케어 시스템을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민간 조사의 한계 극복을 위한 공공 차원의 '정밀 실태조사' 실시와 국가 책임 강화]

본 실태조사는 민간 차원의 한정된 자원으로 수행되었기에 피해 규모의 세부적인 확정이나 장기적인 영향 분석에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의성 지역의 경우 행정의 폐쇄성으로 인해 누락된 피해 사례나 은폐된 권리 침해 요소가 더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본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전수조사를 포함한 '국가 차원의 면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피해액을 산출하는 통계 작업을 넘어, 재난이 지역 공동체와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입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권리 기반의 회복 정책과 제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6층(우 04322)

T. +82 2 3144 1994 **F.** +82 2 6455 1995

www.greenpeace.org/korea

문의 press.kr@greenpeace.org

저자

- 그린피스 강성원, 이선주, 장마리, 정다운
- 녹색전환연구소 황정화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김서린, 유해정

도움을 주신 분들

- 데이터 분석: 정용혁
- 설문조사 진행: 안동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의성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산불회복주민연대 의성무지개, 포항 동네언니협동조합
- 심리 분석 및 자문: 한국재난심리연구소 이윤호 소장

발간 2026년 3월